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안 번호	3395
----------	------

제안연월일 : 2025년 12월 22일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행정전반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시정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1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2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25. 11. 4.(화) ~ 11. 17.(월) <14일간>

※ 제333회 정례회 : 2025. 11. 3.(월) ~ 12. 23.(화) <51일간>

-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각 상임위원회별)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체 행정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 주요 감사대상 업무

- 2024. 11월 ~ 2025.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 감사 착안사항

- 사업진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3 세부 추진 계획

□ 감사대상 선정 기관 : 180개 기관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현황

구 분	계	운 영	행 자	정 치	기 경	획 제	환 경	수 자원	문화체육	관 광	보 복	건 지	도시안전	설	주 공	택 간	도시계획	균 형	교 통	교 육
계	180	3	13	12	6	11	35		43		5	6	43		5	6	4	42		
위원회 의 결	136	3	9	7	6	6	7	43	4	5	4	5	4	42						
본회의 의 결	44	-	4	5	-	5	28	-	1	1	-	-	-	-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의결 선정기관(136),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44)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36)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44)
운영위원회 (3)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1 3)	<input type="radio"/> 비상기획관 <input type="radio"/> 민생사법경찰국 <input type="radio"/> 행정국 <input type="radio"/> 재무국 <input type="radio"/> 평생교육국 <input type="radio"/> 인재개발원 <input type="radio"/> 감사위원회 <input type="radio"/>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input type="radio"/> 자치경찰위원회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input type="radio"/> 서울장학재단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기획경제위원회 (1 2)	<input type="radio"/> 기획조정실 <input type="radio"/> 경제실 <input type="radio"/> 민생노동국 <input type="radio"/> 서울시립대학교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립과학관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input type="radio"/> 서울연구원 <input type="radio"/> 서울경제진흥원 <input type="radio"/> 서울신용보증재단 <input type="radio"/> 서울노동권익센터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6)	<input type="radio"/> 기후환경본부 : 1본부 1센터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input type="radio"/> 정원도시국 : 1국, 4센터, 1식물원 - 정원도시국 - 공원여가센터 • 동부, 중부, 서부, 북부 - 서울식물원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36)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아리수본부 : 1본부, 1연구원, 8수도사업소, 6정수센터, 1자재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아리수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 수도자재관리센터 ○ 미래한강본부 : 1본부, 1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한강본부 - 한강사업추진단 ○ 서울대공원 ○ 서울에너지공사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인 ○ 홍보기획관 ○ 문화본부 ○ 관광체육국(서울시체육회 포함)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보건복지 위원회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실 ○ 복지실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 서북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실 소관(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꿈마루 서울시립학대피해 아동쉼터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36)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실 소관(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인쉼터, 서울특별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광역자활센터 ○ 시민건강국 소관(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실 ○ 도로사업소(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 소방재난본부 ○ 서울종합방재센터 ○ 소방학교 ○ 특수구조단 ○ 소방서(25) ○ 물순환안전국 ○ 물재생센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랑, 난지 ○ 건설기술정책관 ○ 품질시험소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택공간 위원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실 ○ 미래공간기획관 ○ 디지털도시국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AI재단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36)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44)
도시계획균형 위원회 (6)	<input type="radio"/> 도시공간본부 <input type="radio"/> 균형발전본부 <input type="radio"/> 디자인정책관 <input type="radio"/> 미래청년기획단 <input type="radio"/> 글로벌도시정책관	<input type="radio"/>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교통 위원회 (4)	<input type="radio"/> 교통실 <input type="radio"/>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input type="radio"/> 서울교통공사 <input type="radio"/> 서울시설공단	
교육 위원회 (4 2)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교육청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학습관 (4개)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 (17개)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11개)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 감사위원회 편성 : 각 상임위원회별

연번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직원
1	운 영 위 원 회 (1 3)	이숙자	박성연 김성준	김춘곤, 박 석, 송경택,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	최현재, 오주석, 정진영, 김혜진, 김봉환, 전은애 유은아, 김소연, 박은영, 홍승현
2	행 정 자 치 위 원 회 (9)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김태한, 김상원, 정찬일, 배효인, 최석훈, 최문숙, 최현종, 김원진, 채태준, 손은영, 방성애, 김경선, 여양모, 이슬기, 이승후, 정숙영
3	기획 경 제 위 원 회 (1 2)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이준석, 김성만, 안나현, 김현종, 최범준, 신현두, 강민수, 조혜진, 김혜진, 이상희, 이성찬, 정희숙, 김범석, 김한울, 박재윤, 서유진, 안태호, 이정수
4	활 자 경 위 원 회 (1 1)	임만균	박춘선 한 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박귀수, 현진숙, 배성진, 유시범, 이혜선, 신휘수, 양현민, 정주현, 김선희, 김경혜, 온현지, 손정욱, 강규이, 박진수, 박종한, 서효정, 원유준, 한상임
5	문화 체 육 관 위 원 회 (1 0)	김 경	이종배 아이수루	김규남, 김형재, 김혜영, 송경택, 이종환, 김기덕, 유정희	강옥심, 박도현, 임창균, 심형준, 정재윤, 홍민지, 박지수, 김예영, 안정현, 지연경, 이순복, 김연주, 김다운, 박수형, 김보미, 조지훈
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9)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성배, 김인제, 이병도	임영미, 주승원, 김소은, 박현우, 심선영, 김수은, 조용민, 우현재, 도미화, 신현태, 김진영, 김종훈, 박서영, 양옥수, 백순정, 양희수, 권민진

연번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 직원
7	도시안전위원회 (1 1)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이상근, 조동호, 박남권, 심현보, 권혁일, 정민선, 김성연, 남기태, 임은덕, 백제리, 구본장, 공혜정, 민현범, 박진희, 송수진, 임진영, 임태정, 윤희찬
8	주택공간위원회 (1 2)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윤은정, 김숙희, 강대만, 이정현, 오태민, 오성빈, 박영신, 한승윤, 김태훈, 조윤길, 신아현, 홍예지, 강주연, 금민정, 김지혜, 박주용, 배재현, 송명희, 이승미
9	도시계획위원회 (1 0)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조성준, 김재민, 권수정, 박성원, 김금란, 이주병, 공현주, 양세인, 김연희, 장미영
10	교 위원 통 회 (1 3)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	장훈, 김민호, 박준영, 류홍섭, 온순현, 이성엽, 안진주, 남승연, 신혜영, 채원석, 이동남, 이지선, 박은비, 박은샘, 박정렬, 송경희, 최혜민, 홍수희
11	교 위원 육 회 (1 3)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박광선, 김성룡, 정진국, 이현구, 성은혜, 이가영, 박소현, 김지수, 이진석, 김명신, 이현주, 이진우, 김문주, 백경하, 최재현, 권현경, 백승호, 양성옥, 이윤지, 이지희, 구명호

5

감사일정 및 장소

1. 운영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운영위원회	11.17.(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2. 행정자치위원회

일시	감사대상기관	장소	비고
11. 4.(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개발원 ○ 비상기획관 		
11. 5.(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국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11. 6.(목) 10:00	휴감		
11. 7.(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사법경찰국 ○ 자치경찰위원회 		
11.10.(월) 10:00	○ 재무국		
11.11.(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국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 관계 증인 출석
11.12.(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국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1.13.(목) 10:00	휴감		
11.14.(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1.17.(월) 14:00	<p style="text-align: center;">[종합감사] (미진부분 집중감사)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p>		

3. 기획경제위원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2025.11.4.(화) 10:00	○ 기획조정실	회 의 실	
2025.11.5.(수) 10:00	○ 경제실 ○ 서울시립과학관	회 의 실	
2025.11.6.(목)	자료정리		
2025.11.7.(금) 10:00	○ 민생노동국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 의 실	
2025.11.8.(토) ~11.9.(일)	휴 감		
2025.11.10.(월) 10:00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연구원	회 의 실	
2025.11.11.(화) 10:00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회 의 실	
2025.11.12.(수) 10:00	○ 서울경제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회 의 실	
2025.11.13.(목)	자료정리		
2025.11.14.(금) 10:00	○ 종합감사	회 의 실	
2025.11.15.(토) ~11.16.(일)	휴 감		
2025.11.17.(월)	자료정리 ※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 환경수자원위원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25.11. 4(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5.11. 6(목)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도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도시국 - 공원여가센터(4개소) - 서울식물원 ○ 서울대공원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5.11.10(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아리수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아리수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2025.11. 12(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한강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한강본부 - 한강사업추진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5.11. 14(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너지공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5.11.17(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정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 시	감사 대상 기관	장 소
11. 4.(화) 10:00	1. 대변인 2. 홍보기획관 3. 120다산콜재단	위원회 회의실
11. 5.(수)	자료정리	
11. 6.(목) 10:00	4. 서울역사박물관 5. 서울시립미술관	위원회 회의실
11. 7.(금)	자료정리	
11. 10.(월) 10:00	6. 관광체육국(서울시체육회 포함) 7. 서울관광재단	위원회 회의실
11. 11.(화)	자료정리	
11. 12.(수) 10:00	8. 세종문화회관 9. 서울시립교향악단	위원회 회의실
11. 13.(목)	자료정리	
11. 14.(금) 10:00	10. 문화본부 11. 서울문화재단	위원회 회의실
11. 17.(월)	자료정리	

6. 보건복지위원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1.4.(화)	행정사무감사 준비		
11.5.(수) 10:00	〈여성가족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위원회 회의실	
11.6.(목) 10:00	〈여성가족 관련 기관〉 -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특별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꿈마루 서울시립학대피해 아동쉼터	위원회 회의실	
11.7.(금) ~11.9.(일)	감사결과 자료정리		
11.10.(월) 10:00	〈복지실〉 〈서울시 복지재단〉	위원회 회의실	
11.11.(화) 10:00	〈복지 관련 기관〉 -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인쉼터, 서울특별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광역자활센터	위원회 회의실	
11.12.(수)	감사결과 자료정리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1.13.(목) 11:00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14.(금) 10:00	〈특수 법인〉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직영 병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위탁 병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건강 관련 기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위원회 회의실	
11.15.(토) ~11.17.(월)	감사결과 자료정리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소관부서)
11월 4일(화) 10 : 00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기획관 ○ 도로기획관 ○ 재난안전정책과 ○ 재난상황관리과 ○ 재난안전예방과 ○ 중대재해예방과 ○ 도로계획과 ○ 도로관리과 ○ 지하안전과 ○ 도로시설과 ○ 교량안전과 ○ 도로사업소(6개)
11월 5일(수) 10 : 00	재난안전실	▶ 현장확인감사	
11월 6일(목) 10 : 00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행정과 ○ 재난대응과 ○ 예방과 ○ 안전지원과 ○ 현장대응단 ○ 소방감사담당관 ○ 서울종합방재센터 ○ 소방학교 ○ 119 특수구조단 ○ 소방서(25개)
11월 7일(금) 10 : 00	소방재난본부	▶ 현장확인감사	
11월 10일(월) 10 : 00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감성도시과 ○ 치수안전과 ○ 물재생계획과 ○ 물재생시설과 ○ 물재생센터(2개)
11월 11일(화) 10 : 00	물순환안전국	▶ 현장확인감사	
11월 12일(수) 10 : 00	건설기술정책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혁신담당관 ○ 지역건축안전센터 ○ 품질시험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부 ○ 토목부 ○ 건축부 ○ 설비부 ○ 방재시설부
11월 13일(목) 10 : 3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현장확인감사	
11월 14일(금) 10 : 00	종합감사		
11월 17일(월)	감사결과 정리		

8. 주택공간위원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25. 11. 4.(화) 10:00	주 택 실 (1 일 차)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2025. 11. 5.(수) 10:00	주 택 실 (2 일 차)	"	
2025. 11. 6.(목) 10:0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2025. 11. 7.(금) 10:00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2025. 11. 10.(월) 10:00	디 지 텔 도 시 국 서 울 A I 재 단	"	
2025. 11. 11.(화) 10:00	미래공간기획관	"	
2025. 11. 12.(수)	10:00 주 택 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종 합 확인점검
	15:00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A I 재단		
2025. 11. 13.(목)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2025. 11. 14.(금)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2025. 11. 17.(월)	감사중지 ※ 운영위 일정(10시)	-	

9.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2025. 11. 4.(화)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균형회의실
2025. 11. 5.(수)	휴 감 (자료정리)	
2025. 11. 6.(목)	균형발전본부(1일차)	도시계획균형회의실
2025. 11. 7.(금)	균형발전본부(2일차)	현장
2025. 11. 10.(월)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재단	도시계획균형회의실
2025. 11.11.(화)	미래청년기획관	도시계획균형회의실
2025. 11.12.(수)	휴 감 (자료정리)	
2025. 11.13.(목)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계획균형회의실
2025. 11.14.(금)	휴 감 (자료정리)	
2025. 11.17.(월)	휴 감 ※ 운영위원회 행감	

10.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출석요구대상	비고
2025.11.4.(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바이크 대표 · (주)피유엠피 대표 · (주)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 	
2025.11.5.(수) 10:00	교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천리자전거(주) 대표이사 · 콘스탄틴바이크 대표이사 · (주)하림산업 대표이사 · (주)서부티엔디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증인 출석 요구 '14시'
2025.11.6.(목) 10:00	(감사결과 정리)	-	
2025.11.7.(금) 10:00	서울시설공단	-	
2025.11.10.(월)	(감사결과 정리)	-	
2025.11.11.(화) 10:00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자회사 5개 포함 (서울메트로환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다원시스 대표이사 	증인 출석 요구 '14시'
2025.11.12.(수) 14:00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서해철도(주) GTX-A운영(주))	-	
2025.11.13.(목) 10:3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2025.11.14.(목) 10:00	〈종합감사〉 · 교통실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더스윙 대표 · (주)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14시'
2025.11.17.(월)	(감사결과 정리)	-	

11. 교육위원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2025.11.4.(화) 10:00 ~ 11.5.(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무)		
2025.11.6.(목)	자료정리		
2025.11.7.(금)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사무)		
2025.11.10.(월) 10:00	(1)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사무) (2)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11) 소관 사무) ※ 대표보고 : 강동송파, 성동광진교육지원청		
2025.11.11.(화) 11:00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11) 소관 사무) ※ 대표보고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2025.11.12.(수) 14:00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4), 도서관(17) 소관 사무) ※ 대표보고 : 마포평생학습관, 정독도서관		
2025.11.13.(목)	자료정리		
2025.11.14.(금)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4), 도서관(17) 소관 사무) ※ 대표보고 : 마포평생학습관, 정독도서관		
2025.11.17.(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종합감사 및 총평		

6

감사결과 총괄표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 ·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094	1,523	933	638
운 영 위 원 회	58	35	13	10
행 정 자 치 위 원 회	375	228	107	40
기 획 경 제 위 원 회	313	97	107	109
환경수자원위원회	330	185	106	3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1	51	71	5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331	143	109	79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69	198	26	45
주택공간위원회	210	54	78	78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95	144	36	15
교 통 위 원 회	305	171	88	46
교 육 위 원 회	527	217	192	118

1. 운영위원회

 총괄

감사대상기관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제출 등)
계	58	35	13	10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30	17	9	4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8	18	4	6

시정·처리요구 사항 ----- 35건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 17건

1. 한강버스 노선·선착장 다양화

- 관광특구·핵심 거점인 반포 일대 선착장 도입 및 노선 개발 등 용역에 반영하여 검토 필요

2.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 추진사항 점검

- 취약계층 산모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 추진사항 점검 철저

3. 고독사 정책·예산 비효율 문제

- 고독사 위험군 5만여 가구의 저조한 실제 서비스 연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중심 사례 발굴 및 연계 강화 요구
- 고독사 사업 편중에 따른 50·60대 중장년 남성이 소외됨에 우려, 50·60대 중장년 남성을 위한 통합적 접근·부서 간 사업 연계를 통해 실질적 대책 마련 당부

4. 건강총괄관 유튜브 오해 소지 발언 삭제

- 서울시 건강총괄관의 유튜브 상 한의사 직군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대해 삭제 조치할 것

5. 서울시 임기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채용 원칙 위반

- 5급 채용 원칙 미준수로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므로 서울시 임기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채용에 대한 검토 필요

6. 민간전문가 제도 점검

- 민간전문가 수당관리대장·근무일지 표준 서식 마련 및 관리 강화, 명확한 국외출장여비 기준 확립 등 제도 운영 전반 점검 필요

7. 기술용역 관리 체계 개선

- 기술용역 사전심의·리스크 관리 실효성 강화 및 '용역 총량제' 등 관리 체계 개선 요구

8. 건강총괄관 민간활동 이해충돌 우려

- 서울시 건강총괄관의 광고 촬영으로 인해 서울시 정책이 특정 식품 브랜드와 연계되거나 오인될 수 있어 공공성·영리활동에 대한 경계 관리 필요

9. 서울시 공공의료정책 관련

- 손목닥터9988 사업 등 예산·정책 역량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다른 필수 공공의료·정신건강 사업들이 소외될 수 있으므로 공공의료정책의 균형있는 설계 필요

10. 서울시 지원사업 추진체계 재검토

- 1인가구 지원, 다문화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 대상·방향 등 변경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 및 추진체계 재검토 필요

11. 공공의료재단 통폐합 관련

- 공공의료재단 통폐합 후에도 퇴사자 증가, 조직 불안정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필요

12. 창의제안·규제개혁 과제 운영방식 개선

- 창의제안 실국별 강제할당, 시정 홍보 속품 의무 제출 등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자율·창의 취지에 맞고 실무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 고민 필요

13. 시정질문 후속조치 기한 엄수

-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당수 답변이 기한을 넘기고 일부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등 조례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
 - 부득이하게 상세 답변이 늦어질 경우에는 기한 내에 간단히 1차 답변을 우선 제출하고 이후 추가 보고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각 부서에 답변 기한 준수에 관한 안내와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기 바람

14. '약자와의 동행' 지수 고도화 제고

- 기존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부모 사망 등)에 처한 고립된 약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세분화하고,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소통 강화가 필요

15.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재난안전실 기능 개선 관련

- 재난안전실 및 관련 부서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장애 발생 시 실시간 보고체계 및 시민 안내 필요

- 데이터센터 및 감시시스템에 대한 선제적 현대화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추진을 필요

1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및 기기 점검 관련 대응

-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관련 중앙지침 수령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기준 및 매뉴얼 마련 필요

17. 신통기획 및 정비사업 현장 대응 확대

- 권역별 정비사업 관련 공공설명회를 정례화하고, 민원 다발 지역 또는 사업 초기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방문 확대 필요
- 정비사업 매뉴얼 활용 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자치구 및 시의회와 적극 공유하고,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점검 체계 마련 필요

□ 시의회사무처 : 18건

1. TV·엘리베이터 광고 등 의정홍보 구성 방식 개선

- 개별 의원 식별성이 낮아 홍보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홍보물 구성 기준을 재정비하고, 현행 선거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 의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 방식을 개선 필요

2. 정책제안 공모 관련

- 심사위원회 및 선정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시민권익위원회 안건으로 운영한 점이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었으니 시정 필요

3. 의회전문도서관 관련

- 아직 전문도서관의 기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인력 예산 등이 집중 될 수 있어야 함. 그 이후 일반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바람

4. 시의회 출입 기자 관련

- 의회별관 2층 기자실 상주 기자들의 시의회 출입기자단 인정을 위한 검토 필요

5. 청사 명패 정비 관련

- 조직 개편으로 명패 교체 시 경기도의회처럼 부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것

6. 대학생 인턴십 관련

-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무 관련 안내가 부족하므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제작해 청사 안내, 드레스코드 등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
- 인턴이 작성한 정책보고서 활용 결과를 본인들에게 피드백 해줄 것

7. 조례 입안지원 관련

- 서울시의회 조례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표준 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므로 자구수정이 제대로 되어야 함. 이를 위한 자구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직원 휴게실 관련

- 양성 평등을 위해 남성 휴게실 공간을 확보하고 여성 휴게실 시설을 더 편리하게 개선해주기 바람

9. 별관2동 엘리베이터 관련

- 별관2동 엘리베이터는 1997년도에 제작되어 오래된 시설이므로 단순한 부품 교체를 넘어 추경을 통한 전면 교체 등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 필요

10. 의회 전문도서관 이미지 홍보

- 대출 기능 홍보가 아닌,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의 도서관 홍보 강화 필요

11.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

- 청소년 의회교실 심화 과정을 개설하여, 기존 과정 수료 후 더 깊이 있는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심화 과정을 신설할 필요
-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 프로그램(해통소통팀협대) 등과 연계하여 관심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 의회로 유입되는 선순환 플랫폼 구축을 제안
-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사무처와 교육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 제안

12. 의회 홍보비 집행률 관련

- 연말에 홍보비 집행이 집중되지 않고 연중 고르게 집행되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적인 집행이 필요

13. 영상 홍보 형평성 관련

- 특정 의원에게 편중되지 않고 의원 모두에게 고른 출연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작 및 송출 관리(엘리베이터 광고 등) 철저

14. 다면평가 결과 승진 반영 관련

- 다면평가 결과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일 경우, 5급 이하는 승진 제한 패널티를 부과하나 3·급은 예외 기준을 둔 것은 불공정하므로 시정 필요

15. 의정활동 지원 인력 및 조직 보강 필요

- 상임위 지원 외에 재정, 입법 등 분야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인력 배치 및 부서별 보강 필요사항 등 검토하여 개선할 것

16. 직원 인사 관련 소통 필요

- 직원 인사에 대해 사무처와 상임위원회 및 의원들과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음. 직원 인사 관련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

17.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임의 수정 불가 안내 철저

- 집행기관에서 의원의 행정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에 자의적 수정을 금지하도록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해주기 바람

18.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관련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기관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격 모독, 폭언·협박, 보복성 근무평정, 부당한 거취 강요 등 각종 제보되고 있는 상급자 갑질 의혹에 대하여 신속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규명·공개할 것
- 서울시 기준을 단순히 준용하지 말고, 시의회 조직 특성(소규모, 폐쇄성, 평가왜곡, 따돌림 위험 등)에 맞는 별도의 직장내 괴롭힘 대응 기준과 내부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사례 발생 시 조사·징계·인사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

건의사항

13건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 9건

1. 시민건강 정책 확대 운영

- 수요가 높은 건강 정책은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확대 추진하며, 사전·사후 설문조사 및 시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확대 검토

2.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

- 서울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비위·징계 집중 및 2021년 대기환경보전법상 자가측정 미시행 반복
-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차원의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 당부

3. 토지거래허가제 출구전략·해제 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해제 권한을 가진 구조에서 서울시는 객관적·세부적인 해제 기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대통령실에 공식 건의 필요

4. ‘책 읽는 한강공원’ 사업 개선 요청

- 여의도 중심으로 배정되는 ‘책 읽는 한강공원’ 예산이 권역별로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개선 필요

5. 서울런(Seoul Learn)과 입시 정책 연계

- 서울런 수강생들이 검정고시나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입시 제도 내에서 실제 학업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교육청과의 상호보완을 위한 소통 필요

6. ‘서울의 색’ 사전 준비

- 내년도 ‘서울의 색’ 개발 현황을 점검하며, 연말이 임박한 만큼 미리 준비가 필요

7. 강북권 새벽 노동자 교통 불편 문제 해소방안 검토

- 강북·경기북부 주민들이 새벽 시간대 강남·을지로로 이동하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특히 152번 등 주요 노선의 첫차 혼잡이 심각함 첫차 시간대에 한해 2대 동시 출발 등 유연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8. 시장 지시사항 처리 관련

- 시장 지시사항 중 ‘신속히·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시급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당성 검증, 행정절차, 예산 반영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도 있으니, 시장 지시라는 이유로 서둘러 추진하다가 출속 행정,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 근거와 절차에 기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9. 건강총괄관 등의 역할·권한 명확화 필요

- 민간 사업을 겸직하는 인사가 '총괄관' 명칭을 달고 시의 핵심 정책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민간 활동과 정책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총괄관 등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의회사무처 : 4건

1. 직원 업무택시 사용 관련

- 업무택시가 플랫폼 불편·홍보 미흡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플랫폼 보완·실효적 홍보 등 개선이 필요함

2. 대학생 인턴십 관련

- 행정인턴이 비회기때만 운영하고 있는데 회기 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3. 주차 관리 개선

- 회기 중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주차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필요

4. 임기제 채용 시 면접위원 관련

- 공정한 임기제 채용을 위해, 서울시립대 정책지원관 양성과정 운영 또는 강사로 활동한 자는 면접위원에서 배제하는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기타(자료제출 등)

10건

시장 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 4건

1. 한강버스 주말노선, 주중노선의 선착장별 이용객 현황
2. '25.11.15. 발생한 한강버스 사고 관련 102호 선장 사고보고서, 선박 내 CCTV 영상, 항로 준설 실적, 미래한강본부에서 측정한 수심 데이터, 지장물 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23년 6월 발생한 한강 아쿠아슬론 수영 훈련 중 사망사고 관련 시장에게 보고한 현황자료
4. 광화문KT, 동아일보 건물 등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미디어파사드(옥외 전광판)에 송출되는 서울시 광고 현황 및 홍보비 집행내역

시의회사무처 : 6건

1. 입기제 면접 시 직전 상급자 제외 관련 방침수립 여부
2. 시립대 정책지원관 양성과정 관련 강의에 출강하는 직원 명단
3. 언론홍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년 3월, 9월 사용 내역
4. '25년 9월 수석전문위원 연석회의 결과 제출
5. 의회 사진영상 자료시스템(아카이브) 비공개 자료 접근 가능한 직원 명단
6. 의회별관 카페 위치가 상반기 보고 때와 바뀐 이유 및 변경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경위

2. 행정자치위원회

□ 총괄

기관명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등)
계	375	228	107	40
비상기획관	32	17	14	1
민생사법경찰국	26	17	7	2
행정국	39	21	12	6
재무국	37	22	11	4
평생교육국	35	23	9	3
인재개발원	34	24	8	2
감사위원회	28	18	7	3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25	17	8	0
자치경찰위원회	34	19	11	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5	13	8	4
서울장학재단	22	13	7	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22	13	4	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6	11	1	4

□ 비상기획관 17건

1. 서울안전통합센터 방호시설 점검·조치 미흡 시정 필요
 - 방폭문·가스차단문 등 핵심 방호시설에서 동일 항목 불량 반복, 조치 지연, 점검·조치 기록 불일치가 확인됨. 일부 시설은 9개월 이상 방치된 사례가 있음. 비상 대응시설의 기능 상실 위험이 커 시급한 조치 체계 정비가 요구됨. 즉시 조치, 재시험, 기록 검증 등 전 과정을 재정비해 반복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함.
2. 예비비 사용·보고 절차 조례 위반 시정 필요
 -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이 다음 분기 보고 시한을 넘겨 의회에 지연 보고된 사실이 있음. 이는 예비비 보고 의무를 규정한 조례 위반에 해당함. 향후 모든 예비비 사용 건은 보고 기한을 준수하도록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절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송파 방공호 설치 관련, 당초 성동구치소 부지가 방공호 설치 장소로 선정된 사유와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하고, 방공호 설치 내용·규모·운영계획 등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아울러 정확한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고 충분한 안내·소통을 실시할 것
4. 송파구청과 해당 지역 시·구의원 등에게 사전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상 잘못이므로 이를 즉시 바로잡고, 앞으로는 사업 추진 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공유할 것
5.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경험 조사결과 32.3%가 복무 기관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 지시 남용이 23.7%로 가장 많고 이어 부당 대우, 언어 폭력, 성폭력, 성희롱, 신체 폭력 순으로 나타났음. 예방교육과 인식교육 등 사회복무요원의 건강한 복무 환경 조성 및 책임자 관리 방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방안 강구
6. 핵 대피시설은 민방위 시설로 국방부 협의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핵이나 화생방 대응시설 등은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만큼 민간인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영역을 모두 알기 어려우니 법적 기준이나 기술검증 등 충분한 설명과 검증 절차 마련
7.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은 서울시/교육부/강서구가 각각 사업비를 부담하였음.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한 안전체험관 운영비(강사료)에 대한 환수 등 조치 필요

8. 서울수복기념행사 사후평가 미실시

- 제75주년 서울수복기념행사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주요 공공 행사임에도 홍보 효과·시민참여·만족도 등 공식 사후평가가 전혀 실시되지 않음. 이는 행사 성과 검증 부재로 이어짐. 향후 유사 행사는 종료 즉시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시민참여 확대·콘텐츠 보완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9. 자치구 방독면 확보율의 구조적 격차

- 종로 116%, 광진·동작 등 55% 수준으로 자치구 간 방독면 확보율 격차가 심각함. 매칭비 부담과 보관공간 부족을 이유로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것은 비상대응 체계 취약성을 초래함. 시는 국비 의존적 관행을 탈피해 시비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하고, 확보 목표를 구체화해 자치구별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함.

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리 체계 미흡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 시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 제도개선 반영 여부 확인, 대응전략 마련 등 적극 행정이 미흡함. 국가사무임에도 지방 부담이 지속되며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 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1. 송파구 아파트 단지 지하 핵벙커 설치가 주민 홍보 없이 진행되어 지역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조치와 주민 소통을 신속히 추진할 것.

12. 안보정책자문단이 군 장성·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청년·여성 등 다양한 배경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방식을 개선할 것.

13. 예비군 수송버스 만족도 조사가 전체 예비군 규모 대비 표본 수가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향후 조사 방식과 표본 확보 방식을 개선할 것.

14. 자치구별 예비군 수송버스 예약 방식이 서로 달라 이용 혼선이 발생하므로, 예비군 모바일 앱을 통한 일원화와 체계적 홍보를 강화할 것.

15. 예비군 모바일 앱 구축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축 즉시 예비군에게 적시에 안내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16. 사회복무요원 징계·포상 통계에서 서울시의 징계율이 자치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해, 복무관리의 사전 지도·조직문화 및 제도적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할 것

17. 비상기획관 소관 16개 안보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중 서울시 재향군인회에만 보조금 지급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므로, 사업 성과와 적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재향군인회 편중 지원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마련할 것

□ 민생사법경찰국 17건

1. 바디캠·액션캠 운영기준 미이행에 대한 즉각 개선 필요
 - 의회가 요구한 바디캠·액션캠 운영규정 마련, 수사 장비 사용기준 보완은 1년간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됨. 대검 협의·내부 예규 정비 등 추진 계획만 반복 보고하고 실제 성과는 전무함. 장비 사용 확대에 비해 기준 부재는 인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즉시 규정 제정, 관리체계 확립, 진행상황 보고 필요함.
2. 청소년 마약 수사권 행사 준비 미흡에 대한 조치 필요
 - 청소년 마약사범 대응을 위한 수사권 확대 필요성은 이미 작년 지적되었으나, 올해 추진실적은 단기 교육 3회에 그치고 실질 대응체계는 미비함. 10월 개설 예정이던 '청소년 마약 SNS 신고센터'는 기한을 넘겨도 미개설 상태였음. 역할 분담, 신고 처리 절차, 경찰·교육청 협력 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임시회(내년 2월)까지 개선 계획 및 실행 현황을 보고.
3. 불법 다단계 예방을 위해 노인회·경로당 등 유관 조직과의 협력망을 강화하여 어르신 맞춤형 홍보로 전환하고, 카드뉴스 홍보 중심에서 벗어나 어르신 밀집 지역을 겨냥한 현장 경고·안내물 설치를 대폭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홍보 체계로 개선할 것
4. 올해 범죄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전무.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신고 채널 접근성 개선,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시민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5. SNS를 통해 확산되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시 모니터링·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반복 영업자에 대한 관리·대응을 강화할 것
6. 전단지 중심의 기존 홍보 방식을 탈피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학교·상담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 및 사후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7. 민생사법경찰국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장기 수사 경험 인력이 부족해 수사 품질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관 확충과 장기근속 가능한 인사체계 마련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
8. 현장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장비가 2017년 도입 후 최신 기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수사를 위해 장비 현대화와 신형 장비 도입을 신속히 추진할 것.
9. 수사정보포털 시스템의 개발·유지에 외부 업체가 일부 관여하고 있는 만큼,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할 것.

10. SNS·유튜브 기반으로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특성에 맞춘 모니터링 강화 및 AI 기반 자동 탐지 등 실효적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협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응전략 검토 마련
11. 무신고 공유숙박이 주거지에서 소음·안전·미성년자 보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초래하는 만큼, 자치구와의 공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숙박 영업을 제도권 내로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 관리·개선 방안 마련
12. 청소년 유해물품 단속 체계의 기준 및 관리 부재
 - 학교 주변 단속 중 니코틴 함유 제품 여부조차 구분되지 않고, 행정처분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자담배·니코틴 젤리·향료 젤리 등 신종 유해물품이 확산되고 있으나 별도 단속 항목 부재로 대응력이 떨어지는 상황임. 청소년 유해물품의 분류·단속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니코틴 제품을 포함한 세부 실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13. 온라인·SNS 불법 판매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력의 부재
 - SNS·온라인을 통한 불법 담배·니코틴 제품 유통 확산되고 있으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고 공식 답변함. 다른 기관과 협력 사례도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 접근 차단 효과가 미미한 상태임. 온라인 불법 유통 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타 기관과의 공동 단속 및 정보 공유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함.
14. SNS 기반으로 수사 단서가 다수 제기되고 있음에도 민사국이 자체적인 온라인 제보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 SNS 채널을 통한 제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
15. 단속·수사 건수 중심의 성과지표가 시민 체감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나이·도·파급력·환수 실적을 포함한 실질적 성과지표로 전면 개편할 것.
16. 연도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복사해 설정되는 등 목표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고 있으므로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
17. 수사 나이도, 기획수사 여부, 송치율 외에도 기소율·유죄 판결 비율 등 정성·정량 요소를 세분화해 성과지표에 반영할 것.

□ 행정국 21건

1. 최근 10년간 재임기간이 1년 이하인 서울시 실국장 및 본부장, 사업소장 현황에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도 41%로, 실국장이 업무 파악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음. 잊은 실국장 교체는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행정국은 단기적인 보상이나 순환 보직의 논리를 넘어, 해당 분야의 전문을 갖춘 인재가 충분한 기간 동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북한 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의 중복수혜 검증체계 부재
 - 사회보장 협의 조건인 “통일부 취업장려금·새출발장려금과 중복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명단 요청을 시도했으나 제공받지 못해 사전 검증 체계를 갖추지 못함. 현재는 신청자 명단을 통일부에 보내 사후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이어서 중복수혜 차단의 실효성이 낮고 정책 신뢰성이 저하됨. 정책 대상 총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구조적 보완이 필요함.
3. 공무직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저조 및 관리체계 부재
 - 공무직의 성희롱·인권·폭력·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며, 부서별 관리가 미흡한 상태임. 현업 근무·PC 부재 등을 이유로 교육이 방치되고 있고 미이수 패널티도 없어 조례상 의무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 교육을 총괄 관리할 체계 구축과 전면 개선이 요구됨.
4. 공무직 근무특성 반영한 교육 방식 도입 필요
 - 현장·교대근무로 기존 PC 기반 이러닝 참여가 어려운 사례 다수 있음. 모바일 기반 교육, 사업소 순회교육, 단시간 집합교육 등 직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함.
5. 북한인권포럼은 해외연사 항공료·연사비 등을 과도하게 편성해 놓고도 실제 집행을 못하게 되자, 애초 계획에도 없던 개회식 주제영상, 외국인 서포터즈 등의 항목을 뒤늦게 끼워 넣어 남은 예산 정산을 위해서 억지로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감지됨. 용역사의 불투명한 예산 운영에 대해 소관부서의 확실한 검수와 향후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6. 본관 서측 공사는 7차례 유찰 끝에 뒤늦게 공사비를 증액해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인 전형적 부실 추진 사례임. 게다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증액이 불가피해 보임. 향후 공공건축물 조성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지보수 난이도나 예상 관리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내부 사전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7. 사업소·원거리 근무지에서 반복 제보되는 부정·편법 근태(우회 초과근무, 외부

활동 후 복귀 기록 등)가 균절될 수 있도록 전 사업소·자치구를 대상으로 전 수 점검을 실시하고 우회 불가능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8. 대정부 건의, 국회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9. 최근 3년간 전자설문조사 및 퀴즈 운영 실적이 지속 감소하고, 참여 인원이 낮아 결과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실적 저조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또는 대안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10.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시의원 위촉에 관련한 추진현황 등을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보고·협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음. 선거구 획정은 시민 대표성, 선거 공정성, 의회 구성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능이므로 향후 소관 상임위와 보고·협의 절차를 명확하기 바람
11. 서울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의 핵심 조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규칙 또한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아 조례의 실행력과 행정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음. 서울시는 조례 및 세부지침의 정비 없이 이를 추진 근거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제도 정비 필요
12. 용산구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처럼 시민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내부 검증 등 서울시 포상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13. 조직문화 개선 성과평가 총괄부서의 성과 부진
 - 행정국은 조직문화 개선 평가를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하위권을 기록해 평가 체계의 신뢰성이 저하된 상황임. 업무 특성상 유연근무 확대가 어렵다는 사유를 제시했으나 실질적 개선조치가 부족함. 항목별 부진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초과근로 관리, 유연근무 활성화, 업무 재조정 등 구체적 개선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14.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체계의 실효성 미흡
 -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가 개인 업로드 방식으로 관리되어 등록 현황 파악이 불가하고 검증 절차도 없는 등 행정통제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항공사 시스템 차이로 전산 연계가 되지 않아 활용률 역시 매우 낮은 상태임. 업무관리시스템과 결재 연계, 자동 업로드 체계 구축, 점검 절차 마련 등 공적 자산에 걸맞은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함.
15. 장기국외연수 기회를 5·6급 등 깊은 연차 공무원에게 더욱 확대하고, 영미권 중심의 편중을 지양해 다양한 국가로 연수 기회를 넓힐 것.
16.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과 외국 도시 공무원 간 교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피드백·동문 네트워크 등 지속 가능한 교류체계를 구축할 것.

17.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낮은 소득, 높은 만성질환률·자살 생각 비율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
18.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지정 주제가 신설되며 탑다운 방식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19. 주민자치회 전환이 진행되는 시점에 서울시가 충분한 지원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0. 서울시청 공무원 연금매점이 시중가 대비 높은 가격과 상품권 사용 제한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 가격공시 및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
21. 육아시간 제도가 활용 여건이 부족하고 실질적 보상도 미흡하므로 대행수당·특별휴가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재무국 22건

1. 차기 금고 선정 절차가 곧 시작됨. 재무국은, 수십조원 규모의 서울시 자금을 관리하는 차기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관련 법정 절차와 관련 규정 준수를 통해 차기 시금고 선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
2. 금고 사회공헌·기부사업 실적 관리 부실 시정 필요함
 - 사회공헌·기부사업 실적을 정리한 자료가 부실해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됨. 금고운영 평가자료 표준화, 제출 의무 강화, 사업별 실적 검증체계 구축이 필요함.
3. 정성평가 기준 및 배점 운영의 객관성 확보 필요함
 - 1·2금고 모두 동일 은행이 선정되었음에도 정성평가 점수 차이가 존재하고,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이 불명확해 평가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음. 항목별 해석 기준 마련, 평가자 교육, 평가 기록지 보관 의무화 등 개선이 필요함. 동일 구성위원이 수행한 평가의 일관성을 검증할 체계도 마련해야 함.
4.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상정 및 절차 위반 재발 방지 필요함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건립 과정에서 사업비 30% 이상 증액·부지 변경 등 사안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무가 있음에도 의회 심의 없이 추진됨.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절차 누락이 확인됐으며 이는 조례 및 공유재산 법 위반에 해당함. 전 부서 대상 공유재산 절차 이행 점검 및 전수조사, 사전 통제 강화가 필요함.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의회 정례보고와 시의원 참여 등 앞으로도 후속조치들이 지속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바라며, 특히 시의원 임기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회의의 연속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추진하기 바람
6.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관련 분담금 및 이자 전액 연내에 조속히 환수받을 것
7. 지방세 알림톡에 자동납부 혜택은 안내되어 있으나 자동납부 방법이 없음. 자동납부 신청할 수 있는 어플 등에 연결이 필요함
8. 모범납세자 제도가 단순한 영예에 머물지 않고 세대 간 납세문화 확산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령 편중·이용률 저조 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대별 수요에 맞춘 실질적 혜택과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9.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업무에 관심을 갖고, 특히 과세기관 착오 환급금과 주소불명 등으로 환급이 안되는 부분 쟁길 것

10.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금고 약정금리 공개가 의무화되는 만큼, 공개 기준을 체계화하고 금리·수익률 검증 절차를 확립하는 한편, 금리 경쟁 심화로 사회공헌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 체계 마련 필요
11. 정부의 차등지원제 및 지방세 개편으로 서울시의 불이익 가능성 커지고 있음에도 영향 분석이 부족한 만큼, 실제 수혜·손실 규모를 신속히 산정하고 구조적 비용과 지역 격차를 반영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
12. 시금고 검사 실효성 부족 및 재검·제재 미비
 - 23~24년 금고검사에서 총 67건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조치 '종결' 이후 재검·후속 확인 절차가 전혀 운영되지 않음. 2년 연속 제재 조치가 없는 것도 실효성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됨. 시금고 검사 결과를 자료를 구축하여 반복 패턴을 관리하고, 사후 점검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함.
13.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의 절차적 하자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추천 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제외'라는 잘못된 해석을 적용하여 소관 상임위와의 협의 없이 타 상임위 의원을 추천함. 이는 조례·행동 강령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절차적 하자로 판단됨. 향후 위원 추천 시 소관 상임위 협의 및 적법한 회피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해야 함.
14. 위원 추천 관련 내부 의사결정 및 소통 절차 정비 필요
 - 위원 추천이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진행되어 오해와 절차 논란이 발생함. 향후 상임위와의 협의 - 의장 승인 - 추천 통보의 절차를 명확히 정립해 재발을 방지해야 함.
15.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과제 평가조작, 표절, 직장 내 괴롭힘,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내부 부조리가 반복된 만큼, 서울시가 최대 출연기관으로서 선제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
16. 연구원 내 비정상적 조직문화와 인권 침해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외부 발표나 조치가 미흡했던 만큼, 서울시는 관련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17.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퇴직 공무원의 '경유지'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부적절한 인사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18.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만큼, 재무국은 파견 인력과 소통 채널을 통해 감독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받고 의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
19. 올해 3월 연구원이 발표한 조직혁신 비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실행 현황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
20. 교육원 건립 명목으로 임여금을 장기간 방치한 문제를 고려해, 사업 중단 이후 대안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것

21. 동일 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전혀 차단되지 않은 채 편의·관행적 계약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즉시 중단하고, 제도의 실 효성을 확보할 강제적·전면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22.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소관 상임위 의원 배제 방침에 대하여 ▲ 왜 상위 법 위반·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 외부 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의 폐쇄성 문제를 점검해 위원 추천 구조와 풀 구성 절차 전면 재정비 ▲ 타 시·도 및 다른 상임위의 심의 참여 관행을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해 의원 참여 허용 범위의 명확한 기준 마련 ▲ 법률 자문과 의회 의견 등을 종합해 상위법 위반 없이 소관 상임위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시금고 선정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평생교육국 23건

1.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상정 및 절차 위반에 대한 시정 필요함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사업에서 2019년 목적변경, 2020년 사업비 30% 이상 증액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내부 방침만으로 추진함.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임. 향후 유사 절차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 전수점검, 재산관리관 책임 명확화, 사전심의 통제 강화가 시급함.
2. 수유 영어마을(수유캠프) 조례 폐지 이후 재산관리 불일치 문제 시정 필요함
 - 조례 폐지로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유캠프 관련 예산을 지속 편성·집행한 것은 제도취지 및 재산관리 일관성과 충돌함. 조례 폐지 당시 의회에 보고한 '재산관리관 이관' 계획도 확보되지 않아 신뢰성이 저하됨. 향후 부지 활용계획 수립, 재산관리 명확화, 예산편성 정합성 확보가 필요함.
3. 서울린 성과를 서울대·의대 합격자 수로 홍보하는 것은 학벌주의·줄세우기식 성과 자랑에 불과함. 청년을 줄 세우는 왜곡된 성과 프레임을 중단하고 정책의 본래 취지와 교육지원 성과가 드러나는 책임 있는 홍보 체계로 전환할 것
4.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의 고용승계 기준 80%는 통폐합·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평생교육국이 민간위탁이 가장 많은 실국 중 하나인 만큼, 기획조정실과 적극 협의하여 정부 가이드라인 준용, 고용승계 기준 상향(사실상 100% 전제)을 통해 강서인테넷중독예방상담센터 협약 해지와 같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
5. 향후 통폐합·위탁 전 과정에서 기존 인력과의 협의 및 고용안정 장치 의무화 필요
6. 청소년시설 49곳 중 절반이 넘는 26곳이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 정원·직급 기준을 위반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시행규칙과 실제 인력 운영의 괴리를 즉시 바로잡아 정원 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것
7.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청소년시설의 상시 업무를 비정규직·단기계약직으로 돌리는 편법 운영을 즉각 중단시키고, 인력 확충 및 쳐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정원·직급 기준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우수시설'로 선정돼 인센티브까지 받는 잘못된 평가 관행을 바로잡고, 인력·정원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감독·제재의 핵심 기준으로 강력히 적용할 것
9. 소관 출연기관 지도감독에 대한 소극적인 방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 필요

10. 청소년 비영리법인 안내와 관련된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가 2017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모든 관련 정보를 최신 기준에 맞게 신속히 정비하고 주기적 점검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11.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간 미스매칭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고령층의 전문성·경험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일자리 연계성이 강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1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25.11.11.)으로 국가·지자체의 법적 책무가 규정되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체계, 전문인력·시설 접근성 등 기본 인프라 준비가 미흡함
1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반영, 센터 지정 등 법 시행 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필요
14. 출연금 편성의 적정성 검토·사전 협의 미이행
 - 최근 3년간 출연기관 출연금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출연 동의안 편성 과정에서 평생교육국 - 출연기관 - 예산과의 사전 협의가 미흡해 의회 제출 후 대규모 감액이 반복됨. 이는 의회 심의 기능을 형식화시키고 사업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출연금 규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검토·설명 절차를 의무화해야 함.
15. 손자녀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미이행
 - 국가보훈대상 손자녀까지 지원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월 시행되었으나 사회보장협의 미완료로 실제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대상자 검증·시스템 연계·예산 반영 일정도 불명확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보건복지부 협의의 속도와 예산 반영을 병행하여 2026년부터 실제 서비스가 시행되도록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함.
16. 학교보안관 직무교육·체력관리·위기대응 체계의 실효성 부족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은 화재·응급 안전 등 기본 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침입 대응·대피 유도 등 실습형 위기 대응 훈련이 전무하여 현장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음. 교육청·자치경찰과 협력하여 모의훈련 정례화, 체력 기준의 재계약 연동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17.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례까지 제정하고 간담회·출범식·결과공유회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청소년 자율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즉시 예산반영 방안을 마련할 것

18. 서울련 논술 멘토링이 사교육 완화 목적과 달리 템플릿 기반·경험 공유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학습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교육 효과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함
19. 인재개발원 외국 공무원 대상 강의자료에 한국 대학 서열 구조(SKY·서성한·중경외시 등)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정책 홍보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국제 연수 콘텐츠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
20. 인재개발원 외국 공무원 연수 강의자료강의용 영상이 불필요한 음성 덧입히기 등 낮은 품질로 제작된 점은 교육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콘텐츠 검수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할 것.
21.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경우 협약 해지가 가능함에도, 성희롱 사건 전력이 있는 법인이 청소년시설 위탁법인으로 다시 선정된 것은 매우 부적절함. 위탁 해지기준, 심사배점, 고용승계, 업무 인수인계 등 위탁관리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여 적격자심의 평가기준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2. 위탁법인 교체 과정에서 고용 미승계 시 상담 청소년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인수인계 철저
23. 의원 질의가 있는 뒤에야 뒤늦게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하는 후처리식 행정은 시정되어야 하며,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부장·소장 전원이 공석인 상황에서 상담과 행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큰 만큼, 신뢰받던 부장 상담사 미승계로 인한 위기청소년 상담 공백과 심리적 불안을 즉시 해소할 것

□ 인재개발원 24건

1. 직장 어린이집 운영 부실 및 위탁 구조 개선 필요
 - 직장 어린이집이 저조한 이용률로 운영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인근 기업 공동설치, 외부 어린이집 협약, 특화 프로그램 도입 등 단계별 대안 추진이 지지부진해 구조적 비효율만 심화되고 있음. 위탁기관 비용 과다 지출 또한 개선되지 않아 공공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위탁 운영 구조와 운영성과를 전면 재검토해 지속 불가 시 폐원까지 포함한 근본적 조치가 필요함.
2. 강의실 활용률 저하에 대한 실질적 개선 조치 필요
 - 강의실 중 상당수가 활용률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연간 유지관리비가 집행되는 상황에서 공간방치가 지속되고 있어 행정자산 낭비가 큼. 비대면 교육 증가와 채용 축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강의실 운영 전략이 부재함. 실사용률 분석, 공간 재배치, 외부 활용 허용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강의실 자원의 비효율을 시급히 해소해야 함.
3. 소속 직원 복무 기강 및 근태 관리 강화 필요. 예컨대 ▲상호 신고 제도 마련 ▲불시 근태 점검 강화 ▲원장의 적극적인 기강 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인재원이 근태 관리의 모범을 보일 것
4. 채용시험 관련 면접 인솔·감독 업무가 고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과외 활동처럼 인식되고 있음. 특정 직원에게 몰리지 않도록 순번제 도입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5. 홈페이지 관련 반복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 필요. 예컨대 e-러닝 1.2배속~1.5배속 기능 도입은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규정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6. 통근버스 운영의 법적 근거, 안전관리 기준, 교육생·직원 구분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방침)을 마련하고, 공용·임차 차량 혼용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고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행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
7. 직원 의무교육 중 업무 병행으로 집중이 어려운 상황과 결석·지각 기준의 모호함으로 직원 불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체근무 체계와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것.
8. 직장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가 지속됨에도 운영 방식·홍보·합병 검토 등 개선이 수년간 반복 논의만 되고 있어, 실질적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결과를 명확히 제시할 것.
9. 직장어린이집이 법적 설치 기준(직장 50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적정 운영 인력 재조정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어린이집과의 협력·합병 가능성을 검토할 것.

10. 서울시 인재 정책 방향성에 있어, 신규 공무원의 이탈 요인 및 정착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체 설문·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국과 협업으로 인재 순환·정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11. 교육성과를 단순 만족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것
12. AI 교육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시간·실습 부족 등 반복되는 불만을 개선하고 직무·직급별 실습형 교육과정을 확대할 것
13.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 AI 윤리,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등 필수 교과목 신설할 것
14. 장기교육 출결·근태관리 미흡
 - 출결 체크가 수기·온라인 출석부 병행, 중간 이석·조퇴·불참 확인 체계가 부재함. 무단 결석·지각 사례가 다수 확인됨. 대리출석 가능성도 존재하여 교육 공정성과 안전관리 모두 취약함. 교육생 이석·조퇴 전용 기록체계 도입, 출결 기준 명확화, 수료·미수료 판정 기준 일원화가 필요함.
15. 교육생 위치 관리 및 안전관리 공백
 - 무단 이석·조퇴·외부 이동 시 즉각 대응 불가함. 현재 출석은 서명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시간 확인이 사실상 어려움. 강의실 내 전자출결 시스템, 강의실 외 출결 불가 기능 등 기술 기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16. 임용시험 수동 타종 방식에 따른 반복 위험 요소
 - 조작 실수로 시험 타종 오류 발생했음. 수동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며 동일 사고 재발 우려가 큼. 매뉴얼은 개정했으나 자동 타이머·경보 연동 시스템 부재로 근본적 해결이 어려움. 시험관리 이중확인 체계 강화, 타종 자동화 전환 검토, 사고 대응 매뉴얼 고도화가 필요함.
17. 외국 공무원 연수 수료생의 이메일 기반 연락망 유지가 비효율적이므로, 사후 피드백과 동문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소통체계를 재정비할 것
18. 외국도시 공무원 연수 커리큘럼이 시장의 치적사업 중심의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균형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것
19. 외국 공무원 대상 교육콘텐츠가 사교육업체 정보 제공, 대학 서열화 그래프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고 기준을 마련할 것.
20. 외국 공무원 대상 교육강의 영상에서 한국어 음성 위에 영어 음성을 덧입히는 등 품질이 낮은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영상·교안 제작방식을 전면 개선할 것

21. 국제연수 사업이 서울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확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의 전략적 기획과 품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
22. 생성형 AI 교육이 기계적 이론 중심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과정은 계획, 수료 인원의 불균형이 발생함. 수요자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실습 중심 과정 확대 할 것
23.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사전절차 지연으로 일정이 수개월 밀리면서 10월 말에나 업체가 선정되어 올해 뒤늦게 편성한 추경 예산도 불용·이월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전체 사업 일정의 도미노 지연이 우려되는 바, 더 이상의 사업 차질과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관리 철저
24. 인재원 도서실은 4만 권을 보유하고도 대여율 2.5%, AI 관련 도서 '0권' 구매라는 심각한 운영 부실을 보이고 있음. 자료 확보와 수요 반영, 도서·비도서(e북·디지털 자료 등) 구성 전반을 전면 재정비하여 운영 체계를 즉시 개선하고, 직원과 교육생에게 최대한의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

□ 감사위원회 18건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포상을 상·하반기 20건 내외로 포상하고 있으나,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된다면, 전수에 제한받지 않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경우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외부 전문가 참여 실적 저조 및 분야 간 편차 해소 필요
 - 공익감사단·안전감사오부즈만 등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3회 미만 참여 전문가가 다수 존재하여 시정 요구에도 실질적 개선이 없었음. 사업별 참여 인원 편차도 심각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외부 1명, '도시철도9호선 위탁 점검'은 외부 4명 등 불균형 존재함. 전 분야 참여 기준 재정비·적정 인원 배치·연간 참여 목표 관리가 필요함.
3.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지연 및 연장통지 누락
 - 적극행정 국민신청 건 중 다수가 법정 처리기한(60일+연장 60일)을 넘기고도 '처리 중'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연장 통지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확 인됨. 이는 적극행정 지침 위반이며, 전담부서(감사위원회)의 관리 책임이 있음. 기한 준수, 연장통지 의무화, 처리현황 전산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
4. 최근 3년간 연간감사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반복되고 계획 대비 진행 현황이 의회에 공유되지 않아 감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감사계획의 변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착수·진행·완료 현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공개하는 체계 구축
5. 감사 착수 지연과 연도 간 감사 이월로 인해 계획된 감사를 제때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연간감사계획을 연내에 완결할 수 있도록 인력·일정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부득이한 변경 시 사전 보고 및 통제장치를 마련
6. 공익감사단이 127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연간 참여 건수와 활동 인원이 매우 저조해 감사 대상의 다양성과 전문성 수요에 비해 활용률이 낮으므로, 공익감사단 운영의 효율성과 실질적 역할을 강화할 것.
7.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보호와 면책 범위가 확대된 만큼, 서울시는 관련 조례·규칙 개정과 함께 면책 기준·징계 면제 절차·재난 분야 특례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보호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8. 자치구 감사가 10년 넘게 중단되고 감사 부서 간 교류·협력도 유명무실한 만큼, 자치구 감사 기능 재정비 및 교류 협력 체계를 강화
9. 감사위원회 업무 분장과 실제 수행업무 간 괴리

-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상 규정된 감사위원회 업무와 제출된 업무분장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직무 범위가 혼선되고 있음. 주요시책 점검, 투출기관 범죄·비위 현황 등은 자료 부재로 감사 준비에 차질이 발생함. 법령·조례·업무분장 간 불일치를 즉시 정비하고, 감사대상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10.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적 부재

- 최근 3년간 면책 신청·인정 사례가 거의 없고, 2024·2025년은 신청 자체가 전무함. 제도 인지도 부족, 기각 우려, 신청 회피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나 원인 분석과 개선조치가 부족함. 기관 안내·홍보·사례 발굴·절차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제도가 실질적 적극행정 촉진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11. 직장 내 괴롭힘 조사·후속관리의 실효성 미흡

- 괴롭힘 조사 건수가 증가했으나 조사·보호·재발방지 체계는 민원 중심 사후 처리에 머물러 있음. 가해자 분리, 보호조치, 조직개선 권고 등 제도화된 후속관리 기준이 부족함. 최근 서울시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반영해 기관 책임 강화, 선제적 점검, 조사·사후관리 매뉴얼 보완이 필요함.

12. 반부패 청렴 분야 해외 교육·교류사업이 형식적 MOU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성과와 인력 TO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명확한 아웃풋을 제출할 것.

13. 안심변호사 법률 상담 건수가 2022·2023년 30건·25건에서 2024년 8건, 2025년 9월 기준 2건으로 급감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인지 부족·접근성 제약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것.

14. 안심변호사 상담이 시민이 직접 이메일로 문의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회신 여부가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맡겨져 있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할 것.

15. 안심변호사 홍보 예산이 형식적 수준(포스터·영상 제작)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적극적 홍보 전략을 마련해 시민 인지도를 높일 것

16.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문제를 단순한 만족도 차이가 아닌 조직문화·소통부족·내부 시스템 신뢰 문제로 인식하고, 구체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7.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실시한 민원인 대상 반복 문자 발송 등 단방향 캠페인이 내부 구성원의 청렴 체감도와 괴리를 만들고 있으므로,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함.

18. 내부 구성원의 공직환경에 대한 체감과 피드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청렴도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출할 것.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7건

1. 시민참여옴브즈만 활동 실적 급감 및 공공사업 참관 편중 문제
 - '2024년 활동 실적이 2025년 75% 감소했으며, 이 중 290건이 공공사업 참관으로 집중되어 있음. 일반감시·법률자문 등 본래 기능은 사실상 부재함. 이는 활동범위 협소·운영방식 변경이 원인으로 추정됨. 시민 감시체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분야별 활동비중 재조정, 업무배분 원칙 마련, 연간 실행 계획 수립이 시급함.
2. 형식적으로 운영된 민원배심제 안전 발굴 TF를 전면 재정비하여, 연간 안전 발굴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계획 대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보고할 것
3. 민원배심제가 민원인 동의·피신청 기관 동의 등 과도한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상·요건 완화 등 문턱을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충분히 숙성·정교화한 뒤,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
4. 민원배심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방문 ▲통장회의·직능단체 등 대상 맞춤형 홍보 ▲고충·집단민원 상시 모니터링 ▲시민인권배심제 등 유사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통합적으로 구축해 민원배심제의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일 것
5. 시민인권배심회의가 사실상 7년간 방치되고 시행규칙도 제정하지 않는 등 직무태만과 관리 부실로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함. 이에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 실태와 이관·관리 과정에서의 누락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인권침해구제위원회와의 관계 및 역할을 포함한 기능·대상·임기·구성·심의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조례·시행규칙 개정 및 제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보고해 주기 바람
6. 시민인권보고서 등 발간물의 미발간·미공개가 반복되고 형식 또한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발간·제작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상시 공개·배포 체계 구축 필요
7. 온라인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분산되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 창구 안내·연계 시스템을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신고·청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8. 내 지역 지킴이 사업의 자치구별 실적 격차 및 미추진 문제
 - 2024년 일부 자치구에서 보조금 매칭 미편성으로 사업이 미추진되었으며, 자치구별 실적 편차도 크게 나타남. 현장 점검·불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미추진 자치구에 대한 원인 진단과 예산

편성 독려, 운영 실적 저조 자치구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개선 조치 체계 마련이 필요함.

9. 누리집·유튜브 등 홍보 콘텐츠 운영의 부실

- 누리집은 행감 대비 급하게 업데이트된 정황이 보이며, 유튜브 홍보 영상은 이전 제작본을 짜깁기해 사용하는 등 품질·성의 부족 문제가 반복됨. 홍보 실적이 상반기에 집중되고, 크리에이터 협업 예산과 실제 제작 실적 간 불일치도 드러나 개선이 시급함.

10.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청 절차·홍보·운영방식 전반을 개선하여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일 것.

11. 인권현장탐방 집행액이 공통자료와 의원 제출자료 간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것은 기본 행정 오류이므로, 자료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출자료 일관성을 확보할 것.

12.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에 헌법기행 및 민주화 테마 등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헌법 이슈를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학생 인권·교권 등 사회적 이슈도 다루도록 할 것

13. 온라인 인권탐방 영상이 오래되고 전달력이 낮아 교육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단순 영상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체감형·현장형 교육 방식으로 콘텐츠 전면 개편이 필요함.

14. 민주화 테마 '6월길' 콘텐츠가 인재개발원 사이트에 게시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교육 품질을 확보할 것.

15. 인권·청년 정책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업 시 단순 형식적 방문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협업 구조를 더욱 강화하여 정책 연계성을 높일 것

16.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신청 TO가 남아 있음에도 '접수 종료'로 표시된 오류가 발생한 만큼, 시스템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7. 위원회 조사관들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제도적 허점 없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반적 운영 체계를 면밀히 보완할 것.

□ 자치경찰위원회 19건

1. 오토바이 불법 난폭운전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업무보고 등 자료에는 없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분명한 노력이 필요함.
2.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의 실효성 점검 필요함
 - 학교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짐에도 예방교육 내용과 방식은 정체돼 있음. SPO 1인당 담당 학교 수 과중으로 교육 품질 저하 우려가 있음. 사이버 기반 학폭 증가에도 대응체계 미흡함. SPO 인력 운영의 적정성, 교육 내용 고도화, 예방 프로그램 실효성 점검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3. 용산2가동 셉티드 사업 설계 부적합 개선 필요함
 - 용산2가동 사업은 외국인 밀집지라는 잘못된 전제와 단편적 위험요인 분석으로 추진돼 실제 주민 두려움 지표가 상승함. 침입 우려 등 지역 특성 반영이 부족했고 보안등 설치도 지연됨. 현장 정밀 진단을 다시 시행하고, 시설 설치 전략·범위·우선순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4. 동국대 산학협력단의 경찰청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의회 의결·조례 근거 없이 시장 직인이 날인된 지원 협약서(의무부담)를 발급한 경위와 법적 타당성에 대해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소지 여부까지 포함한 정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공모 선정 및 예산 집행 적법성·유효성을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하자를 시정·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5. 한강경찰대 본대 실시설계 완료되면(2026.4)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전액 확보할 것
6. 순찰정(중형선) 차질 없이 건조되는지 진행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
7. 러닝 순찰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집주행, 소음, 상의 탈의 등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순찰 코스·시간대·행동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운영지침 정비 필요
8.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형 모델의 조직·인력·사무배분 등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정부·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서울형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시민 공감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설계 및 내부 대비 체계를 강화할 방안 모색 필요
9. 주민참여순찰대가 경찰 본연의 순찰 기능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범죄 상황에서의 표준 행동지침을 명확히 하고, 안전 중심의 운영 기준 재정비 필요
10. 주민참여 순찰대의 교육내용이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점검하는 통합교육 체제를 만들기 바람

11. 주민참여 순찰대의 운영이 실질적 범죄예방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평가지표를 만들기 바람
12. 대학생 순찰대 운영의 실효성·관리 부진
 - 대학생 순찰대는 활동 편차가 크고 전산화 부재로 수기 보고 중심 운영이 지속됨. 다수 대학의 활동 실적이 극히 낮음에도 동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민 인식조사(52%) 역시 신뢰구간을 고려하면 과반 지지로 확정하기 어려워 정책 근거로 한계가 있음. 사업 유지·확대 결정 과정에서 내부 검토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구조 전반의 재검증과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함.
13. 무인단속장비 노후화 대응 및 교체계획 미흡
 - 무인단속장비 내용연수 7년 경과 장비가 2028년 이후 대폭 증가할 전망임에도, 대규모 교체 물량 증가에 대한 재원 확보 전략이 미비함. 도로교통공단의 판단에 따라 연장 사용 가능하나 장비 폭증 시 예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존재함. 노후 장비 교체 규모·예산을 정밀 분석하고 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체계적 중장기 교체계획 마련이 필요함.
14.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의 회의록이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적시에 게시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
15. 자치경찰 홍보 항목의 성과지표 단위가 매년 퍼센트→건수→퍼센트로 변경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산정 방식과 단위의 체계를 명확히 할 것.
16. 성과지표 전반이 국가사무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생활치안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1인가구·아동·생활밀착 치안 수요를 반영한 지표로 재편할 것.
17. 대학생순찰대 사업의 예산이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 제출 자료에서 서로 상이하게 기재된 만큼, 자료 작성 과정의 겸증 절차를 강화해 기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
18.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에서 성과지표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이므로, 종합감사 전까지 지표 개편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
19.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와 경찰청의 논의·소통 내역을 종합감사 전에 상세히 제출하여, 지표 조율 및 제도 개선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13건

1. 모아플랫폼 운영성과 저조에 대한 개선 필요

- 가입자 6,132명 중 실제 활동자는 1,244명에 불과하고, 신규 가입 또한 전년도 대비 감소한 상태임. 플랫폼 활성화 전략이 부재한 만큼, 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근거 기반의 개선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2. 자원봉사 활동이 고령층에 편중된 만큼, 30~40대가 참여할 수 있는 직장연계·가족봉사 등 청·장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개발하고, 젊은 층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인정체계를 강화할 것

3.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의 혜택이 현재 8개 시립 체육시설에 제한된 만큼, 공공시설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혜택 범위와 운영기준을 구체화 한 확대계획을 마련해야 함. 또한 고령층 중심의 수혜 구조를 감안하여, 젊은 층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제공 방안 역시 검토할 것

4.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가 과도한 발급 기준(10,000시간)과 제한된 혜택으로 인해 실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만큼, 발급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바로봉사단 교육·훈련 인원 급감

- 바로봉사단은 협약기관과 인원은 늘었으나, 교육·훈련 이수 인원은 급감함. 재난 대응을 위한 전문 역량 확보 없이 인원만 확대될 경우 현장 혼란과 봉사자 안전위험이 커질 수 있음. 서울 재난 특성에 맞는 정기·체계적 교육계획 을 재수립하고 이수율을 관리·보고할 필요가 있음.

6. 만 시간 이상 봉사자 포상제도 실효성 부족

- 만 시간 이상 봉사자 대부분이 60세 이상 여성임에도 혜택은 체육시설·경기장 티켓 할인 등으로 구성돼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음. 이미 고령층 일반 할인과 중복되는 혜택이 많고, 실질적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음. 제도 목적(장기 봉사자의 예우)에 비춰 포상 내용과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7. 청소년 봉사학습 프로그램 참여학교·참여학생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8. 자치구별 참여신청 편차가 큰 만큼, 학교장 대상 설득과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 기회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것.

9. 구로의 경우 예산 전액 반납 사례가 발생했는데 향후 프로그램 운영 구조에 허점이 없도록 예산 집행 과정의 점검과 기준을 명확히 할 것.

10. 자치구에서 실시한 봉사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족도 조사 의무화를 철저히 이행하고 결과 취합을 체계화할 것.
11. 양적 실적보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교육 콘텐츠 강화에 집중할 것
12. 최근 3년간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가 크게 감소한 만큼 교육지원청·자치구와의 협업을 강화해 참여 편차 완화 및 홍보방식을 개선할 것.
13. 자원봉사 유공 표창은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낼 게 아니라,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활동하고 애로사항을 공개적으로 청취해 자원봉사 참여를 실질적으로 독려할 것

□ 서울장학재단 13건

1. 예체능 장학금 지원 분야 확대 검토 미이행 문제 시정 필요함
 - 작년 행감에서 예체능 장학금 분야 확대로 'e-스포츠·연기·영화·모델' 검토가 요구되었으나 올해 추진 실적이 없음. 전의 수용 이후에도 검토자료·현황분석 없이 동일 예산만 반복 집행하는 등 후속 조치가 부재함. 장학금 목적(저소득 예체능 학생 지원)에 부합하는 학교 기반·수요 기반 분석 후 확장 가능 분야 재검토가 필요함.
2. 직원 내부만족도 저하 원인 분석 및 개선 필요함
 - 2023~2024년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단순 인원 증원(2명) 외 구조적 개선 조치가 없었음. 업무 과중·경력 관리·이직 요인 등 내부 조직 진단 및 중장기 조직문화 개선계획 마련이 필요함.
3. 교육봉사단이 단기·소규모 운영에 머물러 참여 지속성과 교육효과가 낮게 나타난 만큼, 복지관 중심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혜자 특성과 장학생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로 개선 바람
4. 참여 인원 중심의 현행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역량 변화·만족도·지속 참여율 등을 포함한 정량·정성 기반의 성과지표를 구축하고 장학정책 전반에 환류되는 평가체계 마련
5. AI 서울테크 장학금 운영의 구조적 한계
 - AI 서울테크 장학금은 학기 개시 이후 선발로 인해 인재 유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음. 수혜자의 주소지 조건이 없어 정착형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일부 장학생은 기업 취업 연계 계약학과로 전입해 지급 정지가 발생했으나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함. 선발 시기 조정·주소지 기준 강화·환수 절차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6. 장학금 사후관리 및 이탈 원인 분석 체계 부족
 - 장학금 지급 정지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탈 사유·유형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데이터가 부재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되지 못함. 장학생의 학적 변경, 취업 연계 이탈 등 유형별 사유를 체계화해 관리하고 지급 정지 및 환수 조항을 명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장학사업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단의 관리 지표 정비가 요구됨.
7. 서울 선순환 인재 장학금 평가체계의 한계
 - 현행 평가는 활동 회기수·참여 횟수 등 정량항목 중심으로 구성돼 멘토링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함. 장학금 지급 직후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 결과가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함. 질적 평가 도입, 조사 시기 분리, 멘티 성장효과 반영 등 체계 보완이 필요함.

8. 서울런 멘토단 중 일부에게만 선순환 인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필요성과 목적이 불명확하므로, 선발 이유·평가 기준·TO 산정근거 등을 명확히 정비할 것.
9. 최근 3년간 장학 심사위원 명단이 반복적으로 동일 인물로 구성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심사위원 풀을 확대하고 분야·배경 다양성을 확보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10. 장학사업 심사에서 학계 위주의 단일한 인력 구성은 평가 편향과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료·시민사회·실무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을 포함한 심사 체계를 구축할 것.
11. 장학생 졸업생의 취업·창업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유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장기적 관계 형성이 미흡하므로, 연락 체계 구축과 정기적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
12. 중앙정부의 글로벌 스칼라십 사례처럼 장기적 연락 두절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장학생 선정 때부터 졸업 후 보고·참여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3. 서울테크스칼러십(외국인 이공계 석사 장학사업)이 2년 연속 목표 대비 실적이 크게 미달하고 있음. 사업 구조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13건

1.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편차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함
 - 이용자 중 약 59%가 사용액 0원, 전액 사용 약 29%, 중간 구간은 12% 미만으로 극단적 양극화가 발생함. 특히 자치구별로도 지역 편차가 큼. 접근성 문제, 기관 프로그램 난이도 부적합 등 구조적 원인 파악 후, 사용률 제고 및 기관별 편중 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보험 가입의 법적 근거 미비 및 절차 검증 필요함
 - 평생교육진흥원은 2025년 1월 1일~5월 18일 조례 제정 이전 기간에 영조 물배상보험·시설물 재해보험을 이미 체결한 상태임. 해당 기간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이 이루어졌고, 내부 검토·결제 과정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음.
3. 최근 3년간 저연차 직원의 의원면직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업무 과부하 등 내부 요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조직문화와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 보완이 필요
4. 리테크 사업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최근 영테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시민 수요 조사 방식이 연도별로 불균형하고 참여 인원이 급감한 만큼, 온라인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병행 등 수요조사 체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시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조사 기반 마련 필요
6. 프로그램 성과평가에서 정성·정량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체계를 재정비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 필요
7.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25.11.11.)으로 지자체의 법적 책무가 규정된 만큼, 조례 개정·예산 확보 등 법 시행 전에 필요한 준비체계를 신속히 정비할 것
8. 시민대학 박사과정이 단일 전공으로 운영되며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으므로, 다양한 전공을 개설해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
9. 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이용률이 10대·20대·30대 등 청년층에서 지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세대별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것.
10. 10대·20대 청소년·청년층이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 학생 등 잠재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참여 확대 전략을 마련할 것.
11. 5060 넥스트 아카데미와 청소년 연계 프로그램은 긍정적 사례이나, 단일 사

례로 그치지 않도록 전 세대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할 것.

12. 2030세대 프로그램 예산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층 대상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13.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전면 점검하고, 이용권 모니터링 강화, 부정 사용에 대한 주의 및 조치에 대한 안내·홍보, 이용기관 관리 철저 등의 평생교육이용권 부정 사용 방지 대책 마련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1건

1. 운영 규정 위반 대관 반복 및 관리 부실

- 캠퍼스에서 표영호TV·디플로코리아·풀무원 녹즙 등 상업·종교성·홍보성 목적의 대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 운영규정(정치·종교·상업 목적 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들이 다수 누적되고 있음. 특히 특정 유튜버 대관의 반복 승인, 후원사 홍보 포함, 목적 미검증 등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가 미흡함. 대관 승인 기준 재정비·사전 검토 강화·승인 책임체계 확립·반복대관 차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내부 모니터링 및 운영 기록의 부정확성

- 여러 건에서 대관 목적·참여 대상·사후 점검 결과가 실제 운영 내용과 불일치 함. “시민 대상” 표기에도 참여자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일부 자료는 표기 오류·조치 누락 등 행정기록 신뢰성에 문제 있음. 사전 심사·현장 확인·사후 검증의 3단계 기록 체계 구축과 자료 제출 시 정확성 검증 절차 마련이 요구됨.

3. 최근 3년간 평균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의원면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조직 안정성·승진 적체·근무환경 등 구조적 요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인사·복지·조직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개선이 필요

4. 최근 3년간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의 취업률이 5% 이하에 머물고 있어 예산 대비 고용성과가 매우 낮은 만큼, 행사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구직자 경력·직종 수요 분석에 기반한 실질적 일자리 연계 체계로 전환 필요

5.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참여기업 품질 편차와 구인·구직 미스매칭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기업 참여 요건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등 성과 중심의 구조 개편을 추진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효율적 지원 모델 마련 필요

6. 재단의 고유 사업(40~64세 중장년 지원)과 시니어 민간일자리 대행 업무 간의 역할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재단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 필요

7. 세대(신노년층)의 특성(높은 교육수준, 전문직 등)을 반영 전문화·고도화 및 미스매칭 해소 필요

8. 중장년 일자리 지원 참여자는 대폭 증가했으나 취·창업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

9.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가 일부 사업에서 미시행되고 있어 참여자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모든 주요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이고 신뢰도 있는 만족도 조사 체계를 구축할 것.

10. 외부 만족도 하락 원인이 증가한 탈락자·불만족자 비율과 관련된 만큼, 프로그램 품질·연계성과를 강화해 체감 성과를 개선할 것.
11.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신고 조사 절차 적절성 여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 점검 결과 개선 포함 조직문화 개선과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 데에 적극적 노력 필요

□ 비상기획관 14건

1. 방호시설 유지관리 체계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필요
 - 재난·테러 대응의 핵심 시설 특성상 점검 지연과 기록 오류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됨. 예산 부족·부품 조달 지연을 이유로 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산 확보 및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함. 점검 항목, 조치 결과, 검증 내역을 표준화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예비비 의존 감소를 위한 정식 예산 편성 검토 필요
 - 북한 풍선살포 피해는 반복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매년 예비비 사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국가·지자체 매칭 제도 도입에 따라 정식 예산 편성 또는 추경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반복 예비비 사용을 줄이고 안정적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디펜스서울 정책 추진 시 정치적·사회적 논쟁 가능성을 유념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
4. 송파 핵 대피시설 설치 관련 송파지역 주민들에게 위험한 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시설의 목적과 운영방식 등 충분하게 홍보하고, 평시 핵 비상상황 대비 체험관으로 활용 건의
5. 송파 핵 대피시설 평시 체육시설 전환이 즉시 작동 가능한지 궁금하며, 체육 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비상사태 발생 대비 전환 모의 훈련이 필요
6. 송파 핵 대피시설 설치 관련 행안부 민방위 대피소 설치기준과 국방부 방호시설 기준이 서로 다른데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토의와 협의 필요
7. 송파 핵 대피시설 설치 관련 시설 완공후 관리주체에 있어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토의와 검토 필요
8. 디펜스2030 추가질의 임. 송파지역 핵 대피시설 관련, 향후 확대 추진하게 될 경우 타 지역 확산 및 안테나 속 모범사례를 반영한 시행착오 최소화, 예산 등 계획을 잘 추진하기 바람
9. 핵방공호 및 대피 인프라 확충 전략 필요
 -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의 핵방공호 사례처럼, 서울 전역의 대피시설 확충 전략이 필요함. 현재 대피소 비상물품 보급률은 매우 낮고, 지역별 편차로 인해

위기 시 시민 안전 보장이 어려움. 대피소 현대화, 노후 지하공간 활용, 구별 대피수요 분석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 있음.

10. 안보정책자문단 회의가 국가안보 이슈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의 직접적 연계성이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실효적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운영 방향을 조정할 것.
11.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가 모 연예인 논란 이후 시장 지시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해, 기존 상임위 권고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
12. 사회복무요원 복무 점검 횟수는 유사함에도 징계율이 서울시에만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해 조직문화·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
13. 비상기획관 소관 온라인 플랫폼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2026년부터 실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14. 민방위 관련 용역에서 동일 업체의 반복 수의계약·단독응찰 구조가 고착화된 경위와 제도적 원인을 전면 점검하고, 수의계약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등 신규 업체 경쟁 촉진 및 동일업체 3년 연속 수의계약 시 재검토 의무화 등 제도 개선방안 필요

□ 민생사법경찰국 7건

1. 마약·불법시술(투스잼) 등 신종 위해행위 상시 모니터링 필요
 - 투스잼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이 있으나 서울시 내 단속·신고·수사 의뢰가 전무함. SNS·1인 뷰티샵 중심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모니터링, 탐지체계 구축, 전문기관 협업 등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함. 시민 건강 피해 발생 전 대응 기반을 갖출 것을 권고함.
2. 민생 침해범죄 신고센터·응답소 통합 운영의 실효성 점검 필요
 - 응답소 통합 이후 관련 민원 0건은 실적이 아닌 모니터링 실패 가능성이 높음. 통합 효과·불편 사례 조사, 신고 처리 흐름 점검, 모니터링 결과의 주기적 공개 등 운영 실효성 강화가 필요함.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연중점검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3.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불법전단 기획 단속을 사실상 중단하고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음. 대포킬러 중심의 전화번호 차단 대책뿐 아니라 QR코드·VOIP 등 신종 수법까지 포괄하는 선제적 기획 단속과 실효성 있는 수사·차단 체계를 마련할 필요
4. 예방 중심의 청소년 흡연·유해물품 대응체계 강화
 - 단속만으로는 청소년 흡연과 신종 니코틴 제품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청·보건소·경찰과의 예방 교육 및 정보 연계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학교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 확대, 무인 전자담배기의 성인 인증 사각지대 점검, 온라인 유통 위험 정보 공유 등 다기관 협력 기반의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5. 범죄심리·과학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 등 유관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수사 역량 제고할 것
6. 국내 훈련·국외 훈련 등 직원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저조한 수준이므로 중장기적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연수 기회를 확대할 것.
7.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교체하고도 분석 실적은 줄고, 최신 스마트폰은 분석을 못 하며, 7~8년째 방치된 구형 분석 S/W와 구시대적 수사방식으로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고가 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최신 기종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수사기법·전문인력 등 전반을 혁신해야 함

□ 행정국 12건

1. 근속장려금의 사전 검증체계 구축 필요

- 통일부 지급 이력과 연동되지 않아 서울시 자체적으로 중복수혜 가능 인원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조임. 사전 조회가 가능하도록 통일부와 정례 협의, 데 이터 연동 방식 개선, 신청단계 확인 절차 신설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함.

2. 공무직 교육의 의무화·평가체계 강화

-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집합 혼합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현업 직종에 맞춘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함. 미이수 패널티와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인권 침해 예방 중심의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공무직 교육·근태 관리 총괄체계 강화 필요

- 현재 공무직 교육은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어 전체 실태 파악이 어렵고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함. 행정국이 총괄부서로서 교육계획 수립, 실적 취합, 미이수 확인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중앙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 있음.

4.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서 신생단체 중심으로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 집행(3년간 83건, 약 1억 환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교육·컨설팅 강화 ▲회계 능력 부족 단체를 위한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을 지속·발전시킬 것

5. 서울시 - 의회 간 상호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5급 이하 중심) 대상 의회 역할·업무 방식 교육을 정례화하거나 실질적 소통체계 구축, 대의회 업무 인력 확충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6. 광역이 다른 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 관심과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바람

7. 자치구별로 상이한 어르신 버스비 환급제도로 주민 간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반복되는 만큼, 광역 차원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

8. 항공사 협약 확대를 통한 공적 마일리지 활용성 제고

- 공용계정 도입, 제약 완화 협의, 기부 프로그램 확대, 항공사 간 제도 편차 해소 등 실질적 공공환원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공적 마일리지의 사회공헌 전환체계 보완

- 현행 기부는 개인 자발성에 의존하고 구매 방식은 금전적 환원 흐름이 체계적

으로 관리되지 않아 공공성이 취약함. 복지·자원봉사 연계 기금화,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기부 인센티브 부여 등 공적 마일리지의 사회 환원 효과를 높이는 제도 보완이 필요함.

10. 청년·외국인·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관련 사업과 연계해 서울시 주민자치 참여모델을 강화할 것.
11. 저연차 공무원들의 높은 퇴직률과 생활여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 자금 지원·복지포인트 등 형식적 처우 개선을 넘어서 '대도시 수당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협상할 것
12. 질병휴직의 근본 원인인 과중한 업무와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 상담 전문성 강화 ▲복귀 직원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우수 한시임기제의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업무 조정 등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재무국 11건

1. 복수금고제 취지에 맞는 운영기준 정비 필요함
 - 현행 체계에서는 1·2금고 모두 동일 은행이 지정돼 복수금고제의 경쟁·견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됨. 금리·서비스 비교기능 강화를 위해 동일은행의 중복 수임을 제한하는 기준 마련, 회계 특성별 차등평가 방식 검토 등이 필요함.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례 또는 심사기준 개편이 요구됨.
2. 금고 지점 축소에 따른 시민편의 영향 분석 필요함
 - 신한은행 영업점 축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방문 불편, 세입·세출 업무 처리 부담 증가가 우려됨. 금고 지정 시 지점수·ATM 접근성 등을 정성평가 요소로 강화하고, 향후 금고 운영점포 변동을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포함할 필요 있음.
3. 차기 시금고 선정 관련하여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없이 공정한 진행이 필요
4.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간의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기준·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
5.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방안 모색이 필요
6. 시금고 검사결과의 평가 연계 필요
 - 지적사항이 반복되며 검사·개선 구조가 형식화되고 있어 금고 재지정 평가와 연동하는 체계가 필요함. 지적유형·빈도·조치이행 등을 정량화하여 금고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반복 지적 시 감점·조건 조정 등 실질적 조치를 검토해야 함.
7. 과세전 적부심 급증 사안에 대한 사전 컨설팅 체계 구축
 -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과세 기준 불명확으로 24년에 적부심이 폭증함. 표준안 이전 단계에서 지침 부재로 주민 불편과 행정 낭비가 발생함. 향후 유사 쟁점 발생 시 사전 안내·컨설팅·지침 조기 마련을 통해 불복 누적을 방지해야 함.
8. 연구원이 기부금·출연금 구조 속에서 사실상 행안부가 관리하는 이중 구조가 조직 관리 부실을 초래한 만큼, 서울시가 정책 건의 등 적극적 개선 역할을 수행할 것

9. 연구원의 누적 잉여금이 100억 원 이상 쌓여 있음에도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잉여금 사용 계획을 구체화해 의회에 제출하고 필요 시 회수 방안을 검토할 것
10. 지방세연구원 문제를 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국가적 의제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현안의 심각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1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과 관련하여 재산별 주관부서가 각각 달라 안내 내용이 제각각일 우려가 있으므로, 재무국이 이미 납부한 임대료 환급(상계) 방식 등 감면 처리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전 부서에 통일된 내용으로 안내·관리할 것. 아울러 임대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약 203억 원 규모의 세입 감소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정 보전방안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

□ 평생교육국 9건

1. 수유캠프 부지 활용방안 조속 마련 필요함

- 위탁 종료 후 3년 이상 방치되어 기본 유지·관리비만 소요되고 있음. 조례도 폐지되어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한 만큼 공공·교육·청소년 프로그램 등 대체 활용모델 설계, 관련 부처 협의, 부지 재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필요 있음.

2. 친환경 급식 공급체계 중 유치원 공급망 개선 필요함

- 유치원의 만족도가 학교 대비 현저히 낮고, 공급망·대면수령·물류 제약 등 구조적 한계가 있음. 유치원 전용 소단량 배송체계 구축, 교육청과의 지침 협업, 분기별 만족도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유치원 급식 공급 접근성 개선이 요구됨.

3.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실효성 제고

- 500만원 회비를 납부하며 가입했으나, 가입 이후 활동은 직원 1명 행사 참석에 그치고 교류·우수사례 확산 실적이 미미함.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교류 계획 수립, 우수사례 발표 준비, 벤치마킹 체계 마련, 위원회 공유 등을 통해 실질적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4. 든든급식 자치구별 이용 격차 해소

- 자치구별 편차가 큰 상황을 고려하여 비참여 기관 의견수렴, 집중 홍보, 원장 설명회 확대, 품질관리 보완을 통해 참여 격차를 완화해야 함.

5.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면서도 청소년·대안교육 관련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6. 서울런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교육 연계성, 사교육 종속성 완화 여부, 다양한 교육 콘텐츠 확충 등 전면적 개편 방향을 마련할 것.

7. 서울런이 민선8기 이후에도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대상의 공공교육 기능 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것

8. 평생교육국 보도자료는 서울런 사업 홍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친환경급식과 사업 홍보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평생교육, 청소년정책, 친환경급식 등 전체 소관 업무가 고르게 드러나도록 균형 있게 작성·배포할 것

9. 친환경급식과의 역할과 기능 개편 검토 필요. 조직과 인력 개편까지도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인재개발원 8건

1. 직장 어린이집 기능 강화 위한 대체·특화 프로그램 도입 검토 바람
 - 운영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 보육 기능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짐. 영어·예체능 등 특화 프로그램을 시간제 대체교사 활용 방식으로 운영하고 인근 어린이집과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이용률 제고가 가능함.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사례도 참고하여 대체적 운영모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강의실 활용도 제고 위한 대규모·실무 중심 과정 재편 필요
 - 하반기 대규모 집합 교육이 종료되면 일일 교육생 수가 급감하고 있음. 승진·정년과정 등 대규모 교육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중 분산 운영하고, 실무·현장 적용형 장기교육 확대를 통해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음. 교육생 동아리·모임을 내부공간에 수용하는 것도 활용률 개선에 실익이 있음.
3.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LMS) 구축 시,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요구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용 편의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바람
4. 신규 공무원의 채용·교육·정착 등 서울시 공직사회의 인재 순환 구조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청년층의 공직 기피 현상을 단순한 외부 요인으로 보지 말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것
5. 정책목표인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의 개념·범위·추진전략을 명확히 재정립할 것
6. 전자출결·자동화 기반 관리체계 도입 필요
 - 현 출결관리 방식은 대리출석, 무단 이석, 재실 확인 누락 등 허점이 많음. 대학 등에서 도입한 강의실 내 전자출결, 위치 기반 자동 체크, 이탈 시 자동 기록 시스템 등을 참고해 단계적으로 도입 필요함. 비용 추계와 시범 적용 후 확대 시행 검토가 요구됨.
7. 신규 공무원 조기퇴직 대응을 위한 조직적 관리체계 구축
 - 신규 임용자의 1년 내 퇴직률이 상승해 조직 적응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 신임교육 종료 후 현업 배치 모니터링, 적응도 조사, 부서 근무 강도 분석, 보호배치 기준 마련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퇴직 사유 정기 분석 및 교육 피드백 반영도 병행해야 함.
8.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LMS)의 ‘AI기반 지능형 학습서비스’는 형식적인 AI 적용이 아니라, 학습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학습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개인 맞춤형 피드백과 학습 성취 향상을 실제로 구현·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축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 7건

1. 외부전문가 배치 기준의 명확화 및 분야별 운영 개선 필요
 - 외부 전문과 배치의 차이는 감사의 형평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 있음. 사안 중요도·위험도 기반 배치기준 마련, 분야별 외부인력풀 확대, 참여 실적 공개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균형성을 높일 필요 있음.
2. 서울시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적발이 3년간 140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에도 과태료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어 체계 개선이 필요함. 특히 소방직에 집중되는 임의취업의 구조적 원인과 시행령 개정 건의의 타당성(임의취업 양성화 우려) 등을 포함해 문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과태료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의무교육·자동알림·대상조회 등)를 구축할 것
3.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 규명과 징계 조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자치구 책임기관에 대한 후속 감사·조치가 미흡한 만큼, 감사위원회는 행안부 감사결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체계 마련
4. 투출기관 포함 감사범위·절차의 명확한 기준 설정
 - 투출기관의 범죄·비위 통보 여부 및 점검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감사 수행 근거가 혼재함. 투출기관 감사기능 확대 정책과 연계해 통보체계, 점검항목, 후속조치 기준을 표준화해야 함. 기관 간 책임 배분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하는 지침이 필요함.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기관책임 체계 강화
 - 조사 증가 및 법원의 배상책임 확대 판례를 고려해, 감사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상시 모니터링·위험부서 특별점검 등 예방중심 체계를 강화해야 함. 행정국·인사부서와 협업해 개념 정의·조사절차·문서화·교육·사후관리 기준을 통합한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6. 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포함되는 사례가 있어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됨. 이에 위원 위촉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기준과 검증 체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할 것.
7. 부서·출연기관별로 제각각 처리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로 민원·분쟁·감사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음. 감사위원회와 재무국이 협력해 무단점유·변상금·사용료·협의 절차 등을 아우르는 통일된 표준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 담당자가 감사 지적이나 민원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8건

1. 운영방식 변화에 따른 효과성 평가 및 균형된 감시체계 구축 필요
 - '센터는 공공사업 중심의 참관을 강화했으나, 이는 감시영역의 편중을 초래하여 제도 본래의 '다분야 시민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향후에는 운영방식 변화의 효과 평가, 분야별 사각지대 점검 강화, 전문가 참여 확대, 온라인·사이버 기반 감시 도입 등으로 감시 영역 간 균형을 확보할 필요 있음.
2. 민원 처리 결과가 권고 수준에 머물고 갈등 해소가 충분하지 않으며 조사·권고 결과의 공개 및 사후 모니터링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후속조치 점검을 강화해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것
3. 홍보 체계 전면 개편 및 검수 절차 강화
 - 유지관리 업체와 내부 직원 간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게시물 검수·업로드 절차를 표준화해야 함. 영상 제작 시 사전 검수제 도입, 품질 기준 설정, 연간 홍보계획 수립을 통해 반복 지적을 예방할 필요 있음. 필요 시 전문 인력을 부분 위탁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함.
4. 내 지역 지킴이 사업의 균형 운영 유도
 - 자치구 예산 편성 단계부터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 안내·워크숍·성과 공유회를 강화하고, 실적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와 저조 자치구 맞춤 지원을 병행해야 함. 주민 체감도 조사, 월별 모니터링 결과 공개 등 투명성 강화도 필요함.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누락·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단계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원 재접수 시 다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보완할 것.
6. 직권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민원인이 내용에 동의하지 못해 장기간 갈등이 지속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민원 처리 이후 사후 피드백 절차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이의 제기가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
7. 특정 민원 사례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정황이 제기된 만큼, 조사관 교육·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8. 장기간 이어지는 민원·분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 유형에 따른 처리 프로세스와 사후관리 기준을 정비해 민원인의 신뢰를 높일 것.

□ 자치경찰위원회 11건

1.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함
 - 권역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셉테드 추진은 실효성이 떨어짐. 용산2가동 사례처럼 단독주택 밀집, 외부 침입 취약도, 야간 보행 동선 등 실제 위험 요인을 기반으로 한 정밀 설계가 필요함. 향후 사업 선정 단계에서 사전 현장조사 의무화, 주민 반응 반영 절차 강화 등 지역 맞춤형 기준을 도입할 것을 권고함.
2. 외국인 관광객 폭증 상황에서 관광경찰대 폐지는 서울 치안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조치임. 기존 기동순찰대 4개 대 중 1개 대를 전담 관광경찰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지하철경찰대 인사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4. 자치경찰위원회의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관 활동이 요구됨. 경찰청, 중앙정부 등과 정책 협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협력 채널을 마련하기 바람
5. 러닝순찰대들이 달릴 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 있고 주로 자전거길을 이용하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함. 고민을 해보시고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앞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기 바람
6. 대학생 순찰대 운영체계 재구조화 필요
 -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 실적 차등 지원, 전산화 도입, 활동 검증 체계 마련 등이 요구됨. 학점 인정 또는 장학금 연계가 일부 대학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활성화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예산 규모(800만 원)가 과소해 실질적 운영이 어려운 만큼 예산 현실화, 앱 기반 활동 관리 등 사업 전면 재구조화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 있음.
7. 대규모 행사 교통·안전관리 장비의 보완체계 구축
 -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별도 보조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됨. CCTV·무전기 등 기존 수단은 있으나 현장 비상벨 등 즉각적 알림체계는 설치 빈도가 낮음. 다중운집 장소 중심으로 비상벨·센서 등 보조 장치를 검토해 돌발 상황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8.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도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입장이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 속도를 높이고 구체적 기여를 강화할 것.
9. 전국 위원장 협의회 및 연구용역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성과지표 체계 개편안을 선제적으로 설계해 경찰청과 적극 협의할 것.

10. 경찰청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 평가 지표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평가 지표 간의 차이와 연계성을 명확히 파악해, 시민 체감성과 연계된 공통 기준을 검토할 것.
11. 한강경찰대 센터 이전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변화된 치안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임. 추진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분석하고 파악해서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8건

1. 새 브랜드명 ‘한마음 서울’과 캐릭터가 단순히 도입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시 기존 캐릭터처럼 활용이 부진한 사례를 반복하지 말고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세계관·아이템까지 연계하는 지속 가능하고 적극적인 캐릭터 활용 전략과 플랫폼을 마련할 것
2. 외국인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봉사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센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문화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홍보를 확대해 외국인 봉사자를 적극 발굴·확충할 것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자원봉사 관리·발급 시스템이 중단된 사례를 감안하여, 유사 상황에서도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 대응 매뉴얼과 복구체계를 마련할 것
4. 고령 봉사자 맞춤형 복지형 보상체계 마련
 - 장기 봉사자의 연령·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체육·티켓 할인보다는 건강검진, 문화행사 초청, 휴식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형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음. 고령 봉사자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메뉴를 재설계해 봉사 지속 의욕을 높이고, 형식적 포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5. 시·구 장기봉사 포상제도 중복 최소화
 - 시 자원봉사센터의 만 시간 인증과 25개 자치구 장기봉사 포상이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면서 동일 봉사시간을 시·구가 각각 검증·포상하는 행정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중복포상 방지 원칙, 정보공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초중고등학교 자원봉사 의무교육 폐지에 따른 참여 감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자치구·학교와의 정례 협의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
7. 새로 개발 중인 봉사교육 교재가 현장 적용 시 효과적일 수 있도록 완성 후 공유하고, 학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
8. 코이카 연계 해외 자원봉사 사업은 국가 위상 및 K-컬처 확산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과 여건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마련할 것

□ 서울장학재단 7건

1. 교육청 특성화학교 장학금과의 중복검토 필요
 - 예체능 장학금과 교육청의 특성화학교 지원사업 간 대상·목적·지원항목 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분야별 학교 분포를 세밀히 조사하여 중복 방지 기준 마련·지원 분야 구조조정·심사기준 세분화가 필요함.
2. 장학생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봉사단을 다른 장학사업과 연계해 지속 운영 가능한 사회공헌형 장학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3. AI 분야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연구·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서울테크대학원의 장학금 지원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
4. 서울 거주 기반 정착형 인재 전략 마련
 - AI 서울테크 장학생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착형 인재 육성 취지와 어긋남. 주소지 이전 의무화, 서울 실거주 가산점 부여 등 정착 유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울 산업 생태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활동 관리도 요구됨.
5. 서울 선순환 인재 장학금의 질적 성과관리 강화
 - 멘토링의 사회적 파급력, 관계 지속성, 멘티의 후속 성장 등 질적 지표 도입이 필요함. 장학 종료 직후가 아닌 일정 기간 이후 만족도 재조사, 장기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함. 이를 통해 멘토 - 멘티 간 지속적 역량 순환 모델을 구축할 필요 있음.
6.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은 선발 목표(50명)를 거의 충족했음에도(49명) 2억 예산 중 9월 말 기준 집행액이 1억 미만에 불과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 개선
7. 서울테크스칼러십 장학사업 운영 현황 및 지원자 부족 사유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4건

1. 평생교육 이용권 지표 개편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 강화 필요함
 - 현재 이용권 관리 지표가 '소진율' 중심이어서 실질적 학습 효과를 반영하지 못함. '지속률·만족도·학습성과' 중심의 지표로 개편 필요함. 또한 고령층 친화 프로그램 확대 및 기관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있음.
2. 박사과정 전공을 역사·문화 분야로만 제한한 것은 운영 효율을 위한 과도한 축소로 보이므로, 자연과학·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를 검토할 것.
3. 평생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이 세대별로 다르게 인식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청소년·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가치와 목적을 명확히 정립할 것
4.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이 대상·성격 면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년층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정립할 것.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건

1. 직원 대상 대관규정 재교육 및 캠퍼스별 관리 기준 통일 필요

- 캠퍼스별 대관 승인 기준이 상이하고, 담당자 판단에 의존해 일관성 없는 승인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상업·종교적 성격의 콘텐츠를 식별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따라서 전 직원 대상 정기 교육, 사례 기반 체크리스트 개발, 캠퍼스별 운영 기준의 통합 표준안 수립이 필요함. 또한 홍보성 콘텐츠·후원사 연계 행사에 대한 별도 금지 조항 강화도 검토해야 함.

□ 비상기획관 1건

1. 방독면 확보 및 관리 기준의 정밀 재설정 필요
 - 현행 방독면 공급은 매칭사업 특성상 자치구 의지·예산에 따라 격차가 발생함. 이는 서울 전체 방호 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확보목표 상향·보관 시설 확충·취약구 우선 지원 등 정밀 조정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확보율 편차를 최소화하는 균형적 관리 전략이 필요함.

□ 민생사법경찰국 2건

1. 대검·타 기관 협의사항 등 추진계획의 현실성 점검 필요
 - 바디캠·마약수사 등 다수 사안을 대검 협의 예정으로만 반복 기재하나, 실제 일정·책임부서·추진 단계가 불분명함. 향후 보고 시 “완료·진행·지연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 제출하고, 사전 검증된 일정계획을 기반으로 추진하도록 내부 점검체계 보완이 필요함.
2. 신종 전자담배·니코틴 제품의 접근성 사각지대 개선 필요
 -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에서 부모 신분증 등으로 인증을 우회하는 사례가 존재해 청소년 접근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드러남. 또한 니코틴 젤리 등 신종 제품의 접근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임. 이를 반영해 인증 보완, 판매장 관리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행정국 6건

1. 근속장려금 사업의 정책취지 정렬 필요

- 사업은 사각지대 보완과 지역 정착 지원 목적이나, 통일부 제도보다 지원조건이 불리해 신청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속기록에서 지적됨. 중복수혜 차단과 사전안내 강화, 환수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정책 목적에 맞게 재설계 할 필요가 있음.

2.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업체명 등 기본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3. 본관 서측면 외부 마감재 교체 공사 관련

- 입면도, 설계도, 감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사업비 예산 증액 내부 검토 경위 문서

4. 구청장·부구청장 협의회 회의자료가 단순한 수준에 그쳐 실질적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구청장들이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과 그 처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목록화해 제출하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달한 사항들도 함께 포함한 보다 디테일한 자료를 제출할 것

5.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책임체계 정비

- 관리 담당은 인력개발과이나 전담 책임자, 명확한 관리규정, 실적 점검체계가 부재해 관리 공백이 존재함.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점검 주기와 보고체계를 정비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함.

6. 서대문구의회 행정인력 현황 데이터가 실제와 다름. 자치구별 행정인력 현황 작성 시, 정원이 아닌 실제 배치·운용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변동사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것

□ 재무국 4건

1. 차기 금고 선정 과정은 재무국만의 사안이 아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체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공정하고 잡음없는 금고 선정 절차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음. 그럼에도, 금번 감사 과정에서 재무국의 답변 내용과 제출 자료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에는 미흡하였음.
2.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 위촉 현황
3. 기존 업무보고 내용에서 업데이트만 하는 관행 탈피. 매출감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책과 같이 상임위 위원들이 알아야 할 현안 사항이 부서 업무보고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쓸 것
4.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부서별 매출 감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 사업 안내 자료

□ 평생교육국 3건

1. 급식 위탁운영 중복비용 및 효율성 점검 필요함
 - 학교급식·든든급식 모두 동일 기관에서 처리함에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은 개선 필요성이 있음. 인건비·시설비·물류비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회계기관을 통한 비용 효율성 분석을 병행할 필요 있음. 중복구조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재설계가 권고됨.
2. 서울 든든급식 품질관리·만족도조사 방식 보완
 - 참여기관 중심 조사로 실제 만족도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반품·품질 민원은 낮으나 반복 품목 모니터링과 공급업체 평가 반영이 필요함. 비참여 어린이집 대상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필요 있음.
3.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2024년 운영평가 점수 저조 사유

□ 인재개발원 2건

1. 대면교육 강의실 운영 및 공간 활용도 개선 필요
 - 다솜관 등 일부 시설의 사용률이 15% 수준으로 매우 낮음. 교육과정 재설계, 외부 활용 확대, 동아리·학습모임 수용 등 공간 재배치 전략이 필요함.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에 맞춘 운영구조 개편이 요구됨.
2.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업체 선정 관련 자료

□ 감사위원회 3건

1.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의 ‘이코모스 영어 공문 해석 불가’ 등 업무 소홀에 대한 감사사항
2. 23년도 6월 아쿠아슬론 대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감사사항
3. 주요시책 점검 기능의 정의 및 조례 반영 필요
 - ‘주요 시책’ 용어 해석이 기관·조례·실무 간 상이해 행정감사에서 반복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시책 범위, 점검 방식,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해 향후 감사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시행규칙 개정 및 업무분장 재정비가 요구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건

□ 자치경찰위원회 4건

1. 제주도 등 타 지자체 SPO 운영 사례 분석 필요함
 - 제주도의 퇴직 경찰 기반 SPO 1교 1배치 모델은 긍정적 성과가 있으나, 자치경찰제 구조·재정 부담 등 차이가 존재함. 서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되, 고용 안정성, 교육 표준화, 예산 소요 등 실무적 쟁점을 분석한 후 중장기 도입 검토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2. 경찰청 연구개발사업 관련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여 동일·유사 방식의 학약서 발급·공모 참여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의 절차·법적 근거는 어땠는지 비교·조사 결과를 보고
3. 지하철경찰대 인력 감축에도 운용상 조치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운용상 어떻게 전환했는지 자료 제출 바람
4. 학교 주변 유괴·납치 등 안전 사각지대 점검 강화 필요
 - 아동·여성 대상 범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등·하교길 및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의 안전 사각지대 전면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관련 부서는 학교·자치구와 협력한 현장점검 강화 및 재설계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4건

1. 한마음 서울 브랜드 및 캐릭터 내년도 활용 계획 제출
2. 자원 봉사 팝업스토어('아웃사이더') 운영 결과 및 향후 확대·확장 계획 제출
3. 나진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수당, 회의록, 주요 업무 관련 자료 제출
4. 바로봉사단 자치구별 편차에 대한 현황 정비
 - 자치구별 협약기관·인원 분포에서 특정 구는 높은 수치, 일부 구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편차가 큼. 이는 재난 유형·인구·시설 분포와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각 구별 현황을 재정리해 편중을 완화하고, 취약 구의 네트워크 확충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장학재단 2건

1. 직원 퇴직 사유 및 인력구조 관리 필요
 - 올해 직원 3명이 퇴직했으며, 급격한 업무량 증가와 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인력운영계획이 요구됨. 현재는 일회성 대응에 머물러 있어 향후 조직 안정성 확보 방안 검토가 필요함.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적 기반 관리 및 대학별 편차 점검
 - AI 장학, 선순환 장학 모두 대학·참여자별 운영 편차가 존재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지표가 부족함. 대학별 실적·참여율·만족도 기반의 차등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5건

1. 카드사 연동 부족으로 인한 사용내역 파악 한계 존재함
 - 농협카드 기반 결제 방식으로 인해 개별 사용액·사용기관·사용빈도 데이터가 완전하게 수집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정보 연계 미흡으로 정책분석·성과관리에도 제약이 존재함. 향후 카드사와의 데이터 연동, 시스템 통합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2. 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 현황
3. 김미라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수당, 회의록, 주요 업무 관련 자료 제출
4.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개요 및 사용기관 현황
5.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중인 불출석 사유와 어떤 입장인 공식 문서 제출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4건

1. 중장년층 일자리 고도화 관련 협력체계 여부
2. 구직자의 경력 진단과 구인 기업의 미스매칭 시스템 구축 계획 여부
3. 외부강의 신고, 가족수당, 복무 부적정 적발 건에 대한 조치 결과 자료
4. 직장내 괴롭힘 관련 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자료

※ 주요 감사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 감사사항
비상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재해 군병력 동원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록 관리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위탁교육 관리 • 성과관리계획(BSC) 및 평가업무 • 보도 및 부서 홈페이지 등 홍보 관련 업무 • 상훈, 공무 국외여행 총괄, 보안 총괄 •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 예비군의 날 행사 등 안보행사 • 민·군 협력 지원 업무 • 국군장병 등 위문 행사 • 민원(고충,인터넷, 트위터), 정보공개 • 급여/수당/ 복리후생비, 후생복지업무, 직원교육 • 감사, 조사, 공직기강, 청렴도 업무 • 문서/기록물관리, 물품관리 • 해외참전용사 자녀 장학금 모금사업 • 통합방위지원 계획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회의 운영, 통합방위 협의회 • 운영 조례, 전·평시 통합방위상황실 운영 • 주민보호대책본부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 • 공직자 안보교육, 시민 안보의식 함양사업(시 재향군인회) • 시 소관 국가중요시설 관리, 적 침투 취약지역 분석·관리 •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사업 •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추진 •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 • 협조구역 내 건축협의(고도 및 거리 제한 등) • 충무시행·실시계획 수립 • 비상대비 자원관리(기술인력 및 물자 동원 등) 업무 • 전시 비축물자 관리 • 정부합동평가 지표 관리(충무계획 실효성 제고) • 비상대비 훈련 총괄(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 서울시 전시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 • Defense Seoul 2030 추진 총괄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비상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비 서울시 안보포럼 추진 •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화생방 방호시설, 전기, 소방 등 - 정보, 통신장비, EMP시설 등 - 국지망, 비상대비연습 정보시스템 등 • 시청 직장 예비군중대 관리 및 운영 • 시청 직장 민방위대 관리 및 운영 •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운영 • 사업소, 자치구 등 사회복무요원 현황 관리 • 전시 병무행정 업무 • 고위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리 • 병역명문가 조례 관리 • 서울시 민방위계획 수립 • 전시 민방위통제본부 계획 수립 및 운영 •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결과분석 • 민방위 교육강사 선발 및 위촉(연수 추진) • 마곡안전체험관(구.서남권안전교육센터) 지원 •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 민방위 사이버교육 관련 업무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사업 •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사업 • 민방위대 정기검열 • 민방위 영상 등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훈련 홍보 • 민방위 교육훈련 의무위반 과태료 업무 •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보급확충, 정기점검 •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 민방위대피소 비상용품 비치 • 자치구 민방위대 조직·편성, 지원(여성)민방위대 관리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시/중앙) • 여성민방위 경진대회 운영 • 주민 신고망 관리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 • 시민 생활안전 체험교육 운영, 민방위대원 교육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비상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직,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관리 • 민방위경보 관련 법·규정 및 매뉴얼 정비 • 국가중요시설(민방위경보통제소) 청사방호 및 보안 • 민방공경보 전파체계 개선사업 추진 • 민방위경보통제소 무기·탄약 관리 • 민방위 경보사이렌 노후도 조사 및 교체·이전사업 • 민방위경보사이렌 교체·신설·이설 현장 감독 • 경보음 가청률 및 경보음 미약지역 조사 • 민방위 경보시설 및 경보사이렌 현장점검 • 자치구 경보담당자 교육·훈련 • 경보상황실 경보시스템 도입 및 시스템 운영관리 •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상황실 상황근무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민생사법 경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수사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 민생사법경찰국 홍보에 관한 사항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디지털수사 지원 및 각종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각 지정 지명 분야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대부업 관련 분야 불법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할부거래 관련 분야 환경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분야 상표권 침해·원산지 표시(공산품) 위반 분야 부동산 불법행위 분야 식품·원산지 표시(농·수산물) 위반 분야 사회복지·청소년보호 관련 분야 공중위생·동물보호 관련 분야 의료·정신시설·의약화장품·의료기기 분야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분야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행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년인사회, 시무식·직원조례 개최, 시장단 이·취임식 등에 관한 사항 • 시장공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및 사무공간 재배치에 관한 사항 • 시 자체 행사 및 국경일 등 국가 주요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광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당직, 보안, 청사방호, 공공안전관 관리에 관한 사항 • 다목적홀, 각종 전자안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환경, 청소용역 및 폐기물 재활용 관리,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 본관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기획에 관한 사항 • 청사투어 운영 및 프로그램 발굴, 안내테스크 운영에 관한 사항 • 본관 직원식당 및 간담회장, 자판기 등 후생복지시설, 카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소문1청사 구내식당, 다락, 회의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공용차량 관리·운영 및 업무택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내 시설물 개·보수 등 유지관리 및 청사 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인터넷전화, 법인휴대전화, 웹팩스 등 유무선 통신 운영 관리 및 청사 CCTV,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사관리, 역량평가, 대우공무원 선발·관리,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및 행정직군 임용후보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사법령 등 제도개선 및 인사관리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명예·조기·정년퇴직, 근속승진, 민간근무휴직에 관한 사항 • 제1·2인사위원회(징계), 공무원 복무관리 및 근무기강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및 상시기록평가, 가산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행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 및 수당, 공무원 연금 업무에 관한 사항 개방형 직위 및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에 관한 사항 공무직·공공안전관 단체·임금교섭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공무직·공공안전관 인사·복무·징계, 공무직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공무직 직장내괴롭힘 상담 및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장·단기 국외훈련,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관한 사항 장·단기 국내위탁교육, 상시학습제도, 퇴직준비교육, 국내 배낭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계획 수립, 선택적복지제도 및 후생복지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직장 어린이집, 직원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연수원, 콘도 및 일반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공연문화 바우처, 시청매점 및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건강검진, 힐링센터 및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부속 의원 관리 및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청장협의회 및 부구청장 회의 운영, 시·자치구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특별조정교부금 사후관리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자치구 예산 신속집행, 소비투자 등 행정안전부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커뮤니티 공간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행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 법령 관련 질의, 유권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업무 제도 운영 및 전산자료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운영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시 자원봉사 센터,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시 봉사상, 유공자 시민표창,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공유기업 단체 지정, 공유허브 등 공유서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 법정단체 지원, 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과거사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 •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및 비영리법인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사항 • 지역연계형 청년·중장년 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상생 추진계획, 지역상생발전위원회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기금심의위원회, 재난·재해 지원 포함)에 관한 사항 • 타 지자체 간 우호교류협약(MOU) 체결에 관한 사항 • 서울-지역 비대면 방과후 학습지원사업(랜선나눔캠퍼스)에 관한 사항 • 서울캠핑장(가족자연체험시설), 서울농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주요행사 연계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동행상회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행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농부의 시장 및 추석절 농수산물 서울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상생플랫폼 홈페이지 관리 및 지역상생분야 비영리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 조정 및 기획 총괄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안보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거주 이산가족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기초물품, 입주청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 및 일자리 지원(취업연계, 근속 장려금,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생활안내서 제작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홍보, 가족 통합프로그램(동행한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사업 검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위기징후 대상자 관리(위기기구 실태조사 등), 의료지원(건강검진 등) 사업 및 돌봄(가정·긴급) 서비스,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연합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제도 개선, 통합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입증지,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 계약제도 개선, 서울계약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시금고 지정·약정 등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운영 및 시금고시스템 관리 • 세출 및 자금관리 총괄 • 일반·특별회계·기금·세입세출외현금 지급 및 반납승인 • 일상경비 교부, 국비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해소, 교환 관련 업무 총괄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 공유재산 관련 법규정비, 제도개선,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 공유재산 손해보험, 재산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 행정재산 사용료 및 유·무상 사용허가 자료관리 • 행정재산 활용조회 및 유휴재산 활용부서 지정 • 시유재산 위탁관리 및 시유지 집단화 사업 • 체비지 소송 및 소유권 이전 정리 • 시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 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 • 시유재산 정기·정밀 실태조사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공유재산 결산)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계약심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계약심사 관련 법령·제도개선 관련 업무 원가분석 자문회의 관리 및 운영 업무 계약심사 통계 관련 업무 일반용역, 정보통신용역 계약심사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민간위탁 심사기준 제정 및 변경, 원가산출 교육 등 물품제조 및 구매 계약심사 인쇄물 기획·편집 및 제작 계약심사 토목공사, 기술용역(토목분야) 계약심사 물품 제조·구매설치 계약심사(해당기관 토목분야) 서울형 품셈 개발 및 개선 업무 총괄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총괄 공사 공통자재 단가조사 총괄 토목 분야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 토목공사, 기술용역(토목분야) 계약심사 건설폐기물 용역 자료조사 및 수집 (총괄) 토목분야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 서울형 품셈 개발 및 개선 업무 건축공사 계약심사 조경공사 계약심사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 총괄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품셈 개발 및 개선 업무 • 3천만원 미만 일반물품구매 • 물품구매 계약심사 (수목 및 초화류) •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계약심사 • 기술용역,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설비) • 종합공사 대상사업(5억원 이상) 내 포함된 설비공사 • 설비분야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 • 서울형품셈 개발 및 개선 업무 •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지방세제 개선 및 지방세 법령 개정 업무 • 지방세자치법규 운영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자치구 재정보전금 및 부동산교부세 교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제증명 운영 • 마을세무사 운영 •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업무 • 부동산가격공시지원 및 시·도 검증센터 설치 추진 업무 •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자치구 지원 •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 관련 업무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조사 산정 •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 조세심판원 대응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감사원 심사청구 업무 • 조세심판원 대응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세 소송 총괄 시세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공동수행 지방세 세입의 총괄·조정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 수립·조정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세 체납징수 총괄, 지침, 체납징수기법 공유·지원 자치구 고액시세 이관, 자치구 지도점검 체납차량 합동단속, 영치, 인도명령, 서울시설공단 관리 명단공개, 체납처분위탁,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고액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법원공탁금 총괄, 납세의무확장 총괄, 임대차보증금·분양권, 특별징수불이행범 고발 총괄 소관 체납자 추적, 징수, 정리보류, 재산 압류 및 추심 등 (총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가상자산, 체납차량 공매 (총괄) 정리보류, 출국금지, 체납처분중지 (총괄) 감치 고발(고발총괄), 급여압류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평생교육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조직, 시의회, 주요업무계획, 예결산, 서무업무 등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관한 사항 • 교육경비 보조사업 총괄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리 및 교육분야 후원 업무 • 서울런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서울런 사업진단 및 만족도 조사 • 온라인 콘텐츠 운영 용역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 • 서울런 기본계획,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관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추진 등 • 서울형 교육플랫폼 브랜드 개발 • 서울런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총괄, 자치구 등 유관기관 소통 및 협업체계 마련 • 온라인 콘텐츠 신규 발굴 및 제공 관리 • 맞춤형 비교과 소양분야 콘텐츠 제작 • 맞춤형 자기계발, 학습법, 진학설명회 개최 •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기획 및 관리 • 직업문화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교육플랫폼 대상별 서비스 전략 수립 • 서울런 회원 학습지도관리, 학습통계 분석 등 • 서울형 교육플랫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서울형 멘토링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 서울런 멘토단 선발·운영 관리 • 멘토링 홍보 및 각종 활성화사업 추진 • 멘토링 성과관리, 멘토단 인증서발급, 민원관리 등 • 학교보안관 운영·관리 및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지원 •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등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리 • 입학준비금 및 무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평생교육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추진 및 학교체육관 전립지원 • 서울런 4050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 50플러스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추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대학연계학습 및 학점 연계형 프로그램 관련 업무 •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및 교류협력 추진 • 명예시민학위제 업무 총괄 • 비영리단체 등록 관련 업무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 문해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서울시 문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 학력미인정 문해교육 및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디지털 평생교육 및 시민성 교육 확대 강화 • 민주시민교육,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시스템 구축, 운영 및 관리 • 평생학습포털 콘텐츠 임차 및 운영 • 서울런 4050 직업전환 콘텐츠 확대 및 제공 • 서울리테크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노후장비 및 상용 SW 교체 •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호 관련 업무 • 평생학습도시 국비지원 및 대한민국 인재상 관련 업무 • 서울런 4050 실국별 세부사업 성과관리 • 서울런 4050 홍보에 관한 사항 • 중장년 직업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운영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평생교육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 서울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운영 • 서울시 50+재단 가치동행일자리사업단 관련 업무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 50+ 및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확충·관리 •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 및 관리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및 업무계획 수립 • 청소년시설 디지털 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 청소년 국내·국제교류 업무 • 서울시민상(어린이, 청소년부문) 운영 • 어린이날 및 성년의날 기념행사 • 청소년미디어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음악센터, 문화교류센터 운영 관리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 • 청소년센터(21), 특화시설(2), 유스호스텔(2) 등 관리·운영 • 청소년센터 행사, 특성화사업 추진 • 청소년센터 안전점검 및 시설 유지관리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건립·확충 • 국고보조사업(청소년지도사) 및 특화사업(유스데이), 찾아가는센터, 현장맞춤형 활동) • 청소년시설 할인 손실금 및 사용료 감면 •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 • 시립,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 인터넷중독 예방, 치료사업 등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지원 •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지원) • 성문화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지원(청소년성문화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드림센터 운영지원 •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추진 • 청소년시설 평가지표 개발 등 개선계획 수립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평생교육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시행 • 청소년시설 회계감사 시행 • 청소년 의회,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업무 •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업무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친환경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친환경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지원 예산 교부 및 정산 • 친환경급식 지원예산 집행 합동점검 추진(학교 및 유치원) • ‘찾아가는 서울시 식생활교육’ 사업(유치원·어린이집) 운영 • 친환경 식생활교육 강사양성 과정·심화과정·평가회 운영 • 찾아가는 유치원급식 예산교육 운영 • 학교급식 관련 교육청 등 대외기관 협력 업무 • 친환경학교급식 조례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친환경학교급식 총괄, 인사, 조직, 예산, 일반 서무 업무 • 친환경유통센터 사무위탁 운영·예산 관리 • 학교급식 안전성 관련 계획 및 수립 및 운영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심의·안전성 관리 등 업무협의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및 가격조사 • 학교급식 유관기관 산지체험 및 소통 업무 • 서울든든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서울든든급식 자치구(참여시설) 확대 추진 및 홍보 • 서울든든급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서울든든급식 조달체계 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 기능개선 • 서울든든급식 개편에 따른 자치구 관련사항 처리 • 친환경유통센터 서울든든급식 식재료 관리 위탁 업무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 만족도 조사 업무 • 공공급식센터 관련 사구 재산관리(동북4구, 강동, 중랑)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인재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 e-러닝 콘텐츠 개발, 보수에 관한 사항 • e-러닝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방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및 녹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e-러닝 교육과정 운영 • 정보통신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교육통합시스템(LMS)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메트로폴리스 국제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 운영, 강사선정, 강사 Pool 관리에 관한 사항 •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7~9급 신임자 과정 계획 및 운영, 직무전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4·5급 창의리더십 과정 운영 • ‘창의행정 공감마당’ 과정 운영 • 직급·직위별 리더십 교육에 관한 사항 • 행복한 정년퇴직준비 과정, 50대 인생디자인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신규 공무원(7~9급)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사항 • 민간자격시험(간호조무사, 수렵면허 등) 시험관리 •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5~6급, 가~나급)에 관한 사항 • 전문경력관, 중증장애인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 4·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 역량개발 교육 과제개발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공직기강 확립(계획·평가·점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재심통보·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회 시정 현안사업 처리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회 법령·조례 등 총괄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 감사원 관련 업무(외부기관 감사, 이행실태 포함) • 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 청백-e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 담당기관 관련 부패영향평가 처리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 감사업무 주간 • 담당 자치구 처분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면책 검토에 관한 사항 • 징계사전조정심의회 회의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면책 검토에 관한 사항 • 청렴 및 부패방지 업무 계획·전략 수립 총괄 •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 기관장 주관회의 운영 • 청렴정책 대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기관별 취약분야 분석·컨설팅 추진 • 청탁금지법 운영 총괄 • 공무원행동강령 제도 운영 총괄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총괄 • 공무원 외부강의 등 신고·점검에 관한 사항 • 기관별 청렴지수 성과평가(BSC) 총괄 • 청렴정책 홍보 총괄 • 반부패·청렴 교육 총괄 • 청렴해피콜 운영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제도개선 총괄 • 사전컨설팅 의견 제시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콘텐츠 제작·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총괄 • 공직유관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 취업제한 퇴직자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 공직윤리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주식매각·백지신탁·가상자산 관리 • 투자출연기관 감사계획 수립 총괄·실지감사 실시 • 투자출연기관 내부통제 및 청렴도 강화 총괄 • 투자출연기관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 • 투자출연기관 인사검증(기관장, 상임감사, 이사) •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채용분야 사전스크린 •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활동) 평가 • 투자출연기관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평가 • 투자출연기관 공직기강 점검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주요사업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감사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 관련 제도개선·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 미의뢰 점검 총괄 •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총괄 • 안전감사 연간 종합계획 수립·조정 • 연간 안전감사(점검) 및 기동점검 실시 • 중대사고 및 특별시책 관련 감사(점검) 실시 총괄 • 찾아가는 청렴·안전감사 사례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감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안전감사 옴부즈만 관련 업무 • 하도급 감사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하도급 감사조사 및 개별 수명사항 처리

		• 하도급 감사 감사결과 수렴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 접수 및 처리 총괄 • 하도급계약집행의 불공정방지 면담,지도,감시,직권조사 • 하도급 관련 교육 및 제도개선 관련 업무 • 하도급 부조리 해소를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항에 관한 사항 • 청렴도 및 부정비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외부기관(검·경, 감사원 등) 통보사항 총괄 • 내부징계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권익위 이첩·송부사건(부패·행동강령) 관리에 관한 사항 • 청렴도 비위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 사전예방적 조사활동 추진 총괄 • 공익제보 보·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익제보 활성화(홍보 및 교육 등) • 공무직·공공안전관 처분 등 총괄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찰업무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감찰결과 적출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 세계옴부즈만협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블록체인 기반 주민·시민감사 청구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 감시대상 선정시스템 및 양방향 소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감사시스템 운영(DB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 관련 응답소 시스템 개선 협의 사항 • 민원배심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배심제 홍보에 관한 사항 • 시민·주민감사 재심의 관련 사항 • 위원회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사항 • 위원회 연차보고서, 안내책자 제작·발간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청원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원사항 접수, 조사,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조례 및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제도 발전방안 연구 및 토론회 관련 사항 • 감사·조사·감시 등 위원회 소관 법규집 관리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법령질의 회신, 법률자문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주민·직권 등 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주민·직권 등 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주민·직권 등 감사 심의(검토)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시민·주민·직권 등 감사 결과·재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감사 결과 공표 및 공공감사시스템 입력에 관한 사항 • 법률자문단 구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접수 및 이송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활동실적 보고(분기별)에 관한 사항 • 소극행정 보고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관한 사항 • 응답소 현장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 응답소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 감시 업무 안내서, 사례집 작성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옴부즈만 관리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 해촉, 연임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평가에 관한 사항 •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사항 •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사항 •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 및 지도점검 사항 •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항 •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사항 • 인권침해 조사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사항 • 시민권익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사항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보조금 지원) 사항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사항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사항 • 인권교육 운영 사항 •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지원)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자치경찰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협정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장비, 통신 등 정책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수행관련 경찰청, 서울경찰청 협의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관련 서울시 관련부서 협력 총괄에 관한 사항 • 치안 협력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반려견 순찰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 러닝순찰대 및 대학생 순찰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경찰관서장 보임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표창 등 포상 업무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홍보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관련 민원·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경찰서장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市행정-치안행정 업무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부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치안상황 및 주요 사건사고 보고 총괄에 관한 사항 • 여성청소년 치안정책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 여성청소년 주요사업·사건사고 관리(시·경찰 협력)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자치경찰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아동안전지킴이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치안정책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사건·사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분야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서울시-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주요 협의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감소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속도 5030 및 탄력 운영제에 관한 사항 • 보행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 교통 소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서울경찰청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평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관 후생복지 제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사업비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종합 감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감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인권침해 민원에 관한 사항 • 특수지역 경찰대(한강, 지하철)에 관한 사항 • 한강경찰대 연차별 시설개선, 순찰정 교체에 관한 사항 • 유실물 업무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센터 정·현원, 직제관리 등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인사, 급여, 보수체계,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정보공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회계, 세무,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 센터 복무 관리 및 직원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센터 채용, 직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법인 운영 및 정관 등 각종 규정, 내규에 관한 사항 • 위탁사무(공익센터)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 조사, 자원봉사와 NPO 연계 방안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전략체계, 경영전략, 성과관리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경영평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센터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브랜드 개발 및 매체 홍보·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발간물 및 자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웃화합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사항 • 이웃화합 프로젝트 시범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웃화합 프로젝트 봉사단 교육에 관한 사항 • 이웃화합 프로젝트 대시민 캠페인, 홍보에 관한 사항 • 이웃화합 프로젝트 협력기업 발굴·연계에 관한 사항 • 서울동행 청년봉사 사업에 관한 사항 • ‘대학 연계 사회참여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 청년 기획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봉사학습(실천학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지역 돌봄 봉사 사업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민관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재난대응 바로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대응 바로봉사단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 기반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 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 ‘내곁에 자원봉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캠프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캠프 활동가 역량강화(보수·심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민관협력(기업·공공기관 등) 자원봉사 운영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수요처 관리 및 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 자치구센터 협력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우수자원봉사자 인정·예우에 관한 사항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및 시상식 운영에 관한 사항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관리자 전문 교육에 관한 사항 시·구 정보화 관리에 관한 사항 시·구자원봉사센터간 지역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장학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 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운영(장학생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24~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 성장지원사업 총괄 • 글로벌 장학사업 런칭(유학생 지원) • 장학사업 실적관리, 경영평가(사업 및 혁신지표) • 장학사업 제규정 관리, 고객만족도 • 서울희망대학진로 장학금 • 서울교환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 장학금 • 서울선순환 장학금 • 서울희망고교진로 장학금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 청춘스타트 장학금 • 성장지원사업(멘토링, 아카데미, 썸포터즈, 선순환 프로그램) • 서울희망공익인재 장학금 • 서울희망고교예체능 장학금 • AI서울테크대학원장학금 • 홍보(뉴미디어홍보, 보도자료) • 서울꿈길 장학금 • 서울희망하나고 장학금 • 이사회, 법인관련 업무(시교육청 등) • 감사, 안전·보건, 개인정보 보호, 규정 관리 • 장학생선발관리시스템(정보화전략, 홈페이지), 그룹웨어 운영 • ESG경영(인권경영 등), 성별영향평가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기획 및 경영혁신 추진 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 기관장 경영계약 이사회 운영 및 시의회/국회/시 대응 대외업무 진흥원 원규 제·개정 관리 ESG경영(인권/환경경영 및 사회공헌 등) 창의경영 및 적극행정 추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경영공시 및 정보공개 진흥원 언론홍보, 홈페이지·SNS 채널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기관 홍보물 제작 및 연차보고서 발간 인사·노무제도 기획 및 운영 임직원 교육 기획 및 복리후생 관리 급여 및 총인건비 관리(퇴직연금 포함) 회계, 세무 및 결산(4대 보험·원천세 신고 등) 계약 총괄 및 공공구매 관리 전산 및 보안 업무(통합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등) 시설안전보건 관련 업무(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록물 관리 및 출판물 관리 총무(사무용품비 및 본원 계약 관리 외) 및 기관장 수행 업무 <국가평생교육통계> 서울지역 현황조사 및 관리 서울시 평생교육정책 공급 및 수요 조사 서울시 평생학습 싱크탱크 위원회 운영 서울시 평생학습정책 이슈 분석보고서 <이슈포커스> 개발 및 발간 서울시 평생학습정책 공유 및 학습의 장 <작은 세미나> 개최 및 운영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2026~2030) 발전방안 연구 동(洞) 평생학습센터 운영모델 개발 및 체계화 연구 서울형 디지털배지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사업 성과관리 방안 연구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개발 제안(I·II) 진흥원 연구 수행관리 및 지식공유 체계 구축 및 운영 기반 마련 자치구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 연수 프로그램 운영 자치구 평생교육 정책 현황 조사 및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자치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지원 사업 운영 디지털 문해학습장 운영 및 학습자 디지털 역량변화 조사 시행 문해교육 교원 양성 연수 및 보수교육 운영 서울형 성인문해교육 콘텐츠 개발·배포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및 관계자 연수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전문 강사 지원 사업 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광역 단위, 프로그램 단위) 운영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 햛살버스 운영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업 운영 서울마이칼리지 운영(일반대, 전문대, 인증형) 서울마이칼리지 대학 컨설팅 및 운영 모니터링 서울마이칼리지 사업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학습결과 인증, 선수학점 등 대학연계 협력모델 추진 대학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대학 평생교육 지원체계(플랫폼 등) 구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응 시민대학 종합기획 및 성과 관리 예산 및 운영체계 관리, 행정 대응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홍보 종합기획 및 성과 관리 유튜브·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관리 및 대응 학습매니저 선발 및 역량 강화 신규강사 공개선발 및 역량 강화, 강사 관리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비 징수 및 정산 관리 • 정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캠퍼스 특화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리테크 사업 종합기획 및 성과 관리 • 중부권 캠퍼스 시설 관리 및 대관 • 시민커뮤니티 기획 및 운영 • 동남권 캠퍼스 학습매니저 배치·관리 • 동남권 캠퍼스 홍보 • 동남권 캠퍼스 시설 관리 및 대관 • 시민대학 인생디자인학교 종합기획 및 성과 관리 • 시민대학 명예시민학위제 종합기획 및 성과 관리 • 명예시민학위제 통합 행사 운영 • 모두의책방 조성 및 운영 • 모두의학교 캠퍼스 학습매니저 배치·관리 • 모두의학교 캠퍼스 홍보 • 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관리 및 대관 • 다시가는 캠퍼스 개관 행사 운영 • 다시가는 캠퍼스 학습매니저 배치·관리 • 다시가는 캠퍼스 홍보 • 공유오피스 운영 지원 • 다시가는 캠퍼스 시설 관리 및 대관 • 시민대학 7학년 교실 종합기획 및 성과관리 • 7학년 교실 통합 행사 및 홍보 • 청렴·감사 부패방지 시책업무 • 내·외부 감사 및 조사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관리 • 일상감사제도 관리 및 점검 • 부조리통합신고, 응답소 등 내·외부 제보 대응관리 •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및 관리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 감사, 반부패·청렴 시책, 인권경영 신고센터 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대응 미래10년TF팀 운영 및 추진 사업 재단 경영전략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재단 제규정 및 내규 관리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편성·추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이행 및 활성화 민원 행정 서비스 대응 기관 업무협약 추진 중장기 인적자원 계획 수립 및 인사제도 직원 임용 및 인사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 직원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노사제도 운영 복무관리(근태, 초과근무 등) 및 직원 복리후생 직원 급여, 성과급, 부가급여 지급 및 인사시스템 운영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및 조직문화 활성화제도 운영 행정정보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운영 재무 건전성 및 내부통제 전략 수립 회계결산 및 회계감사 지출·수입 관리, 회계처리 및 출납업무 계약 및 조달구매 등 재물관리 및 사무기기 조달 및 운영 구매실적 관리, 차량 관리 등 홍보 기획 및 관리 등 전사 홍보 및 관리 등 50+포털 운영, 보도자료 관리 및 주요언론 매체 광고 등 업무 뉴미디어 홍보전략 수립 운영 CI·정책 브랜드 기획 및 관리 중장년 정책 연구 및 개발 중장년 통계 구축 및 조사 분석 연구 등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 정책 이슈 발굴 중장년 정책 포럼 기획 및 운영 중장년 정책 및 성과 확산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정책 네트워크 구축 40대 직업 전환 지원 사업 기획 및 성과 관리 서울시 현장학습 대상 40대 특화사업 운영 40대 특화 이·전직 프로그램 운영 40대 특화 공간 운영 활성화 전사적 정보화 체계 기획 및 운영 고객 데이터 관리·기획·운영(분석) 정보보안(사이버침해대응, 시스템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시니어 전용 일자리 플랫폼 운영 기업연계 서울형 일자리 기획 및 발굴 취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서울시 시니어일자리박람회 개최 경력 전환, 취업 지원 사업 및 권역별 잡페어 기획·운영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운영 창업·창직 지원 및 공유사무실 운영 중장년 취업연계 등 상담센터 운영 경력설계프로그램 기획·운영 중장년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운영본부 전략 수립 및 운영 등 50+정책 전달체계 지원·관리 기반 조성 등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기획 및 운영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및 운영 재단 재난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캠퍼스 등 시민이용시설 재물 및 자산 관리

3. 기획경제위원회

□ 총괄

연번	기관(실국)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제출)
	계	313	97	107	109
1	기획조정실	49	21	13	15
2	경제제실 (시립과학관포함)	56	14	22	20
3	민생노동국 (농업기술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포함)	56	20	17	19
4	서울시립대학교	39	8	15	16
5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가락시장정산(주) 포함)	36	10	10	16
6	서울연구원	26	11	8	7
7	서울경제진흥원	22	3	10	9
8	서울신용보증재단	29	10	12	7

□ 기획조정실 : 21건

1. (시정고문단 관련) 특정 정당 편중, 서울시 전직 간부 중심 구성, 성별 균형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시정고문단 구성에 개선이 필요함
2. 2025년 시정고문단 운영 예산이 미집행됨. 비공식 간담회가 아닌 정식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공공위탁 관련) 공공위탁, 대행은 별도의 절차나 규정이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공공위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고민해 주었으면 함
4. (서울연구원 조정수당 관련)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일몰(10.31.)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데, 여전히 지급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당초 서울연구원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서울시도 책임이 있으므로 내부 갈등 해결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대책 마련해야 함
5. (서울연구원 감사청구 관련) 서울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 정식 감사 청구함
 - 조정수당 일몰 후 임금 문제 미해결 관련 사안
 - 규정에 어긋난 명예퇴직수당 지급
 - 건강보험료 예수금 부당 처리
 - 뇌졸중 직원 조치 관련 사후 조치
6. 市 책임운영기관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임. 서울시가 이 책임운영 기관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임
7. 투출기관별 내규와 관련하여 편재, 목차 등을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통일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8. 시책연구용역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업에 비해 비대하므로 조정하기 바람

9. 교통공사, SH, 에너지공사 등 공기업의 채무 규모가 큼. 구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0. 현재 조례, 규칙,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관리 중이나 조례에 규정된 시범사업이 모호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시범사업 대상을 명확화(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투자심사 대상 제외 등)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
1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은 협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나, 가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민간전문가 기본조례가 있음에도 개별 조례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 기본조례에 규정된 민간전문가 위촉·운영상의 원칙 및 기준이 개별조례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13. 민간전문가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14. 공공위탁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 사업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15. UN에서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인데 서울시 목표는 2045년까지 설정되어 있어 정합성 문제가 우려되며,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주택도시공사 3개 기관 직고용을 결정했으나, 여전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 서울시는 5년 전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람
17. 오세훈 TV 콘텐츠 제작 관련 5분 자유발언 조치계획·처리결과 미보고 등 소통 부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 위반)
18. (서울시 규제개혁 관련) 100일간 123건 규제철폐는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임. 규제철폐의 내용도 규제철폐가 아닌 단순 행정개선

에 가까운 조치로 규제개선 150건은 실적부풀리기. 특히,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를 폐지한 것은 하도급이 많아서 문제인데 20% 줄이는 것에 시민이 만족할지 의문이며, 51호는 이미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두고 사용 교육을 하는 것을 규제철폐라고 할 수 없음.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과제를 규제철폐 대상과 실적으로 인정하고 단순 행정개선 과제는 별도 분류해 실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혁신의 개념을 다시 세우고 본래 의미에 맞는 규제를 혁신해 나가기 바람.

19. 인구기본계획이 서울 주요 인프라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해서는 과 단위 조직이나 TF 신설 검토가 필요함 (인구통계·데이터 분석 및 실질적 전략 고민 필요)
20. 인구정책 주요 성과지표에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과제나 진단 지표가 없음. 민생노동국과 협의해서 누락되는 사업 없도록 체크 바람
21. 전임시장 시절에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해 왔음. 현재는 서울비전2030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추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주길 바람

□ 경제실(서울시립과학관 포함) : 14건

1.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음. 중복 지원 수혜 사업장들이 발생.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의 영속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도시제조 작업환경 관련) 현재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안전 분야보다 업무능률 향상쪽에 집중된 것으로 보임.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성과는 무엇으로 파악할수 있는지? 현재 만족도 조사는 단편적, 일률적 수치가 많음. 실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노동자에게 잘 어필될 수 있었으면 함. 장비 지원 관련해서도 실제로 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3. (취업날개 서비스) 사업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가 필요하며, 특정 기업의 독과점 발생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1개 업체, 1개 지점 운영을 원칙으로 제안하였으나, 현실적 문제로 1개 업체에 2개까지 운영하고 있음. 독과점 방지에도 특정 업체에서 이를 위반하여 일자리정책과에서 시정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4.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중소기업 제품구매 현황이 저조함
5. 산업진흥지구와 계획 수립이 된 지구는 전체적인 성과가 저조함. 부진지구에 대한 구조조정 검토 및 앵커시설 이외의 진흥지구에 세금감면이나 인력제공 등의 실질적 지원방안 필요
6. 과학관 관람객수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7. 상암DMC 부지 매각 불발시 대책 필요
8. 도시제조업 제조공정 디지털 지원 사업은 25년도 예산 4억으로 10기업 4천만원 지원 사업은 서울시 전체 소공인 6만개를 고려하면 너무 적음
9. (동행일자리 관련) 최근 예산 집행잔액이 연간 20억씩 발생하고 있으며, 단시간 참여자(3, 4시간) 및 중도 포기자 등을 고려한 연간 목표인원 설정이 필요함.
10. (동행일자리 관련)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비참여자 제도 운영 등을 보완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연령제한으로 인해서 건강하신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필요함
11. (펀드 운용 관련) 첨단제조, 바이오 분야가 역성장 문제 지적. 그럼에도 모태펀드 기준 규약을 이유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미래혁신성장 펀드 투자금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비밀 유지로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는데 비공개 자료라도 최소한의 정보 제공은 필요함
12. (펀드 운용 관련) 미래혁신성장펀드 2,727억 원 규모 투자 손실 발생. 손실 발생 운용사와 투자원금, 사유를 제출하고 서울시 관리감독 강화할 것

13. (서울투자진흥재단 성과지표) 2023년에는 INSC(산업부)를 활용한 FDI를 인베스트 서울의 성과로 집계하였는데, 서울투자진흥재단 성과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운영 필요함
14. 서울투자진흥재단 실적지표를 직접 투자유치 실적과 지원활동 실적으로 구분이 필요함

민생노동국(농업기술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포함) : 20건

1.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채용 관련) 채용 공고문 상 '추후 안내'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와 달리 면접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된 것은 공정한 절차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대책 필요
2.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노동권익센터에 부적절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인사가 구성되 있음.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으로 서울시의원은 운영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는 없음. 대신 국회 보좌관이 구성되어 있는데 적절한지 검토 필요. 현재 약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계 위원이 특정 노총에 편중되어 있어 노동계 위원이 균형감 있게 위촉될 필요가 있음. 전반적인 위원회 구성 검토 할 것.
3. (서울노동권익센터 수의계약 관련)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 검토 바람
4.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너무 과소함, 관리 필요
5. (서울사랑상품권) 상품권 결제내역을 보면 30억 초과 유무로만 가맹점을 관리하는데 매출액을 더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함

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복무, 회계, 운영실적 등 사업 추진이 매우 부실하며, 사업 전문성도 부족해보임.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민간위탁 재검토 필요
8.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민간배달앱과 수수료율 차이가 거의 없고, 쿠폰 이벤트 등 단기 지원에 집중하여 근본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필요
9.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출연 동의안과 실제 본예산간의 큰 괴리가 발생하여 매년 동의안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편성이 대폭 감액되고 있음.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기획조정실 및 예산담당관과 협의를 강화하여 현실성 있는 규모로 제출하기 바람
10. (노동자복지관)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 과도하여 '노동자의 권리 및 권리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음. 인근 공공기관과의 프로그램 중복으로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노동자 중심 특화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함
11. 노사민정협의회가 3년간 회의 개최 및 분쟁 조정 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협의회 및 사무국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 추진할 것
1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감자료의 제출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며, 출장 및 복무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민간위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1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튜브 등 홍보사업의 효과가 부실하므로 관리감독 및 예산증액여부가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할 것
14. (노동권익센터 예산) 센터 인원(45명)에 대한 매년 건강검진 실시가 과도하며 세금 효율성 측면 및 국가정책에 맞춰 내년부터는 2년 주기 검진으로 변경하길 바람
15. (상담이동노동자쉼터) 현장 방문 당시 쉼터라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특정인을 추모하는 공간이 있었음. 실제 이용자가 편히 휴식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해 주길 바람
16.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에 따른 노동권익센터, 노동자복지관(서울, 강북),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중복됨 없이 효과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람

17. 서울시가 조례상 의무인 감정노동 교육을 축소해왔으며, 온라인 노동교육 사이트는 폐쇄되어 있음에도 방치하는 등 조례상 의무 방기
18. 투출기관 감정노동부문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과 조례상 규정된 경영평가 반영이 필요
19.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율 확대에도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입률이 아직 전국 꼴찌인 상황임 여전히 가입률 제고가 필요함.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개선 방향 마련 및 향후 실적 자료에는 민간가입 보험률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제출하기 바람
20. (AI 물가관리 정책 제안) 서울시는 서울데이터허브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가관리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음. 물가정보 시스템 관리 부실과 활용방안 부재 지적. AI 빅데이터 물가 모니터링 관련 자료요구에 '해당없음'으로만 성의없이 자료제출 지적. 변화무쌍한 시대에 기존 데이 터를 잘 활용하고, 서울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AI 물가관리 정책 추진, AI 기반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할 것 요구

□ 서울시립대학교 : 8건

1. 연구 성과 부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구성원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함
2. 시립대 도서관 장서 포화도가 상당히 높음. 장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도서관 신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률이 높은 편으로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4. 인권센터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
5. 폭력예방교육 교원 이수율이 저조하니 이수율을 제고할 것
6. 캠퍼스 건물 전체의 누수발생률이 70% 가까이 되고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안일한 업무처리를 바꿀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책 필요
7. 해외출장 사전신청이 미흡함에도 대학 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음. 사후 허가 사유와 관련하여 제출 지연에 대한 부분은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함.
8. 해외출장 사전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예방적 조치 마련과 공무국외 연수 결과가 내부 구성원에게 공유, 환류 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농수산시장본부(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신(주) 포함) : 10건

1. (파렛트 출하율 관련) 가락시장 경매제는 품목별로 파렛트 출하율에 큰 편차가 있으며, 강서시장의 경우 동일 품목의 파렛트 출하율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간 매우 큰 편차가 확인됨.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잘 해주시기 바람.
2.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상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으면 외부 위원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니 개정해 주시기 바람.
3.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과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상인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 없이 진행되도록 잘 준비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람.

4. 도매시장정산(주)의 미수금이 총자산의 60%를 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익, 현금흐름이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그 원인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전자송품장의 높은 수정률 막을 대책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의무화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6. 사장님 지시사항과 훈시는 구분하여 관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7. 채소2동 1층 경매장 내 차량진입 불가에도 차량이 진입해 있고, 새 건물임에도 벌써 일부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으며, 상단 반입장 안내 간판에 비닐이 걸려 있는 등 시설과 환경 관리가 미흡함. 공사는 시설물 관리에 좀 더 힘 써 주시기 바람.
8. (물가관리 데이터 관련) 서울시에 빅데이터 기반 물가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데이터 허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공사와 협업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공사와 서울시가 물가와 유통정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할 것 요구.
9. 채소2동에 대해 내화벽체도 인정받은 것과 달리 시공, 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누락 등 품질인정 내화구조 벽체 관련 지적사항 및 개선 계획 요구
10.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법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법을 위반하여 설치·운영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서울연구원 : 11건

1. (조정수당 일몰 관련)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지급되던 조정수당이 10월 31일자로 일몰되는데, 아직도 협의중인 것 심각한 문제. 조정수당이 일몰된 이후의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별도 보고도 해주기 바람.

2. 서울연구원을 상대로 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고등법원 판결이 났음. 관련하여 추후 대책 마련 등 서울연구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기 바람.
3. (명예퇴직급 부당지급 관련) 21년 명예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절차 위반 및 지급액이 과다하게 산정됐음. 특히 해당 직원은 직장내 인권침해 가해자임에도 특혜성 명예퇴직금이 지급 된 것이라 봄. 해당 직원에게 과지급 된 부분 포함 명예퇴직수당 전액 환수조치 계획과 관련자 문책계획을 세워 보고해주기 바람.
4. 서울연구원 정책반영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정책에 반영은 많이 안되고 있음. 정책에 반영이 안된 과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5. 기술이전에 대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식재산권 관리 인력들의 전문성이 초급~중급으로 부족함. 특히와 S/W 등 지식재산권은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재산임. 시기를 놓쳐 폐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6. 올해 이사회 4번 모두 서면으로 개최했는데 인사나 복무 규정 개정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진행 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규정 개정으로 직원들의 삶이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면 이사회로 이사들에게 직원들의 처우도 어필해주기 바람.
7. 「서울도시연구」가 등재후보지로 강등된 이후에도 학술지 운영 대책이 없음. 서울연구원이 운영하는 학술지가 논문 1편을 겨우 투고 받는 수준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8.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의 TF 운영 등 공동연구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를 낼 것.
9. (건강보험료 예수금 임의집행 관련) 서울연구원 건강보험료 추가공제사항 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고 심각한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라 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직원

의 기존에도 예수금을 사용했었다는 답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함. 조사후 결과를 기경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알려주기 바람.

10.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관련)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 고용부담금을 8,238만원이나 납부했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신체는 조금 불편하지만 지적 역량이 풍부한 분들을 적극 빨굴해서 일반직으로 채용하거나 각 학교에 홍보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람.
11. (비공개 연구보고서 관련)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보고서가 23년 대비 50%나 증가했음, 타 연구기관들도 전 연구과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한시적으로 비공개중임. 연구보고서 공개원칙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예외도 최소화 바람.

□ 서울경제진흥원 : 3건

1. (청년취업사관학교 내실화 및 홍보 예산 관련) 감사위원회로부터 사업 총체적 부실(질적 성장 미흡, 관리 소홀 등)을 지적받았음에도 2025년 예산은 교육 품질 개선이 아닌 홍보비 증액에 치중되어 있음. '집중팔구 취업 성공' 홍보의 근거가 되는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원데이터를 제출하고 실질적인 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2. 면세점입점 사업을 외부 벤더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벤더업체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해당업체에 주의 필요.
3. (서울콘 민자사업 및 인플루언서 계약 관련) CJ ENM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선지급된 27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요하며, 협력사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한 인플루언서 섭외비 중 시비가 투입되는 5억 원 이상의 상세 집행 내역 및 계약 내용을 즉시 제출해주시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10건

1. (제출 자료 불일치 관련) 민생노동국과 재단이 제출한 자료 간에 실적 수치(골목상권 육성 지원 개소 수)나 목표 설정 기준(고용보험 가입 지원 전수 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소통 부재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함.
2. (안심통장 관련) 안심통장은 영세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일시적 지원. 안심통장지원을 업체당 1회로 횟수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 상환하고 나면 다시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을 풀어줄 것 요구
3. 상권활성화 사업이 시설개선 지원에 치우쳐져 있는데 상권 매출 증대에 더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람
4.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에 안심통장 관련 작업대출이 있다는 제보 있음. 불법대출이 없도록 조치할 것
5. 외국인 사업자 심사 평가 강화 적용할 것
6. 예산편성시기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7. 소상공인들의 키오스크 설치 지원 확대를 고려할 것
8.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앱 이용의 불편함과 전화통화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고객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담전화는 반드시 받기 바람
9. (모바일앱 관리 및 디지털 전환 실태 관련) 관악구 등 청년 창업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 앱 접속 불량 및 서버 다운(안심통장 접수 시), 자동심사 승인 후 은행 부결 처리 등 사용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함. 이에 대해 7월 전면 개편 이후에도 개선이 미흡함 지적. 조속한 기능 보완과 안정화를 요구함.
10. (고졸 채용 실태 및 청년 취업 관련) 과거 '고졸 채용' 실적이 실제로는 정년 퇴직자(시니어) 재채용으로 채워졌던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마이스터고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신규 채용(3명 선발 예정)은 단순한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청년 취업 기회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 요구.

□ 기획조정실 : 13건

1.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관련)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매우미흡, 미흡)대로 반영되지 않은 건들도 있음. 미흡 등 평가받은 건은 주요 의견 사업이 잘 정리되어야 함
2. 진행률(공정률, 예산집행률 등)이 저조한 사업 예산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점검 요청
3. 모금 실적 제고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담례품 추가 선정 시기를 당겨서 추진하면 좋겠음
4. 시스템이 집중화되어 있으면 사고 발생시 대규모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백업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하기 바람
5. 세입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불용액 등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조치 바람
6.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적 대응보다는 조정·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 바람
7.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 객관적·구체적 기준 마련 없이 통상업무 범위에 대해 현금성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닌지 검토하기 바람
8. 시민참여예산 참여율이 12% 정도 줄어들었으며, 서울시민(940만 명 기준) 전체 인구수에 비해 참여율이 0.03%로 매우 저조함. 시민참여예산 참여율 제고에 힘써주시길 바람
9. 서울시는 전국 대비 높은 여성 공무원 비율을 보이고 있음. 3급 직급에서는 서울시가 전국 평균(12.7%)보다 낮은 8%에 불과하지만, 4급 이상에서는 전국 평균(20%)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여성 진출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더 적극 홍보하기 바람. 그리고 고위직으로 갈수

록 여성 비율이 낮기에, 서울시는 여성 지도자 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람

10.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육아휴직 비율은 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대다수 기관이 서울시 전체 평균에 못 미침. 효율적인 휴직 제도 운영을 마련해주길 바람
11. 기조실은 여성 기업 구매 실적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함. 좀 더 노력해 주길 바람
12. 여성경제인들의 해외판로개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라며 여성 디지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양을 늘려주기 바람
13. (재정건전성 문제 관련) 민생회복쿠폰이 풀리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함. 예산편성 시, 현물이나 현금성 복지 정책 등 자제하고, 전전 재정을 잘 다뤄줬으면 함

□ 경제실(서울시립과학관 포함) : 22건

1.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 수료생의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 등도 취업률로 잡히는지? 취업사관학교가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있음. 취업률 산정기준과 세부자료 제출 바람. 사업의 질적 성과와 현장의 수요 중심 프로그램으로 재검토 촉구
2. (과학관 전기 셔틀버스 운영) 회차별 평균 이용객이 감소하는 반면 운영 비용은 증가하는 비효율 발생. 운영종료 적극 고민해 볼 것
3.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시민 예산으로 타 지자체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함.
4.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을 보니, 캠퍼스별 운영과정 수 등에 편차 있음. AI에 포커스가 맞춰진 과정으로 전부 운영 중임. 프로그램 재조정 필요할 것임.
5. 뷰티, 패션 등 IP 확보 및 사후관리 노력

-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K-브랜드의 해외 무단선점이 2025년 약 1만 여 건에 달하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 피해
 - 서울시에도 중소, 중견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피해사례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음
 - 현재 뷰티·패션 육성기업도 절반 정도 지식재산권 확보가 안되어 있으며, 현재 지원은 출원단계에만 집중되고 사후관리(권리 보호 등)가 부족하여 서울시의 뷰티, 패션산업 글로벌 육성 목표에 맞게 대책 등 적극 노력하기 바람
 - 위조·형태 모방 건수(전국 단위)도 5년간 뷰티, 의류 분야 많음. 보완 필요
6. 비더비 사업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용산 투자유치와 관련해 계량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별 계획으로 설명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부동산 부분은 서울코어용산을 활용 하려는 기대감 을 활용할 것.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니즈 파악과 어필이 필요함
 8. (창업허브 관련) 창업허브 지원 기업의 생존율이 높음. 공공혁신의 일환 으로 좋은 모델임. 사회환원 체계를 구축하여 선순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사업 추진 바람
 9.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개발과 교육비 예산이 1천만원에 불과하여 증액을 요구
 10. (매력일자리) 민간기업 맞춤형의 만족도가 작년과 비교해서 떨어짐. 사업 수행기관인 협회·단체의 자부담 폐지는 부적절하며 자부담을 매년 5%씩 점진적 확대나가길 권함. 민간형에 대한 평가항목에 '사업 참여자의 평가' 추가. 협회·단체 사업제안서에 전년도 인턴매칭률, 취업률 등의 수치 반 영하여 사업체 선정 필요
 11. (광고비 지출 현황) 25년 23개 광고 중 16개가 신문광고에 집중. 신문 광고의 비중이 높은 것은 홍보에 적합한 방법이라 보기 어려움

12. (인공지능과학관) 인공지능과학관을 글로벌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외국 관광객까지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람
13. (도시제조업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관련) 아울러, 5대 도시제조업 실태조사도 잘 진행해주길 바람. 22년도부터 시행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사업의 방향 전환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현재 설비지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14. (여성경제인 해외판로개척사업) 낮은 비용대비 효과 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15. (여성 AI 및 디지털 직무향상교육)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인프라를 이용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디지털 직무향상 교육 사업 지속적으로 운영 요청
16. (도시제조업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 신용보증재단의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의 성과가 좋았음. 3년후 폐업율 50%인데, 디지털 전환지원을 하니 매출이 신장됨. 디지털전환 교육이 소공인 매출 및 신용증진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제조업 기반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 디지털 전환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17. (여성 디지털 교육 지원) 지원 사업도, 대상도, 예산도 너무 작은 현실임, 디지털 교육은 강사비가 비싸서 예산을 충분히 줘서 해야 함. 열악한 여성 창업지원센터를 창업허브 성수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살펴봐 주면 좋겠음
18. (SETEC 활성화 방안) '31년 이후 SETEC을 개발 계획, 단기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 부재. SETEC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부재
19. (1인 창조기업 관련) 1인 창조기업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20. (서울경제 위기진단 관련) 반기별로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 의견 청취

하는데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이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함

21. (패션·봉제산업 지원) 패션봉제 거점마다 특성, 편차가 있으며, DDP 동대문 활성화에서 확산되어 거점 특성에 맞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소관 부서에서 예산,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SBA는 비즈니스 경험을 새롭게 구성해서 특성과 거점에 맞게 수립할 것
 - 시범적으로라도 서울시 봉제업체들의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근무복, 단체복 수주방안 혹은 영세 봉제업체 연계 방안 검토 필요 (SBA에서는 마케팅, 영업판로 개척에서 노하우를 제공할 것)
22. (미래 진로 연결 프로그램) 창업허브, 청년취업사관학교, 1인 미디어 창작 지원, 상상타운, 상상비즈 아카데미 조성 운영과 같은 진로 연계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협력해서 청소년(10대)들이 견학과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결 제안함

민생노동국(농업기술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포함) : 17건

1. (노동센터 통합 운영 관련) 노동센터 통합이 2년이 지난 시점, 통합 효과 검증 성과평가 등이 필요함
2. (광역 반려 식물병원 운영) 향후 비대면 및 원격상담이 가능하도록 영상 진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알선 조정 제도가 이중적인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4. 이벤트나 명소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 분석과 매출액 분석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광장시장 미스터리쇼퍼) 작년에 종로구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미스터리쇼

퍼 사업이 금년에는 시행되지 않았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람

6. (해외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해외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유해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기준 등을 명확히 정립해주시기 바람
7. 사회적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및 기업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 성과인센티브 사업의 운영비 확대 필요
8. (노동권익센터 사업 관련) 센터 상근 노무사가 1명뿐이라 상담, 조정, 화해 등 법률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짐. 취약노동자 타겟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정리, 개편 바람
9. (노동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3조 하나의 조항을 근거로 여러형태의 노동자복지 시설과 사업이 존재하며 중복사업이 많은데 특히 법률상담 사업은 모두 실시, 기관별 특화사업으로 각 기관의 역할 정리 필요
10. (노동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3조(별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부분 자구 수정 필요하며 부칙 안에 폐지된 조례도 있음. 소관 조례 정비 필요함
1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청년층들의 사회적경제 연계를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필요
12. (콜센터 정규직 전환) SH, 교통공사, 신보 3개 기관 약 100명 콜센터 근로자 직고용 약속이 5년째 미이행되고 있는데, 민노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길 바람
13. (상권 공실 지도 관련)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실문제 해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예비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공실지도를 제작하기 바람
14.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천원의 아침밥 관련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강화 필요
15. (도시농업 보급사업 관련) 도시농업과 반려식물 사업 성과 인정. 2012

년 시작한 도시농업 사업이 현재 스마트팜까지 발전했으며,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 등 높은 만족도로 성과 인정. 그러나 ESG·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는 '해당없음' 답변. 탄소저감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기후위기 시대 도시농업을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기 바람

16. (서울사랑상품권 낙전 관련)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해 별도 방침을 수립할 필요 있음. 세입조치 후 액수만큼 별도 세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환원할 필요 있음. 지방자치법 상 상품권 시효도래 낙전의 변제(환불)는 지자체 권리포기로 시의회 의결 사항임. 낙전 처리방안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
17. (노동 이슈 관련 업무 협력) 노동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7개소와 광역 단위인 노동권익센터 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노동권익센터는 광역 단위의 정책을 기획하고 자치구 단위 센터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실행하는 한편, 외부기관인 서울 지방노동청과의 정기 협력 프로그램 필요

□ 서울시립대학교 : 15건

1. AI, 인공 지능, 반도체 학과 등 활성화에 맞추어 인기 있는 교수님 영입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2.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관련) 기술이전 실적이 서울 내 주요 대학과 비교해서 최하위 수준임. R&D의 성과 촉진에 신경써주기 바람
3. (학생 창업기업 지원 관련) 학생 창업기업의 높은 단기 폐업률 문제. 교원 창업에 비해 학생 창업은 단기 폐업률이 높아 학교의 창업 지원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 학생 창업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강화와 정책 추진 필요
4. 농어촌전형이 오용되는 사례에 대해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함
5. 신입생 중 서울 지역 학생들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함

6. 중앙일보 평가의 교수 연구 부문 22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혁신 추구 가 필요함
7. 시립대만의 강점을 가진 도시계획, 세무 등을 통해 평생교육원의 사회 공 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주기 바람
8. 교수 연구력 순위 지표나 피인용률이 낮은 편으로 후학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9. 사회공헌의 의미를 고민해보고 시립대만의 특화가 필요함. 지역사회 동반 성장은 별도로 독자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실행하길 바람.
10. 특허출원과 관련한 보상금이 낮은 편으로 보상금에 대한 확대를 요청드림
11. 인권센터 홈페이지의 부적절한 용어 수정과 인권 감수성 진단테스트 링크가 작동이 안됨. 인권센타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 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홈페이지도 개선이 필요함
12. 서울시 출신 초빙교수 비율이 과다하고 임기나 급여 등 특혜성 논란이 될 수 있음
13. OECD 국가의 수도에 있는 시립대학교와는 자매 교류 협정을 맺는 것이 필요함
14. 발전기금이 타 대학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명확한 전략을 수립 하여 대책 마련 바람
15. 서울시립대학교의 차별화된 전략과 강점을 구조화하여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에 적극적으로 노출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농수산시장본부(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 10건

1. 착한가격 프로젝트 등 농산물 할인공급 사업은 대형마트 위주 보다는 전 통시장 등 소상공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2.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농산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3. 가락시장 내 거래되는 수산물에 대해 고성능 기기를 통한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하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람.

4.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0명의 위원 중 생산자는 3명에 불과함. 산지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생산자 위원 증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시 4개 공기업 중 농수산식품공사의 24년도 기준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큼. 남녀임금격차와 여성임직원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6. 조례와 정관에 명시된 사업내용 중에 가락몰 사업부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 사업을 지속하려면 조례와 정관개정이 필요함
7. 업무추진비 사용은 규정에 맞게 가능하면 근무시간에 사용하기 권장함
8. 수의계약 건 수가 많고 특히 연구용역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23년부터 25년사이 29건의 계약중 17건이 특정 6개 기관에서 2번 이상 중복 수행하였음. 2천만원 이하일지라도 연구사업으로는 큰 금액이므로 계약의 공정성을 유념해주길 당부
9. 농산물 포장화, 규격화에 더해 가락시장 입출차 차량에 대한 자동 세차 등을 통해 대시민 ‘극단적 청결’ 캠페인을 추진할 것. 이를 통해 가락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음
10. 정부의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정책은 2030년까지 온라인 유통물량 비중을 5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춘 가락시장의 기능 변화를 모색하여 공사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 서울연구원 : 8건

1. 연구원장실 면적 축소 등 부족한 연구공간을 확충할 방안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2. 서울연구원이 가진 특허들이 서울 미래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3. 연구원 양평가는 기간이 길고, 예산이 크고, 참여 연구원이 많을수록 유리해보임. 정책적으로 작지만 핵심적인 핀셋 연구들의 평가가 소홀해질 수 있음. 작지만 현실성 있는 연구들에 대한 평가의 반영도 존중해주기 바람.
4. 자체 외부 위탁 교육이수 실적이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 부서가 교육률이 저조하므로 지속적으로 관심가져주길 바람.
5. 서울의 인구대비 연구인력이 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함. 특히 첨단산업 및 지역연구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을 늘이고 조직혁신을 통한 지역거점 연구원으로 강북분원 신설을 제안함.
6. 요즘은 AI가 논문을 써주는 시대인데, 작은연구가 얼마나 지속가능할지 의문임.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함.
7. 출강 허가가 너무 많음. 출강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부수적인 수입으로 인해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음. 본인이 연구한 것을 사회에 공유함으로서 연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1학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지속적인 출강은 부수적인 수입의 수단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함.
8.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은데 연구의 경우 2천만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함.

□ 서울경제진흥원 : 10건

1.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 감사 지적 관련) 감사 결과 특정 위원 업체가 중간기업으로 참여해 부실 운영된 이해충돌 및 특혜 의혹과 서울 기업 지원 예산의 46%가 지방 기업에 쓰인 문제점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음. 이에 대한 관련자 징계 현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보고해주시기 바람.
2. 비더비가 DDP에 기여하는 부분을 계량화하고, DDP 활성화에 더욱 기여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소공인 대상 제조장비 렌탈 방식으로 양말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 검토하기 바람
4. 벤처펀드의 관리 및 수익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5. 각종 위원회 구성관련 남녀 성비 균형을 맞춰주기 바라며 위원회 출석이 0인 불량한 외부위원들에 대한 처리 등이 담긴 위원회 총괄 운영 규정 신설이 필요함
6. 소기업 IP 보호 지원 필요함
7. 육아휴직율이 모범적으로 높으나 여성임원비율을 높여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바람.
8. SBA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경제실에서 직원을 늘려줘야 함
9. AI 전환시대에 경제진흥원 전체가 소관 업무에 AI 전환을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10. (서울경제진흥원 정체성 및 고유사업 비중 관련) 서울경제진흥원의 2025년 고유사업 비중이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인 22.8%로 하락하였으며, 전년 대비 수탁사업비 감액(2.5%)보다 고유사업비 감액(15.8%) 폭이 월등히 커 기관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삭감 내역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예산 확보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12건

1. (서울신용보증재단 고유업무 관련) 재단의 주요 업무 중 7가지가 대행 업무로 장기간 수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효율성을 위해 이를 고유 업무로 전환할 필요성 강조
2. 골목상권 구획화 지정 및 육성 사업이 현장 반응이 좋으니 앞으로도 적극 적 지원해주실 것
3. 여성임원 비율과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저조하며 공공기관의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4. 업종닥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내용이 훌륭한데, 이를 데이터화해서 경영지원에 활용할 것을 포함하여 데이터 입력시 보증사업에 대한 책임자 이력 제가 운용되어야 함
5. 상권분석서비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 성별, 연령 등 세분화된 자료입력과 분석으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할 것
6. 프랩아카데미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칭찬하고 프랩아카데미 출신이 업력을 늘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푸드박람회에 이들을 위한 부스를 서울시가 마련하여 홍보와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기 바람
7. K푸드 열풍으로 한식이 주목 받고 있음. 프랩아카데미 수료생 중 우수한 제품이 해외까지 진출한다면 더욱 좋을 것. SBA와 협업하여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검토해볼 것
8. 재단 홈페이지에 프랩아카데미 수료생의 매장을 소개하는 등 수료생 매장 홍보에 신경 써주기 바람.
9.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사장님이 고객센터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람
10.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하고 면직 처분이 발생하는 등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남. 재발 방지를 위해 단순한 법정 교육 이수를 넘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할 것 주문
11. 지역별 골목상권의 개별 특성에 맞춰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에서 경영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바람
12. 현재는 예비 창업자가 입지와 아이템을 정해오면 수동적으로 보증만 서주는 형태라, 상권 특성과 맞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가 많음. 자치구별 '종합지원센터'가 보유한 방대한 골목상권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희망자들에게 선제적·능동적인 창업 유도 프로세스 필요

기획조정실 : 15건

1. 인구정책시행계획 성과점검 결과에서 달성을 수치가 다른데, 수치가 틀리거나 혼란을 주지 않게 작성 바람
2. 인구정책 시행계획 중 경력보유여성 미래의 유망직종 진출 지원 추진 내용
3. 법률고문 자문 내용 (4건)
 - '23.3.24. 서울연구원 현안검토의뢰(창의)
 - '23.4.4. 기관에서 발생한 임원의 비위행위가 기관장의 관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공기업)
 - '25.6.16.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위탁 대행 수수료 폐지 가능 여부(공기업)
 - '25.8.1. 동일 목적의 수당 신설 가능 여부(조직)
4. 자치법규 입법지원 사례 중심 자료
5. 약자동행지수 주거 부분 중심 자료
6.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자료 (※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협의)
7. 지방보조사업 통합 심층평가 시범운영 결과자료
8. 16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
9. 실질적인 세입 증대, 예산 절감 등에 대한 성과결과 심의 자료
10. 시민성과금 신고 후 개선 내역
11. 시범사업 조례에 근거한 시범사업계획서 자료 및 평가결과 공시 관련자료(2019년~)
12. 서울비전2030 이행 실적관리 자료

13. 6개 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
14. 서울연구원 통합 관련 서울시가 노력했던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리한 자료(고노부 협의 등)
15. 시민참여예산 중 자유제안 사업 목록 (업무보고 p.93)

경제실(서울시립과학관 포함) : 20건

1. (진흥지구 관련) 진흥지구 취소가 되면 진흥지구의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진흥지구 평가시 C등급은 없고 B등급도 1억원을 주면 예산 나누어 주기가 아닌지
2.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연장, 재연장하는 경우가 많았음. 경쟁률이 높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내용 확인 필요
3. (뿌리산업 실태조사) 시장 공약사업 뿌리산업 이행률 30%에 불과한데, 내년 사업에 잘 반영되기를 바람
4. (공공의 책임성 강화) AI허브 등 입주 기업들에게 계약서를 쓸 때 본인이 받은 혜택을 사회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음
5. (패션산업 지원 관련) 한국적 요소가 있는 다양한 품종의 패션상품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소잉협회 등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6. (24년 인베스트 서울·실적) 인베스트 서울 운영결과 보고서의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발굴 개수 '24~'26년 목표치는 있으나 실적이 없음. 핀테크 아카데미 수료자 수는 '23년에 사업 일몰되었고, '25년부터 목표설정이 없어야 하는데, 목표가 있고 실적이 없음
7. (요구자료 88번 관련) 24년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전체자료제출 요청(전자파일 제출)
8.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사업 상세 현황

9. GPU 지원 관련 - 집행 내역 상세 제출 요청 (GPU 구매/임대 여부, 몇 개 회사에 몇 개씩 공급했는지, 사양, 차별적/일괄적 집행 여부 등)
10. 매력일자리 관련 민간기업 맞춤형, 민간단체 협력형 사업의 인턴이 해당 기업에 취업한 비율 관련 자료
11. 2024년도 서울경제진흥원 창업시설 관련 창업지원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12. 전기버스 관련 도입시부터 현재까지
 - 운전자 인건비 내역(연도별)
 - 버스 이용객 전체 내역(표)
 - 정비비용, 운행비용 등 소요 예산 일체(연도별)
13. 투자진흥재단, 인베스트서울 고용 승계 과정 자료 요청
14. 금융 경쟁력 강화의 노력
15. 비더비 공간의 방문객 수 및 성과
16. 뷰티워크 관련 자료
17. DMC 교육첨단 및 홍보관 용지 추진계획
18. 25년 동행로봇 발명프로그램 서대문구 참여 현황
19. 라이즈 사업 관련 대학별 예산 현황 (동국대·중구청·한국외식업중앙회 협업 관련 사항)
20.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개선 방침서에 포함된 보조금 집행율에 대해 자치 구명으로 제출

□ **민생노동국(농업기술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포함) : 19건**

1. (노동센터 통합 관련) 권익센터 통합 전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4개소 (감정센터 포함)
 - 노동 상담, 컨설팅 실적 비교
 - 통합전후 인력, 예산 비교
 - 만족도 조사 등 정량적인 성과지표 비교
2. (노동센터 통합 관련) '24년 정규직 채용 공고 2건 면접심사위원 명단 및 채점표
3. (땡배달 민원) 땡배달 배차 지연, 고객센터 미응답 등 소비자 불편 사항이 많음
4.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 관련) 시스템 활성화 수준에 비해 인력이 과도 함. 실질적인 경력 인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5. <노동권익센터 요구자료 14번 관련 보완자료>
 - 센터장 채용공고문 관련 보충자료
 - 서류제출자 수, 서류전형 합격자 수
 - 채용절차 서류 일체
 - 면접심사위원 명단 및 채점표
 - ('24년 정규직 채용 공고 2건) 면접심사위원 명단 및 채점표
6. 센터장 면접심사 당시 복무처리 관련 증빙자료
7. 권익센터 통합 전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4개소(감정센터 포함)
 - 노동 상담, 컨설팅 실적 비교
 - 통합전후 인력, 예산 비교
 - 만족도 조사 등 정량적인 성과지표 비교

8. 신규채용 평가 채점표, 평가서(원본대조필)
9. 공공배달 목표 및 그동안의 성과
10.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알선위원 역할 및 선정(기획) 이유, 성과/사례
11. 골목상권, 골목형상점가와 일상 보행권과의 관계
12. 서대문구 착한가격업소 리스트
13. 이동노동자쉼터 대관현황(개인/단체 구분), 노동권익센터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 현황, 찾아가는 감정노동교육 교안
14. 프리랜서 안심결제 월별 세부실적(프리랜서/의뢰인 구분)
15.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등록된 기업 수(카테고리별, 업종별)
16. '26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7. 프리랜서 안심결제 월별 세부실적(프리랜서/의뢰인 구분), 프리랜서지원 팀 업무내역
18. '26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 관련 성과보고서
1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4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누락된 출장결과보고서

□ 서울시립대학교 : 16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붙임자료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종이 책자 간소화 요청드림
2. 초빙교수 현황 및 고위공무원단 출신 초빙교수 중앙정부 보조 내역
3. 서울시립대 보유 지식재산권 전체 현황(특허출원 국내·외 포함) 및 지식재산권 신청 현황(산학협력단, 연구소 구분), 서울시립대 지식재산권 업무 절차 및 지원 현황

4. 누수건물 설립연도, 시공사 현황
5.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내역 및 처리결과(외국인 학생 포함),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형사고소 현황
6. 교직원 복무규정
7. 최근 3년간(2023~현재) 교원 겸직 현황 (성명, 겸직신고 업체명 명기)
8. 14개 부설연구기관 중 연구기능이 중복된 연구기관 목록
9. 최근 3년간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10. 시립대 의대 유치 방안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1. 최근 3년간(2023~현재) 교원 겸직 현황 (성명, 겸직신고 업체명 명기)
12.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계획 및 정책과제 내용
13. 전임교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공무국외여행 사후신청 및 귀국보고서 지연 제출 시 관리방안 및 개선방안
14. 최근 3년간 사회공헌 활동 실적
15. 시립대 연구지원 사업현황 및 개선방안, 외부 연구 참여 인센티브 현황
16. 기업협업센터(ICC) 산학공동연구 매출증대 및 상용화 현황과 기술이전 수입료 현황, 기술이전실적 현황에 기술이전 건수 포함 여부, 기업협언센터의 우리 대학 강점 사업 6개 분야 현황 및 내용

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농수산식품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 16건

1. 공동물류를 수익사업에서 R&D 사업으로 전환된 이유가 궁금함. 공동이 배송 사업 계약서에 사업의 수행 범위는 제안요청서, 운영업체 제안서, 협상합의서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음. 관련 자료 및 별도 보고 요청 드림.
2. 상반기 품목제한 해제 관련 농식품부 협의, 검토 과정에서 수발신한 문서 일체, 협의내용 및 검토결과

3. APC 현황
4. 디지털전환 2026년도 추진계획, 현황
5.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운영 정관
6. 정산회사 대여금(차입금) 내역
7. 공동이배송 사업계획서, 시범사업 진행결과, 공동물류 사용료 차액 지원 사업계획과 근거
8. (행감자료 433p) 수의계약 건 중 가장 금액이 컸던 4억 7천 3백만원에 대한 사업계약서, 지출 관련 서류 일체
9. 정산회사 중도매인 연도별 체납금액(시장별로 구분해서)
10.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직원 복지현황(연도별 복지, 고정적 복지 구분해서)
11. 최근 5개년 공사와 물품을 구분한 수의계약 비율
12. 예산 집행률 관련 수입/지출의 자본 부분의 집행률 편차가 심한데 그 집행률 중심으로 자료 작성 요청
13. 11월 휴업일 전후일, 전전일/익익일에 대한 매출규모
14. 세금 관련 토지 분리과세(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이 부분 관련해서 계산하게 된 경위, 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
15. 품질인정 내화구조 벽체 관련 지적사항 및 개선 계획
16. 최근 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내역

□ 서울연구원 : 7건

1. 서울시 전체 출자출연기관 대비 연구원의 육아휴직률이 매우 낮은 편인데, 연구직이 육아휴직률이 낮은지 이해가 안됨. 이유가 무엇인지? 조직문화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함.
2. 소속 직원이 아파서 질병 휴직신청을 하기 위해 3차 의료기관 진단 결과를 제출했더니, 연구원에서는 지정 병원(2차 의료기관)의 진단서만이 유

효하다는 입장을 내고 산업보건의 검토를 강행했음. 소속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연구원의 입장을 밝히고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3. 조정수당 일몰 후 대책(별도 보고 요청)
4. 명예퇴직금 관련(별도 보고 요청)
 - 2021년 명예퇴직금 관련 규정을 위반(신청시기) 하여 지급한 것에 대한 법적검토 자료
 - 명예퇴직금 과다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계획
 - 특별감사 및 관련자 문책 계획
5. MOU 체결 이후 협력 실적(공동연구, 상호교류 등)
6. 임금체불 관련 자료
7. 2025년 서울시 유관부서와의 정기교류(솔루션포럼) 개최 현황

□ 서울경제진흥원 : 9건

1. 서울영화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
2.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흡연실 사업 제안
3. 면세점 입점 판매지원 사업 관련
4.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관련 '24년 3월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5.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별 수료자·취업자 수, 취업률
6. DDP 쇼룸 관련 서울시 패션산업 육성 정량 성과지표
7. SBA와 CJ ENM의 역할 분담 관련 별도 보고 바람
8. 2025년 창업허브 글로벌 진출 사업 관련
9. 장비 지원 관련 지원금 30% 이내 관련 규정

□ 서울신용보증재단 : 7건

1. 업무보고서 작성이 잘되었는데, 직원들의 노고가 클 것으로 보임. 직원 격려 및 보상에 신경써주실 것
2.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계획 및 성과
3. 공덕 프랩아카데미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일체, 공덕 프랩아카데미 조성 공사 인건비 산정 기준 및 분리발주 사유
4. 외국인 업체 대위변제율 - 2024년과 비교
5.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인원 구성 및 예산 현황
6. 정보화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7. 골목상권 지원 대상지 지정기준, 공고문

〈 붙임 〉 주요 감사 사항 (기관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기획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 시정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 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 ○ 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 ○ 시정백서·시정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 미래 시정발전 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p>【 국회협력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협력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조사 및 국회연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정당·국회의원 건의사항의 처리 <p>【 조직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정원관리 및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업무의 총괄조정 ○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시정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직무발령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정책 총괄·조정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평가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 ○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 ○ 지시사항 평가·관리 ○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p>【 법무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 ○ 법령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법무 관련 자료·법제심사 사례 체계화 및 정책적 활용기반 마련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의 총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p>【 법률지원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법령 제·개정 관련 법률검토 등 지원 ○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중요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 법률자문 및 시정관련 중요사항 법률지원 ○ 민간투자·위탁사업, 계약 등에 대한 재무 및 법률적 타당성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예산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 예산편성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 ○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p>【 재정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채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제정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 민간보조금사업에 관한 사항 ○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 예산절감,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사항 <p>【 약자동행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획 수립·총괄 조정 ○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빌굴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약자 동행 지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재구조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p>【 공기업 분야 】</p>

- 투자·출연기관 신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및 투자기관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경영수익사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혁신경영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부채감축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상시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창의규제 분야 】

- 창의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창의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 창의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창의행정상 운영
- 법령·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정책 수립
- 규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규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규제총괄관(민간전문가)의 규제개혁 자문·조정·대외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등록규제 관리 및 자체규제 정비
-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파 및 교육
- 규제개선 과제 점검 및 평가·성과관리
- 규제개선 과제 공모 등 홍보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 분야 】

-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기업규제·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
- 규제개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대상 안건 발굴 및 검토
- 규제개혁 관련 시민 제안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 및 관리
- 시·자치구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경제정책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제정책 총괄 · 조정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서울경제진흥원 지도 · 감독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비지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 · 조정 ○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 · 조정 및 국제 통상환경 조사 · 분석 ○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운영 · 관리 ○ 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기업 애로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 감독 · 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지원센터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기업의 국내 · 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전략산업 선정 및 계획 수립 총괄 ○ 로봇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행 ○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일자리정책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 취업지원 및 직업안정 계획 수립·조정 ○ 민간취업 관련 구인기업 발굴·협력·관리에 관한 사항 ○ 고용촉진 훈련 등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업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직업 훈련 시설의 지도·감독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p>【 창업정책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창업지원 인프라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창업교육 및 상담·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창업기업 투자금융·유통·마케팅 지원 등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관한 사항 ○ 민간창업 기관과 협력 추진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펀드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관리 <p>【 대학협력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담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대학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학 창업기업 성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학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 금융투자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금융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에 관한 사항 ○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국제금융기구 및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 마케팅에 관한 사항 ○ 글로벌기업 등 투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여의도 금융중심지 기부채납 계획수립 등 금융허브 조성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 촉진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전담 지원시설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 창조산업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창조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확장현실(XR)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시설 운영 ○ 게임·e스포츠 산업 육성 및 e스포츠 경기장 조성·운영 ○ 1인미디어 허브 조성 및 산업 지원 ○ 웹툰·만화·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시설 조성 ○ 웹툰·만화·애니메이션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창조산업 전문인력 양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 <p>【 뷰티패션산업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뷰티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패션·봉제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서울패션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뷰티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서울도시제조허브 및 패션제조 기반시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제조업 및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사항 <p>【 첨단산업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흥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서류 또는 현장 확인 <input type="radio"/>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서울바이오허브 앵커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등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서울 AI 허브 운영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AI 서울 테크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p>【 산업입지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산업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 <input type="radio"/>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마곡신산업단지 관리·운영 총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뿌리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인쇄·기계금속 산업 지원시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민생노동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소상공인정책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푸드트럭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매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p>【 노동정책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노동존중 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 생활임금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비정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 상권활성 분야 】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정경제 분야 】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 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 · 육성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 · 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 · 검정 · 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 · 수리 ·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정보공개서
등록 ·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육성 시책
수립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농수산유통 분야 】

- 농수산 유통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 · 안정 및 유통
지도 · 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 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미래비전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 · 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지보전 및 전용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인권센터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 신고사건 처리,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 ○ 장애학생 대학생활 지원 ○ 인권 및 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문화·홍보·연구 사업 <p>【 교무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 교수업적평가 ○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 ○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학사관리 ○ 학생현원 관리 ○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 학적관리 ○ 수업·시험·성적 및 교구 관리 ○ 논문심사 관리 ○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 <p>【 입학관리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대학원 입학전형 계획 수립 ○ 학부 신·편입생 선발 ○ 주요 입학전형 확정 및 입학전형 유형개발 ○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 <p>【 학생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 집회, 행사, 간행물 지도감독 ○ 학생취업지도 및 부업에 관한 사항 ○ 학생병무에 관한 사항 ○ 학생보건 및 학생 후생복지관리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학생의 해외연수 ○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 비교과교육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기획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기 대학발전계획 수립 ○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 대학주요업무계획 수립 ○ 대학혁신 관련 사업 총괄 ○ 대학평가, 혁신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 대학통계 및 정보공시 <p>【 대외협력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홍보 종합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대외 협력지원 ○ 재정지원사업 총괄 ○ 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강촌수련원 운영 <p>【 연구지원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비 관리 총괄 및 자체감사 ○ 연구노트 관리 ○ 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 연구기자재 수급 등 그 밖의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p>【 국제교류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지원 ○ 외국 학생 선발 및 입학전형관리 ○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 ○ 외국인 입시설명회 개최, 기획 및 홍보 ○ 외국 학생 및 교원 지원 관리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총무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및 대학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관수 ○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교직원의 의료보험·연금·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 ○ 자체 감사계획 수립·시행 ○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 재무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및 대학회계 집행 및 결산 ○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 행정재산 관리 ○ 물품관리 및 불용품 처리 <p>【 시설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 학교건물의 전기, 냉난방, 급수, 기계설비, 도시가스, 실험(연구)실, 위생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 교내 수목, 녹지, 조경, 수경설비 등 환경관리 ○ 통신, 음향 시설관리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p>【 중앙도서관 사서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구입의 선정 ○ 도서의 등록 ○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 ○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관리 <p>【 전산정보원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정보화사업 총괄 추진 ○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구축 및 운영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다기능사무기기,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매 · 보급 및 유지관리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생활관 관련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 운영 및 관리 ○ 관생의 선발과 지도 ○ 관생납부금 책정 및 수납 ○ 생활관 예산 및 결산 ○ 시설물의 유지·관리 ○ 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p>【 평생교육원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기 운영계획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관리 ○ 교육홍보, 자료수집 ○ 학생의 모집 ○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 교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 교육진행 제반사항 <p>【 창업지원단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강좌·창업실습 운영관리 및 지원 ○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 창업경진대회 운영 및 지원 ○ 예비기술창업자 발굴 및 육성 ○ 일반인 대상 창업운영 관리 및 지원 ○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기타 정부지원사업 기획 및 발굴 지원 등 <p>【 교육혁신원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혁신 관련 전략 및 연구 개발 지원 ○ 교양 교과목 교육과정 관련 총괄 운영, 개편 및 학사행정 ○ 외국어 교과목 개발 운영 및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개발 ○ 교육 및 교수학습 관련 소통 및 홍보 활동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시립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사회공헌사업 총괄 추진 ○ 국내·해외 사회공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사회공헌 소양 교육 개발 및 운영 ○ 사회공헌 단체 및 활동자 연계 <p>【 박물관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발굴에 관한 사항 ○ 수집 및 발굴된 자료의 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 등 <p>【 대학보건소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건강상담, 집단검진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등 <p>【 체육관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 수칙 등의 제·개정 ○ 체육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p>【 출판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학술연구 문헌 및 간행물 출판 ○ 대학과 연구소 논문집 발간 등 <p>【 대학언론사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신문사 운영 및 관리 ○ 대학방송국 운영 및 관리 ○ 영자신문사 운영 및 관리 <p>【 부설연구소 관련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연구기관(14개)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 도시과학연구원, 공학연구원,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소, 서울디자인연구소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농업교육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농촌진흥시책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형 도시농업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 농업인 및 도시농업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현장 적용기술 및 효과분석 연구 ○ 시민 및 학생들의 농업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장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생활농업교육, 학교원예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치유농업 육성 및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 기술보급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기술·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생활개선회·4-H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귀농·귀촌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에 관한 사항 ○ 곤충산업활성화 및 관련 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 전통음식교육 및 농업·농촌 전통문화 계승, 소비자 농업에 관한 사항 ○ 서울시 반려식물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업인 기술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총무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관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조직·인사·예산·회계·직원관리 등 과학관 운영 총괄 ○ 과학관 시설, 장비, 재산관리 ○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지원 ○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전시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 전시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전시품운영 심의회 등 운영 ○ 전시품 DB 구축 및 전산화 ○ 고객만족도 및 고객서비스 향상 관련 사업 추진 ○ 매표 및 안내데스크 관리 <p>【교육지원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교육 교재, 기자재 확보 및 운영 ○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도슨트 교육 및 운영·관리 ○ 과학관 견학 및 자원봉사자 등 관리 ○ 교육청,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 추진 <p>【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예산, 회계, 복무, 보안, 재산관리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상설전시·기획전시 기획 및 운영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홍보, 교육 프로그램· 문화행사 운영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시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p>【 도매권 관리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유통업무종사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 시설현대화사업 등 도매시장 시설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서울농수산물도매 시장정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소매권 관리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몰 임대상인·입주자 지도 단속 및 질서 관리 ○ 가락몰 구역별 임대료 산정 및 시설물 임대 관리 ○ 가락몰 명소화·활성화·경쟁력 확보에 관한 사항 <p>【 식품 안전 및 유통정보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에 관한 유통정보의 수집·전파 <p>【 공공급식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및 든든급식 사업과 관련된 친환경·우수식재료 학교 및 어린이집 공급 등 <p>【 자회사, 출자회사 관리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자회사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공사 출자회사인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p>【 기타 사업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급 사업 ○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사업, 이외 부대사업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 연구사업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기술개발·연구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기술개발·연구 ○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기술개발·연구 ○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 ○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연구기반사업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p>【 연구성과 확산 분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경제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p>【 윤리경영 및 청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윤리경영 기획 및 관리 총괄 ○ 재단 운영의 효율성 등 제고를 위한 감사기획 및 운영 ○ 청렴·반부패 관련 외부평가 대응 ○ 외부 민원대응 및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 임직원의 고충처리제도 운영,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관련 업무, 인권침해 구제관련 업무,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관련 업무 ○ 기타 재단의 윤리경영, 청렴·반부패, 감사 등에 관련 사항 <p>【 경영기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비전, 경영전략 및 주요 정책개발 ○ 예산기획 및 편성, 집행, 운영관리 및 결산 등 ○ 조직기획 및 관리, 정원기획 및 관리, 조직성과 평가, 이사회 ○ 정관 및 규정, 규칙 등 규정의 제·개정 관리 ○ 소송사무, 법률자문 등 법무 관련 업무 ○ 인사기획 및 직원의 채용 등 인적자원 관리 업무 ○ 직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사항 ○ 인사평가 및 보상, 노무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사항 ○ 자금운용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관리, 자금 조달업무 ○ 재무 및 세무회계, 재산관리, 퇴직연금 관리 업무, 출납 등 ○ 계약업무 총괄 및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업무 ○ 정보시스템(홈페이지, 경영·사업·고객 등), 플랫폼서비스 등 전사적 정보화체계기획 및 운영 총괄 ○ 전사 시스템 등 내부 DX 전환 기획 및 운영 총괄 ○ 기타 기관 경영, 노무, 인사,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경제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p>【 홍보 및 동행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홍보기능 통합 운영 및 조정, 홍보기획 및 관리 등 ○ 주요 언론 매체 관련 업무 총괄, 보도계획 수립 및 관리 ○ 전사 브랜드 관리 총괄, 브랜드 전략수립 및 관리 ○ 기관 대외 협력 및 사업별 위원회 관리 ○ 약자와의 동행 관련 업무 기획 및 운영 <p>【 창업기업 육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창업허브 운영 관련 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 창업기업 클로벌 진출 지원 및 창업플랫폼 간 연계협력 ○ 창업기업과 국내외 대·중견기업 협력사업 기획·추진 ○ 우수 창업기업 선발, 투자, 지분 확보·관리·회수에 관한 사항 ○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투자 네트워크 구축 ○ 투자 지원업무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미래 혁신 신사업 기획 및 운영 ○ CES 운영계획 수립,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서울시관 조성 등 CES 운영 총괄 ○ 서울형 규제혁신 운영 및 전문 협력네트워크 발굴·관리 ○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외부 전문 협력 네트워크 발굴·관리 ○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및 해외 투자유치 관련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경제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p>【 매출 증대 지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및 바이어 인·아웃바운드 수출상담회 운영 ○ 수출유망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인증, 통관 등)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마케팅센터 운영 및 입주사 선정·관리 등 ○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해외 수출 프로그램 운영 ○ 서울어워드 사업운영 관련 글로벌 우수 제품 선정, 홍보, 판매 촉진 ○ 하이서울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운영 ○ 하이서울 기업인증 및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p>【 인재 양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기획·운영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신기술 등 실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교육관련 사업 ○ 창업 등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에 관련 사항 <p>【 기술 경쟁력 강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기획 및 신사업모델 발굴 운영 ○ 중소기업 R&D 지원성과 및 기술개발 수요 조사·분석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신성장산업 기반 중소기업 R&D 지원 및 기술사업화 촉진 ○ 민간 연계 강화를 통한 혁신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경제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을 통한 혁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한 초기 기술, 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서울시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혁신기술 개발 지원 ○ 서울형 R&D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테크밋업협의체 활성화 지원 ○ 서울 로봇쇼 개최 및 운영 ○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실증 지원,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 산업거점 활성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곡형 R&D 생태계 활성화 및 마곡산업단지 거버넌스 구축 ○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해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개발 ○ 서울창업허브M+ 운영과 관련한 계획 수립, 유망기업 발굴, 지원사업 개발 및 운영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집행 및 제도 개선 ○ 마곡일반산업단지 기업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고도화 ○ DMC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 및 DMC 기업지원시설(첨단, 산학) 입주기업 모집·선발·성장서비스 지원 ○ 서울XR실증센터 기반 XR 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XR 기업 지원 및 XR 산업 확산 프로그램 운영 등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경제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밸리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제품 상용화·고도화 등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운영 ○ G밸리 창업큐브 입주기업 모집, 계약체결, 기업 지원 및 관리 ○ SETEC 운영 및 임대유치, 전시회 개최 등 관련 사항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서울창업허브M+ 운영, 창업기업 육성지원, 마곡산업단지, DMC 활성화, G밸리 활성화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p>【 창조산업 육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콘 운영 및 인플루언서 연계 사업 등에 관한 사항 ○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 ○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및 관련 콘텐츠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 ○ 첨단장비 및 기술지원을 통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 ○ 상상비즈이카데미 운영 및 콘텐츠 신입분야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 콘텐츠 빌굴 및 창작 커뮤니티 활성화 등 상상타운 클러스터 강화 ○ 서울영화센터 운영 및 관리 ○ 콘텐츠산업(애니, 웹툰 등) 창작 및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 ○ SPP, 국내외 콘텐츠 마켓참가 등 콘텐츠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게임콘텐츠센터, 이스포츠경기장 운영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 게임산업 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경제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상상타운 활성화, 콘텐츠산업 육성, 게임콘텐츠 육성 및 게임 사업 지원 관련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 뷰티·패션산업 등 육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뷰티복합문화공간(비더비) 공간 운영 및 활성화 ○ 서울 패션복합문화공간(DDP쇼룸) 및 첨단라이프스타일전시장 공간 운영 및 활성화 ○ DDP 및 비더비, DDP쇼룸 공간 및 뷰티·패션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 서울 유망 뷰티기업 발굴 및 국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런웨이투서울 패션쇼 등 연계 패션 유망기업 발굴 및 집중 성장지원 ○ 서울도시제조허브 운영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뷰티산업, 패션산업 등 육성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신용 보증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p>【 신용보증 지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재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 경영지도 ○ 구상권 관리와 행사에 관한 사항 ○ 정책자금 융자대상업체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市·자치구 수탁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상권활성화 사업 등 ○ 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업무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노동 권익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p>【서울노동권익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시설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노동교육, 노동상담, 법률지원 실적 ○ 중소사업주 컨설팅 실적, 만족도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 ○ 정책연구 추진 현황 ○ 노동관련 홍보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p>【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판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유통채널 연계 기획판매전 운영 ○ 공공기관 협력사업 발굴 및 기업 맞춤형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구매 확대 ○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온·오프라인 교육 ○ 가치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참여 마케팅 및 SNS마케팅 등

4. 환경수자원위원회

□ 총괄

기관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제출 등)
계	330	185	106	39
기후환경본부	78	45	25	8
정원도시국	소계	93	60	26
	정원도시국	66	48	16
	서울대공원	27	12	10
서울아리수본부	68	35	22	11
미래한강본부	53	29	18	6
서울에너지공사	38	16	15	7

기후환경본부 – 45건

1. 서울시 산업 구조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건물 부문이 가장 크지만, 예산 편성은 교통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 비율과 예산 편성 간에 괴리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
2.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자치구 자체와 서울시 합동으로 과대 포장 점검 및 단속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적발되는 업체들이 많아 효과가 미비함. 시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대 포장 기준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참여형 정책을 추진 할 것.
3. 에코마일리지 전용 앱 미비, 홈페이지 연동 불가 등 사용자 접근성 낮아 MZ 세대의 확대가 미흡함.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체험형(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도입하여 내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
4. 기후부의 탄소중립 인센티브 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조기 중단된 상태임. 향후 통합 시까지의 운영 공백 방지 및 예산 연계 방안 마련하고 시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안내할 것.
5. 명동 관광특구의 쓰레기 관리 체계가 부실함. 유동 인구가 많은 중앙 가로 쓰레기통 부족과 청결 관리가 미흡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6. 시민과 관광객의 인식개선을 위해 줍깅 캠페인과 외국인을 위한 다국적 안내 표지판 및 카드 등으로 홍보할 것.
7.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가 민간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어 참여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짐.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8. 연도별 신고·등급제 목표를 자체 설정하기보다 전체 대상 건물과 참여 가능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목표를 재설정할 것.
9. A~E등급 평가뿐만 아니라 건물 에너지 절감량 등 정량적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10. 등급 공개를 거부하는 건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공개율 제고를 위한 원인 분석과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것.
11.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시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않음.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중앙부처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것.
12.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고 표준화된 건물 에너지데이터 확보와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
13.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 전환으로는 폐기물 감량이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체계를 강화할 것.
14. 수치상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보다 생활폐기물 자체 총배출량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
15. 독려 수준인 분리배출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 확대와 홍보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16.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함. 단속원을 늘리는 단속 중심에서 주민 홍보·제도 등 강화 등 예방 중심의 대책을 강구 할 것.

17.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감축 목표(50%)가 2년 연속 달성되지 않은 만큼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력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18. 1인당 종이 사용량 10% 감축 목표는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서별 업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서별 맞춤형 감축 방안 마련 등 관리 지표를 구체적으로 재설정할 것.
19. 종이 감축 실적과 예산, 온실가스 감축 간 연계를 명확히 하고 우수 부서에 예산 반영 등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
20. 시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시기를 결정하고 시범 운영을 실시할 것.
21.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및 4등급 경유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2.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행에 따라 장애인차 및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차량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할 것.
23.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시행 전에 시민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확보하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할 것.
24. 은평환경플랜트는 타 시설에 비해 폐기물 처리 효율이 낮고 운영비가 과다함. 적자의 50% 지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5.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마포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법상 영향권 외 주민은 포함 불가하나 법 이외 별도 대화 기구 구성 등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

26. 은평환경플랜트는 음식물 혼입으로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관로 부식 문제가 발생하므로 별도 수거 체계를 도입할 것.
27. 기후환경본부가 서울시 미래 위기 대응의 주도적인 부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미래세대 관련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28. 시민이 기후환경본부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순 행사 중심이 아닌 기후 의제 중심의 홍보·캠페인을 강화할 것.
29. 단순 행정 수행을 넘어 AI 기반 기후위기 예측 연구 및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30. 비흡연자 보호와 환경관리를 위하여 담배 제조사 재원을 활용한 흡연 쉘터 및 필터 정화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할 것.
31.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할당 시 자치구별 재활용률 반영하여 재활용률이 높은 자치구에 차년도 반입 용량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32. 재활용선별시설 안전관리 실태평가를 단순 평가에 그치지 말고, 자치구별 안전관리 개선이나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
33. 반복되는 환경기초시설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작업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
34.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도 바닥재가 늘어난 것은 소각시설 노후화 또는 불완전 연소 때문이므로 현대화 사업 이전에 단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35. 소각재 재활용 MOU 체결 후 추진 성과가 미미함. 현재 진행 중인 MOU 사업은 적극적으로 참여·관리하여 정책화하고 MOU 종료 후에도 소각재 재활용 확대를 추진할 것.

36.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 권고기준 초과율이 증가하고 있어 검사 강화 및 베이크아웃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는 자가 조치 실행이 어려워 실내공기질 관리 및 규제를 더욱 철저히 할 것.
37.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인한 중금속 미세먼지와 한강 수질 오염이 우려되므로 대기질 영향, 잔류물에 관한 연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까지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므로 인근 자치구에도 관련 지침을 확대 적용할 것.
38. 전기이륜차 보급은 작년 대비 예산을 2배 편성했으나 성능과 충전 편의성 부족으로 실적 및 예산집행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3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구체적 대응 전략과 실행 계획이 부재하므로 법 취지에 맞춰 지역 단위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시민 참여형 모델 확산을 포함한 서울형 분산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것.
40. 현재 서울시 전력 자립률이 약 10%로 정체된 상황에서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중단하지 말고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41.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의무에도 43개 기관이 미설치 상태이고 서울시는 기후부에 견의하는 등 형식적 대응에 그치고 있음. ESS 화재 위험 이유로 방지하지 말고 서울시는 안전기준 마련과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하며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
42.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대비 실적과 예산집행이 모두 부진한 만큼 실현가능한 보급 목표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43. 재생열(지열) 공사 보조금 시범 지원사업은 착공 이후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집행이 부진하므로 집행 실적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44. 스마트서울맵 내 폐배터리, 폐의약품 수거함 정보 제공 오류 및 관리 부실 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2차전지 수거함 위치도 등록할 것.
45.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은 업종 변경으로 유지관리비 지원이 줄고 설치 소요 기간이 길어 신청 철회가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률 저조하므로 사업 실행력을 높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정원도시국 등 - 60건

[정원도시국] - 48건

1.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등록된 밤섬 인근에서 개최된 불꽃축제에서 사업 주최측 행사계획 시 '밤섬'을 대상지로 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해 장소를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2. 도시공원인 선유도공원 내에서 불꽃축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조립, 해체 등 작업을 시행하는 장소로 지원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옳지 않고 흡연실 부스 설치까지 지원한 것은 공원관리상 안전문제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 불꽃축제 행사로 인해 람사르습지이며 철새도래지인 밤섬에 화약 잔재물, 불티, 폐기물 등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생태계 및 철새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연구하고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생태경관보전지역 외에 생태경관완충구역 지정에 대해 검토할 것.

4. 공원조성계획 관리 실태 점검을 2019년 이후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원조성 계획 불일치한 사례에 대해 장기간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불일치하는 사유를 검토하여 현행화 즉각 조치할 것.
5. 1980~2000년대 초반까지 장기간 방치된 공원 불일치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과거 발생분까지 포함한 전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정리 조치할 것.
6. 도면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고 공원시설이 훼손·변경된 사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고 질의에는 사례 1개소만 언급한 것으로 이외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조치할 것.
7. 대표(A)와 직원(B) 관계인 정원도시국 내 위원회로 활동했던 직원(B)이 유사한 사업자 명칭 회사 대표(B)로 활동하며, 사업자 등록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마당에 같은 주소 및 전화번호, 사무실을 사용하는 정황(A)+(B)이 있어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로 판단되므로 「지방계약법」 및 서울시 재무과 수의계약 규정 등을 고려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8. 서울시 도시숲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자치구에서 사업 시행 시 임의로 가로수를 추가로 반입·반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과 조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 제재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9.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처리 사업에서 열매 그물망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암나무 교체사업을 하여 예산에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정책 태도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10. 노을공원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공원녹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

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조례를 위반하여 인상함으로써 시민에 피해를 준 부분, 수수료 추가부과(세금) 등에 대해서 개선 조치할 것.

11. 파크골프장 이용 안내 시 인터넷 예약 및 잔여석에 대한 예매방식을 일관되게 안내하고 있지 않고 홈페이지, 현장 사무실, 여가센터 직원 등이 각각 다르게 안내하여 시의회에 정확한 정보(자료)를 주지 않았으며, 시민과 민원인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으므로 시정조치할 것.
12. 서울시 도시공원 내 이용프로그램은 대부분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데, 월드컵공원의 노을공원 내 파크골프장과 노을캠핑장은 10년간 인터파크에서만 운영했으므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점검 후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임.
13. 정원도시국 공사 시행 시 하자검사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 하자검사 기간 및 횟수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령을 준수하여 체계를 정비할 것.
14.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조성·기부채납된 도시공원이 목적에 부합하게 조성 및 관리되고 기능하는지에 대한 정원도시국 차원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15. 기부채납이 완료되고 공원 조성(준공)을 했다면 공원의 위치, 공원의 명칭, 인터넷상 안내·홍보를 점검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자치구와 협의하여 조치할 것.
16. 토지보상 및 사유지 침해 관련 소송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고, 일부 폐소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2025년 협의매수 사업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예산 낭비이므로 토지주의 권리와 침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7. 협의매수 공모 신청건은 매년 많지만 보상이 되는 대상 필지는 한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예산편성 규모에만 기댈 것이 아닌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18. 사유지를 활용하는 시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토지보상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시 토지주의 변심으로 인해 집행이 늦어지고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체계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
19. 재개발·재건축 등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이 실제로 어린이공원으로 기능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어린이 이용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놀이시설 등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어린이공원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전체 시설 등을 보완, 점검하고 개선할 것.
20.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심포지엄과 공동 개최됨에 따라 2개 행사는 개최 취지가 모두 퇴색하였고 참석자 또한 시민이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무원으로만 이뤄졌다는 면에서 행사는 목적 달성이 부족 한 점을 개선할 것. 행사는 취지에 맞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서울 식물원만의 행사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
21. 서울식물원 예산으로 국제정원박람회 심포지엄을 지원하여 서울식물원 10 주년 기념행사가 과도하게 축소되었고 행사 성격·장소·내용이 식물원의 정체성과 맞지 않게 기획되지 않은 것은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자의적 집행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22. 서울식물원 해봄정원 부지 재산관리관이 서울시 타 부서로 되어있고, 현재 임시 사용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꽃정원, 작가정원 공모 등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식물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카페 입찰 시 상호명이 달라 취소된 사례가 있는데 입찰에 참가한 당사자가 잘못된 법인을 제출한 사례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등 시행 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지방계약법」을 준수할 것.

24.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마당 시스템에 폐업된 사업자등록 번호로 표시되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계약마당 시스템 등록 및 계약 행정 추진 시 유의할 것.
25. 서울시 재무과 기준 수의계약 횟수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마당 등록 시 실제 계약한 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5회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관계 등 특수 관계에 의한 분할 발주 계약에 유의할 것.
26.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 옹벽 안정성과 토질 등 기술적 검토를 철저히 하고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것.
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공원녹지 조경공사에 준하는 정원조성을 완성품(기부 1식)으로 하여 기부심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재검토할 것.
28.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작가정원, 참여정원, 기업정원 등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원녹지 등 조경시설과 무관한 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어 시설의 적절한 설치 비율에 대해서 검토할 것.
29.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푸드트럭 선정 등 상업행위 등 공공성을 근거로 허용한 것인데, 이에 맞지 않은 허가 사항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원박람회 주최 (컨소시엄) 측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위를 재검토할 것.
30. 푸드트럭 이용 약관과 달리 운영일수를 자의적으로 늘려 참여한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할 것.
31. 국제정원박람회 부스 운영 시 최초 계획에도 없던 일반 부스가 아닌 특정

부스를 카페 등 수익 시설로 운영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세외 수입 및 사용수익허가도 아닌 방식으로 제안서를 받아 민간 업체에게 상업 행위를 허가한 것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 향후 재검토해야 할 것.

32. 공원이 공원의 용도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원도시국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함. 자치구별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공원에 대해 현황 파악 후 해당 용도에 맞게 관리할 것.
33.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내 주차장 등의 시설률에 대한 공원 내 시설 현황 현행화 필요하고 근린공원의 경우 시설률 4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에 맞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법에 따라 운영관리 되도록 조치할 것.
34. 문래근린공원은 시설률이 39.33%로 시설이 포화상태인데, 이와 같은 시설 포화인 공원에서 조경시설을 줄이고 광장과 기반시설을 늘리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지양해야 할 것.
35. 일부 공원에서 공원조성, 정비 등에 관해 반대 여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시행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지키고 협의 과정을 지켜가며 사업을 수행할 것.
36. 오래 전 조성된 공원 내 위치한 주차장이 현재 공원 방문객을 위한 용도의 주차장으로 기능하지 않고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광역 근린공원이 아닌 경우 지역민을 위한 조경, 편의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주차장을 지하로, 상부를 공원화하는 등 방안을 모색할 것.
37. 정원도시국이 도시공원 총괄을 하고 있으므로 자치구가 운영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를 점검할 것.
38. 남산 하늘숲길 주변의 일부 수목이 제거되었고 전망대 하부 콘크리트 기초의

기본계획과 실제 규격이 상이하고, 공사 이후 식생 훼손이 된 부분을 보완 할 것. 또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

39. 동행정원, 매력정원 등 정원 내 식재 조성 시 다년생 식물이 살아있음에도 중복 재조성하며 정원 조성 횟수를 정량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기존 식생을 훼손하면서 조성하는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40.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실태가 미흡하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공원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은데 관리가 부족하므로 여가센터 차원 등 조직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41. 이촌시설 녹지 토지보상이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데, 해당 토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서울시 소유권이 발생하면 주차장에 대한 행정 사항을 정비할 것.
42.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가로수 12,042주가 감소했는데 향후 정비사업이 본격 시작되며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대책 마련할 것.
43. 가로수 관리 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도시숲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44.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견 중에서도 공격성이 높은 개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하며, 해외 사례, 국내 생태환경과 현장에 맞는 정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함. 견주가 자율적으로 맹견을 등록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할 것.
45. 국제정원박람회로 추진했던 뚝섬 내 지방정원 등록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 하고 있으므로 한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 투자심사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
46. 산불 예방 대책 뿐만 아니라 발생 시,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47.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사업은 연천군과의 행정 협의에서 상당 부분 지체되어 수개월 지연되고 있으므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할 것.
48. 국제정원박람회 판매부스 유형 5개, 총 78개소에 대해서 상업적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실적 보고를 면밀히 시행하도록 하여 공원 운영관리 공공성을 확보할 것.

[서울대공원] - 12건

1. 운영 중인 코끼리열차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구매한 전기 차량(2011년)과 업체에서 구매한 전기 차량(2013년) 모두 사용 연한이 지나서 폐차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닐지 우려되므로 운행일지 작성을 포함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리할 것.
2. 코끼리열차 중 디젤 차량은 매연 발생 내용으로 시민 민원이 많은 만큼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2027년으로 예정된 신규 운영업체 선정 시 친환경 차량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반영할 것.
3. 향후 예정된 곤돌라 공사시 면 거리를 이동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코끼리열차 운영 확대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
4. 싸이쇼 등 대형주차장에서 공연하는 경우, 수많은 인파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함. 그리고 소음 발생으로 근방에서 주거하는 주민분과 소리에 예민한 동물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것.
5. 내년에도 유사한 대형 공연이 진행된다면 사용료에 비해 엄청난 수준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대공원과 배분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공연 시 폭증하는 노점상 발생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함.

6. AZA 조건부 인증과 관련하여 유인원관 환경개선 부분은 이미 2년간 보수를 진행했던 내용인데도 현장 실사 시 지적을 받았다는 점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문제 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지적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 또한, 생태적 동물사 조성 사업 등 잣은 사고이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 역시 재실사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것.
7. 대공원 내 게스트 하우스 조성에 관한 언론 기사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 전 시의회 보고 등 선행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사전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할 것.
8. 큰물새장 파손으로 새들을 임시 사육장으로 이동하여 사육 중이지만, 임시 사육장이 매우 협소한 상황임. 또한 큰물새장 정비가 '27년에나 마무리될 계획으로 장기간 임시 사육장에서 사육 시 환경불량에 따른 폐사가 우려되므로 임시 사육장 환경개선과 함께 폐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것.
9. 서울랜드 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동문주차장 주차타워 건설 대신 기타 노후 시설 개선으로 변경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진행 상황이 불투명함. 얼마 남지 않은 사용 허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전체적인 시설 노후화로 안전 문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
10. 올해 태어난 서울대공원 호랑이 '설호'를 소개하는 데 있어 소품 활용 이벤트 정도로 소극적인 홍보만 진행됨.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 미흡해 보이므로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연구를 적극 진행할 것.
11. 서울대공원(특히 동물원) 직원 업무 분장 및 필수 인력에 관한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수 조사 실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2. 스마트 주차장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허가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주차장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관리위탁 방식으로 새로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할 것.

서울아리수본부 – 35건

1. 본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2. 수도계량기 구매조달 평가 방식이 제안 가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기술경쟁력이 낮은(높은 하자율) 업체가 낙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할 것.
3. 상수도관 공사, 세척 등의 과정에서 혼탁수 발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
4. 현재 기술진단결과 Ⅱ등급 관로를 대상으로 관세척하고 있으나, Ⅲ등급 및 재개발 지역 관로의 정비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단기 정비계획이 없는 관로의 경우 관세척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
5. 혹서기에 운영 중인 병물아리수 냉장고는 일회용 페트병 사용 저감을 위한 관련 조례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6. 학교 아리수 음수대를 학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치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전체 음수대 중 상당수가 내용연수(6년)를 경과하고 10년 이상 된 음수대도 많아 안전사고 우려가 크므로 내구연한 기준을 재점검하고 교체가 필요한 음수대 정비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8. 학교 및 기관과의 관리 책임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교육청과 협력하여 음수대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9. 펌프 설치사업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반복되어 사업 차질이 우려되므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10. 펌프 보증효율 미달 이력이 있음에도 동일 업체가 이후 사업을 재수주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입찰 및 계약 구조 개선할 것.
11. 아리수품질확인제 온라인 신청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고객번호가 아파트 대표번호만 존재하는 경우 개별 세대의 아리수품질확인제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선할 것.
12. 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우려가 있음.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하자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3. 본부 전력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펌프의 경우 운전자의 경험에 의존한 수동·반자동의 비효율적 운전에 머물러 있으므로 펌프 최적 운영·관리 체계 구축할 것.
14. 아리수본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할 것.
15. 정수장 공정별 전력 사용 모니터링 및 공정 효율 개선 피드백 체계 구축할 것.
16. 수도계량기 및 단말기 구매 시 동일인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회사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과 품질관리 체계를 왜곡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17. 수도계량기 구매 입찰 평가 시 선호도 평가(하자율 감점)를 강화하여 기술력 낮은 업체가 낙찰되지 않도록 할 것.

18. 2004년부터 구매하여 설치한 동파안전계량기가 2023년 물연구원의 검증을 통해 동파에 취약함을 결론으로 2024년 구매가 중단된바, 앞으로 신규 설비 및 기술 도입 시 물연구원을 통한 사전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
19. 소액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임. 향후 수의계약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할 것.
20. 본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 목표에도 불구하고 감축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고 그동안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을 국비·시비 매칭 또는 민간투자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을 뿐 자체 재원을 투입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본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21.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심의를 내부(물연구원)에 맡기고 있어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기술심의 등을 통해 객관성 확보할 것.
22. 주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수장 기술진단의 전문성 및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23.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세척의 평가는 수질(탁도·잔류염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 세척 효과 평가 기준으로는 부적합한 바, 세척 효과 검증 체계 보완할 것.
24. ‘관세척 효과평가 매뉴얼’에 관세척 절차, 방법 및 효과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은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정량적 평가기준(세척 전후 비교 지표, 기준값, 성과평가 방식 등)은 다소 미흡한 바, 이에 대해 개선할 것.

25. 정수장 슬러지 원단위 및 함수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한 저감 방안 검토할 것.
26. 정수 슬러지처리 시 과도한 운반비는 예산 낭비 우려가 큰바, 설계단가 산정 시 운반 거리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발주 방식을 개선할 것.
27. 매년 수의계약 금액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이 다수 있는바, 지침을 지켜 과한 수의계약은 지양할 것.
28. 디지털계량기 하자·고장률이 높아 재정·운영적 리스크가 크므로 하자·고장률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29. 하자율 기준 강화($0.4 \rightarrow 0.2\%$)에도 불구하고 낙찰 배제효과가 제한적이므로 품질개선 유도하는 방향으로 입찰 및 계약 제도 개선할 것.
30. 대형 디지털계량기의 높은 고장률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계량기로만 구매하고 있는 현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것.
31. 향후 통신비 지출 증가에 대비해 통신요금 변동성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및 중장기적 비용관리 전략 수립할 것.
32. 학생들에게 아리수에 대한 인식을 좋게 심어주어야 하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음수대의 경우 수거 및 관리 철저히 할 것.
33. 도·송수관로의 약 51%가 내용연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미흡·불량) 관로가 전무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크므로 안전진단 용역 관리 및 결과 평가 철저히 할 것.

34. 현재의 성과지표는 예산집행 및 사업물량 중심으로 운영되어 투입 예산 대비 정책효과 측정이 어려움. 단순 집행률이 아니라 사업의 정책 효과 중심 평가 체계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할 것.
35. 관세적 계획 수립 시 재개발 지역 관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대상 제외 시점 기준이 불명확함. 재개발 사업은 단계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므로 합리적인 관세적 대상 제외 시점 선정 기준 마련할 것.

미래한강본부 – 29건

1. 의원 요구자료 요청한 ‘한강버스 점검 및 수리 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답변을 신중히 할 것.
2. 자전거 이용자 수가 1,500만 명이 넘고 최근 5년간 512건의 사고로 안전 우려가 큼. 2023년까지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겠다 하였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히 추진할 것.
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된바, 향후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
4. 한강버스를 신속히 예인할 수 있는 예인선 건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 이므로 건조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지연에 따른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5. 한강버스의 예고 없는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 안내 부족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전광판, 지하철 방송, SNS 등을 활용하는 등의 안내 체계 마련할 것.
6.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으로 이미 수천억 적자 상태인데, 한강 버스까지 더해질 경우를 고려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7. 한강공원 쓰레기 처리량이 쓰레기봉투 제작·판매량과 실제 처리량이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해야 할 것임.
8. 강서 한강공원이 '보전' 명목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개선이 필요함에도 2026년 강서지구 특성화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문제에 대해 시급히 재검토할 것.
9.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강서 한강공원 특화 용역·콘텐츠 개발이 지연 또는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경 등 재반영을 통한 사업 정상 추진할 것.
10. 마곡 선착장이 단층 구조·편의점 중심 이용·위생 미흡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위생·관리 체계 개선할 것.
11. 보전지구→친수지구 용도 변경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강서 둔치 시민 편의 시설 조성 또한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용도 변경 절차를 시행할 것.
12. 잠실계류장 사업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된 바 없는 서울미라나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선행 사례를 분석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
13. 한강버스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운행 이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방안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14.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으므로 향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5. 한강공원 신규 나들목 사업 7개소 중 1개소만 설계 중이며, 그마저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16. 한강공원 조형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 대부분 철거,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매년 철거·보수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미흡한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형물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17. 잠실계류장 사업 지연(1년 이상)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본래 목적인 계류시설이 축소되었으나, 편의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동 사업은 계류장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이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18. 뚝섬수영장 사고와 관련하여 위탁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관리청인 미래한강본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위탁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점검할 것. 또한, 동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19. 뚝섬 유선장 두 개 동을 점용하는 업체가 상업적 홍보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며,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약속하였음에도 출입을 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미래한강본부는 공공성이 지켜지도록 관리할 것.
20.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이후 재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임대계약은 장기 계약(15년)으로 체결된바, 추후 점용허가 불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것.
21. 정식 운항(9월 18일) 이후에도, 운전 미숙, 화장실 오수 등 명백한 운영사 귀책인데 손해배상·지체상금·운항결손액 산정 등 운항사가 명확히 책임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22.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는 세부 내용이 미흡하여 허술한 부분이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 방법을 마련할 것.
23. 와류, 항주파 등에 대해 저감 장치 설치 등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24. 선장·승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장치 및 접안시설을 개선하며, 레저시설 이용자들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방안을 마련할 것.
25. 항로 안전을 위해 한강 준설은 지속적 관리·검토가 필요하며, 준설·수심 관리 등을 포함한 한강버스 운행 구간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26. 서울시는 운항 시 수심이 2.8m로 준설하여 충분하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목표 수심은 2.5m로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음. 한강버스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 등의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
27. 선착장에서 8개월간 16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잠실 구간에서는 항로 협소와 수심 불균형으로 인한 선체 파손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 선착장 이동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
28. 시설 구조상 하부는 서울시, 상부는 한강버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민간이 담당하나,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있음. 수익 발생시 서울시는 수익을 한강버스 시설에 재투자되는 구조로 서울시 재정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상황으로 향후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9. 한강 유선장이 허가 목적과 달리 수익시설 중심으로 운영됨. 선착장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유선장 본래 기능을 확대·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1. 공사 소관 위원회는 전문성 강화,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등 각각 고유의 역할과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그 중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에너지 정책위원회의 경우에 적합한 전문가들(현장 근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도 포함하여)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
2. 서남 2단계 건설사업에 도입할 SPC 방식은 설립 시 민간기업 지위가 적용되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면제되므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없도록 공사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3. 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구상에너지 부단수공사 불법하도급 건에 관해 제재가 있었고 이에 구상에너지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결국 불법하도급이 아니라 특수장비 대여 등 성격이 다른 전문적 공사라고 결론이 난 것인데, 이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취소가 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으니 처분 취소를 고려할 것.
4. 구상에너지 소송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도급을 포함한 업무를 공사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
5. 마포 소각장 소송 패소 사례와 같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남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주민 협의·소통 절차를 강화할 것.
6. 발전소 예정지 인근 지역은 악취·소음·분진 발생 등 기피 시설이 이미 밀집된 곳으로 현재 열병합발전소 예정 입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주민들의 환경적 부담을 고려해 재검토할 것.
7. 발전소 운영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 증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할 것.

8. 2025년도 태양광 사업 집행률이 9월 30일 기준으로는 26%로 저조하여 관련 사업에 소극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므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9. 공사의 2035 혁신경영 전략에서 나오는 태양광 사업 관련 계획이 부지 여건에 적합한 태양 발전소를 구축하겠다는 정도로 추상적인바, AI를 활용한 열 수요 예측 신기술 도입 내용과 같이 구체화할 것.
10.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통해 18,880k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공사에서 공급하고 있음에도 그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11. 열요금 지원 대상별(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치구 주민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리도록 할 것.
12. 서남 2단계 사업이 장기화할 때를 대비하여 공사의 부채 비율 관리 등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철저히 검토할 것.
13. 수의계약 건수와 액수가 증가하는바, 쪼개기 형태의 수의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추진 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것.
14.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남동발전의 경우 화력발전이 주력인 곳으로 이에 참여하게 된 것에 의문이 드는바, 공사 단독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15. 전기차 충전기 결제 오류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및 운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할 것.
16. 추진 중인 목동 플랜트 현대화 작업에 현재 미운영 중인 신정 플랜트 활용 방안까지 연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할 것.

기후환경본부 -25건

1.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건물 부문의 감축 정책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장기적 전략 수립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2. 에코마일리지 민원 처리 시 조치 결과가 형식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민원 유형 별 분석과 공감 및 성의 있는 답변 등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3. 단순 인력 증원이 아니라 시민 참여와 문화 중심의 청결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
4.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기후부)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국토부)가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중앙부처 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일원화를 검토하기 바람.
5. 민간 건물주가 신고·등급제를 규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컨설팅 및 융자 상담 등 기존 지원을 넘어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중소형 건물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형별·규모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하여 소급 임금 자치구 부담액이 높은 자치구는 서울시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8. 임금 개편 전까지 현 임금수준 유지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업무 환경개선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수도권매립지 공모 및 확보 과정이 서울시 폐기물 감축 정책과 연계되지 않음. 공모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의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전략을 수립하기 바람.
10. 시, 자치구, 사업소,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가칭) 종이 절감 협약' 도입과 기관별 우수 사례 공유 및 시상 등 참여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전까지 과태료 부과 없이 단속 차량에 안내 문자 발송과 전방위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하기 바람.
12.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폐기물 감량 대책과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 바람.
13. 공공폐기물 반입량 감소는民間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함.民間 처리 분량 까지 포함한 총발생량 감축 실적 평가 및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기 바람.
14. 미래의 기후 리스크 예측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관련 용역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15. 기후테크 산업은 신산업 및 인재 양성 분야 사업으로 AI 및 양자기술과 연계해 서울형 청년·스타트업 양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가 기후테크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공용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이행 관련하여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무산 사례와 같이 주택가 밀집 지역의 빛반사 및 경관 문제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 기후부와 협의하여 기술·안전 문제를 고려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7. 요일별 생활폐기물 반입량 편차(월요일 집중 반입) 완화 필요하니 수거·운반업체와 연계한 요일제 예약제 도입 등 물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8. 서울시 주최 행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후원 민간 행사에도 폐기물 관리 의무화를 검토하기 바람.
19. 전기이륜차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뿐 아니라 성능개선, 배달용 차량 보험료를 지원하고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은 구별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설치하기 바람.
20. 도심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민간 주차장과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확대, 민간 참여형 인센티브 도입,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굴 등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 최근 3년간 신규 민간 자본 발전소 사업이 전무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더딘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2.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규 설치 시 안전기준 강화와 지하에 설치된 기존 충전 인프라는 이전 및 안전기준 보완을 추진하기 바람.
23. 2차전지 특성과 화재 대응을 위해 자치구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24. 전기집진기 설치의 효과와 실효성을 검증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하기 바람.
25.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정원도시국 등 - 26건

[정원도시국] - 16건

1.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추진 시 서울시 기준에 맞게 추진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방과의 계약은 특히 유의하여 진행하길 바람.
2. 밤섬 일대에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구역 바깥 쪽으로 '완충구역' 지정 확대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하기 바람.
3. 정원도시서울 추진으로 초화류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음. 전면 간신하는 비율이 높은데, 다년생 초화류와 같이 여러해 보는 초화류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길 바람.
4. 공원 내 화장실·놀이터·파고라 등 수요가 큰 시설 현황과 조성계획 간 불일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미한 변경이라도 체계적인 보고·승인 절차를 마련하길 바람.
5. 시유지 공원 부지가 사유지 건물과 무단 연결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의 협업체계 강화 및 관리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해주길 바람.
6. 자치구 공원관리 현황과 변경을 공원조성과 등 정원도시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시 보고 의무 강화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검토해 주길 바람.
7. 노을공원 파크골프장의 예약은 민간대행사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8. 서울식물원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국제심포지엄은 식물원 단독 기획·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9.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학계·관련 단체 중심의 참여가 되도록 추진해 주길 바람.
10. 행사 결과물(발표자료·정책 제안 등)을 식물원 발전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주길 바람.
11. 서울로 7017의 화분 등 시설물과 식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2. 서울로7017 고가 육교 승강기는 서울역, 남대문시장, 남산공원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시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람.
13. 가로수 고사한 뒤 그대로 방치해 보행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있으니, 대체 가로수를 심거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14. '남산야외숲박물관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사업자가 두 개로 나눠진 '남산 하늘숲길', '한국숲정원' 용역을 중복 설계했으며, 구간이 줄어들었음에도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추진 체계를 점검하길 바람.
15. 국제정원박람회 부스 운영 시 장애인단체, 소상공인 등과 상충이 되는 별도 제안서를 통한 부스 상업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길 바람.
16. 원인자부담금이 가로수 식재, 공원 조성 등 도시숲 확충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람.

[서울대공원] - 10건

1. 대공원 내 사용 허가 시설과 관련하여 사용료 체납 등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체들을 관리하길 바람.

2. 서울대공원 방문 활성화 아이디어로 인기 동물(호랑이 등)을 활용한 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대공원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3. 코끼리열차 전기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 지형(언덕), 텁승 인원, 엔진 출력 등 실제로 운영 시 필요한 사양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했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매 전 전문 기관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등 기술 검증을 강화하길 바람.
4. 운영업체는 동일하지만, 캠핑장 주차장 사용 허가 기간과 캠핑장 사용 허가 기간이 다르게 산정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 두 기간을 같이 맞추어 사용 허가를 하기 바람.
5. 대공원에서 보유한 식충식물 등 식물자원의 규모에 비해 식물원 관련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고, 관련 홍보도 부족해 보임. 관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6. 언론에 여러 번 공개되기도 한 동상 문제(위치 변경 혹은 철거) 등 대공원 내 조형물 관리에도 신경 쓰길 바람.
7. AZA 조건부 인증 관련하여 관련 사업 담당 직원이 매년 교체되는 상황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므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연속적으로 진행하길 바람.
8. 대공원에서 시설개선 공사 등이 어려운 사유 중 하나가 지적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라 함. 멸종위기종 보전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공원인 만큼 과천시와의 적절한 협상 방안까지 고려해 지적 정리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길 바람.

9. 성희롱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공원 내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길 바람.
10.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사육사 등 동물 관리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내용이 부족해 보이므로 AZA SAFE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서울아리수본부 – 22건

1. 본부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비해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임.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력과 성능을 검증하며, 우수 기술 선도적 적용하는 혁신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2. 장기사용 상수도관로 정비, 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 등 향후 대규모 투자 수요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 방안 마련하기 바람.
3. 현재 아리수음수대의 위치 정보는 아리수맵에서 표출하고 있으나, 음수대 수질검사 및 점검 결과를 아리수맵에 추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4. 아리수 음수대 정비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요 부품만이라도 교체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의 정비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5. 아리수 품질확인제 무료 수질검사를 실제 시민이 신청하는 사례는 매우 적음.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람.

6.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GIS, 아리수맵 등과 연계 활용 방안 검토 필요.
7. 디지털 계량기 오류 및 현장 문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 모니터링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8. 하자심사 결과(사용 가능한) 정상 계량기의 재사용 또는 대체 용도 활용 방안 검토 필요.
9. 정상 계량기의 불필요한 교체·폐기를 줄이기 위해 비철거 진단 및 사전 검증 절차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10. 정수장 간 전력원단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정수장별 효율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표준화된 관리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단수와 비용 문제로 운영 중인 관로를 직접 평가(진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정비사업과 긴급 관 복구공사 시 교체되는 관로를 본부 또는 물연구원에서 진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의사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12. 아리수 수질관리 기준에 미세플라스틱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시판 생수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3. 정수장 기술진단 시 진단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역량을 신뢰하고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14. 서울은 지상 환경 제약 및 지하매설물 밀집(하수, 통신, 도시가스, 열수송관 등)으로 점검구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관 정비·세척 등 유지관리에 제약이 많은 상황임. 향후 비굴착·무단수 기법 등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관망 구성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5. 관로공사 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굴착면 기울기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복구비 산정 목적의 행정조례로 굴착작업 안전기준 대체 불가하여 사고발생 시 법적 분쟁 우려가 있음. 다만, 「산업 안전보건법」 기준이 서울시 여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16.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으로 과도한 환급금 발생하고 있으며, 부과 범위, 산정 기준, 정산 절차 등이 여전히 불분명하여 조례 개정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해 주기 바람.
17. 학교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이나 요청 사항을 조사하기 바람.
18.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미터 기술 기준안」에는 디지털계량기 시험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세부적이고 엄격한 시험기준이 부족한 상황임. 디지털계량기의 높은 하자·고장률 발생 현황을 고려할 때, 기계식보다 더 강화된 품질 검증 기준 마련이 필요함.
19. 대형 디지털계량기의 경우 구경이 커질수록 하자·고장률이 급증하는 경향이 뚜렷한 만큼 별도의 강화된 품질시험 및 내구성 검증체계 마련이 필요함.
20. 계량기 보증기간이 기계식, 디지털식 모두 2년으로 동일. 전자센서, 배터리, 통신모듈 등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디지털계량기의 경우 보증기간 확대가 필요함.
21. 하자율 기준 입찰평가가 보증기간(2년)만 맞추는 품질에 그쳐, 근본적인 품질개선 유도에 한계 있음. 검정유효기간 미달률을 선호도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22. 관로 상태 평가 시 기술진단과 안전점검/진단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있고, 송수관로 진단은 두 과가 함께 진행하므로 진단결과와 관련자료 공유 등 잘 협의하고 보완해서 진행해 주기 바람.

미래한강본부 – 18건

1.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2.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기 바람.
3. 현재의 구조에서는 대중교통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류장 접근성 개선·운항 시간 단축·환승 동선 최적화 등 ‘대중교통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4. 향후 예인선 신규 도입(100톤급·30톤급)까지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민간 예인선 활용 체계나 긴급 예비선 확보 등 단기 안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샛강생태공원이 정비가 잘되고 가꾸어져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 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를 통해 교육적·문화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바람.
6. 강서지구의 이용 수요·인구 규모·한강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 배분 및 사업 우선순위 재정립 필요함.
7. 마곡 선착장은 2층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8. 여의도 물빛 무대 시설 보수 이후 문화행사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향후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람.
9. 하자검사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하자 만료 전 14일 이내 실시해야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10. 발주 과정에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바, 사업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11. 한강공원 신규 나들목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므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할 것.
12. 한강공원 내 매점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체납이 반복되는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13. 기간제 일자리 관련 65세 이상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4. 향후 한강환경유역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타당성 및 설계 용역 등 보고회부터 참석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5. 한강공원 내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들의 설치·보수 이력과 위치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GIS, QR 등을 활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16. 선박, 추진체, 선착장의 잘못된 설계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17. 배터리 교체 및 긴급 충전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를 바람.
18.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제출하기 바람.

1. 인천 맨홀 질식 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협력업체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길 바람.
2. 공사는 지금 ‘혁신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1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던 ESG 경영위원회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바람.
3. 수소에너지 사업에 관련된 의지는 높아 보이나,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규제 특례까지 받았음에도 그 이후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수소에너지 육성을 위해 미래수소경제위원회(가칭) 구성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길 바람.
4. 서남 2단계 건설사업이 공사가 발전사업 분야에서 SPC를 본격 도입하는 첫 사례인 만큼 SPC 운영 사례·리스크 분담 구조·자금조달 방식 등에 대한 전문 자문 체계 등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길 바람.
5. 태양광 등 기존의 소규모 SPC 경험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해, 서남 SPC 설계 시 적용할 수 있는 운영모델·관리 기준을 마련하길 바람.
6. 7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업비 등 SPC 재원 조달에 따른 재정 리스크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장기 관리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바람.
7. 발전소 운영에 따른 편의 시설 등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편익에 대해 서도 검토하길 바람.
8.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 추진 방식이 공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SPC 설립으로 결정된 만큼 안정적으로 적기 추진되길 바람.

9. 열에너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선도하겠다는 비전과 전략에 맞춰 현재 수소차 충전소 등 일부에 국한된 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길 바람.
10. 최근에 주력했던 서남 2단계 집단에너지 건설사업 이후를 대비하여 신성장 에너지 주력사업처럼 시의적절한 명칭으로의 변경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람.
11. 공사에서 제시한 2035 혁신 경영 전략 내용이 추상적인 사업 설명 위주로 작성되어 있음. 중장기 재정 계획과도 연관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길 바람.
12. 시와 공사가 함께 출자 변경 계획 등 정리 방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하여 노후 열수송관 관련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람.
13. 2018년부터 추진 중인 가상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상업건물을 제외한 공동 주택 등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람.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및 향후 계획을 수립 하길 바람.
15. 전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 사업을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람.

기후환경본부 - 8건

1.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역할과 권한 책임분담 관련 자료
2.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반입량 할당 기준 및 자치구별 발생량 증감 원인분석과 인구수 고려한 할당량 검토 결과(별도 보고)
3.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안전관리 실태평가 관련 별도 보고
4. 자치구 폐기물 관리 목표 할당 방식 설계연구 자료
5. 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 단가 현황 자료
6.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소통 회의 결과
7.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분석한 이동측정차량 자료
8. 대규모 정비사업 중 지열 활성화 관련 자료

정원도시국 등 - 7건

[정원도시국] - 2건

1.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련 기부금 영수증 발행 내역, 환경과 조경 및 동아일보와의 업무 협약서
2.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푸드트럭 등 연장기간 동안 판매실적

[서울대공원] - 5건

1. 코끼리열차 서울시 구매(2011년)과 업체 구매(2013년) 전기차 가격·사양 비교
2. 코끼리열차의 내구 연한
3. 코끼리열차 전기차와 디젤차의 운영 비용 비교
4. 코끼리열차 운행일지
5. 큰물새장 사육 조류 통계 자료 및 폭설 피해 이후 조류 폐사 현황 자료

서울아리수본부 – 11건

1. 검침단말기 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 평가 방법 세부현황 및 문제점
2. 최근 2년간 품질하자 수도계량기에 대한 배상 현황
3. 동파에 취약한 역류방지용 계량기 구매 사유
4. 6개 정수센터별 배출수처리시설 내 틸수기 현황
5. 2025년 수선유지비 예산항목 중 긴급누수복구비, 민원 처리비 사업소별 예산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
6. 2025년 사업소별 긴급복구 연간단가 업체 사업자등록증
7. 수도계량기 교체가 잦은 수전에 대한 원인조사 현황 및 세부 예방 대책
8. 스마트 원격검침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총 운영 비용 및 배터리 교체 현황
9. 스마트검침 단말기 통신비용 현황
10. 디지털계량기 구매수량 대비 단말기 구매수량이 적은 사유
11. 스텐레스 재질 대형 디지털 계량기의 연도별 구입가격의 편차가 큰 사유

미래한강본부 - 6건

1. 5년간 매몰된 사업 및 비용 자료
2. 하자보수검사 내역보고
3. 쓰레기봉투 현황보고
4. 유선장 임대차계약서
5. 안내표지판 2억원 예산집행내역
6. 재난안전실에 보고한 한강버스 사고 보고자료

서울에너지공사 – 7건

1. 협력업체 안전관리 강화 추진 현황
2. 에너지정책위원회 세부 현황 : 분과별 위원 세부 경력, 분과별 목적 및 추진 방향, 위원회 개최 계획 및 기대효과
3. 2025년 10월 ESG 경영위원회 회의 내용
4. 지속경영가능 보고서 사본
5. 하도급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법하도급 감사 관련 징계 현황
6. 동부지사 터빈 블레이드 구매 계약 관련 자료
: 관련 법령 및 절차(심사위원회 등) 포함
7.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 관련 공사 단독 추진 불가 사유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총괄

기관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제출등)
계	181	51	71	59
대변인	8	2	4	2
홍보기획관	20	10	4	6
문화본부	23	13	4	6
관광체육국	30	8	15	7
서울역사박물관	13	3	6	4
서울시립미술관	20	5	6	9
세종문화회관	15	4	5	6
서울시립교향악단	14	1	11	2
서울문화재단	8	-	5	3
서울관광재단	15	2	5	8
120다산콜재단	15	3	6	6

□ 대변인 : 2건

1. 언론통신사와 협약을 통해 뉴스 저작권을 확보한 것이 편법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 바람
2. 해명자료 배포 후 인용률이 저조함. 언론과의 소통방식, 해명자료 배포 후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홍보기획관 : 10건

1. 홍보대사 위촉시 의무조항을 넣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 정보공개 미공개 건이 있는데, 시민들의 정당한 알 권리의 보호받아야 함. 관련 대책 마련 필요
3. 한강버스는 교통수단이자 관광 수단으로 효과 큰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하며 안 좋은 정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함
4. 광고매체 선정시 공정한 집행 지표, 기준, 근거 등 필요. 광고비 집행지침 마련
5. 편파보도와 불공정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백세시대)에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관련 민원해소 노력 바람
6. 서울굿즈 민간콜라보 사업추진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과 추진하여 홍보효과 제고 필요
7. 서울굿즈 민간콜라보 사업의 사회공헌비율을 일정하게 하는 방안 검토와 협약대로 사회공헌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 수단 마련 필요
8. 상상대로서울 제안에 공감 50개 이상이 되면 30일내로 시에서 답변 준다고 되어있는데 미답변 목록이 14개가 있음. 행정 신뢰성을 위해 잘 조치하기 바람
9. '23년 호국보훈프로젝트로 촬영한 사진에 대해 유튜브에서 무단사용한 건 발생. 공공 저작물 소유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10.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상호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협약 종료가 어려워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임. 향후 이러한 협약 체결시 계약종료에 대한 조건 필요

□ 문화본부 : 13건

1. 서울 뮤직페스티벌 당시 우천으로 인해 초반 공연 시작에 어려움이 있었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가 필요함
2. 한성백제박물관 내 정보자료실 20~24년 연체반납률이 37%에 달함. 대책 마련해주시기 바람
3. 서울 6개 권역도서관 발표 후 6년이 지났음에도 착공에 들어간 곳은 서북권 서대문 시립도서관 1곳뿐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람
4. 서서울미술관 건립 공사에서 부실시공, 하자 발생 등이 드러났음. 감사위원회에 문제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원인규명 요청하겠지만 문화본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명확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며, 향후 진행되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 시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본부가 도기본과 함께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5. 서서울미술관 현장 상황이 심각했음.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단호히 대처하여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청구
6.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 보류·부결률이 30% 수준임. 단순히 심의위원들에게 안건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전에 안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함
7. 문화본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은 재단에서 하는 경우가 있음. 시민의 시선에서는 기획-실행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보임. 문화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실행까지 문화본부에서 하거나, 처음부터 재단에서 계획과 실행을 해야함
8. 청년문화패스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20~23세 전체 청년인구의 일부만 지원가능한 금액임에도 불용률이 높은 것은 홍보 등 실행계획 측면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검토 필요
9. 제2세종문화회관은 올해 4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음. 투자심사 결과를 이행해야만 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없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보임. 검토 필요
10. 주택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국가유산청 등과 논의하여 풍납토성 주민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11. 서울 관내 무형유산 57개 중 21개 종목이 보유자가 없음.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유자도 없으면 전통문화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12. 2023년 송파구에 풍납동 3권역 주택 모델 개발 용역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2024년 12월에 용역이 체결됨. 서울시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1년 이상 지연됐으며, 용역 내용도 부실함. 문화본부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챙겨주시기 바람
13. 타 시도는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에서 신문 등록 업무를 통합 운영 중인데, 서울시는 문화본부와 홍보기획관에서 신문 관련 업무를 양 부서에서 나눠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민 불편과 혼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이니, 부서 간 업무 조정 필요함

관광체육국 : 8건

1. 관광대전환 토론회를 했는데, 최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이 없음.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연차별 기본급이 동일하다는 것은 부당함.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호봉제 도입이 필요함
3. 태권도 시범단 회의 결과서를 보면 간담회 내용, 다과비 과다 지출, 똑같은 서명 등 간담회가 과연 잘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듬.
 - 서울시체육회에서 명예직을 임명하면 안된다는 공문도 보냈지만 명예직으로 임명을 함. 명예직 운영과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광체육국에서도 챙겨봐 주길 바라며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람. 체육회에서도 보다 성실하게 감사를 시행해 주길 바람
4. 자부담 금액도 보조금 전체사업에 포함되므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지급될 수 없음. 원로나 자문위원에게 지급될 근거가 없음에도 시범단 지도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하였음. 앞으로 보편타당한 시범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정확한 근거하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함.
5.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보면 회원 산하단체 경영공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현황,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탑재가 되어 있음. 서울시 체육회는 산하 종목단체가 80개 이상이 되는데, 이 단체들의 경영 정보를 알 수 있는 경로가 없음. 서울시 체육회도 각 단체에 대한 경영 정보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를 신설하도록 후속 조치 마련
6. 민간단체 생활체육 공모사업을 서울시 체육회가 아니라 관광체육국에서 직접해야하는

것 아닌지라고 질의했었는데, 검토해본다고 하셨는데, 검토했는가?

7. 조달청에 해당 잔디가 문제가 있다고 공고가 나왔는데, 벌써 1년이상 방치가 된 것이 아닌가? 사진 같은 걸 봐도 근원적인 보수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빠른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8. 외국인들이 너무 특정 장소만 가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됨. 좋은 상품을 각 자치구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임

□ 서울역사박물관 : 3건

1. 청계천 박물관에 어린이, 외국인 관람객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2.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비공개 문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직원 외부강의 내역을 비공개할 필요 없어보임
3. 박물관 보유 장비 중 내용 연수가 상당 기간 경과한 장비들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교체 계획 검토 필요

□ 서울시립미술관 : 5건

1. 구입작품 가격 등 자료제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람
2. 서서울미술관에 직접 가서 현장을 점검해 보니 누수, 결로, 곰팡이 등 전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 공사 마무리 시점에 부실시공이 드러난 상태로 내년 3월에도 개관이 불가능해보임
3. 서서울미술관 건축 관련 감사도 청구해야 하지만 하자보증기간 등 고려하여 최악의 경우 시설을 해체 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 건축감리 업체 등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수거부까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의 바람
4. 대여, 외부 순회 전시 등 미전시 소장품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홍보 등 후속 액션 플랜 서면 보고
5. 공공예식장 사업이 민간 수준의 외형이나 분위기를 갖출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하기 바람

□ 세종문화회관 : 4건

1. 동선이나 세트 병행 구조 위험성 관련,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뉴얼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2. 세종문화회관 건물 규모에 비해 계양대 규모가 작아서 보이지 않음. 앞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치선정 및 크기 재고하여 변화를 위한 개선 방안 강구 바람
3.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특정 법무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바람
4. 서울시 예산편성지침 내 환율 기준 준수를 위해 직원 교육 등을 진행해주길 바람

□ 서울시립교향악단 : 1건

1. 재단 소속 행정직원이 외부단체 소속으로 활동한 익명 제보에 대한 조사 요구

□ 서울관광재단 : 2건

1. 임직원의 상습 지각 문제 등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 개선 조치 바람
2. 각 산마다 지형 등 특성이 다르므로 3개 등산관광센터의 운영 업체 분리를 통해 맞춤형 등산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120다산콜재단 : 3건

1.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기준 금액을 상향해 행정낭비 우려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2. 규제제도개선 상담 접수 건수 대비 반영 건수가 저조하여 시민 홍보 방안을 마련 할 것
3. 응대율 산정 기준을 총인입대비 응대율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대변인 : 4건

1. 서울시장 인터뷰가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대변인실에서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하기 바람
2. 지난 행감때 제안한 조례안 서명식을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추진완료로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람
3.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거나 국가 위임사무가 아닌 경우와 같이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4. 서울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적 기사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기 바람

□ 홍보기획관 : 4건

1. 온라인채널관련 양적 성장 (구독자수 등) 이외에도 쌍방향의 시정참여도 필요함. 구체적인 전략 수립하여 내년에는 질적 성과도 기대함
2. 내손안에 서울은 사업 투자 잘된 사례로 보임. 양적 성공을 얻었으니 질적 성공을 위해 관심사별 세분화 발행, 평가툴 등 검토 필요
3. 불교방송에서 TBS 운영에 관심있는 것으로 아는데 검토바람
4. 마약문제가 심각한데 콜든타임으로 생각, 마약 예방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함. 공무원 채용시 마약투여자는 결격자로 제외 필요

□ 문화본부 : 4건

1. 서울야외도서관 사업을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형평성 있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
2. 동대문 시립도서관이 상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을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수시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3. 문화비축기지에 공연기능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람
4. 보신각 타종행사 시 소관 상임위 위원들도 초청이 필요함

□ 관광체육국 : 15건

1. 서울시에서 좋은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스카웃해야함. 여력이 없다보니 체육회에서 노력을 하려고 해도 집행부의 지원이 없으면 힘듦
2. 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에도 골든타임이 있음. 이에 대한 예산 수립 고려 필요
3. 서울시 소속 엘리트 선수가 많은데, 마케팅 활용이 부족함. 밀라노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선수들의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으면 좋겠음.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번 선거는 기존의 규정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람
4. 서울시체육회 사무실 이전·확장 필요. 접근성 좋은 부지 확보해 합숙·훈련 환경 개선해야 함
5.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서울시민과 해외관광객 이용인원 증가 추세인 만큼 1~2주 운영 기간 연장 적극 검토하길 바람
6.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행사개최 이전에 의회에 행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람(의회에서 사전점검 및 축하인사 등을 챙길 수 있도록 요청)
7. 야구장 다자녀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8. 서울바비큐페스타는 성공적 개최 K-푸드 축제로 외국인 비중이 11%에서 20%로 증가함. 단, 2일간의 행사 기간은 짧아 우천시 등에 대한 대비 필요
9. 국제 스포츠 대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해야하는데 관광재단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음
10. 쉬엄쉬엄 한강축제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참여패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를들어 단체 참여패키지, 실버연계, 응원단문화, 영상수기 부문 신설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1. 의료관광객 국적이 다변화되고 있는데 시장 규모, 환경에 맞도록 전문 통역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12. 미용·성형 등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연말 종료(예정)와 관련, 서울 의료관광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에서도 우려가 큼. 시 차원에서도 정부에 연장 건의 등 신속한 대응 바람
13.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하여 예산확대가 필요하며, 학교체육보안관 따로 두어야 함. 그에 따른 시설관리 비용 절감과 은퇴선수 일자리 제공 등 가능함

14. 사찰음식은 웰빙음식으로 만족도가 높아 관광 상품화 필요. 미식주간과 같은 행사로 개최해 볼 것을 제안드림
15. 주 4.5일 근무도입에 따라 학교개방 등 생활체육 활성화가 필요함. 학교개방 지원금 확대 및 학교수 확대 필요

□ 서울역사박물관 : 6건

1. 청계천박물관의 정체성과 콘텐츠 방향에 대해 ‘물길’의 의미를 강화, 확대 해야 함
2. 한성백제박물관 연계 프로그램과 같이 앞으로도 타 박물관과 연계 교육을 더 활성화 하길 바람
3. 타 박물관에 비해 굿즈 개발 및 상품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기업 협업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
4. 우리들의 광복절, 미증유의 대홍수 등 기획전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5. 어린이박물관 조성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 보다 내실을 다져주길 바람
6. 서울생활사박물관의 음팡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단위 문화행사 및 저출산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주기 바람

□ 서울시립미술관 : 6건

1. 기증 문화와 함께 클라우드 펀딩처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후원제를 적용하는 등 후원문화 활성화에 대해 생각해 봐 주시고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감사패 수여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관련 구체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람
2. 기증 작가와 청소년이 만날 수 있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고려
3. 난지창작스튜디오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 운영하기 바람
4. 굿즈 판매 관련 향후 수익에 대한 고려 당부
5. 검열비판 보도 관련 보도에서 질타한 바와 다르게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립미술관의 입장문을 내야하고 후속 조치 해주시기 바람
6. 미디어아트 관련 시립미술관이 233개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대여가 안된 72개 작품이 있음. 해당 작품들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조치하기 바람

□ 세종문화회관 : 5건

1. 세종문화회관 외관 정비가 필요해 보임. 미디어 아트 등을 활용하여 외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기부금 수익 및 문화예술 후원 관련 기부금(현물/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평단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관객 반응 미비한 경우, 공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소홀과 제도적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예술인 산재보험 개선 방안, 제작극장체제 도입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5. 리빌딩 시 석면 전면 제거하더라도, 그 전에 직원 이용 공간과 관람객 이용 공간은 우선으로 제거해 주기 바람

□ 서울시립교향악단 : 11건

1. 대규모 야외 시민공연을 확대하여 실시해주시길 건의드림
2. 정년 제도 도입으로 신진 음악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길 바람
3. 훈련 후에 육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해주시길 바람
4. 시민공연도 정기공연 못지않은 공연 수준 유지해주시기 바람
5. 외국인 관람객도 티켓 구매와 관람이 쉽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람
6. 정량적 목표 설정 및 객관적 평가 참여하시길 건의드림
7. 예를들어 5개년 해외 공연계획, 해외 전용 기금, 민간후원연계펀드, 음반수익모델 개발 등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꾸준히 추진해주시길 바람
8. K 컬쳐와 연계한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해주시길 바람
9. 예를들어 귀국 보고 공연, 무료 온라인 스트리밍 등 해외 순회 공연 성과 시민들과 공유해주시길 바람
10.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람
11. 중앙아시아 순회 공연 지속 추진 당부드림

□ 서울문화재단 : 5건

1. 조례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방침에만 의거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행태를 개선할 것
2. 어텀페스타 참여 공연예술단체를 위한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플랫폼형 사업 확대를 제안함. 이외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점검 및 향후 민간 후원 확대를 제안함. 아울러 핵심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등 좋은 사업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3. 다양한 공연의 마케팅과 홍보라는 어텀페스타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특히 사업 후반부로 갈수록 홍보에 힘이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 써주기 바람. 또한, 대규모 추진위원회 역시 발족 후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이 역시 차년도에는 개선이 필요함
4. 창작예술공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공간을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 관련, 앞으로는 선정 단체에게 지원 제한사항 관련 사전에 정확히 공지하길 바람. 예술단체에게 의미 있는 사업으로 신청단체가 너무 많다면 사업을 확대하여 공정하게 운영 바람
5. 3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 및 인건비 예산전용 건을 보면 사전 단계의 철정한 예산 계획이 미흡하지 않은지 점검하기 바람. 잉여금 등에 대한 꼼꼼한 예산 확보를 통해,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기를 바람

□ 서울관광재단 : 5건

1. 관광 테마에 있어 미식관광, 의료관광도 중요하지만 스포츠관광 역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서울 스포츠관광 분야 관련 서울시와 재단 간 협조 강화 바람
2.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3. 의료관광은 작년에 비해 올해 더 활성화됐는지?
 - 서울 의료가 세계 순위권인 만큼 서울 의료관광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4. 7~8월 이동식 안내소의 탄력 근무 비율이 높아 관광 안내 인력의 공백이 우려됨
 - 피지컬 AI, AI 키오스크 등의 도입을 통한 공백 최소화 방안 검토 바람
5. 청계 소울 오션이 청계천에 머물지 않고 예를 들어 한강에서 진행, 주변 관광 및 상권 연계로 외국 관광객 유치, 글로벌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개최 등 확장 방향에 대해 검토 바람

□ 120다산콜재단 : 6건

1. 외로움안녕120처럼 전문 콜센터 연계를 확장해 더많은 분야에서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 생성형 AI를 행정 상담에 도입하는 방안은 고려해보았는지?
3. 외국어 상담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기 바람
4.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같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
5. 현재와 같이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어가주기 바람
6. 리브랜딩 만으로 콜센터 산업군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앱 활용 등 다양한 방식 검토 바람

기타(자료제출 등)

----- 59건

□ 대변인 : 2건

1. 언론중재위원회 진행 중인 사안 조정 결정 나지 않는 사유
2. 언론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근거 자료

□ 홍보기획관 : 6건

1. 서울도서관 대형 현수막 최근 3년 소요예산
2. 홍보대사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신규 위촉된 홍보대사들에 대한 교육, 연수 및 간담회 등 실시 내역
3. 서울시 홍보 방송 및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내역, 집행근거 등
4. TBS 광고비 집행 내역(연별, 월별)
5. TBS 예비비 지출내역
6. 서울라면 민간 콜라보 관련 다른 업체와 접촉한 내역

□ 문화본부 : 6건

1. 풍납토성 이주대책 관련 추진경과 및 추진현황
2. 3권역 주택모델개발 용역 예산편성 및 추진경과, 결과 요약
3. 국가유산위원회 심의(9.25.)자료 중 10. 27. 범난기념관 건립 자료
4. 돈의문박물관마을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등
5. 원터페스타 ‘특색있는 조형물’ 관련 예산현황
 - 세부 7개 축제 사업계획 포함 예산 전체
6. 국가유산위원회 봉은사 관음전 건립 심의 관련 속기록
 - 심의내용 관련 판단 기준

□ 관광체육국 : 7건

1. 종목별 지원사업의 예산이 코로나 때 감축되었는데 이 부분을 원상 복구해야 하지 않 은지? 3377 정책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지?
2. AFC 대관 관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직 보류적인 입장인가, 아님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가? 오래 고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음. 빠른 결정 바람
3. 효창운동장 잔디하자 내역 및 처리 현황
4. 도보해설관광 관련 신규 개발 계획서 및 올해 실적
5. 최근 3년간 체육회 수발신 문서내역, 야구소프트협회 인건비 관련 조치현황 보고
6. 장애인체육회 3년간 체육관련 행사, 대회 현황 (일자, 규모, 종목 등 포함)
7. 최근 3년 외국인 국가별 관광객 범죄율

□ 서울역사박물관 : 4건

1. 최근 3개년 교육프로그램 현황 (체계별 분류)
2. 한성백제박물관 연계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결과
3. 영뮤지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4. 박물관 보유장비 내용연수 조사 및 장비 교체계획

□ 서울시립미술관 : 9건

1. 작품 수리 관련 지속적 사후관리 방안 마련하여 보고
2. 서서울미술관 공사와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함
3. 계약현황에서 수의계약이 91%를 차지하고 여성기업이 많음. 하나의 계약으로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는 사안을 쪼개기 계약으로 했는지 의심이 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함
4. 3년간 수중작 및 작가이력
5. 관람객 수 관련 스티커 집계 현황
6. 다국어서비스 제공 추진 현황
7. 5년간 작품 수리비 내역
8. 신진미술인 지원사업 확대 계획 수립하여 제출
9. 수의계약 중 여성기업과 계약한 건들에 대해서 각 품목별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 세종문화회관 : 6건

1. 마술피리 사고 당시 관련 큐시트, 무대매뉴얼 운영기록, 스태프 명단 및 역할 구분표 서
2. 마술피리 공연 당시 안전교육 확인서 및 전담 안전요원 배치 관련 자료, 퇴장을 위해 활용되는 동선 표시 및 라이트 표시 자료
3. 마술피리 사고 관련, 기존 지병(기왕증) 및 경막하출혈에 대한 자료
4. 다자녀가구 할인 관련 자료
5. 석면마감재 철거 추진 계획
6. 타 기관 법률지원서비스 받은 사례 및 법률 관련 AI 활용 사례

□ 서울시립교향악단 : 2건

1. 단원연차제도 도입 이후 공연별 연주자 구성 현황(단원/객원비율), 공연별 객원연주자 비용지급 내역, 연차사용 외 연주미참여 사유(병가 포함), 연차제도 도입 이후 단원 병가 사용 및 관리실태
2. 2024~2025년 다동이카드 티켓 할인 실적

□ 서울문화재단 : 3건

1.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는데, '24년 총 8건 중 6건을 시정완료 했으나, '25년 노조 합의사항 관련 두 건이 완료되지 못했음. 직원 성과급 관련 사항으로, 직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관련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 바람
2. 동대문구 대학가 공연장 현황 파악 후 자료 제출 바람
3.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위 지적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결 완료한 대처 결과 자료 제출 요청

□ 서울관광재단 : 8건

1. 관광재단은 내년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 삭감된 예산에 대해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2. 신규 관광객 확보를 위한 기획보다 인프라 확충과 안전 확보를 통한 재방문 관리가 중요함
 - 서울시관광협회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탄탄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발전시키기 바람
3. 9. 13.부터 인삼공사와 협업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검토 결과 현재 업종으로는 판매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
 - 법률검토 회신은 9. 15.에 받았는데 판매 관련 보도자료는 9. 13.에 이미 발표했음. 다음부터는 사전에 검토 바람
4. 경동시장 등 서울의 다른 지역을 개발해서 분산시키면 더 쾌적한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안내와 홍보 바람
5. 최근 3개년 서울 등산관광센터 운영 실적 및 프로그램 실적
6. 제38차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일체
7. 2025년 법률자문 내역 일체
8. 최근 3년 복무점검 결과 및 지각자 현황

□ 120다산콜재단 : 6건

1. 프로모션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2. 120다산콜재단 민원서비스 보상제 관련 내부 규정 및 집행 내역, 오안내 현황
3. 헬스키퍼 추진 현황 및 1인당 사용 횟수
4. 2025년 제5회 인사위원회 및 제8회 인사위원회 세부 내역
5. 스마트상담시스템 구축 예산 조정에 따른 운영 현황
6. 2023년~2025년 120다산콜재단 자살관련 상담 건수

※ 특기 사항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의 건

○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 제한적인 감사기간과 감사권한 등으로 인해 사안의 실체를 모두 파헤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음 2건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임

1. 서서울미술관 건립 과정의 부실 준공 및 하자보수 지연의 건

1) 주문내용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은 2025년 3월 준공 처리 이후 누수, 결로, 곰팡이 등 중대한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개관이 2026년 3월로 지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준공검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규명이 필요하며, 소관 부서(문화본부·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시립미술관) 간 책임 소재 불분명 및 소극적 행정 처리로 인해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설계·시공·감리부터 준공 승인 및 하자 보수 관리에 이르는 건립 전반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해 줄 것을 청구함

2) 피감사기관 : 문화본부·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시립미술관

3) 이송처 :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2. 서울시립미술관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진행의 적정성 규명의 건

1) 주문내용

서울시립미술관의 2025년도 계약 현황을 살펴본바, 수의계약이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 발주가 의심되는 등 의혹이 있으므로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청구함

2) 피감사기관 : 서울시립미술관

3) 이송처 :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 총괄

기관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331	143	109	79
여성가족실	61	33	20	8
여성가족재단	14	4	7	3
여성가족 관련 기관	50	16	22	12
복지실	58	30	13	15
복지재단	17	7	3	7
복지 관련 기관	45	24	4	17
시민건강국	44	13	22	9
보건환경연구원	3	-	2	1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24	12	9	3
건강 관련 기관	15	4	7	4

여성가족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괄표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25	53	49	23
여성가족실	61	33	20	8
여성가족재단	14	4	7	3
여성가족 관련 시설	50	16	22	12

2 세부내역

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여성가족실 -33건

-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재구조화 검토를 요청했으나, 크게 진척이 없음.
 - 신규시설 설치 시 보조금 미지원 등을 통해 시설 수를 20개소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기존 시설보다 한부모가족의 수요에 더 적합한 신규시설이 생기더라도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미지원하는 것이 이용자 관점에서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3년 연속 입소율 50% 이하 시설은 정원·종사자 조정 및 예산 감액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전국 단위 지침으로 서울시 현실(입소율 60% 수준)과는 괴리가 있음. 서울시 여건에 맞도록 입소율 기준 조정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하기 바람.
 - 동일 지역 내 생활시설·양육시설이 중복되는 경우, 시설을 통폐합하여 그 확보된 예산으로 전 세임대·매입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지침상 종사자는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66센터는 센터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수탁기간과 종사자 근무 기간이 맞지 않아 결원이 반복되는 등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음. 여성가족실 소관 전체 위탁기관의 계약 관행과 종사자 노동환경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직장맘지원센터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키즈카페 면적기준, 설치기간 등의 재검토가 필요함.
- 키즈카페 공사비, 설계비 등 지역별 편차가 많음. 공사비 산정 근거, 공사비 재점검 등이 필요함.
-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
-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 예산 및 집행 부진함.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거나 또는 적정 집행이 필요함.
- 보호출산 긴급보호비 집행률 저조함에 따라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9.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집행률 저조함, 보증금 월세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확대할 것
10.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집행률 저조, 사업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을 고려해 봐야 할 것.
11.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첫만남 이용권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경우 포인트 차감 순서가 달라 교통비로 사용하더라도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이 먼저 차감됨. 각 사업의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 못 하게 되는 불편이 있으므로 개선할 것.
12. 엄마 아빠택시, 가사서비스 등을 사용기한과 신청 마감일이 서로 달라 12월에 태어난 경우 당해 연도 사업 종료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 발생, 잔액 이월 등 개선 필요함.
13. 쌍둥이 등 다태아인 경우 탑승 시 하나의 카시트로 불편, 동시 바우처 결제 불가, 개선 필요함.
14. 탄생응원몰 타 시도민도 동일하게 이용, 서울시민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음. 다량 구매 후 중고거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 필요함.
15.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서울시 독자 운영 유지 필요함.
16. 아동복지센터 조직 진단 개선방안 용역 완료 이후 인력과다에 대한 구체적 개편 필요함.
17.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아동복지센터에서 입퇴소하는 대상 이름 정보에서 가운데 글자만 마스킹 되어있음.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있으므로 시정 필요함.
18.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정된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배상금 소송에서 기관위임사무와 소멸시효를 들어 3심까지 항소한 것은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 행위이며, 또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에 반하는 것임. 또한 이 사건은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사회가 어떻게 바로잡고 현재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므로, 단순한 배상금 지급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응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약자와의 동행이 약자와의 투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19. 과거 서울시로부터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와 권리 구제에 앞장서는 행정을 구현할 것.
20. 어린이집 안심공제(배상보험) 내 보육교직원 형사방어비용 지원 내역 중 실제 아동 학대로 판결나거나 그에 준하는 결과가 나온 사건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지원된 비용이 확인될 경우 이를 사후에 환수(보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신설하여 조치할 것.
21.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교권은 보호하되 아동 학대 행위자에게 혈세가 지원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지급 심사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것.
22. 주요재정사업평가가 미흡으로 떴을 때 노력 및 개선사항 없이 종결하는 것은 문제임.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도 사업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보다 단순 예산 삭감만 함에 따라 스카우트 인원이 감소하고 있음. 감소된 인원이 25개 자치구 활동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재원 분담도 자치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임. 안심이앱 다운로드 대비 가입 및 주요서비스 이용자 수 적은 문제 해결 바람. 또한 안심택배함 이용률 점차 떨어짐. 사업이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기 전에 개선의 고민이 필요함.
23. 산후우울증 증가 대비 심리지원 실적 매우 미흡함.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규정(산후조리경비 등)으로 이용 곤란 다수 발생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과 통합해달라는 민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출산 지원 관련 각 사업의 신청기간 정리 필요함.
24. 2024~2025년 융합형 키움센터 증가 없음. 미설치 된 자치구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하지 않음. 학생 수가 많은 구(예: 강서, 영등포, 서초 등)에도 부재 사례 존재하며, 지역 간 편차가 과다함. 공간 확보·조정을 통해 미설치된 구 우선 배치 및 확대 추진을 요구함.
25.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료상 실적표 표본 축소·숫자 불일치·만족도 과대, 연도 배열 통일되지 않음 등의 문제가 있음.
26. 최근 3년간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자료 수치가 불일치·오류로 보임. 예산 집행의 투명성(대상자 수 대비 집행액, 집행 경로) 검증을 요구함.

27.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현행 24~36개월만 지원으로 민원이 다수 있음에 따라 연령 확대·소급 적용 검토를 촉구함.
28. 휴대용 안심벨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긴급입찰한 것은 부적정하며 통상 40일 전 입찰공고 하는데 10일로 긴급입찰하면 참여업체가 제한됨. 또한, 연말까지 배부하고 효과성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29. 유령등원은 입소 후 미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에 따라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이 못 보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보조금 부정 수급(아동 허위등록)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보육사업 재설계가 필요함. 불법 색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보육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함.
30. 모아어린이집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음.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니 개선방안 마련 바람.
3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인 주거비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는 좋았으나 연말 집행률이 10%수준으로 저조하며, 실제 11월말 지원받은 가구수가 없는 것은 신청에서 선정 및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이 너무 긴 것으로 보여짐. 이는 여성가족재단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중복 여부는 SH에 요청하는 등 사업의 단계가 복잡하게 구조화 된 것이 원인으로 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임.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부서인 주택실과 연계한 종합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함. 또한, 출생신고 때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32. 키움센터 운영시간·인력기준·근무체계 등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운영지침을 마련해놓고 의회와 현장에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절함.
33.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자문위원회 구성에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대부분 부재, '기타' 항목 인원이 다수임. 사례판단·이의신청 처리 과정의 전문성 결여로 행정소송 제기 및 패소 사례 다수 있음. 관행적으로 자문위원을 임의 변경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상설 참여가 필요함. 이런 요인으로 아동학대 판단 자문위원회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시 차원의 운영기준·지침 제정 및 점검 강화가 필요함.

◆ 여성가족재단 - 4건

1. 재단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 대관 내역 확인 결과, 정치적·종교적 성격의 행사에 대관한 사실이 확인됨. 재단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선할 것.
2. 재단의 핵심가치가 시정목표 및 재단 고유기능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직원들도 핵심가치와 업무 방향성을 명확히 체감하지 못해 내부 만족도가 외부 만족도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향후 핵심가치 수립 시 여성가족실과 소통하여 재단 고유기능과 부합하도록 하고, 내부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연구사업에서 정리원 수당 내역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것.
4. 위탁사무 수행인력 대부분이 계약직이므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채용조건이나 내부교육 등이 필요하며, 위탁사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성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16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1. 현재 센터의 누적 검사 인원(약 1만 5천 명) 대비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계된 실적은 약 1%(89명)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함. 이는 센터가 이용자에게 단순한 치료기관 명단(정보)만 제공할 뿐, 바우처 지원이나 비용 할인 등 연계를 유도할 실질적인 어드밴티지가 없기 때문임. 단순 정보 제공을 '연계 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용자가 센터를 통해 전문 기관을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유인책을 마련하여 연계율을 높일 것.
2. 전문 치료기관으로의 연계 후 해당 아동이 실제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치료를 통해 어떤 발달적 성과(개선)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함. 연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 경과를 공유받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3. 검사결과에 따른 '관찰요망', '도움 필요' 아동들이 실제 센터의 프로그램(발달놀이터, 심화평가)이나 외부 치료 기관으로 얼마나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단계별 누적 통계가 명확하지 않음. 단순 검사 건수보다는 검사 후 실제 관리 단계로 진입한 아동의 수치와 비

율을 정확히 산출하여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비할 것.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4. 업무보고에서는 장애 관련 개발·연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발달장애·경계성지능 아동의 키움센터 이용현황을 요청하자 파악이 되지 않아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특히 거점형 키움센터는 교육청 늘봄학교와 연계하고 있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키움센터의 지원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5.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독립형 주거 공간 마련, 청년통장 등 관련 제도 적극 안내가 필요함.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6. 회의 다과비가 1인 4천원 초과 지출됨. 기준 준수 필요함.
7. 심리치료인력과 상담원의 전문성 요구됨. 별도의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이 없다면 시차원의 교육을 마련해야 함.
8. 시설의 채용은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에서 채용 후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함.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9. 센터 실적 자료의 산정방식(명수, 지원횟수, 홍보횟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 성과 파악이 어려움. 각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성과 산정 방식과 표기 체계를 명확히 할 것.
10. 예산이 가사서비스와 축제에 편중 된 반면, 다른 사업은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집행률도 50% 이하로 저조함. 센터의 본래 목표인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과 역량개발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음.

11. 전국단위로 모집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주거자금사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센터가 하는 것은 부적절함.
12. 9월말 기준 집행률이 49%로 매우 저조하며, 25년도에만 이직률이 인원대비 40%로 매우 높아 조직의 안정성과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 또한, 1억원 이상의 규모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 구조 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전시성 행사가 아닌 실질 지원 중심의 사업 운영 필요함.

<꿈마루 서울시립학대피해 아동쉼터>

13.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나 타 시설 전원 결정 시, 현재는 담당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단순 상담 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ADHD, 조현병 등 고위험군 아동이 다수임에도 원가정 복귀 비율이 높은바,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와 치료 경과를 수치화하거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크' 및 '판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자체(담당 공무원) 및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근거 자료로 제공할 것.
14. 입소 아동 중 ADHD, 조현병, 발달장애 등 전문적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다수이나, 현재 쉼터 내 프로그램은 보드게임, 놀이치료 등 보육적 측면의 단순 심리 지원에 그치고 있음. 쉼터 협약서를 보면 쉼터의 목적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초기상담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는 바, 단순 상담을 넘어 전문 의료기관 및 심리치료센터와 연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외부 자원 연계 방안을 강구 할 것.
15. 치료사가 인사업무 등 행정업무까지 수행 중이므로, 행정업무는 보육사가 담당하도록 업무분장 조정 필요
16. 쉼터 조직도에 수탁법인((사)꿈이루는 사람들) 이사회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정 필요함.

② 건의사항

◆ 여성가족실 – 20건

1. '엄마아빠VIP존' 주말 이용 제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개선이 미흡함. 주말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이용편의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2. 여성가족재단이 정치적·종교적 성격의 행사에 회의실 및 세미나실을 대관한 사실이 확인됨.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전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대관 규정을 점검하고, 공통지침 마련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수립할 것.
3. 신규 개소 예정인 '서울성착취예방대응센터'는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내 불법성산업감시본부,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음. 또한, 기존 십대여성건강센터·일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착취·성매매 유입 전 취약청소년 발굴 및 지속 지원 기능이 신규센터 계획(조직·인력 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임. 다른 시설과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하고, 예방적·지속적 지원 기능 보강할 것.
4. 기존 십대여성건강센터는 법인·종사자 간 갈등 장기화 되다 결국 운영 중단됨. 이를 반면교사 삼아, 문제 있는 수탁기관 있는 경우 조기 개입하고 중재하여 시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할 것.
5.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확장되면서 서비스 질과 종사자 처우 격차 커지고, 이용자-종사자 간 갈등뿐 아니라 종사자-서비스제공기관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음. 사업 확장에만 그치지 말고 서비스 품질관리, 종사자 처우, 갈등 조정 시스템 함께 강화하는 방안 필요함.
6. 다문화 지원 소관 부서가 여성가족실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되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의 종사자 처우(인건비) 및 이용자 지원(정착지원금)에 차별이 발생함. 소관 부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파악하고, 부서 간 협력·논의를 통해 정책적 연속성과 통합성 확보할 것.
7. 저출생 대응은 단기적·개별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동행·모아 어린이집 등 기존 사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 어려움. 제5차 보육 중장기계획 수립 시 구조적 문제와 질적 개선 방안 포함할 것.
8. 정신적·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증가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 증가 등으로 아동양육시설, 특히 소규모시설의 운영상 어려움 심각함. 실태 파악 및 지원 필요함.

9.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서울시 정착금 2천만원은 긍정적이나 주거지원 부분은 충분하지 않음. 특히 보호종료아동 주택공급(청년매입임대 우선공급)의 경우 50호에 지나지 않는데, SH공사 공가가 연 2천호(25년 9월 기준)인데, 여가실과 SH가 협의하여 공가를 활용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람.
10.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가 종료된 후 자살충동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서울시 전 담 심리상담인력은 4명뿐임. 특히 아동힐링센터 운영 예산 대비 상담 예산 및 인력은 매우 부족한 편인데(상담지원 예산 약 4천만원, 상담인건비 약 3억원인 반면 아동힐링센터는 연 29억원에 운영됨) 기능 대비 재원 배분이 불균형 하니 상담예산 및 인력을 늘려주기 바라며, 사업명도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따뜻한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해 주기 바람.
11. 5인 이상 다자녀가구 주거 실태 파악 및 주거지원이 필요함.
12.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실질적 사후관리가 필요함.
13. 몽땅정보 만능키 관련하여 산후조리경비와 같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한번에 신청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한번에 신청 매뉴얼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14. 몽땅정보 만능키 관련 명칭 변경이 잦아 혼란이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건의함.
15. 성심모자원 관련 남은 입소자들에 대해 시설 이동과 새로운 시설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함.
16. 서울형 가사서비스 업체 증가와 함께 3시간 기준을 다 채우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있음. 이용자가 후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17. 과거 국가를 비롯한 서울시로부터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 배상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국가 위임 사무라며 책임을 부인하다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후 절반의 책임을 인정하는 식의 모순된 행정 태도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된 행정 태도를 지양하도록 하고 선진적이고 성숙한 행정 태도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
18.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중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19. 동행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은데, 대기수요 가운데 우려되며, 대기 수요가 적은 어린이집 중심으로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함.
20. 키즈카페·키움센터 야간운영과 관련해서 야간근로 150%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민간 키즈카페(교회 등)에서도 야간 운영을 지침으로 강요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음. 안정적인 야간운영을 위해서는 키즈카페·키움센터 야간운영 인력 채우개선의 검토가 필요함.

◆ 여성가족재단 - 7건

1.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재단의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3.1% 증가했고, 그 중 대표이사 업무추진비가 전체 업무추진비의 76%를 차지해 다른 출연기관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임. 업무추진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 있음.
2. 재단 자체사업보다 수탁사업 비중이 커지고 있고, 전체 사업비 대비 연구비가 너무 적음. 재단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 검토가 필요함.
3. 디지털성범죄 관련 AI 삭제 지원 시스템 누락 확인 필요. 인공지능 분석의 사각지대도 확인 필요.
4.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관련 성평등가족부의 사회복지시설 전환 정책에 포함될 경우 기존의 노력과 성과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대응 방안 마련 필요.
5. 스토킹피해자 지원 관련, 상호 소송절차에 있는 사건 등을 사유로 피해자가 급하게 내민 손길을 피해지원센터가 잡아주지 못하는 것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재단이 직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정 범위를 고민해 보기 바람
6. 여성단체 지원 프로그램(양성평등 활동단체 역량강화 사업)이 단체 역량 강화에 더 심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될 필요가 있음.
(재단 운영 시설의 입주 단체 및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필요)
7. 피해자 지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등으로 유사경력 확인이 필요함.
(전문 인력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22건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1.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과 현장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 저조함. 사업 운영 효율성 점검이 필요함.
2. 종사자 이직률 높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례도 있었던 만큼 조직문화와 근무 환경 분석 필요함.
3. 2029년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예정임. 센터 기능 변화 및 역할 재정립 필요함.
4.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공방 위주 사업으로 되어 있음. 탈성매매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등 현실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직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5.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 위주의 발달검사가 진행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발달검사 시행 필요함.
6. 아이발달 검사 및 지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검증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
7. 전문 치료 협약 기관 선정 시 지역별 형평성, 접근성 고려 및 심사평가 기준과 결과가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심사 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8. 아이 발달 관련 사업을 여성가족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이 발달 문제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됨. 여성가족실은 부모, 교사 등 양육자의 교육 및 상담에 집중하고, 아이 발달은 의료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함. 두 영역의 역할 및 기능 분리, 센터의 중점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9. 23년도 종사자 이직률이 높음. 이후 이직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이직률 감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10. 건물 임차료가 많음. 축소나 이전 검토가 필요함.

<서울특별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11. 느린학습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내부 전문인력 보충 필요하며, 홍보를 통한 일시돌봄 이용자 수 증가가 필요함. 또한, 지역 내 아동 돌봄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이용 아동 확대, 예산의 효율성 증대,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대해 향후 노력이 필요함.
12. 거점형 센터는 키움센터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강화해야 함.

<서울특별시립 꿈나루마을 초록꿈터>

13. 다양한 연령층(미취학~자립준비청년)의 아동을 위한 맞춤 지원과 정신적·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케어를 위해 인력 등 보강 검토 필요함.
14. 소그룹(규모) 운영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지역사회·학교로부터의 편견에 대한 우려 있으므로 개선 방안 고민 바람
15. 예방접종 실적, 재산조성비 집행률, 아동인권교육 및 외부기고나 협력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 집중 요보호아동 수(28명) 대비 임상심리상담원 수 1명은 매우 부족해 보임. 아이들의 집중 치료 시점을 놓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연계 치료 및 인력 충원 등의 대응 방안이 필요함.
17. 반복적인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대한 변경된 법인의 기관장으로서 대책 필요함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18. 종사자 수 대비 사례관리 건수가 너무 많음. 감당 가능한 수준의 업무량인지 검토 필요함.
19.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핵심 역할에 집중하고, 일부 기능은 타 기관(복지관, 심리치료기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20. 직업교육훈련 후 취업 시 고용유지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함
21. 5회차 수탁 중인데, 여성들을 위한 특화사업이 있어야만 존재 이유가 있음. 남부 센터 만의 특화사업 프로그램 마련 필요

<꿈마루 서울시립학대피해 아동쉼터>

22. 수탁 기관 운영 평가에서 필수 이행 사항인 종사자 의무 교육(인권, 성희롱 예방, 청렴 교육 등) 미이수와 공고 기간 준수 위반(날짜 계산 착오) 등으로 감점을 받은 사례가 발생함.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운영의 기본 원칙 위반이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복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협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③ 기타 자료요구 등

◆ 여성가족실 - 8건

1. 직장맘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용
2. 보호출산 대상자 현황
3. 면적 작은 키즈카페 이용 현황
4. 아동복지센터 소장 출장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5. 행정사무감사 76번 자료 보완 제출
6. 휴대용안심벨 입찰관련서류
 - 입찰공고문, 지침, 관련서류, 제안서평가표, 제안서
7. 모아어린이집 418개소 정원 대비 입소인원 현황
8. 키움센터 관련 운영 가이드 라인 등

◆ 여성가족재단 - 3건

1.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 주거비지원사업팀 신규 직원 이력 사항
3. 여성가족재단의 신규 정책 개발 현황 자료 제출 및 보고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12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1. 연령별 발달검사 도구
2. 아이발달지원센터 관련(지역사회 치료 전문기관 연계 현황)
3. 최근 3년간 조기개입 참여율
4. 최근 3년간 치료 전문 협약기관 참여율
5. 지역사회 연계 협약기관 심사기준표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6. 직원 근속연수 최종 자료

- 최초근속일과 구분하여 2016년 초록꿈터 시설 분리 운영 기준으로 근속 산정 자료

7. 2023~2025년 후원품 사용 내역

- 타기관 인계 관련 상세 내역

8. 2023~2025 인건비 현황 및 증감 사유

- 인건비 내역 및 증감 사유

- 이직현황 상세 내역

9. 집중보호아동 상담 및 치료 관련 외부지원 연계 현황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10.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력 및 자격 현황

11.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합사례회의 개최 현황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2. 세부 사업별 구체적 추진 실적

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괄 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 요구
계	120	61	20	39
복지실	58	30	13	15
복지재단	17	7	3	7
복지 관련 시설	45	24	4	17

2 세부내역

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복지실 - 30건

1.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50플러스재단이 대행 운영하고 있으나, 재단 조례상 대상 연령(40~64세)과 시니어일자리 사업의 법정 대상 연령(65세 이상)이 불일치해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또한 기존 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설치했음에도, 접근성과 프로그램 연계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50플러스재단에도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됨. 운영방식, 운영주체, 소관부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어르신 일자리 지원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2. 장애인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은 3년 주기로 지도점검하는데, 거주시설은 지도점검 주기를 더 짧게 할 필요 있으며, 입소자 특성(발달장애인인, 성인, 미성년 등)에 따라 평가 내용 및 방법 달리할 필요 있음.
3.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1·2차 성과발표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됐으며,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 결과와도 상반된 내용이 확인되어 신뢰성과 효과성에 의구심이 드는 시범사업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후속조치 논의 필요함.
4.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저소득 서울시민 부가급여' 사업의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함. 면밀한 설계와 개선방안 검토할 것.
5.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간 환경 격차 관련 시설에 따라 복지 품질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있음. 서대문구 장애인시설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있고 주소가 다르게 나와 있는 곳도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설과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들의 필요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
6.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보조기기는 많이 없음. 발달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보조기기가 뭔지 고민해야 함. 사업 내용에 보면 맞춤 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맞게 장애인들의 니즈를 맞춰야 함.
7.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발생시 보조금 제한 등 필요함. 비법정시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8.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관련 성희롱, 갑질 등 직장내 괴롭힘 민원이 있음 복지관 전체 다시 점검이 필요함.
9.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외벽이 붕괴 이후 하자처리에서 문제 많음. 서울시 전체 종합복지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시공 자재 적절성 등 확인 필요함.
10. 평화로운 집의 해임사건이 유독 많음.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함.
11. 상이군경복지관 직원에 3억 4900만원 횡령, 반납해야 할 것, 지휘 감독 등 안전장치가 필요함.
12. 남대문 쪽방상담소의 경우 내부고발자는 취업을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 내부고발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함.
13.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예방교육 강화 필요함.
14.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29억 원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의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2024년 지원 실적이 41건(약 3,800만 원)에 그침. 경기도와 같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소득·자산 기준과 무관하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완화된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5.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1,898건)의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실적이 0건이며, 관악구(1,762건) 또한 5건에 불과하여 피해 규모대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해당 자치구들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발굴 및 신청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정 체계를 가동할 것.
16.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2030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배제되고 있음. 주거비 지원 외에 당장의 생계 위협을 겪는 청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정책 부서와 연계하여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17.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 주택실(전월세종합지원센터)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복지실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주택실의 피해자 데이터와 복지실의 지원 자원을 연계하여, 피해 결정 통지 시 긴급복지 지원 안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

18.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관련 강북의 남성 쉼터가 5억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애초에 장애인쉼터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을 지정하여 리모델링 하였음.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 정원은 8명인데, 현재 리모델링 완료된 쉼터는 내부 구조상 2명만 입소 가능. 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람. 또한, 리모델링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면 관리 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19. 학대피해장애인아동쉼터 종사자들 간 직장 내 괴롭힘신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등 고발 문제가 심각함. 범인이 운영 못하겠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임. 내부 갈등이 심해지면서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하겠지만, 그 피해가 쉼터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갈 수 있음. 종사자 내부 갈등 문제 속히 해결하여야 함. 또한 주중 야간 및 주말에 근무자가 1명인데,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려운 1인 근무 체계는 매우 위험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함.
20. 학대피해장애인아동쉼터 한 종사자의 호봉이 8호봉에서 16호봉으로 갑자기 오름. 채용공고가 12호봉 밑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16호봉이 되는건 문제가 있음.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및 장애아동쉼터 관리에 문제 많으므로 개선 바람.
21. 학대피해장애인아동쉼터 원장의 잣은 교체가 문제 있으므로 개선 필요
22. 재정사업평가결과 미흡으로 뜨는 사업이 다음연도에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어르신 종사자 지원'의 경우 미흡에서 보통이 되긴 했지만 예산만큼은 처우 개선에 쓰이는지 의문이고, 쉼터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그 장소를 이용했던 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나 스트레스 해소 공간을 박탈당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임.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클 것임. 처우개선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함. '커리어 플러스 센터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에서 미흡으로 내려옴. 성과가 저조한 이유와 세부 실행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23.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운영'도 보통에서 미흡으로 내려옴. 이 부분이 생활지도원을 운영했는데 가서 본 결과 효과가 전혀 없음. 종사자 인원을 더 보강해준다든지 하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지도원으로 바꾼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님. 아동들에게 피해가 크게 가고 있음. 종사자들 인원 보강이 필요함.

24. '사회보장 위원회 운영'도 미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내부 자체 평가나 외부 자문 결과 요청함. 향후에 지표를 개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결과들이 있는지 자료 제출 요청함.
25. 연말에 '긴급 복지 사각지대 개선' 국가형 긴급 복지 조기 마감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함. 공백 때 선지원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할 것.
26. 은혜장애인요양원에 서울시 예산이 지급되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27. 서울역 인근 및 지하도의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시설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철거 또는 센터 이전 등 적법한 행정조치가 필요함. 서울역에 노숙인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노숙인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숙인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부족한 상황임. 서울시는 노숙인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 설정 없이 노숙인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이 부분에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28. 자활자원과 및 자활센터의 총 예산은 3000억 원 수준으로 노숙인 지원대상자 1인당으로 환산하면 2천만원임. 이는 연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연 918만원보다 많은 금액임. 노숙인 대상에 쪽방촌 주민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쪽방촌의 월세는 넓이로 환산할 경우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어 주거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다시 노숙생활로 연결되고 있음. 외국의 노숙인 지원제도는 주거를 우선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도 주거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효과적인 노숙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29.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퇴소자 수가 거의 비슷한데 노숙인들이 줄지는 않는 반면 입소자만큼 퇴소자가 있는데 사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지 의문임. AI 또는 디지털 시스템을 잘 이용하여 노숙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0. 복지실 소관 시설 직원 징계 사항'을 보면 시립장애인복지관 차량사고(3건)가 눈에 띄며, 세 사람이 같은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건이 있음. 내부 조사보고자료가 있을 것으로 이런 부분은 기관 경고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함.

◆ 서울시 복지재단 – 7건

1. 25개 신청 기관 중 10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적용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심사 배점표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특히 ‘유경험 수행 기관 우선 선정’이라는 원칙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수치화되고 적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바, 향후 공모 사업 진행 시 심사 기준과 배점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별 고독사 발견 경로, 주거 형태, 연령대별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3. 서울시가 고립 가구 발굴 시스템 도입과 채널 다각화를 계획했으나 진척이 더딘 상황임. 현장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밀착형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발굴 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고립 가구 발굴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차원의 연구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
4. 외로움안녕120 운영을 통해 외로움 해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계층의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고독사의 인과관계(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단절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여 질적 성과가 도출되길 바람.
5. 24시간 관제서비스 관련 실제 관제 출동 건수는 낮은 것으로 보임. 비용대비 효과성 있는 방안에 대비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6. 행감제출자료에 예비비를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인력증원봉급예비비 등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회계지침에 따라 세부항목 구분 해서 관리 할 것.
7. 매년 유보금이 증가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치인 내부 유보금을 적절히 계상하여 출연금을 요구해야 함. 불용액의 반복누적 방지를 위해서 일정비율 이상의 내부유보금 보유 시, 다음연도 출연금 산정(편성) 시 감액하는 등 유보금 관리를 하기 바람

◆ 복지 관련 시설 - 24건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 대부분 사업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함. 집행률 관리 철저히 하고, 사업 제때 추진하도록 할 것
2. 발달장애인 쉬운 조사 설문 문항 등 의원별 제출 내용이 불일치하고 의회 자료 제출 내용이 일관되지 않음.
3. 복지관 주요 프로그램 대기 기간이 3년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긴 것은 문제라고 봄. 언어 치료는 특히 시기성이 중요한데 현재 대기자가 너무 많고 언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함.
4.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사업 실적이 저조한데 인력 미채용 원인파악과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5. 노숙인 규모는 감소 추세인데, 연인원 기준 실적 제출은 실제 규모와 괴리가 있어 의미가 없음.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 마련하고, 현장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여 그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할 것.
6. 2005년도 이후에 서울역 인근 및 지하도의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시설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철거 또는 센터 이전 등 적법한 행정조치가 필요함.
7. 노숙인 일자리지원사업, 지원주택사업 등 각 사업에 대한 예산과 실적이 불분명하며, 입소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주거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8. 법인전입금은 이월하기보다는 당해연도에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반복되는 이월은 부적정함.
9. 사례관리 내용이 부실하며, 직원교육과 비전을 강화하여 클라리언트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10. 2023년과 2024년에 예산 초과 지출 및 목적 외 집행 등 기초적 회계 규칙 위반이 2년 연속 발생함. 예산 편성·집행을 철저히 하고, 회계 관리 강화를 통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11. 센터 실적 자료의 산정 기준과 단위(명수, 지원 횟수, 홍보 횟수 등)가 불명확하고 연 인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실질적 성과 파악이 어려움. 각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성과 산정 방식과 표기 체계를 명확히 할 것.
12. 등록회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수가 누적인원으로 관리되고 있음. 회원탈퇴, 이사, 장기 간 미이용 등으로 정리가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실인원으로 현행화가 필요함.

<서울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13. 쪽방주민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음에도 쪽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은 중복 소지 있음.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인쉼터>

14.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내 임대서비스 제공 시 배송에 대한 정보가 없음. 홈페이지에 배송에 대한 정보 기재 해야 함
- 보조기기센터 이용자들이 배송이 가능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15. 시설장이 자주 바뀌는 부분 문제 및 종사자 간 고소, 고발 문제가 심각함. 종사자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부모임. 결국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는 부분은 아이들임. 종사자 간 아동학대 신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결과가 무혐의라고 끝날 사항이 아님. 시설 종사자 간 내부 갈등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감. 신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서 살고 있음. 법인이 법적으로만 해결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진행해서 결론 낼 것인지 고민 바람.
16. 법인 사무국 내 아동복지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쉼터 운영이 부실함. 입소아동의 인권은 누가 지키나? 9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 시설 운영을 잘해야하고, 원 가정 복귀를 위해 주력하길 바람

17. 센터운영위원과 법인 운영위원이 중복된게 있음. 2023~2025 임원수당 지급을 보면 알 수 있음. 시정 조치 바람.
18. 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구에 경사로가 없이 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시설에도 장애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편의시설이 없는 등 시설의 관리가 불충분함.
19. 생활지도원 8명(남아 4명, 여아 4명)인데, 모집자격이 사회복지사로만 되어있음. 장애 관련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피해아동을 케어하는 경력자 채용할 때,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인식, 경력이 없는 사람이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성이 높은 종사자들로 시설이 운영되어야 함.
20.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보면 법인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채플(종교 활동)을 강요하거나, 직원들을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21. 직원들 명절선물 등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등 문제가 있음. 후원금은 직접 사업비에 지출 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서울특별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22. 사회서비스사업 중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은 참여율 저조, 상담 인원 대비 과도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는지 검토 필요함.

<서울광역자활센터>

23. 중앙자활기금 사업비 집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세입·세출이 불일치하며, 자활센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외부 재원을 받아 집행했으나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됨. 세입·세출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업 관리 철저히 할 것.
24. 지역센터 자활사업 유형별 중간 터락자에 대한 사유와 지역자활사업의 문제점 등 광역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② 건의사항

◆ 복지실 -13건

1. 통합돌봄의 기본은 돌봄SOS센터, 장수센터 등 기존 기관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활용하는 것임. 그러나 돌봄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현 체계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규모와 역할이 통합돌봄협의체보다 훨씬 작고 제한적이어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검토 바람.
2. 장애인의 욕구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다음 사항을 제안함.
 -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용 차량 제조·공급 및 개조 지원
 - 장애인 차량에 장착되는 보조기기의 등록 및 지원
 - 휠체어 전용 백팩과 보완대체의사소통(ACC)도구를 보조기기 품목에 포함
3. 다양한 1인가구 중 특히 중장년 남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1인가구지원센터의 실제 이용자는 여성 비율이 70~80%로 매우 높고, 1인가구 지원정책 소관 부서가 여러 차례 변경됨(여성 가족실 → 1인가구추진지원단 → 복지실 1인가구지원과). 1인가구 지원정책의 방향 및 그에 따른 추진 체계의 적정성 검토 바람.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연령 확대(34세→36세)와 서울시 일괄 선발방식 도입으로 경쟁률이 급증하면서, 털락자 증가에 따른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우려됨.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선발인원 증원과 예산 증액 검토 바람.
5.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이 기초지자체에 기반해서 시행되다 보니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함. 사업 확대와 본격 시행에 대비해, 현행 통합돌봄추진단 외에 '지원단' 형태의 광역 단위 조직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 좋은 돌봄 제공을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가 중요하므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가 후퇴하지 않도록 할 것.
7. 어르신 돌봄을 수행하는 생활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처우 및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검토 바람.
8. 어르신 인구의 40%가 60대이며,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체력을 갖춘 경우가 많음. 또한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60대 초기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함.

9.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교육 외에도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함.
10. 의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 의결했음에도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예산 편성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소극행정임. 향후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11. ‘3년간 노숙인 생활 시설 입소자 현황’ 제출자료에서 영등포의 광야홈리스 센터를 보면 민원이 계속 발생함. 이 중 주요 민원은 무엇이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의 수탁법인의 운영능력에 대해서 점검해야 하며, 법인의 목적사업 등 이력 사항을 검토해야 함.
12. 복지실에서 지도점검 많이 했고 민원처리 많이 했을 텐데 시설의 자체 대처 미흡에 대해선 법인을 과감히 바꿔야 함. 민원이 많이 나오면 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적정한 수탁기관으로 변경까지도 고려해야 함.
13. 서대문구 늘푸른 자활의 집과 성동 비전트레이닝 센터도 민원이 많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점검 필요함.

◆ 서울시 복지재단 – 3건

1. 어르신 인구의 40%가 60대이며,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체력을 갖춘 경우가 많음. 또한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응한 어르신 일자리 연구가 필요함.
2. 은둔·거부 가구는 기존 복지 시스템에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서울시가 보유한 ‘위기 징후 DB(공적 데이터)’를 사업 수행 기관 선정 및 대상자 발굴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공적 데이터와 민간 기관의 현장 발굴 노력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위기 징후 데이터를 수행 기관과 실효성 있게 공유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3. 스마트돌봄서비스 관련하여 고독사예방을 위한 똑똑안부확인, AI 안부든든, 1인가구안부보살핌 등 유사·중복서비스로 인한 업무과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복지 관련 시설 – 4건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1. 노숙인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 알코올중독 노숙인은 증가하는 추세임. 정신 질환 노숙인의 입원 연계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서울시 공공병원의 수용이 원활하지 않아 50% 이상이 타 지역 병원으로 인계되고 있음.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시민건강국 등과 협력하는 전문적 협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2. 수탁법인인 굿위드어스의 목적사업을 명확히 하고 레인보우마켓 등 후원금은 복지사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3. 쪽방주민은 감소하는데 예산이 계속 늘고 있음. 서울시가 너무 많은 사업을 벌려서 그런 것은 아닌지 개선해야 함.
4. 쪽방주민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자립 의지를 저해할 수 있음. 정책 검토 바람.

③ 기타 자료요구

◆ 복지실 - 15건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관련
 - 등록과정,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종류, 4개 센터별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이용률
 - 장애인보조기기 연간 신규등록 및 신청 건수
2.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 관련
 - 센터 운영실적(이용내역), 취업사례, 민원사항, 만족도조사 내용
3. 1인가구지원센터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 목록 및 내용
4.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관련
 - 재지정 심사 기관별 평가 결과
 - 재지정 심사 통해 청산된 활동지원기관 체불임금 내역
 - 휴일 근무 활동지원사 처우·임금 후퇴 관련 민원 접수 내역
5. 통합돌봄추진단 회의록, 논의내용 등
6.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구별 현황
7. 3년간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현황과 조치결과
8. 장애인 거주시설별 보조금 차이 발생 사유
9.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평가 '매우미흡' 관련
 - 내부 자체평가, 외부 자문자료, 유사위원회 운영방식 벤치마킹 반영 결과 등
10. '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선지원 제도 지원요건, 실적
11. 최근 3년치 동일법인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정량평가 관련 자료
12. 최근 3년간 용역, 공사, 물품 계약 현황
 - 발주금액, 낙찰금액, 공고기간, 긴급공고 현황, 관련 근거, 수의계약 사유, 공고 참여업체, 낙찰업체, 비교 견적업체
13. 최근 3년간 변경계약 체결 현황(2천만원 이상)
 - 변경 전후 과업지시서 포함
14. 노숙인 생활시설 입퇴소 시 입소자 정보 공유 여부 및 현황
15. 비전트레이닝센터, 늘푸른자활의집
 - 최근 3년 민원 제기 상세내역, 재계약·재위탁 관련 정보, 시설장 변경사항

◆ 서울시 복지재단 – 7건

1. 복지 분야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연구 현황
2. 희망두배 청년통장 민간재원 확보 현황
3. 복지관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시 복지관 개선사항 반영 결과
4. 서울형 임차보증금 증액 개선시행 세부내용
5. 좋은 돌봄 인증 심사위원 개선 사항
6. 은둔거부가구 맞춤형지원사업 수행기관 세부 선정 과정
- 25개 기관 중 10개기관 선정 기준, 과정 등
7. 은둔거부가구 맞춤형지원사업 모니터링 추진 현황
- 전담 사례지원단, 전문가 자문단을 포함한 참여기관 모니터링 추진내용 등

◆ 복지 관련 시설 – 17건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 이월금 항목별 제출(증감여부)
2. 24~25년 지정후원금 종류, 금액
3. 재가장애인 사례관리(1건) 내역
4. 24~25년 직원 급여 비교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5. 2024년 노숙인 실태조사 자료, 종합지원센터 평가체계
6. 종합지원센터, 희망지원센터, 위기대응콜 운영사업등 각 사업별 예산과 상세한 실적 제출
-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은 25년도 1월부터 실제지급 현황 포함해서 제출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7. 학대피해노인 사례관련(2건) 내역
8. 시설 후원금 현황 및 내역
9. 법인 결산자료 현황
10. 최근 3년간 법인 이사회 회의자료
11. 공고문, 정관, 회계결산서, 24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25년도 사업계획서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12. '24~'25년 이직률이 높은 사유, 이직자들의 구체적 이직 사유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13. 부서러기사랑나눔회 법인 현황(예산포함) 3개년
14. 위탁기관 사업비 세부내역서
 - 여아, 남아 가각 23-24 결산서
 - '25.3분기 추경예산서
15. 직원 8명에 대해서 김00등 무기명으로 작성해서 호봉 및 경력 등 직원 이력 현황

<서울광역자활센터>

16. '24~'25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절차, 지원내역
17. '24~'25년 야구장 다회용기 사업비 지출내역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괄 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 요구
계	86	29	40	17
시민건강국	44	13	22	9
보건환경연구원	3	-	2	1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24	12	9	3
건강 관련 시설	15	4	7	4

2 세부내역

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시민건강국 -13건

1. '손목닥터9988'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라 '만 10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서울 소재 직장인·대학생을 포함하여 지원하여 사회보장 협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짐. 법적 체계를 넘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책임 소재 명확히 할 것.
2. '손목닥터9988' 사업의 효과성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되고 있음. 성과 평가체계 마련하여 효과성 명확히 입증할 것.
3. '손목닥터9988' 가입자 250만 명 중 주소 등 기본정보 인증 안 된 미인증 가입자가 44만 7천 명임. 미인증 가입자를 포함한 수치를 성과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하며, 미인증자에게 가입 및 포인트 적립까지 허용한 것은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 할 수 있음. 개선할 것.
4. 시립병원 운영 개선을 위해 2억 4,200만원 투입해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서울의료원 중심의 단일관리체계 구축, 서울의료원장에게 임명·예산 권한 집중 등으로 현실성과 전문성이 부족함. 중요한 공적 연구용역에 자의적 의견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5.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90% 이상이 서울시 공공의료에서 치료를 못 받고 10%만 서울시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검토 바람.
6.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센터 정치적 행위관련 2023년 지적하였음. 2025년 5월에도 정치적 행사 참석 협약서에 정치적 행위를 하였을 시 해지할 수 있으므로 검토 바람.
7. 직영병원인 어린이병원(200병상), 은평병원(190병상), 서북병원(295병상)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임. 「의료법」 제62조에 100병상 이상은 의료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직영병원 3곳은 의료 예산 시스템이 아닌 행정 예산 시스템인 'e-호조'를 사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원가 분석 등 진료과별 손익계산이 불가능하며 적자 원인 파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므로 직영병원이 병원 회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8. 서울시가 25년 공공병원 손실보전금의 실제 손실 추정액(약 781억)을 산출하고도 313억 안에서 각 공공병원에 정책적으로 배분. 2016년~2019년 365억선, 2020년~2022년 347억선, 2023년 398억, 2024년 498억이었음을 보았을 때, 공공병원 손실보전금이 마치 총 액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며, 공공의료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공병원 손실보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이는 공공병원의 표면적 적자를 가속화시키고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수행 의지를 꺾으므로 실제 손실금에 맞게 추계하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전금 제도를 개선할 것.
9. 서울시 공공병원 체계 전환 및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약 2010년대부터 8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음. 공공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병원의 전반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내고 추진 목표 시점을 명확히 할 것.
10. 북부병원 호스피스 대체인력 비용부담 관련, 용역업체 관리가 잘 안되는데 타 병원도 실태조사 필요하며, 북부병원 용역업체의 대체인력 확보 유무도 확인 바람
11.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대상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음. 통합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함.
12.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은 8개 자치구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구비 부담을 이유로 자치구 참여가 저조하므로, 더 많은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13. 산후조리원의 행정처분 및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부적절한 상황이므로 관련해서 지도점검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2건

<병원 공통>

1. 병원의 진료 방해 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70건 중 유죄 판결이 2건에 불과하는 등 현장의 의료진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 보안 인력을 확충하고 특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진료 방해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서울의료원>

2. 2억 4,200만원 투입한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결과가 서울의료원 중심의 단일관리체계 구축, 서울의료원장에게 임명·예산 권한 집중 등으로 현실성과 전문성이 부족 함. 공적 연구용역에 자의적 의견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
3. 범죄전력 조회가 필요한 취업제한대상자를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중랑구 보건소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 책임 있는 윤리의식 확립과 내부 관리 강화가 필요함.
4. 자체감사 결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109건 지적됐으며, 대부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소속 직원에 대한 사례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통폐합 과정에서 임금을 시간외수당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항임. 관련하여 양측 입장 정리해 보고할 것.
5. 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통폐합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통폐합 이후 퇴사자 증가, 조직 불안정, 연 10억 임대료(서울의료원과 별도 건물 사용) 등 통폐합 목적 및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통폐합 효과 창출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함.

<어린이병원>

6. 기부금이 병원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기부금은 의료 취약계층들에게 우선순위로 쓰여지는 게 적정하다고 봄. 시설개선 사업비 집행이 계속 늘어나, 이로 인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바람.
7. 현재 어린이병원은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황임. 서울시 직영병원인 은평병원과 서북병원은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통해 사회복지사업과 기부·후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병원은 사회복지사가 여러 부서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서울시 직영병원으로서의 사회공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의문임. 특히, 사회공헌사업의 기획 및 추진, 기부금 운영의 우선순위 설정 등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 할 통합 관리체계가 부재해 보이므로, 전담부서 신설 또는 조직 재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함.
8.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결원이 다른 과에 비해 특히 심각함.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진료 대기 기간이 1년이 넘어, 환자의 적기 치료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함.

<은평병원>

-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의 수용 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임. 취약계층 지원은 공공의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만큼, 개선 방안 검토 바람.
- 은평병원 세입, 세출 부분 금액 차이가 많이 남. 현대화(리모델링) 사업 118억 제외하고도 차액이 89억 정도 나고 있어 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동부병원>

- 동부병원의 IPS 침입 탐지 경보가 32만건 이상으로 타 시립병원을 압도하며 전체 병원 경보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보안 취약성이 드러남. 또한 과거 EMR 시스템 구축 시 필수 테스트를 생략하고 잠재적인 결함과 오류를 가진 채 시스템을 위험하게 오픈한 사례를 보았을 때 환자의 의료 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서울시 사이버 안전센터와 공조하여 정보보호 솔루션에 대한 전면 재검증 및 결함 시스템을 보완할 것.
- 동부병원의 경우 자본잠식, 유동부채가 당좌자산의 2배를 육박, 20년이 지난 인공호흡기를 아직도 사용하는 등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임에도 직원 및 가족 감면 건수가 최근 3년 18,134건 금액은 4억 7천만원임. 이는 의료취약계층 감면 내역인 5,649건, 3억 8백만원을 상회하는 수치이며 임금이 체불되어 6.94%의 금리로 20억을 빌려야 하는 재정 악화 상황에서, 이렇듯 공공병원 예산 사용 우선 순위가 뒤바뀐, 공공병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경영을 지양하고, 취약계층이 비급여 항목 등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

◆ 건강 관련 기관 -4건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3배 이상으로, 총 65명의 인력을 운영하며 타 센터에 비해 막대한 인건비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하고 전문성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에 대한 리빌딩이 필요함.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2. 광역심리지원센터는 기존 기관과의 차별성 부족 및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이 지적되고 있으며, 작년에 권역별 4개 심리지원센터를 통합해 광역센터로 전환했음에도 블루터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기존 체계가 안내되어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조례에는 ‘심리지원센터, 광역센터, 자치구별 센터’가 혼재되어 실제 운영체계와 불일치하고 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정비와 개정 필요함.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3. 자살위기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경험을 통한 공감도 필요. 상담사 채용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채용 바람.

4. 자살 예방교육을 한번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함.

② 건의사항

◆ 시민건강국 - 22건

1.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운영이 주로 강남권(서남, 동남)에 치우쳐 있어 강북권의 열악한 의료 접근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긴급치료센터 운영을 통해 대형병원 쓸림 완화 효과가 있었으나 2026년 종료 예정으로 확인됨. 강북권역 주민도 긴급치료센터에 대한 기대감 있으니 검토해 주기 바람.
2. 시립병원 마스터플랜이 기존 병원의 기능·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주민 체감도가 낮음. 시립병원 신설이 어렵다면, 민간병원 지원 등 보완 대책 검토가 필요함.
3.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에 금천구, 은평구 등 간호사가 없는 자치구가 있음. 2026년 통합돌봄 시행되는 상황에서 의료가 강화되는데 필요한 인력배치 등 서비스 표준안 마련할 것.
4.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계획 있었으나, 동남권은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충분하여 추진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됨. 의료환경이 취약한 북부권역에 건립하는 방안 검토 바람.
5. 한의약치매관리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란 등으로 내년도 예산 미반영된 상태임. 그러나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완전 폐지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타당한 운영 방안 검토 바람.
6. 건강총괄관이 건강·식품 기업과 협업하여 제품 개발 및 광고에 참여함. 또한, 특정 브랜드에서 본인의 레시피를 활용한 잡곡 제품을 출시하면서 본인 사진을 사용해 홍보하고, 서울시의 잡곡밥 사업에도 구상·자문 역할을 수행함. 공적 지위를 부여받은 건강총괄관이 개인 상업활동에 관여하고, 그 내용이 서울시 공적 사업과 유사하거나 연계될 경우, 사적 이익과 직무 수행 간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 필요함.
7. 지역 돌봄통합 관련하여 시민건강국 내 건강장수센터, 방문건강관리, 시립병원 퇴원환자 관리 등 여러 사업들을 통합 정리해서 추진 방향 등 보고 바람.
8. 경미한 진료 시 과거에는 18세 이상이라도 어린이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했으나, 해당 조치가 2024년 이후 중단되어 현재는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놈병변 중증장애인의 민원이 있음. 어린이 진료를 위한 특수목적 병원이지만 공공병원인 만큼, 18세 이상이라도 의료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료 제공은 해주기 바람.
9. 치매관련 프로그램에 노래 치료활용 검토 바람.

10. 청소년 열독감이 유행, 소관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병원 및 약국에 안내 바람.
1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등록 요건이 있으나 전문의가 퇴사한 이후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 진료하는 병원에 대해 개선 방안 마련 필요함.
12. 서울마약관리센터 개소 이후 내원환자 현황에 서울·경기가 많고 20~30대가 늘어나고 있음.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시간 연장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바람.
13. 산후조리원 관련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길 바람.
14. 자치구에서 다양한 방문이나 유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통합돌봄을 위해 자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장수센터로 늘리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
15.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메이드 호스트카페 등이 미성년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 및 대책이 필요함.
16. 서울의료원 등 대형 공공병원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ABC 갈랩과 같은 원가관리시스템을 나머지 병원에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할 것.
17. 현재 의사 출신 건강총괄관의 역할이 자문 및 시민 건강 예방에 국한되어 병원의 조직 및 경영 구조 개편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개입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차기 총괄관과 같은 역할을 선임할 때에는 공공의료 체계의 비효율을 객관화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조직 개편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볼 것.
18. 장애 동행 치과 인터넷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으며, 장애 동행 치과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없는 곳이 많은데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도 보완이 필요함
19. 의료기관별 예산지원 내역과 진료실적을 비교하여 지원 금액에 비하여 진료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는지 점검하고, 3차 의료기관(3개소) 중 강서, 양천, 구로 지역을 커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데 개선해 주기 바람.
20.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 중 산모 어깨 탈골로 소송 발생한 민원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26년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사항도 보고 바람.

21. 손목닥터9988에는 민감한 건강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누출 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됨. 개인정보 보호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주기적 보안점검, 해킹 대응, 외부 보안 및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관기간과 폐기 절차, 장기간 미사용자 데이터 관리도 필요함.
22. 손목닥터 서버 관련 서울시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및 데이터 분산 가능성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 보건환경연구원 – 2건

1. ADHD 치료제가 환청, 환각 등 아이들 부작용이 심함. 연구원에서 검사와 함께 홍보하고, 시민건강국과도 대책을 논의하기 바람.
2. 어린이집, 키즈카페, 학원가 등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에 비고란을 만들어 재검사 시기와 적합 여부 등 재검사 결과를 기재하고, 지하철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기준 초과된 경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함께 쟁기길 바람.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9건

<서울의료원>

1. 장애인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 발생 시 문자 발송과 전화 안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장애인이 후속 진료 절차를 이해하거나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주기 바람.

<어린이병원>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으로 확대했다고 하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와 분리될 때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또한, 격리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나 단기 입원 환아까지 100% 통합서비스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전 병동 확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3. 장기 입원 환자 중 성인이 된 경우 어린이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어린이병원의 만성적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요양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등 방안 검토 필요함.
4. 외래진료 환자 중 서울시민 외의 비율이 38%를 차지함. 서울시 아이들을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서울시민 외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함.
5.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 발견 시 충분한 상담과 안내가 필요함에도, 최근 예약 간격을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상담 시간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음. 검토 바람.
6. 외래에서 소아정신과 진료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발달 문제 증가를 의미하는 만큼, 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이들의 발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마련할 것.
7. 경미한 진료 시 과거에는 18세 이상이라도 어린이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했으나, 해당 조치가 2024년 이후 중단되어 현재는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민원이 있음. 어린이 진료를 위한 특수목적 병원이지만 공공병원인 만큼, 18세 이상이라도 의료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료 제공은 해주기 바람.

<보라매병원>

8. 올해 2월 18일 발생한 전산장애 후속조치 중 미진행된 ‘백업 디스크 솔루션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바람.
9. 공공의료 사업 중 ‘지역사회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은 주민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동작구 또는 인근 관악구 보건소, 관악구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 홍보를 확대할 필요 있음

◆ 건강 관련 기관 – 7건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1.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 관련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일정 수준의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체계 운영 상황 상세 보고 바람.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2. 공공후견인 보수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 중이나, 교육 시기 및 인원을 보다 적절히 조정해 시행할 필요 있음.
3.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역치매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바람
 -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함
4. 공공후견인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5. ‘심리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참여기관 신청 및 등록 절차가 기본 정보 제출만으로 이루어져 검증 신뢰성이 부족해 보임. 모니터링 참여 절차와 검증 방식에 대한 보완과 개선 필요함.
6. ‘민간심리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자료가 평균값인지, 특정 기관의 샘플인지 구분 없이 제출되어 평가 결과를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자료 제출 시 수치의 기준과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하여 제출할 것.
7. 공공민간심리서비스 모니터링 관련, 미래활짝센터와 같은 심리치료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알고 발굴해야 함. 특히 시립병원 등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발굴이 필요함.

③ 기타 자료요구

◆ 시민건강국 - 9건

1. '손목닥터 9988' 연도별, 연령별, 성별 참여자 수
2. '브레인핏45' 연령별, 성별 가입자 수
3. 3개 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2025년 5월15일 센터장 포함 전직원 출장 및 휴가내역 출장비 지급내역 지도점검내역 및 결과 보고서
4. 메이드 카페(성상품화) 현황(지역별 점검대상, 점검실시횟수, 적발건수 위반내역, 행정처분 결과 등)
5. 2023년~2025년 현재 은평병원 일별 외래 환자 수
6. 2025년 마약관리센터 일별 외래환자와 현재 입원환자 수
7. 2025년 마약관리센터장 근무현황(월별 실제 출근일 및 진료일, 출장 및 외근일)
8.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자료
 - 지정병원 현황, '25년 누적 이용건수, 병원별 예산현황
9. 3개 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 2023~2025 현재까지 후원금 수익, 지출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 1건

1. 보건환경연구원 조직 및 인력 현황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3건

<서울의료원>

1. 장애유형 별 건강검진 인원, 검진 이후 결과 통보 방법

<어린이병원>

2. 영유아 건강검진 실적(자치구별, 회차별)

<서북병원>

3. 2025년 기본경비 내역서

◆ 건강 관련 기관 -4건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1. 근무중인 41명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간호사 14명 경력, 근무이력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2. 기억키움학교(각 구 쉼터) 연 이용인원 감소내역(사유)
3.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해당 단체와 업무연계 현황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4. 트라우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현황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총괄

기관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제출 등)
합계	269	198	26	45
재난안전실 (도로사업소 포함)	85	69	6	10
소방재난본부	70	52	5	1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포함)	42	26	5	1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8	6	1	1
건설기술정책관 (품질시험소 포함)	27	15	5	7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37	30	4	3

[재난안전실] — 69건

1.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이후 자치구별 위험구간에 보행자 보호용 차량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에서 L형 측구 열화를 간과한 채 시공하거나 베이스 플레이트 받침부 충진불량 등 시공불량이 나타났는바 하자보수기간에 적의 조치하고 시공지침을 마련할 것.
2.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오전 6시 이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오전 6시 이후 발송하고 있는바 긴급한 재난에 대해서는 새벽 6시 이전에라도 발송도록 할 것.
3. 재난문자 발송이 30분 이상 지연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바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정비할 것.
4. 보도상 영업시설물 신규 디자인 교체 시 영세 운영자의 대부분 부담 증가로 교체 신청률이 매우 낮은 상황인바,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자들의 의견수렴을 보다 면밀히 시행하여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

5. 한강교량 교각·우물통 등 수중구조물 안전점검을 위해 자체 개발한 수중점검선·수중우물통 자동청소장비·수중드론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점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한강교량 교각 하부·기초부 세굴 등 취약부에 대해 점검 주기를 단축·세분화하고, 정기·정밀점검 및 진단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와 기준을 정비할 것.

7. 시설관리공단 관리 교량의 경우에도 보수예산 부재로 인해 보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강교량 전반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을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편성할 것.

8. 한강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교각 하부에 야광표시, 신호등, 진행 방향 안내 등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쉬운 안전정보를 설치하여 탑승객이 교량 하부 통과 시 심리적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9. 자치구 보도 열선 설치와 관련하여 공법선정위원회, 신기술·혁신 제품 지정, 조달청 총액계약, 수의계약 등 발주·계약 방식이 자치구·사업별로 과도하게 상이한 실정을 점검하고, 수의계약 적정성 및 법령·내부규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할 것.

10. 지하차도 배수시설 설계기준이 50년 빙도에서 100년 빙도로 강화된 만큼, 집수정·배수관로·펌프 시설의 관경 및 용량을 상향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배수펌프·방재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교체·보강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11. 극한호우 시 보행·교통 안전을 위해 경계석 채색스티커 등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표시를 사전에 설치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할 것.

12. 도로보행업무가 교통실과 재난안전실에 분산되어 있어 민원 처리 지역, 예산 중복·누락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재난안전실·교통실 간 중복 제안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1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릉IC 램프 공사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공람자료에서 이문동 구간이 누락되었다는 지적과 주민설명·공람 절차가 미흡했다는 문제가 제기된바, 해당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람자료 누락 여부를 재점검할 것.

14. 월릉IC 램프 공사구간이 실제로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함에도 동대문구에 사업 내용이 충분히 통보되지 않아 황토길·화장실 조성 등이 공사구간과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한바, 유사 사업 추진 시 자치구와의 사전 행정협의·정보공유 절차를 의무화할 것.

15.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바,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것.

16. 40년 이상 운영 되어온 지하도상가의 시설 노후화, 상권 경쟁력 저하, 불법전대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서울연구원 용역 결과를 참고해 보완·재검토하고 지하도상가 운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17. 재난관리자원 비축과 관련하여, 마스크 등 소모성 물자의 불출·지원으로 재고량이 변동되는 특성을 감안하되, 재난 발생 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수 물자의 적정 비축 수준을 상시 유지할 것.

18. 폭염·한파 등 재난위기 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안심수당 제도의 실적이 미진한 점을 감안하여, 재난안전실이 소관부서(건설정책관)와 협의하여 폭염·한파 대책 추진 시 안심수당 제도를 함께 적극 홍보·안내할 것.

19.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운찰제 성격의 공개경쟁 입찰로 인해 다수 업체 참여·페이퍼컴퍼니 양산·동일 현장대리인의 반복 투입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재검토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방안을 마련할 것.

20. 교량·터널·지하차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용역이 2021년 이후 특정 컨소시엄에 의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반복 수행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1. 서울시설공단이 분야별 전문가 확보로 과거 외부 용역으로 시행하던 교량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는 등 모니터링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의무사항 미준수 개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단순 지도·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3.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개정으로 이용자의 위험 행동을 예방·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안내문·표지판 제작, 안전교육 등 서울시 차원의 재정·행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4. 공중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률이 2023년 26%, 2024년 46% 수준에 그쳐 사고이월·보류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목표 대비 154% 초과달성 보도자료가 발표된 경위와 산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 자체 추진 구간 포함 여부 및 착공·준공 기준 등 실적 산정 체계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정비할 것.

25. 서울시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작한 우선정비구역도를 비공개 지하시설물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지반특성이 반영된 지하안전지도를 적극 공개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

26.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이후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과정에서 디자인 공모 및 심의 절차가 길어져 설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그 사이 유사 사고가 재발한 점을 감안하여, 긴급 안전시설 설치 시에는 심미성보다 신속성과 안전성을 우선할 수 있도록 공모·심의·계약 절차를 간소화·단계화하는 등 신속 집행체계를 마련할 것.

27. 급경사, 급커브, 비정형 교차로 등 근본적으로 도로 구조 자체에 위험요인이 큰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방호울타리 설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도로 구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로공학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8. 강동구·영등포구 등 일부 자치구가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신설 계획에서 제외된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치구 제출자료와 위험도, 사고 이력 등을 재검토하여 실제 위험이 높은 구간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기준과 수요조사 절차를 보완할 것.
29.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직후 자치구에 교부된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특별조정교부금(자치구당 약 40억 원) 집행이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전면 보류되고, 이후 서울시 디자인 공모 추진으로 설치가 약 1년 지연된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실제 인명사고가 재차 발생한 만큼, 집행 보류 결정의 경위·근거·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
30. 복합재난 발생시 주관부서인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초기인명사고 등 재난상황보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할 것.
31.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와 주행구간의 제강슬래그 포장 공사비가 약 7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2024년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흡수율·배수성 등 품질·안전성 우려에 대한 후속 검증 계획이나 품질안전성 확보방안 수립이 미흡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2.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공법 도로포장 시범사업에 대해 성능검사나 기술적 위험요소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바, 장기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보수 중심이 아닌 재발 방지 중심의 도로정책으로 전환할 것.

33. 솔샘고가 하부공간(정릉동)의 개인 불법 창고 사용에 대해 변상금 부과에만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바, 장기간 도로 하부공간을 사적 창고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여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를 적극 추진할 것.

34. 어린이놀이시설은 재난안전실이 총괄책임을 맡고있으나 실제 현장점검은 대부분 자치구·관리주체에 맡겨져 있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서류·자체점검 외에 일정 주기마다 서울시가 전수조사도록 할 것.

35.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중대사고 위험이 큰 만큼, 어린이 놀이시설과 같이 정기적인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6. 서울시 중요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이 반복·지속되고 있음에도, 보수 이후 등급 상향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C등급 유지에 그치고 있는바, C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정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최소 1년 수준으로 단축하여 상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는 보수·보강계획을 수립·이행할 것.

37. 현재 지반침하 현황은 면적 $1m^2$ ·깊이 1m 이상 국토부 보고대상만을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바, 소규모 함몰·동공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도록 하고 자치구에 발생한 동공의 복구공사에 대해 서울시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38. 지반침하 원인의 약 60%가 상·하수관로에서 비롯되고, 이 중 상수관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바, 노후 상수관로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39. 상수관 인근에 전력관 등 지하매설물이 법정 이격거리(예: 0.6m)만 겨우 확보된 채 과도하게 근접 매설된 사례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지하매설물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로 간접에 따른 2차 사고를 예방할 것.

40. 서울시는 2024년 7월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기존 5년 주기의 공동조사를 연 1회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41. GPR 탐사 결과를 비롯하여 위험도 등급 및 후속조치 현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한 '위험도 지도' 형태로 개선할 것.

42. 지반침하 관측망을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인바, 설치 대상 선정 시 대형 굴착공사장·지하철 공사장 등 고위험 구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43.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공사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주변 공사·교통 영향에 대한 종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착공이 지속적으로 지연된바 사전 조정 절차를 강화하여 반복적인 공정 변경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

44.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중단된 사유 중, 서울-광명 고속도로 준공연기를 간과한 측면이 가장 크다 할 것인바, 본 사업과 연관된 주변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면밀히 체크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을 시정하여 추후 시민불편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5. 서부간선도로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왕복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실제 도로 폭·교량 폭·구간별 편차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바, 현장 실측 및 교량 구조 검토를 통해 철저히 검토할 것.

46. LED 도로표지병은 빛길과 밤길에 시인성을 높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효과를 분석해 차선 시인성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설치구간 중 시공불량 구간을 조사하여 시정할 것.

47.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결국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과정에서 매몰비용이 대량 발생한바, 원인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8. 서소문고가 개축 사업은 구조물 철거·신축 공사를 추진하는 과

정에서, 상당한 교통 혼잡과 인근 상가·주민 불편이 예상되는바, 정확한 교통량 예측,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 단계별 우회·대체교통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할 것.

49. 서울시가 지중화사업 154% 달성 등으로 홍보한 보도자료가 이월·보류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과장된 성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성과 홍보 시 산출근거·기준·적용범위를 명확히 표기하여 오해 소지를 방지할 것.

50.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사업비 매칭 구조 등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가 보도자료와 상충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자료 작성·검증 절차를 정비하여 감사자료 및 대외 홍보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

51.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제시된 보행교 건립계획의 내용·진행상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바, 보행교 설치 여부 등 관련 계획 등이 수립되는대로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

52. 한강 23개 교량 중 다수가 노후한 방전등을 사용하여 경관효과가 낮고 유지비 부담이 큰 상황인바, LED 조명 전환을 단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야간경관 조성에 적극 나설 것.

53. 대한민국 서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한강 야간경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것.

54. 현장에서 사용 중인 일부 보차도 경계석이 표면 미끄럼 위험을 유발하고 있어 해당 경계석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표면 거칠기기준을 강화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명확히 통보하고 적용여부를 점검할 것.

55. 터널 안전경관등이 어두운 공간·연기 발생 상황 등 실재 재난 환경에서의 시인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바, 소방 실화재훈련장 등 실제 연기·열 환경에서의 실증 테스트를 실시할 것.

56. 새롭게 적용하는 터널 안전경관등에 대해서도 소방 실화재훈련장 등 실제 연기·열 환경에서의 실증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색상·밝기·설치기준을 보완할 것.

57.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과 관련해 홍수 시 데크와 안전울타리 등의 시설들에 부유물이 적체되어 발생될 수 있는 유지관리 문제와 그로 인한 물길 변화에 따른 안전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58. 잠수교 전면 보행화와 관련한 접근성 개선공사가 특정지역에만 효과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여 추진할 것.

59. 잠수교 전면 보행화의 접근성 개선공사와 관련해 연결로 변경 등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추진할 것.

60.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미관 개선으로 인해 상판 하부 등 교량의 안전점검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도로에 설치된 방음벽 대신 담쟁이덩굴을 심어 탄소중립을 실천해주길 바람.
([붙임]연번46 참조)

62.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도로 재포장 시 맨홀 높이 불일치로 차량 혼들림과 사고 위험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빗길·눈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맨홀과 도로면의 수평 시공 기준 강화 등 신속한 점검·보완을 요청함.

([붙임]연번60 참조)

63.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수석대교 노선 협의에서 서울시가 사실상 참여를 소홀히 하여 강일동 주민 교통불편 가능성이 커지고 경기도 중심의 조정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감사 및 인접 지자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함. ([붙임]연번65 참조)

64.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방화터널 공사로 6개월간 통행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대체도로·소음·먼지 등 공사 영

향에 대한 안내가 거의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안내 및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붙임]연번84 참조)

65.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깨지기 쉬운 콘크리트 맨홀뚜껑이 존재함에도 서울시가 교체대책 없이 경고표시 위주로 대응해 보행 안전 위험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시급한 교체대책 마련을 요청함.

([붙임]연번186 참조)

66.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도로 굴착 후 보도 복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시 포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지속됨에도 서울시는 공사·복구 관리체계를 분산 운영하고 있어 현장 관리공백과 보행 안전위험이 반복되고 있는바, 관행적 복구관리 실태에 대한 복구공정 통합관리 및 품질확보 대책 마련을 요청함.

([붙임]연번202 참조)

67.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88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반포대교 나들목 직전에 신반포역으로 나가는 시설물이 완공되었는데 몇년째 개통이 안되고 있음. 반포대교 나들목의 정체 해소를 위해 본 시설물의 조속한 개통을 요청함.

([붙임]연번424 참조)

68.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고투몰 점포의 다수가 전대·숨은 매매로 운영되고 관리법인과 중개업자, 관리 공단까지

관행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정황이 지속되는바, 전대 악용으로 각종 불법이 반복되고도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황에 대해 철저한 사실확인과 조치를 바람.

([붙임]연번425 참조)

69.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미국대사관 앞 횡단보도에 1년 이상 불법 천막이 설치되어 통행과 시야를 방해함에도 종로구청이 부적절한 판례를 이유로 철거를 미루고 방치하고 있는 바, 해당 불법 적치물에 대한 즉시 철거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관리·처리 기준 마련을 요청함.

([붙임]연번450 참조)

[소방재난본부] — 52 건

1. 건축물 신축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단계에서 소방 동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소방차 진입·회전·전개가 곤란한 구조에 대해서는 동의를 제한할 것.
2. 2025년 구조장비 구매 입찰에서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인증을 요구하면서 1순위 업체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
3.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전입률(현행 70%)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기획조정실·예산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입 비율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
4. 이태원 참사 등 대형재난 현장대응 이후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공상 불승인 시 심사청구·행정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5. 광나루안전체험관은 시민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는 유아 및 초등학생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인 바 적절한 세대별 안전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복지관 및 노인시설과의 연계를 적극 고려하는 한 편,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할 것.

6. 체험관 운영 인력에 대한 충분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운영 인력의 사기 및 프로그램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운영 인력의 복지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인 예산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할 것.
7. 재개발·철거 예정 건물 등 실제 구조물을 적극 활용한 실전형 훈련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소방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8. 단순·반복 민원은 콜봇·챗봇 등 AI 안내로 우선 처리하고, 상담 정확도·응답시간 등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여 민원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것.
9. 굴착 공사장 내에서의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관리와 30년 이상 된 노후 가스배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더불어 신기술 탐지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
10.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이 국가·외부기관 장애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체 정보 제공 및 출동대 안내 절차를 포함한 비상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주요 건축물·도면·도로 정보는 사전 캐싱·로컬 백업을 통해 장애 상황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1. 성산대교 외 자살예방 CCTV 미설치 3개 교량에 대해서는 입찰·계약 분쟁 원인을 신속히 재점검하여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고, 향후 CCTV·구조장비 등 유사 사업에서 규격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 제도를 개선할 것.
12. 종합방재센터·119안전센터·특수구조단·시민안전체험관 등 전 부서가 급식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내년도 단가 인상분을 검토하고, 급식 지원 사각지대를 파악·해소하여 소방관의 기본 근무여건과 복지를 균형 있게 개선할 것.
13. 20~30년 이상 노후된 119안전센터에 대해 노후도와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3~5개년 청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 정책사업비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할 것.
14. 현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용역 형태로 운영중인 교육(교수) 인력의 경우, 급여가 일정하지 못하고 불안정해 지속적인 교육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인건비의 현실화와 근로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5.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소방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여 보완 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16. 전통시장 AI 화재순찰로봇을 시범운용 과정에서 열화상 및 실화상 카메라를 통해 고온 지점과 화염·연기를 식별하고 있으나, 열감지 센서 기반 AI 감지 알고리즘이 단순 열원에도 반복적으로 고온 경보를 발생시키는 사례로 인해 상인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 바, 정확도 개선 또는 별도의 매뉴얼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7.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에 대해 취약계층 대상 보급 속도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매칭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순위 조정·홍보 전략을 강화하는 등 대폭 확대 보급을 추진할 것.
18. 소방의 적법활동에 따른 피해 손실 보상이나 부적법 활동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지급된 건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할 것.
19.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비상설·수시 개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출석률·활동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쇄신과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것.
20. 소방대원 폭행·방해행위에 대해 주취 등을 사유로 처벌을 감경하거나 선처하는 관행을 배제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수준의 강력한 형사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

21. 서초 내곡동, 강동 암사동과 고덕동 등 비닐하우스 단지를 살펴보니 ‘보이는 소화기’가 골고루 배치되지 않아 미배치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배치할 것.
22. 소방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중 바디캠 지급이 안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수조사를 통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3. 건축공사에서 소방감리 보고서만 보고 완공승인을 해주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소방청과 협조하여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것.
24. 종로 소방합동청사를 비롯한 유사 공공건축·합동청사 사업 추진 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하여 산정 오류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반복되는 비효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소관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25. 비상발전기 교체 시 중앙부서 차원의 ‘표준 용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과대·과소 설계를 방지하고, 실제 필요부하·청사규모·수보체 계 등을 반영한 용량 재산정 절차를 마련할 것.

26. 자율소방대의 기본 장비인 조끼·유니폼 지급을 조속히 보급하여 조직 소속감과 화재 초기대응 역량 제고에 실효성을 확보할 것.
27. 현재 시민안전체험관 일일 최대 수용인원이 440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 방안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와 시설 활용도를 높여 일일 수용 최대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
28. 소방관의 업무 특성상 시민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관련 징계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소방관의 근로 의욕과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공직 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9. 여의도·반포·뚝섬·광나루 수난구조대의 노후·협소 문제 해소와 수난 구조장비 성능 저하에 대비한 장비 교체·보강 등을 포함하여, 중기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30. 한강버스 운영 및 마곡권역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5의 수난 구조대 신설을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
31. 광진구 등 119안전센터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신규 설치·부지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기존 노후 청사는 전면 개보수·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

32.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감소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입 비율 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개발사업 연계 세입 확충 등 중장기 재정대책을 마련할 것.
33.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급량비·출동 간식비 등 관련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34. 매년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등 무리한 근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과 심리치료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5. 폭행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근무 배치 제한, 심리상담 연계, 법률 지원 안내, 동료·상급자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36. 소방대원·가족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오디오북 등)등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37. 체험관은 어린이, 학생,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이용이 많은 시설인 만큼, 지역 간 접근성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부권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

38. 체험관 인근에 어린이대공원과 상상나라 등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연계 성과 교육 시너지를 높이고 더욱 많은 시민들이 체험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
39. 시민체험관은 가족 단위, 특히 어린 자녀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가족화장실 등 가족 친화형 편의시설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40. 공동주택이나 피난약자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자체 자율점검시스템에 맡기고 있으나,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에 한계가 있다 사료되는 바, 제도적·행정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
41. 지반침하 발생 시 초기 구조 이후의 2차 위험요인(추가 붕괴·지반 약화 등)을 재난안전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재난 매뉴얼·역할 분담 구조를 전면 재정비할 것.
42. 재난 발생 시 ‘모든 판단·책임이 소방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고체계·역할분담을 명확히 재설계하고 관계부서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
43. 현재 체험관 운영 현황을 보면 타 시·도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이용 통계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으로, 체

계적인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예약 후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방문하지 않는 인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44.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는바 제도개선(조례 제정 등), 매뉴얼 제작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
45. 리튬배터리의 과충전·과열 방지를 위해 충전시간 및 충전율 제한 등 안전 장치에 대하여 소방청 등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46. 소방공무원 방화복 전용 세탁기는 KFI 인증제품이 사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는데 조속히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할 것.
47. 방화복 세탁은 전문성과 위생관리 측면에서 위탁세탁이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되는 반면에 일부에서 제기되는 세탁 후 손상 우려 및 수거의 불편 등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자체세탁 체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위탁 + 자체세탁' 운영전략을 검토할 것.
48. 소방대원의 보호장비는 대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9.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119수난구조대의 인원을 증원 배치할 필요가 있는바 기획조정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정 인원이 신속히 확보·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0. 2025년 5월 소방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소방은 2024년 이전에 마포와 강남에 시범적용 이후 적극적인 변화가 없었는데, 효과가 검증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1. 119 AI 종합상황관리 시스템은 재난 신고 접수의 정확도와 골든타임 확보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시범운영 단계부터 오류율·정확도·처리시간·골든타임 단축 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관리하는 실증 검증체계를 즉시 구축할 것.
52. 119 AI 종합상황관리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오류 사례·유형을 정량적으로 기록·보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상시 검증과 자문을 제도화하여 본격 운영 이전에 대외적 검증을 완료할 것.

[물순환안전국] — 26건

1. 서울시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간건축물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지원사업' 10개 중, 현 단계에서 4개 사업이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이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바,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
2. 현재 중랑·난지·탄천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가 PIMAC에서 진행 중인데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직접 건설하는 방식은 경제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시민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과 물재생시설공단 운영 측면 등 다각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3. 하수도 정책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하수도 보급률' 항목의 경우 이미 오래전에 보급률 100%를 달성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해서 동일하게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성과지표 항목을 개발할 것.
4. 자치구에서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하천부지 내 파크골프장의 경우 잦은 침수로 복구비가 반복적으로 투입되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바 서울시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대책을 강구할 것.

5. 노후 하수관로가 쥐 등의 설치류 서식지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류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바,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생 안전 측면을 별도로 관리하고, 보건당국과 정기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방제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할 것.
6. 최근 청계천에 석면 슬레이트 조각들이 4km에 걸쳐 발견되었는데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사하여 제거할 것.
7. 하천 점용료와 변상금 체납이 과다하다 판단되므로, 원인을 파악하여 강력히 징수 조치할 것.
8. 물재생센터 내 시민 이용시설의 경우 선착순 방식과 추첨제 방식이 혼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특정인이 과다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결과보고서가 실질적 평가가 아닌 형식적 문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고 사료되는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 체계와 투명한 지표를 공개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정책성과의 실질화를 검증할 것.

10. 미군부대 유류오염에 따른 UN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관리기준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바, 녹사평역 주변 UN사 부지까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차수벽의 설치 및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11. 현재 물산업 R&D 공모대상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물순환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R&D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
12. 빗물펌프장 펌프 모터의 경우 교체주기를 하천관리과 방침상 최대 30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달청이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의 2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내용연수라 여겨지는바, 필수 방재시설이라는 점에서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것.
13. 침수 예상지역 도로에 설치된 수위계의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장비 파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바 이를 재점검하고 풍수해 예방을 위한 도로수위계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14. 우이천 등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망권 불편 및 운동공간 상실 등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동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15.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배출시설 TMS 미설치 구간은 사실상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로, 최소한의 모니터링 보완책이 필요한 만큼, 법적 기준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시설의 안정적 운전 능력과 실질 배출 저감 성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할 것.
16. 하수처리 비용 중 오수를 제외한 빗물에 대한 처리 비용은 법적으로 일반회계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부담한 적이 없는바, 서울시가 법적책임을 다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것.
17.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의 방재성능목표를 현재 설계빈도 30년 이상에서 50년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는바, 조속히 성능개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8. 물재생센터의 악취가 법적기준 이내이거나 비규제물질인 경우에도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19. 대형 굴착공사장 지하수위 실시간 관리와 관련하여 단순한 센서 설치가 아니라 지반침하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20. 강서구 염창동 하수맨홀 보수공사 중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돌발 강우시나 강수확률이 50%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지켜지지 못하였는 바, 서울시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1. 강서구 염창동 하수맨홀 보수공사 사고와 관련하여 발주·감독의 부실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시 예산이 투입되는 자치구 사업의 경우 발주단계에서 계약구조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
22.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무상공급에 따른 비용은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정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바 전입금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할 것.
23. 시민제보 사항 중 영등포 버드나루로 지반침하 긴급복구공사가 현장에서 임시복구 현장을 지나던 차량이 같은 위치에서 다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각 자치구별 지반침하 긴급복구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임시복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할 것.
24.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하

수관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기반 부재로 국비 등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속가능한 국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서울시 자체 재원이나 기타 예산 조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25. 물재생센터 유입펌프 효율 측정 결과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 다수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설비 교체 및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것.
26.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 권역 사업의 예산이 대규모 연쇄 이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대규모 이월 발생 사유를 검토하고 집행 중심으로 로드맵을 철저히 정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6건

1. 물재생센터 내 시민 이용시설의 경우 선착순 방식과 추첨제 방식이 혼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일부 특정인이 과다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배출시설 TMS 미설치 구간은 사실상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로, 최소한의 모니터링 보완책이 필요하고, 법적 기준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시설의 안정적 운전 능력과 실질 배출 저감 성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할 것.
3. 물재생센터의 약취가 법적기준 이내이거나 비규제물질인 경우에도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4. 최근 공무원의 징계제도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바 서울물재생시설 공단 역시 공공부분의 종사자로서 동일한 수준의 윤리 청렴 기준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 등을 포함하여 인사 규정을 조속히 상위 관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할 것.

5. 물재생센터 유입펌프 효율 측정 결과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 다수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설비 교체 및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것.
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와 임직원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 결과 직장 내 인권보호, 정보 접근권 및 참여권 등에서 개선과제가 도출된바 이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건설기술정책관] — 15 건

1.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 '23년도 국토부의 동일한 선행 연구용역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국토부 지침만 고려한 것은 연구용역의 중복성 문제와 실효성 저하 문제를 낳을 수 있는바, 시정조치 할 것.
2.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교량·터널·하수관로 등 시설별 내구연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과연수 30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유지관리 우선순위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바, 시설 특성과 구조적 안전성 등을 반영한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3.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의 경우 '24년도에는 지원 실적 및 예산 집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축물관리법」 상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의무 보강대상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미진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
4. 연간 650억 원을 투입하는 고용개선지원비 제도가 현장 인지도 및 사회보험 가입률 저조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바, 설계단계 고용개선비 자동 반영과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등 제도 설계·운영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것.

5. 한파·폭염 시 안심수당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극한기후 안심수당예산 11억원을 편성했음에도 수혜자는 2명에 그치고 있는데, 소득·근속일수·대상자 범위 등 비현실적인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
6.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동일한 미비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벌칙 규정 등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
7. 건설업 부적합사업자가 점검 시기에만 형식요건을 갖추고 이후 다시 위장·회귀하는 등 형식적 단속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전수조사 및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할 것.
8. 건설업 부적합사업자로 적발될 경우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 제재수단이 아니라 일시적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바, 타 자치단체의 입찰 적격심사 사전 전수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입찰단계부터 문제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 건설기술정책관이 운영 중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경우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

10.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바, 적정한 소요 예산편성과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시정할 것.
11.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이 공정성·투명성·성과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의 다각화 및 활성화에 힘쓸 것.
12. 품질시험소 시험장비 242대 중 약 32.2%(78대)가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시험성적서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바, 장비 교체 5개년 계획을 현실화하고 노후 장비 우선 교체 및 예산을 확충하여 시험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할 것.
1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에게 심의·수당이 편중되고 출석률 저조 위원이 연임되는 등 공정성·효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상 해촉 근거를 활용하여 참석률이 낮은 위원은 정리가 필요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정비할 것.
14. 건설공사장 근로자 중 여성 산재가 최근 5년 동안 약 2배 상승하고 있어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화된 안전장비 보급과 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15. 공공발주 공사는 동영상 기록관리가 의무이나 민간 현장은 안전관리비 범위 내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의 법적 근거와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뉴얼 현실화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정착을 도모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30 건

1. 도기본에서 소관 70여 곳의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2.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가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 도중에 심각한 교통 체증 문제로 중단되어 원상복구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서울-광명 고속도로 개통이 연기된 주변 환경영향을 간과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지는바, 공사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할 것.
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착공과 관련하여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통학로 및 산책로가 고려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바,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4.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장 인접 아파트 및 주택가 주민들로부터 발파로 인한 진동 및 지반침하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한바 주택가 인근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 반영할 것.
5. 지난 2월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사후조치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추후 보고할 것.

6. 월드컵대교 공사에서 양화 인공폭포 설치공사를 전문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원도급사에서 다시 하도급사로 내려가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별도 분리발주 했어야 한다고 여겨졌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7. 월드컵대교 공사와 관련없는 대관람차 지반조사 용역, 테니스장 조성 등이 설계변경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시정할 것.

8.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평면화 공사 중지 이후 5차로 확대 등 추가 공사로 인해 시민불편이 지속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바, 설계를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

9.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교통우회를 위한 임시도로의 경우 사면성토가 계획되어 있는바 호우 시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가도 설계 및 시공에 주의를 기울일 것.

10.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공사로 인한 우회 임시도로의 다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하차도 공사현장으로의 추락 위험에 대해 대비할 것.

11.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 중 대모지하차도 공사를 실시하면서 가시설 설계를 누락하여 공사비 3,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바,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12. 도기본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13. 건설공사장 공사장 CCTV 합운영시스템의 영상보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여 준공 후 하자나 부실공사 발생 시 활용할 수 없는 바 보관기간의 적정성과 재검토하여 개선할 것.

14. 공사장 CCTV 운영이 사고 후 확인이 아닌 사고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CCTV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15. 실시간 위험감지 AI가 접목된 CCTV 설치를 확대할 것.

16. 건설공사장 근로자 중 여성 산재가 5년새 2배가 상승하고 있어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화된 안전장비 보급과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바,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17.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결과를 보면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의 부실벌점제도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 할 것.

18. 한양도성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 공사 중 해체방법 및 봉원 구간 등 당초보다 과다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바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로 다수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9. 9호선 4단계 3공구 공사의 경우 주민설명회 자료에 있는 정보와 실제 설계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는 등 주민설명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바,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변경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추후 보완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20. 도기본 발주 공사 전반에서 GPR탐사 단가의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GPR탐사 단가 산정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

21. 도기본 소방시설공사 중 무등록자에게 현장소장을 맡겨 공사를 위임하는 등 불법하도급이 발생하거나 불법하도급 지도·감독 소홀이 적발된바, 하도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할 것.

22. 도기본 공사장 스프링클러 차단, 용접 불티 관리 등 화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여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강화할 것.

23. 사천펌프장 유입관로 현장은 24년 8월경 발생한 연희동 땅꺼

짐 사고와 인접한 현장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5개월간 안전지수 미흡을 받은 바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4. 빗물펌프장 악취와 관련하여 기준치 충족 여부와 별개로 주민 체감도가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민원 수준을 반영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25. 안전지수제 인센티브 중 도기본 점검 1회 면제가 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는 현장 안전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해당 인센티브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26. 건설현장 안전지수제 등급이 양호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외부전문가 등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7. 유입관로에 악취방지시설과 자동유량계 설치 등을 검토할 것.

28. 건설공사장 내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들 간의 소통환경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작업 현장을 조성할 것.

29. 안전지수 평가 결과 작업환경분야, 고위험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개선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30. 안전지수평가에서 작업계획 소통, 협의, 계획 수립 등 작업 소통 분야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에 대한 시정 결과가 점검 일로만 기록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개선할 것.

건의사항

26건

[재난안전실] — 6 건

1. 도로열선 전력요금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과도한 요금 부담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한전·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목적 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단가 조정·할인 방안을 다시 적극 건의할 것.

2. 각 자치구에 설치된 도로열선의 전기료 등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이 각 자치구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공공이 사용하는 전기료에 대한 인하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3. 최근 정부의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방침과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중복 체크로 지하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지는바,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선제적으로 지반침하에 대응할 것.

4. 대형 경기장과 지하철역 등 다중운집 시설에서 경기·행사 종료 후 단시간 내 인파가 집중·이동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접목한 인파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5.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인파사고 예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파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독려하고, 필요시 구청과 협조하여 점검·지도 기능을 강화할 것.

6. 업역 규제 폐지 이후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물량 감소 및 시장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시는 도로포장 소규모 연간단가공사 발주 시 전문건설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발주방식에 대해 검토해 볼 것.

[소방재난본부] — 5건

1. 공동주택 등에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 제품을 실내에서 충전하던 중 폭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단지 내 공용 충전·보관 공간 설치 등을 검토할 것.
2. 드론·사족보행 로봇 도입이 단순 구매에 그치지 않도록 대원 안전 확보 및 신속 대응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도입 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
3. 현재의 시민안전체험관 체험 콘텐츠는 단순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학습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콘텐츠 다양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통해 체험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
4.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열 폭주 등으로 화재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현행법(환경친화적 자동차법·주차장법 등)상 소방이 직접 점검·개선할 권한이 없어 화재취약성이 우려되는바,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붙임]연번107 참조)

5.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강동소방서 의용소방대 모집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바, 관련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향후 모집 기간·공고 방식·정원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허점 없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체계로 정비할 것.
([붙임]연번134 참조)

[물순환안전국] — 5건

1.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수변활력 거점조성 사업 중 송파 성내천 사업의 경우 안전 가시 설 보완, 주변 상권 분석,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해 보이는 바, 보완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해주기 바람.
3. 개포로 53길 하수암거 설치 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기존 선로를 변경함에 따라 주변 공동주택아파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완을 실시해 주기 바람.
([붙임]연번171번 참조)
4. 서울시 내 파손 위험이 높은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대해 근본적 교체 대신 경고 표시만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 및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므로 조속히 교체해 주기 바람.
([붙임]연번186번 참조)
5. 중구 퇴계로 남산서울빌딩(SK) 옆 남산 오름길 초입에 강우시 계단으로 빗물이 흘러넘쳐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조치 바람. ([붙임]연번80번 참조)

[물재생시설공단] — 1건

1. 탄천물재생센터 마루공원 공공예식장 지정 이후 이용실적이 전무 하므로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 개선 및 이용 촉진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건설기술정책관] — 5 건

1. 기술적 공무원 대상 온라인 기술 정보 공유 채널인 서울기술이야기 등의 조회수가 월 400건 내외에 그쳐 활용도가 낮은바, 내부 교육과정과 연계한 적극 홍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기 바람.
2. 기술적 직장교육에 대한 예산 증액, 강좌 수 확대,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기술적 공무원의 자기계발과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부실공사 제로 정책 포럼에 대한 개최 실적이 부진한데, 건설상 시장·신기술 발표회 등과 연계하여 연 1~2회 정례 포럼을 운영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 및 신기술 활용 촉진, 건설업계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해체공사 허가·신고가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구 해체공사 점검 실적과 안전역량에 따라 교부금 등의 예산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유인하도록 하기 바람.
5. 해체공사 상시점검·하도급 점검·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과 단위 2~3개 팀 체제로 확대하는 중장기 조직·인력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4 건

1. 공사중 실정보고가 절차상 남용되고 있고, 실정보고 승인 기준 조차 불명확하다고 보여지는 바, 구조적으로 공정 단계 개선을 검토할 것.
2. 다국어통역시스템을 ONE-PMIS와 연동한 건설안전 예방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 이를 공공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
3.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공사로 중대로2길 4차로를 폐쇄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바 효율적인 우회 계획을 세워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
4. 사천펌프장 유입관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빗물펌프장과 유입관로의 설계빈도가 30년 강우강도임에 따라 향후 관로 단면 확장 및 재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해 검토할 것.

[재난안전실] — 10 건

1. 한강교량 건립년수, 최근 보수보강 내역, 향후 보수보강 계획
2. 한강교량 경관조명 개선 계획
3. 신기술 계측기 46개소 설치 현황
4. 2차 신기술 4개 현황
5. 신기술설명회(기술심사담당관) 때 발표된 추가 신기술 현황
6. 2025년도 도로사업소, 공단의 도로시설물(지하차도·터널 등) 청결·세척 실적
7. 재난안전실 소관 위원회 목록, 명단, 각 위원 임기, 재임·신임 여부, 회의개최 횟수, 지급 내역
8.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현황
9. 지중화사업 254km 추진구간 상세 현황
10. 잠수교 전면보행교 건립 계획

[소방재난본부] — 13건

1. 공동주택(강남구 소재) 건축허가 동의 관련 탄원이 제기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소방 동의 관련 자료
2. 소방의 구조장비 입찰·계약 민원 관련 자료
3. 공상 불승인 관련 심사청구·행정소송 지원체계 관련 법률 지원안에 대한 자료
4. 서울시 도시가스 배관 총 연장·노후배관(30년 이상) 현황, 쿨착공사장 점검 실적, 정기검사(연 1·2회) 및 IoT·드론 진단 운영 실적과 향후 보완 계획 자료
5. 20년 이상 안전센터에 대한 시설보수 계획안 자료
6. 서울시내 건설현장 연동형 경보설비 설치 현황 자료
7. 소방재난본부 산하 서울시위원회의 최근 2개년 위원회(자문회의 포함) 개최 횟수·지급내역·출석률·회의록 자료

8. 보이는 소화기 최근 2개월(9~10월) 전수점검 결과(파손·불량·쓰레기 적치 등 포함) 자료
9. 최근 3년간 배상책임보험 처리 현황(미결 원인 포함), 경미·상식 이하 사례 목록 및 심의 사유
10. 보험사와의 협의체계,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례(오른에 주수하여 오른 손상 등) 및 검토 의견 자료
11. 여의도 수난구조대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 반영 내역
12. 최근 3년간 시민안전체험관이 받은 기부물품 내역
13. 비인증 방화복 세탁기에 대한 교체 계획

[물순환안전국] — 11건

1. 성북천 수변감성도시 처음 시작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공정, 사업비 등 상세한 자료
2.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전체 목록 세부사항(사업예산, 기간, 위치, 기본·실시설계, 시공발주부서 등) 제출
3. 빗물펌프장 내구연한 경과 설비(내구연한경과 안전관리, 설비 교체계획 등) 관련 자료
4. 우수처리비용 전입계획과 관련 자료 제출
5. 강남구(양재, 대치동) 빗물펌프장 관련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월별)
6. 물재생센터 반류수 처리시설 설비 운영현황 및 문제점
7. 대심도 예산현액 중 내년 이월되는 보조금 내역 및 현황
8. 대심도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민원별 해소방안
9. 강서구 하수관로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 조치 현황
10. 30년 이상, 5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자치구별 상세자료
11. 하천점용료 등 체납 관련 자료(변상금 징수율, 결손처리현황, 점용사유 등) 제출

[물재생시설공단] — 1건

1. 물재생센터 반류수 처리시설 설비운영 현황

[건설기술정책관] — 7 건

1. 부적합 건설사업자 최근 단속 22건에 대한 업체 리스트 및 조사 원 인적사항(개인정보 비식별)
2.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연도 별 편성액·집행액·반납액 및 미보강 대상 건축물 현황과 자치구 별 추진 실적
3. 최근 3년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집행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4. 고용개선지원비·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 및 중앙정부 법령 개정건의 현황
5. 품질시험소 시험장비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장비 노후·오류로 인한 부적합, 재교정, 재시험, 성적서 정정 및 시험 지연·중단 사례에 관한 현황 자료
6.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8기 위원의 출석률, 심의수당 지급현황, 분야별 안전 처리 건수 등 위원회 운영 실적
7.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25년 실시한 대한건설 협회 대상 교육·설명회 자료 및 서울시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수조사 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3 건

1.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총사업비 및 현재 집행 내역 자료
2. 건설기술심의 및 부실벌점제도 설명자료
3. 공사장 안전사고 관리실태

[붙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

연번	제목	주요내용	세부내용
17	동부간선도로 월릉 IC 램프 A 위치 이전 촉구의 건	1호선 신이문역 인근 중랑천 뚝방길이 폐쇄되어 2차선 도로가 되고 지하도로 진입램프가 생길 예정임. 동부간선도로 월릉 IC 램프A 위치를 재검토 해주길 요청함.	중랑천 뚝방길은 하루 1,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통학로임.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민자사업으로 인해 한두달전 갑자기 산책로가 폐쇄되고 지상 2차선 도로 및 지하도로 진입램프가 생기다고 플래카드가 게첨 됨. 이는 인근 아파트의 약 1,500세대 주민들에세 소음,진동, 분진, 대기질 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것임. 주민들의 기본권과 100여명의 석계초 학생들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월릉 IC 램프A 위치를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림.
20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천 황토길 예산 낭비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천의 산책길과 황토길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로 인해 사라질예정이고 이후에 공사가 끝나면 일부 산책로와 황토길을 다시 조성한다고 함. 이러한 예산낭비를 정부에서는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함.	2024년 개장한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천의 황토길이 이용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로 인하여 중랑천 제방길의 산책로와 황토길이 없어진다고 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는 2023년에 실시협약과 승인이 있었는데 왜 굳이 몇년 이용하지도 못할 황토길을 조성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함. 알고도 예산낭비를 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21	동부간선도로 월릉IC램프-A 건설 위치이전 촉구제목 : 동부간선도로 월릉IC 램프-A 건설 위치 이전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동부간선도로 월릉IC 램프-A 건설 공사의 위치 이전(또는 반대) 및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함.	주요문제점 1. 통학로 안전 위협 2. 주민 여가·휴식 공간의 상실 3. 거주·생활환경 악화 4. 안전문제(지반 침하·건축물 위험) 요구사항 1. 월릉IC 램프-A 건설 전면 재검토 및 램프 위치 이전 요구. 2. 공사 진행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3.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공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3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관련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공청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바람.	월릉IC Ramp-A 공사로 인해 갑작스레 아이들의 통학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음. 시청과 구청, 건설사에 문의하니 절차대로 공청회를 마쳤다는 답변만 돌아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조금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공청회, 설명회 등을 공지하고 해당 공청회 내용 및 참석자들의 의견이 기록된 문건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31	동부간선 월릉IC 램프 A 이전	월릉IC 램프A 공사위치 이전 요청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홍보도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발표가 있는 공사임에도 주민들의 동의 또한 받지 않음.
32	월릉 ic ramp A 공사지역 지정에 대한 감사와 공사 중단을 부탁 드립니다.	본 사업이 타당한지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 한것은 아닌지 행정감사를 요청함.	1. 아이들의 유일한 통학로이고 2. 많은 예산을 들여 산책로를 정비하였음.

37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 투자 사업 (Ramp-A 구간)으로 인한 중랑천 뚝방 산책로 훼손 및 주민 안전 우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중 Ramp-A 구간 공사가 주민의견 수렴이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점검과 시정조치를 요청함.	<p>서울시에 다음의 행정대응을 요청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차원의 Ramp-A 구간 현장 실사 및 공사계획 재검토 중랑천 뚝방 산책로의 흥수방지 및 안전성 영향 평가 실시 주민 공청회 개최 및 실질적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대체 보행로 및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 구체화 공사차량 운행 제한 및 교통안전 대책 수립 주민과의 보상·대책 협의 공식 창구 개설 동대문구청과 서울시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38	동부간선도로 월릉IC 램프-A 건설 위치 이전촉구!!!	동부간선도로 월릉IC 램프-A 건설 공사 위치 이전(또는 반대) 및 재검토를 요청함.	<p>요구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릉IC 램프-A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위치이전 공사 진행 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환경영향 평가 및 안전성 검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공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46	방음벽 담쟁이덩굴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도로에 설치된 방음벽 대신 담쟁이덩굴을 심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요청.	방음벽은 탄소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조류 충돌의 문제도 있음. 담쟁이덩굴로 벽면녹화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절감, 열섬현상 완화로 시민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음.
60	도로 재포장 시 멘홀 표면과 수평 유지 제안	도로 재포장시 멘홀 표면과 수평 유지 제안의 건	<p>서울시내 및 인접도로의 일부 파손구간을 재포장시 차량의 안전한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시내도로내에 설치된 멘홀이 여러 곳에 지속적으로 있으나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로 표면과 멘홀 뚜껑 높이가 맞지 않아 자동차가 주행시 빈번하게 훈들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어 노후 차량 또는 오랫동안 주행시 자동차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크고 빗길 또는 눈길, 브랙아이스 발생시 전혀 대처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사실임.</p> <p>향후 도로 포장 또는 재포장시 멘홀 표면과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로 표면이 최대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음.</p>
65	비합리적인 수석대교 노선 확정의 되풀이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의견제시 절차 개선	수석대교 건설사업이 서울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직무유기로 해당할만큼 노선갈등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가 수석대교 노선 갈등 및 서울시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 양시의 요구안별로 서울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여부 감사 직접 이해당사자인 강동구에 이 소식을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지시여부 감사 올림픽대로 교통량 증가를 이미 파악했는데, 대략 어떤 도로에 교통량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는지 감사 강일동 주민들에게 노선에 대한 의견전달의 적절성 여부 감사 보완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를 통과하거나 인접하게될 기피시설 및 광역시설에 대해, 시의 입장을 총괄·관리하는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관련 자치구에 즉시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되게하는 절차 마련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공동으로 권익에 맞는 입장을 확정하면, 이에 반대하는 외부 지자체와의 갈등을 본청이 총괄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80	남산 오름길	중구 퇴계로 남산서울빌	그로부터 50m떨어진 남산 오름길(계단) 역시 비가 오면 옆 화단

	경사로 계단 빗물 넘쳐 하수 설치했으면	딩(SK) 옆 남산 오름길 초입에 강우시 계단으로 빗물이 흘러넘쳐 보행에 불편함.	모래흙이 인도로 흘러 넘침. 작은 하수로를 설치해 빗물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도록 요청함.
84	강서구내 방화터널 공사 대안없이 막기만 해서 교통해결방안이 있는것인지	광명과 연결 공사로 인해 강서구 방화터널이 막혀 6개월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주민들은 사전에 제대로된 안내도 받지 못함.	도로공사 시에는 대체도로나 소음등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음.
107	서울특별시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조례 일부 개정 후 점검 및 이행 결과 확인 필요	2025년6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후 점검 및 이행결과 확인을 요청.	본 조례는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 발생시 이격 거리 확보로 화재확산 방지근거를 만들었으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점검결과를 찾을 수 없으니 본조례가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감사를 요청함
119	싱크홀 제보서	2025년 7월 제보자는 영등포구 맨홀 공사 현장에서 포트홀 사고를 당함. 현장에는 아무런 안전표지나 조치가 되어있지 않았음.	영등포구와 건설업체 보험회사에서도 아직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음. 영등포구와 공사업체를 감사해주기를 요청함.
127	월계 IC관련 제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한 산책로 훼손 통학로 안전 위협 및 인근 아파트 구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감사 요청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정보 공개 없이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문동 산책로와 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임. 또한 공사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의 구조 안전성도 위협받을 상황임에도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의 적극적 대응이 부재하여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철저한 감사와 시정 조치를 요청함.
128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라고 속이고 민자 도로 건설하려는 서울시	이문동 산책로 길과 주변 아파트에 동부간선도로로 지하화 공사가 아닌 민자화 도로 건립에 대한 철회의 건	이문동 산책로 길과 주변 아파트에 동부간선도로로 지하화 공사를 한다고 9월에 안내문을 붙이고,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덮히고 수변공원이 된다고 주민들은 좋아진다고 인식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는 없었음. 그런데 알고보니 지금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공사가 아닌 동부간선도로 옆으로 통행료를 걷는 민자화 도로를 만드는 공사고. 월릉IC A램프 진입로라고 함. 이문동 산책로 통학로 민자도로 진입로 공사 철회를 요청함.
130	형식뿐인 주민설명회, 공사 직전에야 알게 된 이문동 월릉IC 공사 절차 전면	최근 진행 중인 월릉IC (동북간선 지하도로 연결 램프) 공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강행되고 있음을 제보함.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공사로 직접 피해를 입는 이문동 주민들(이문푸르지오, 현대아이파크, 대성유니드 등)은 2025년 9월 공사 직전에야 처음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주민 기만이며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음. 서울시의회는 본 사안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준수 여부, 주민 고

	재검토 촉구		지의 적법성, 설계 변경의 재협의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문동 주민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람.
131	동부간선 지하화 관련 월릉 IC 램프구간 위치 설계	산책로(석계초 통학로)를 없애고 지하차도 진입 램프 구간 공사 반대의 건	이문동 주민으로서, 최근 집 앞 산책로(석계초 통학로)를 없애고 지하차도 진입 램프 구간 공사가 시작된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공사가 임의로 착공되는 것을 반대함. 동대문구청은 이를 알고도 주민들에게 안내하지 않았는지 안내하였다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몇명에게나 동의를 받았는지 증명 자료 제출을 요청함.
132	이문동 동부간선로 진입 위치 변경 요구	이문동 동부간선로 진입 위치 변경 요구의 건	이문동 대우1차 입주민으로서, 삼천리 연탄공장과 신이문 기지창으로 인해 많은 소음과 불편을 겪었는데 연탄공장이 나가자 마자 그자리에 진입로를 만든다면 이문동 신이문역기지창쪽 주민들을 최악으로 모는 것이라 사료됨. 단지 뚝방 산책길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안 삼고 살았는데 그것마저 사라진다는것 자체도 이해가 안되며 5억원정도의 경비를 들여 조성한 황토길과 산책로인 뚝방길을 없애고 소음과 먼지 등과 함께 생활한다는 게 제일 참을 수 없을것 같아서 위치 변경 요청함.
134	강동구 의용소방대 관련	강동구 소방서 의용소방대 모집 운영 사항을 포함한 감사 청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강동구 의용소방대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다수인데 강동소방서는 상반기 동시모집때 소극적으로 홍보하였고, 모집기간이 조례에 명시된 기간보다 하루 짧았고 다른 구처럼 기간을 늘리거나 별도 추가모집이 없었음. 강동구에는 쟁크홀도 발생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니, 오히려 의용소방대원 정원을 현재보다 100명을 늘리고, 공개모집 동시모집을 강동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구청 소식지에도 게재하는 등 큰폭의 확대와 변화를 촉구함.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구 소방서 의용소방대 모집 운영 사항을 포함하여 엄중히 감사해주길 요청함.
171	개포로 53길 하수암거설치 관련 주민 안전을 지켜주세요	공동주택아파트 벽면 2m 거리에 6m가 넘는 하수관로를 기존선로를 변경하여 설치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단 한차례도 설명이나 고지없이 허가해준 강남구청 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행태와 시행사의 공사 편의주의에 편승하여 주민들의 안전요구를 경시하고 안전불감증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조사와 책임을 요구	민원건은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비관리형 공공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당초 개포주공1단지주택재건축시행 인가시에 대로인 선릉로로 공공우수관로를 경유하도록 인가되었으나 공사진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로1차선도 안되는 민원인 거주 공동주택앞 도로로 변경 인가되었음. 2024년 1월 하수암거 설치 시공사인 흥문종합건설에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관련 설명을 요청하여 주민 몇명이 참여해보니지하 10 m깊이에 2m크기의 하수관을 아파트 지하벽면 2m 거리에 설치한다는 1차 설명을 하고 지하안전평가 결과가 나오면 재차 설회를 갖기로 하였으나, 이에 민원인이 강남구청 치수과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 벽면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도로침하, 쟁크홀발생등 아파트안전성 문제를 수차례 제기하였음. 공동주택아파트 벽면 2m거리에 6m가 넘는 하수관로를 기존선로를 변경하여 설치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단 한차례도 설명이나 고지없이 허가해준 강남구청 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행태와 시행사

			의 공사 편의주의에 편승하여 주민들의 안전요구를 경시하고 안전불감증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조사와 책임을 요구함. 선로변경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법한지 사전에 안전성검토, 주민설명, 주민동의절차등의 행정절차는 적법했는지 투명하게 확인을 요청함.
186	깨지기 쉬운 콘크리트로 만든 맨홀 뚜껑에 대한 빠른 교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보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내구성이 약해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함.	시민 아전에 위협이 되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를 행정감사 해주길 요청함.
194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지반 침하 문제 등이 대두됨에도 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예산 불용 처리도 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보	현재 서울시 하수관 56%가 30년 이상된 노후관인데(전국 평균은 31%) 이는 지반 침하의 대표적인 원인이 됨. 다른 시에 비해 하수관 정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니 행정감사를 요청함.	1. 전국 노후 하수관 중 30년 이상이 31%인 것에 비하여, 서울시는 56%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 이유 2. 이로인해 지반침하,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련된 예산을 쓰지않아 불용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 3. 향후 개선방안 등을 행정감사를 통해 밝힐 것을 요청함
202	서울시 내 보도 공사 및 포장 복구 공정의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제보	도로 굴착 공사 이후에 보도블록 복구를 제때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관리감독 책임도 공기업, 자치구, 민간사업자로 분산되어있어 사후 관리가 미흡함.	1. 도로 굴착 및 복구 공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인허가 단계부터 복구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 포털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2. 복구 품질 사후 점검제 도입. 복구 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도 침하, 파손, 배수불량 여부를 재점검하고 불량 판정시 해당 시공업체에 재시공 명령을 의무화 3. 하자 발생 시 행정 제재 강화. 복구 후 1년 내 동일 하자 발생 시 하자보증금 즉시 환수. 재발 업체는 차기 공공입찰 참여제한 규정 신설 4. 시민 참여형 신고체계 운영 보도 파손이나 미복구 구간을 시민이 사진으로 제보하면 접수 즉시 현장 담당자에게 전송되어 조치 결과를 피드백하는 시스템 구축.
309	이문동 동부 간선 지하화 월릉IC 램프-A 구간(진입 구간) 관련 민원제기의 건	동부간선 지하화 월릉IC 램프-A 구간(진입 구간)	1. 지반 안전상의 우려 - 공사하려는 진입구간에서 약 10~20M 떨어진곳에 약 1,500여 세대가 사는 고층 아파트 존재

	<p>-A 구간(진입 구간) 관련 민원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파 작업도 이루어 진다는데 하천옆이라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 우려됨 (싱크홀 등) - 이미 기 공사중인 신이문역 쪽 이문2동 복합청사 공사현장에서 지난 7월 싱크홀 발생으로 건물 기울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더더욱 불안함 <p>2. 초등학생 아이들의 통학로와 산책로가 없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진행하면서 동부간선 옆 산책로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해당 산책로는 약 120명의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통학로이며 주민들의 귀중한 산책로임. - 건너편 보도는 좁은 보도에 건널목 2개, 지하터널 등이 있어 상당히 위험하며,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좁은 도로에 공사차량이 이동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안전에 문제가 발생됨. - 그리고, 이미 1년 전후로 해서 많은 예산을 써서 황토길 등 조성을 해놨는데 이것 또한 추가 예산 낭비임. <p>3. 그림의 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기간 소음과 진동, 분진등 모든걸 견뎌내고 계획대로 공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정작 저의 주민들은 지하화 된 동부간선 도로를 이용하려면 먼 곳으로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 <p>4. 공사 안내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성북구 석관동쪽으로 입구가 설계되었으나 갑작스런 설계 변경 및 공사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직접 공사가 진행되는 이문동 주민에게는 설명이 없었고 동의도 없었음. <p>현재 주민들이 산책로에서 매일 안전을 지켜달라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 한번이라도 방문하셔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함.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하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까 걱정되는 마음에 제보 올리니 꼭 검토 진행 부탁드림.</p>
312	<p>이문동 동부간선 지하화 월릉IC 램프</p> <p>-A 구간(진입 구간) 관련 민원제기</p>	<p>동부간선 지하화 월릉IC 램프-A 구간(진입 구간) 관련 민원제기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반 안전상의 우려 - 공사하려는 진입구간에서 약 10~20M 떨어진곳에 약 1,500여 세대가 사는 고층 아파트 존재 - 발파 작업도 이루어 진다는데 하천옆이라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 우려됨 (싱크홀 등) - 이미 기 공사중인 신이문역 쪽 이문2동 복합청사 공사현장에서 지난 7월 싱크홀 발생으로 건물 기울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더더욱 불안함 <p>2. 초등학생 아이들의 통학로와 산책로가 없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진행하면서 동부간선 옆 산책로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해당 산책로는 약 120명의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통학로이며 주민들의 귀중한 산책로임. - 건너편 보도는 좁은 보도에 건널목 2개, 지하터널 등이 있어 상당히 위험하며,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좁은 도로에 공사차량이 이동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안전에 문제가 발생됨. - 그리고, 이미 1년 전후로 해서 많은 예산을 써서 황토길 등 조성을 해놨는데 이것 또한 추가 예산 낭비임. <p>3. 그림의 떡</p>

			<p>- 공사 기간 소음과 진동, 분진등 모든걸 견뎌내고 계획대로 공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정작 저의 주민들은 지하화 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려면 먼 곳으로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p> <p>4. 공사 안내 미흡</p> <p>- 기존 성북구 석관동쪽으로 입구가 설계되었으나 갑작스런 설계 변경 및 공사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직접 공사가 진행되는 이문동 주민에게는 설명이 없었고 동의도 없었음.</p> <p>현재 주민들이 산책로에서 매일 안전을 지켜달라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 한번이라도 방문하셔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함.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하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까 걱정되는 마음에 제보 올리니 꼭 검토 진행 부탁드림.</p>
320	동부간선 민자도록 월릉 IC 램프 A구간 진입구간 관련	동부간선 민자도록 월릉 IC 램프 A구간 진입구간 관련의 건	<p>1. 지반 안전우려 및 싱크홀 가능성</p> <p>공사구간은 뚝방길로 지반이 불안전하면 고층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지하에서 발파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임. 이로 인한 지반 약화 및 건물의 안전우려 가능성.</p> <p>2. 초등어린이 통학로 및 주민의 녹지 공간의 훼손</p> <p>대부1,2,현대,대성아파트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로가 훼손되어 안전한 길이 없어지며, 인근 아파트의 2000세대의 주민과 석관동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 체육공간이 없어짐</p> <p>3. 공공세금의 낭비</p> <p>1년전에 설치한 수억원의 황토길을 다 제거하고 다시 복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혈세인 공공세금을 낭비하는 행위임.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기를 제기함.</p> <p>4.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p> <p>공사 현수막을 보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사 계획을 인지함.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 지지않음. 다시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 동의를 받고 전면재검토를 강력하게 제기함</p>
332	동부간선도로 월릉IC 진출입로 계획 철회 요망	동부간선도로 월릉IC 진출입로 계획 철회 요망의 건	<p>현재 계획중인 동부간선도로 월릉 IC진출입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 또한 없었던 부분임.</p> <p>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한 계획 철회 요청드림.</p> <p>1. 동대문구 이문동 공사 인근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회 및 동의 절차 누락. 시청에서는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했으며, 피해지역 약 1,500가구가 모르고 있을 정도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음. 또한 환경 영향 평가 시 주민들 대상 설명회나 의견 청취 누락</p> <p>2. 해당 지역은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된 주거 지역으로 진입로 설치 시 아이들 안전, 매연, 소음, 인접 도시와 접근성 차단 등 많은 문제 발생하며, 아파트 바로 앞 발파 공사 안정성 의문. 이에 지금이라도 피해지역 주민 (이문현대아파트, 이문 대우 1차 아파트, 이문 대우 2차 아파트, 이문 대성유니드 아파트) 대상으로 한 공청회 및 동의 절차 진행 바람.</p> <p>해당 지역 모든 세대원이 모르고 있었을 정도면, 홍보 및 공지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임. 그런데도 서울시 도로계획과 김정식 팀장은 주민들 관심이 없어서 그런거라고 저희 탓으로 몰아</p>

			가고 있음. 꼭 행정사무 감사 부탁드림.
334	동부간선지하화 월릉IC램프 설치 이전을 요청합니다	동부간선지하화 월릉IC램프 설치 이전 요청의 건	<p>저희가 다니는 중랑천 산책길에 월릉IC 램프를 설치와 공사를 반대함.</p> <p>이제와서 집 앞 산책길에 밑에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것도 모자라 집입램프를 만든다는 것에 반대함. 현재 그길은 저희 동네 안전한 도보 산책길이며 서울석계초등학교 아이들의 등교길임.</p> <p>그리고 작년에 5억원을 들여 황토길에 이문까페를 만들고 1년 정도 사용하고 바로 다 갈아 엎는 건 세금낭비임.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 세금을 지키기 위해 월릉IC 집입램프 이전을 부탁드림.</p>
336	동부간선도로 민자도로, 서부간선도로 민자도로 등 현재 서울시에서 행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주세요.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동부간선도로 민자도로, 서부간선도로 민자도로 등 현재 서울시에서 행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해당 건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심도있는 감시의 역할을 촉구드림.	<p>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릉IC 건설 계획(ramp A, 동대문구 이문동 지역)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 바람. 현재 서울시의 행정은, 수상택시 뿐만 아니라, 서부간선도로의 민자도로도 논란이 되고 있음. 이 사업들이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은 동부간선도로 민자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음.</p> <p>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동부간선도로 민자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해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람.</p>
337	이문동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릉IC램프 A구간 관련 민원제기	이문동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릉IC램프 A구간 관련 민원제기의 건	<p>서울시정에 관련하여 민원제기 합니다.</p> <p>2025년 11월 1일로 정해진 이문동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릉IC램프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제기 합니다.</p> <p>이공사는 주민에게 공지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시에서 말하는 주민 공청회는 이곳 주민이 사는 이문동에서 공청회를 진행한것이 아니고 타지역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진행한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문동 주민을 무시한 행정으로 ?에 볼수 없으며 이문동 주민으로써 도저히 납득불가이며 받아들일수 없는 일입니다. 이곳 이문동에서 산지 10년동안 단 한번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에서 이곳 이문동에 램프가 들어선다는 공지를 받아본적이 없으며 공청회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곳 산책도는 주민들의 삶의 휴식처이자 생활공간입니다.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는 공사입니다. 이곳 이문동 주민들은 공사구간인 산책로에서 휴식과 운동 및 산소와 같은 공간처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도로화 한다는것은 이곳 이문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아 버리는 만행에 가까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문동 주민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까운 성북구 주민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산책로는 석계초등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통학로를 대체할 만한 도로도 없습니다. 이 공사를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한다면 이곳 이문동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걸로 예상합니다. 산책로를 없애고 램프가 들어서는 공사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민생안전을 무시한 행정으로 반드시 이공사는 중단해야 합니다</p>
339	동부간선도로 월릉IC램프-A	동부간선도로 월릉IC램프 -A 위치 이전 요청의 건	왕복 2차도로(아파트에서 23m) 떨어진 지점에 주민들의 산책로였던곳에 월릉IC램프 -A가 건설예정임. 그렇지만 이 공사는 여기

	위치 이전	<p>근처에사는 주민들에 대해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이 공사로인한 피해사항들이 정말 심각한 사안임. 공사로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산책로가 근처초등학교의 통학로였으나 이곳을 도로로 만들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없어지며 반대편 위험하고 좁은도로(횡단보도증가, 연탄공장, 재활용센터가 있는 도로)로 통행해야 함. 또한 차량유입증가,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될 것임. 초등학교가 근처에있고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산책로위치에 굳이 이런 큰 공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2. 공사위치인 산책로는 주민들의 여가, 운동, 휴식공간이었습니다. 나이많으신 노인분들도 슬슬 걸어다니면서 운동기구에서 운동도 하시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산책하던곳임. 이런 소중한 공간을 주민들의 동의없이 사업이 랍시고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음. 3. 거주·생활 환경 악화 및 피해 (조망 저해, 차량 소음·진동·분진, 대기환경 악화) 4. 지반 침하 및 건축물 안전 우려 (깊은 굴착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 5. 주민 의견 미반영 (대다수 주민이 공사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 	
424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신 반포역 나들 목	88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반포대교 나들목 직전에 신반포역으로 나가는 시 설물이 건설되었는데 무 슨 까닭인지 완공 후 몇 년째 개통이 안되고 있음	반포대교 나들목의 정체현상이 심각하니 본 시설물의 조속한 개 통을 요청함.
425	고투몰 불법 정황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의 원이 고투몰을 다루었으 나 후속 조치가 없었음.	임차인을 중심으로 관리법인이 있는데 그곳이 불법의 중심이며 매 물 중개하는 업자가 있고 지하상가 점포에서 중개를 하고 있음. 공단도 확인하고 있으니 감사를 요청함.
450	종로구청 미 국 대사관 앞 극우세력 불 법천만 노상 적치물 철거 민원 거부 무 단방치 직무 유기 제보	제보자는 2025년 4월 미 국대사관 앞에 불법 노상 적치물을 신고하였으나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대 법원 판례를 이유로 방조 하였으니 시정을 요구함.	종로구청의 불법 천막 철거 미이행에 대해 해결을 요구함.
53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 투자사업 월 릉IC 진입 시 설 설계 재검 토 필요	이 사업이 주민안전, 환 경, 경제성 측면에서 타 당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임.	첨부파일에 내용을 염중히 다루어 주기를 요청함. 월령IC 캠프A 위치 이전을 포함하여 설계 내용을 변경해 주기를 요청함.

8. 주택공간위원회

총괄

기관별	계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별도보고, 자료제출 등)
계	210	54	78	78
주택실	60	11	33	16
미래공간기획관	36	2	9	25
디지털도시국	42	25	6	11
서울주택도시개발 공 사	60	12	23	25
서울AI재단	12	4	7	1

시정·처리요구 사항

54건

[주택실] — 11 건

1.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종료 후 임차보증금 이자지 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은행 대출을 못받아 계약율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치가 필요함.

2. 미리내집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3. 청년안심주택 도산 우려 사업자에 대한 대응 및 제도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도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게 재무자료 요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5.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재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청년안심주택 의무임대기간 이후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해야 하며 구조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함.
7. 청년안심주택 매년 5~6억씩 공가 관리비가 나가고 있으며, 공가가 제대로 순환이 안되고 있으니 SH와 협의하기 바람.
8. SH 연석회의 안건 중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서면회의가 아닌 대면회의로 개선이 필요함.
9. 건축행정평가 결과가 15위로 낮고 자치구 간 순환 근무를 함에도 자치구 별 편차가 큰데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10. 서울주택정보마당 8.20.에 오픈하였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이를 이용해야 할 텐데 방문자 수가 저조함. 특히 오픈 초기에는 많이 접속하였는데 접속자 수가 줄어들어 10월의 경우 일평균 고작 80여명임. 홍보가 부족한건지 콘텐츠가 부족한건지 분석이 필요함.
1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시설로 조성된 충신연극인센터가 최근에 안전문제로 재난센터로 신고가 들어가는 등 방치되는 시설에 대해 자치구 이관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주민 안전확보 및 도시미관 정비를 해주기 바람.

[미래공간기획관] — 2 건

1. 정계처분 공공건축가에 대한 해촉 등 공공건축가 활동 평가 기준 마련 등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개선이 필요함.
2. S-Pool DB 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사항을 검토하여 즉각 시정 조치를 하시기 바람.

[디지털도시국] — 25 건

1. 와이파이 설치와 민간데이터(통신사 데이터) 사용량 간 상관관계 분석 가능한지.
2. 서울온 명칭 선정의 적정성, 기존회원의 정보 이관 동의율이 저조한 이유, 시민 리뷰 문제를 지적.
3. 서울기록원의 비밀기록물 관리 부실, 비밀서고의 보안미흡 등 신속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및 개선 요청함.
4.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국제부담금 투입 대비 WeGO 사업계획의 성실성 부족 문제와 향후 운영·감독 개선 방안을 지적함.
5. 디지털동행플라자·배움터·안내사 등 디지털 포용사업의 자치구별 수혜 편차가 큰 만큼, 향후 데이터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함.
6. 스마트서울맵의 17년간 총투입비용(약 60억), 초기 계획 대비 예약·원스톱 서비스 미반영 사유, 테마 구성 관리 미흡·저조한 이용률 등 시스템 실효성 문제, 그리고 Open API 활용 및 정보 오류 개선 필요함.
7. 내용연수 경과로 보안 위험이 있는 노후 장비의 교체 계획을 예산부서와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함.

8. 서울시의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점수가 광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문제와, 금년도 평가 결과 여부 및 향후 개선 의지에 대한 입장은?
9.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의 평가, 자가망 전환의 비용·효용 분석 필요성, 시내버스·정류장 와이파이 업무의 일원화 여부, 그리고 버스 와이파이 유효성 검증 용역·보도 대응 조치 전반에 대한 입장은?
10. 디지털동행플라자 성과·운영방식 변경 사유, 민간용역 선택 배경, 용역 자격요건 완화 이유, 신규 3개소의 용역 유지 및 운영 이원화 우려, 그리고 재단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한 입장은?
11.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의 매장 수 감소 이유와 향후 지속 가능성, 활성화 노력 부족 지적, 협약기간 만료 후 계획, 그리고 어르신 디지털 약자 지원 확대 필요함.
12. 디지털배움터의 서울시 이양 효과, 향후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연계·일원화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한 입장은?
13. 국정자원 화재 관련 정보시스템 이중화·DR 구축이 충분한지, DR 구축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함.
14. CCTV 투자 규모·기한, 그리고 중장기 설치계획·격차 해소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15. 데이터센터 소장이 보기에 화재 발생시 대비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16. S드라이브 미도입 자치구 현황, 본청·자치구 사용률 저조 원인, 개인PC 병행 저장 지침 배경, 보안 우려, 그리고 향후 확산·교육·홍보 강화 필요함.
17. 해킹 전수조사·재택근무 보안 수준, 사이버보안조례 담당자 교육 이행, 본청 교육 참여율 저조 원인 및 개선 계획은?

18. 최근 3년간 WeGO 회비 납부율 저조, 산하기관·수상도시의 미납 문제, 납부율 저하 원인 파악 및 회원혜택·연회비 기준 재점검 필요함.
19. 결재문서 공개율은 높지만, 관행적·소극적 정보공개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함.
20. SLW가 과기부 AI 페스타와의 차별화 및 내년 SLW 내실화가 필요함.
21. 스마트라이프워크(SLW) 시장단 초청비 성과 부족 문제, 시장단 포럼의 실효성 부족, 향후 개선 필요함.
22. 디지털동행플라자 사업은 센터 규모의 적정성 및 지역 편중, 예산 약감 현황, 취약계층 밀집 지역 설치 형평성, 그리고 중소형 센터 운영비의 자치구 부담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23. 디지털 안내사의 활동 노선이 특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및 활동노선 개선 방안은?
24. 디지털 동행 플라자, 디지털 배움터 자치구 간 형평성 고려하여 조성 필요함.
25. 공익목적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인력풀을 관리한 이유와,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경력정보 수집의 적절성 문제, 향후 개선 필요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12 건

1. 공동체주택 보증금 미반환 위험 세대 보호 등 적극적인 검토와 서울 시 협조 요구 필요함. 방치되고 있는 시유지 35개소에 대한 활용계획 종합 검토하여 보고해주기 바라며, 공동체주택 모니터링 시 권고 조치를 면하는 등 봐주기 평가는 아닌지 확인 바람.

2. 입주자 패널 조사는 유의미한 자료로 조사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며, 다시 추진하기 바람. 단, 연구 과정에서 탈북이탈주민의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채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므로, 향후 추진 시 주의하시길 바람.
3. 용산 보유세 소송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약된 내용 잘 점검하기 바람.
4. 미리내집 입주자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계약서 수정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
5.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의 잣은 변경이 매도포기가 발생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됨, 재발하지 않도록 잘챙기길 바람.
6. 불법하도급은 좀 더 강력한 조치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7. 학교시설로 결정된 세곡동 192 중학교 부지를 사전 설명 없이 계획을 변경하여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것은 잘못되었음.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바람.
8.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입주민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고, 국토부 매뉴얼에 따라 인접 건물과의 안전거리 확보, 가림막 설치 등을 고려하기 바람. 또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통해 공사 임대주택 실태조사 후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기 바람.
9. 공무국외 출장 후, 관련 규정에 의거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바람.

1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금 대출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서울시 보완 대출 제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또한, 마곡 17단지 공고시기 (12월)를 고려 국토부와 조속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11. SH연구원의 연구수당 부당지급 관련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연구비 수당 관련 사항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12. 공공임대주택 패널조사 연구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개인정보 외부 제공된 사실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고 예방 목적의 지도감사가 필요함.

[서울AI재단] — 4 건

1. 시와 재단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관련 사업 비교를 통해 유사 사업을 파악하고 연계 방안을 보고 바람.
2.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는 전시·체험 중심에서 시민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공간이 되어야 함. 센터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 하며, 또한 성과지표에 교육 비중을 늘리거나 추가하기를 바람.
3. 감사팀의 잣은 인사이동 및 겸직은 대책이 필요함. 인력 증원을 통해 서라도 방안을 마련한 후 말씀해주시기 바람.
4. 자치구별로 디지털 체험버스 운행실적 격차가 큼.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높은 자치구에서의 사업실적은 오히려 낮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실적 부족함. 지역별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시정이 필요함.

[주택실] — 33 건

- 10.15 대책은 서울시에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원안대로 시행함. 이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의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부동산대책 발표 후 현실성 있는 공급대책 필요 및 보완책 마련 강구할 것.
- 이번 정부대책이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시 공급물량 목표 달성이 필요함. 박원순 시장 재임시설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재생 중심으로 개발 추진하면서 많은 규제가 생겼는데 10.15 대책에 영향을 받는 정비구역에 대한 서울시만의 대책 마련 필요함.
- 반지하 멸실하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니 단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반지하 주택 안심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개폐식 방범창 설치사업' 실적이 저조하고, 자치구별 편차도 큼. 실적 저조한 데 대한 원인분석 및 그에 대한 대안과 방안수립이 부족함에도 관련 용역예산은 불용 예정으로, 임대인 동의방식, 설치 후 유지 관리 체계 구축, 근본적인 원인 및 대책 분석 등 시정이 필요함.
- 미리내집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금 한도가 하향되어, 8월 공급물량 90퍼센트가 전세대출 받을수 없게 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2024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대부분 행정지도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함. 직권취소 및 강력한 행정 처분과 제도개선이 필요함.

6.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기준 완화하였으나, 사업 추진 속도가 떨어지고 있음. 기준상 개발 가능 용적률 대비 낮은 용적률 적용과 건축비 상승 등으로 민간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타 정비사업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사업성 보정계수 등) 등을 참고하여 사업성 제고 및 활성화 검토 바람.
7.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발표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사실상 추진 중단되었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규제와 현실성 없는 공급 대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을 요청함.
8. 중랑창업지원센터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연내에 SH가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9. 임대주택 중 공가가 많지 않으나 공가 관리비가 많으므로 공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10. 정부 대출규제로 부작용이 많은 점과 서울시가 주택정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음.
11. 미리내집 공급 시행률이 낮은데, 현실적인 공급목표치로 보정해야 할 것임.
12. 공공주택 소셜믹스 추진 시 공공성과 사업성 모두 쟁기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3. 매입임대주택 목표치 대비 50% 실적 달성인데, 연말까지 계획대로 목표치 대비 90%이상 확보 바람.
14. 청년안심주택 사업환경이 바뀐 상태에서 임대료 설정 부분도 고려중

인지? 임대료 지원은 이중 지원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사업성 재고 방안을 고민해야하며, 법·원칙·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은 신중해야 함.

15.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책정 올려야하고 공급도 늘려야 함.
16. 청년안심주택에 청년들이 은행대출 등의 문제로 입주를 못하는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17.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재정지원은 재무건전 사업장에게 우선 지급해야 하며, 면밀하게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람.
18. 청년안심주택 피해 우려 청년들을 끝까지 구제해주길 바라며, 어떻게 재구조화 해서 해결할지 진지하게 고민 바람.
19. 신내동 홈플러스를 청년안심주택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보고해주시고, 주민들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기 바람.
20.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홍보 및 협약을 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니까 구청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의 책임감있는 대처가 필요하며, 보증금 선지급 조치는 서울시 행정미흡에 의한 당연한 조치이며, 이것을 '호의'로 포장하는 것은 안됨.
21.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재건축 추진시 용적률 230% 정도로 한계가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움. 분당같은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적용 용적률 350%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주택실에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적용되도록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22.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관련 국토부에 법령개정 건의하였는데,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에서도 공원·녹지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내년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평균 공시지가 산출 방법 및 결과를 사전 보고해주기 바람.

23. 공공보행통로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시정 방안 마련과 준공 이후 폐쇄 단지 전수조사를 요청함.
24. 서울시는 '디자인서울'정책 하에 발코니 규제를 통해 사업성 요소를 낮추고 있으므로 발코니 규제를 두지 않고 다양한 입면식 발코니 설치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닐지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 또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1년만에 폐지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 추진 시 신중한 도입 및 책임감있는 실행이 필요함.
25.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의 실행의 관리감독 역할에 있어, 일부 자치구 및 조합이 공공지원없이 추진된 사례에 대해 사전 파악하지 못하고 의원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후, 전수조사를 통해 사후 조치를 취하였음. 해당 자치구에 대한 행정 지도는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침을 수립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 대민 업무들을 구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장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등 인력에 대한 조직 보강과 보상이 필요함.
26. 국토부 특정건축물법 양성화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특정건축물법 2014년도 제정 당시 여건을 바탕으로 필요 인력과 예산 대비가 필요함. 특정건축물법 제정 전 정책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 계약상대자간 피해 보호 조치 준비가 필요함.
27. 다중인파밀집구역 위반건축물 단속 관련 일부 지역의 시정 실적이

미미하므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시민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서울시의 이행강제금 감경 조치 완화와 국토부의 지자체 재량 폐지 등 시민 혼란 야기함으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당부함.

28.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확대 및 의무화되고 있는데,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황이 166건, 6위로 적으며, 인증 건축물조차 90% 이상이 4, 5등급에 불과하므로 실적저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29. 서울시 장기사용(15년 이상) 승강기 비율이 높고(63천대), 장기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함. 예산을 반영하여 승강기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함.
30. 주거기본조례상 위원회로 정해놓은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 주택정책자문단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31. 부동산 거래관련 허위 계약, 취소 거래 등이 최고가를 견인하고 있어 왜곡현상이 생기는 부분을 문제 제기했는데, RTMS상 전자거래 전환으로 인해 취소거래 외에도 미확인이거나 실제로 취소인 부분도 있음. 이에, 관련 법안이 2월에 발의가 되었으므로(「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 김정재의원) 면밀히 모니터링하시고 요청하셔서, 광역 시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셔서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32. 노원구 희망촌 사업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33. 관련 법령에 조합해산은 재건축 완료 및 이전고시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 청산 기간은 길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서울시에서 마련해주기바람.

[미래공간기획관] — 9 건

1. 노원운전학원부지는 '22년 아파트 건설추진 중 주민반대로 무산된 지역임. 주변에 주민들이 10여년간 가꾼 철쭉동산이 사유화 우려되니 초기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야 함.
2. 사전협상조정협의회에 시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함.
3. 혁신 디자인 구현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 및 준공 후 공유공간의 운영·관리방안에 대해 제도적 강화가 필요함.
4. 남부터미널 일대의 실행가능 사업은 개발계획의 구체화, 예산 마련 등 통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5. 남부터미널 개발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자도 공감할 수 있는 개발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6. 사전검토, 설계공모 등 기획단계 업무뿐 아니라 누수,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의도 구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하고 건축물의 준공 시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7. 동행개발리츠 검토는 법적 기반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추진으로 시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후보지도 착공조차 하지 않아 시민에 위험부담을 줄 여지가 있음. 또한, 공공이 시행

하면 시민은 안정성을 믿고 투자할 수 있으므로 ‘청년안심주택’ 사례 교훈 삼아 신중히 접근하시길 당부함.

8. 미래공간기획관 지역별 사업추진에 불균형이 있으므로 사업진행 시 자치구를 안배하여 추진을 요청함. 도봉구의 경우 아레나가 27년도에 개관되지만 주변지역인 창동 역사프로젝트 등도 사업 추진이 필요함.
9. 사전검토, 설계공모 등 기획단계 업무뿐 아니라 누수,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의도 구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하고 건축물의 준공 시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디지털도시국] — 6 건

1.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관련하여 교통실과 업무 일원화 방안 검토 및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유효성 검증 용역 보도 관련 대응 필요함.
2. 디지털도시국·서울AI재단의 AI전문가 보유 현황과 향후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3. 대시민 챗봇(서울톡) 서비스 정확도 향상 필요함.
4. 방화벽 보안조치 권고 결과 및 자치구 보안사항 챙기기 바람 .
5. 서울톡 등 해킹 보안도 서비스가 부족함이 없도록 당부함.
6. 정부 대비 서울시의 AI행정서비스 예산 규모의 적정성, 이 예산으로 실질적 AI행정 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경제실·디지털도시국 간 AI 정책 추진체계 이원화 문제와 향후 통합 필요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23 건

1. 과도한 소송 방지를 위해 소송에 들어가기 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 서울시처럼 단가보수업체 계약 1년 단위 추진을 검토하는 등 임대주택 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3. 매입심의 통과 대비 매입실적 저조한데, 기다리는 매도자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4. 성산 아파트 재정비 사업 관련
 - 사유지 매입, 용도지역 협의 등이 원활하지 않아 국토부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아닌지
 - 혼합단지 재정비 사업 추진 관련 법적, 제도적 공백 해소를 위하여 국토부에 더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처해줄 것
5. 공덕시장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SH에서 같이 참여해주길 바람.
6. 하계5단지 재건축 시 학습권 관련 협의체 구성하여 대책 마련 및 상계마들 송전탑 관련 이주 지원 대책 및 의원 협조 필요한 사항 말씀 주실 것.
7. 공릉동 모듈러 기숙사는 진동에 의한 누수 등 모듈러 구조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줄 것.
8. 자살예방 관련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방문 업무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청과 잘 협의하여 폭넓은 검토 바람.
9. 전관업체의 수주 현황이 확인되는데,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필터링, 심사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점검하여 신뢰성을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10. 불법전대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점검해 보길 바라며, 불법전대 적발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길 바람.
11.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소 제기 전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소송(종합부동산세, 용산 보유세)은 추진하지 마시길 바람.
12. 공사의 사회적 환원 범위를 주민편의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강동구 재정 문제로 고덕강일 지구 체육시설 용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데, 무상임대가 어려우면 임대 전환 등 대안을 검토해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요청함.
13. 시드큐브 창동 공실률 원인 분석 및 현재 보유 중인 한옥에 대해 관광 요소를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실 노후상가를 공공자원으로 개방하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SH 공공자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14. 한강버스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가 공사의 역할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급행 등 대중교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협력해 주길 바람.
15. 정비구역 내 매입임대주택 관리방안 관련
 - 정부 정책 변화 이후 환경을 고려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등 동참해 주시기를 바람
 - 조건부 동의보다는 적극적 자세로 사업에 참여하여 불씨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함
 - 국비 미반납 제도 및 현금 청산 LH임대주택 인수 관련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

16. 임대아파트 화재 대책

- 초기 자동진압설비 설치 비율 7.2%으로, 안전문제인 만큼 계획대로 자연 없이 설치를 부탁드림
-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예방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 사각지대 해소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17. 잣은 부장급 이상 인사이동으로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18. 클린케어 서비스는 수요 파악하여 임대단지 임차인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기 바라며, 임대 단지 화재예방 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임대 단지 쪽으로 변경하기 바람.

19. 이사회 결정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법률 자문가 등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

20. 임대주택 자살, 고독사 관련 사업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등 노력하기 바람.

21. 반지하주택 활용 관련하여 공급불가 반지하주택들에 대해 시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더 고려하기 바람.

22. SH 사옥 이전 관련하여 내년 초 시의회 의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3. 사회주택 보증보험은 매입계약이 있어도 부채비율에 따라 허그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 필요함.

[서울AI재단] — 7 건

1. 재단이 TF를 구성해 센터 인수·운영을 준비 중인데, 예산, 채용, 시설 및 프로그램 이관 등 인수 일정이 촉박한 것은 아닌지?
2. 인사위원회의 서면회의 비중이 높음.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사업지표를 성과에 맞추는 방식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4. 재단 내 AI 분야 전문가 구성이 부족해 보임. 관련 인원을 많이 확보하기 바람.
5. 재단의 예산이 행사 등 운영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연구 및 정책개발 등 본연의 AI 혁신 기능 강화 및 투자 비중 확대 필요함.
6. 재단 직원의 내부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람.
7. 재단 조직관리 측면에서 감사 독립성 유지를 위해 고민하기를 바람. 인력 확충을 통해서라도 감사만큼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람.

기타(자료제출 등)

----- 78건

[주택실] — 16 건

1. 정부와 서울시 부동산 대책 발표 비교 및 서울시 대책 효과성에 대한 홍보,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협의 추진 등
2.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오차 점검

3.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완화 지속 제도개선 건의 필요
4. 주차장 옥상 녹지공간 조성으로 누수 발생 전수조사 및 서울시 대책 마련
5.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독려 및 지도 점검
6. 주택진흥기금 재원의 체계적인 수입 계획 수립, 운용 필요
7. 조합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 민원 누락없이 처리
8.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9. 신길10구역 정비사업 신속 추진
10. 지역주택조합 소송 현황 중 강동구 추가 제출
11.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이 실제 위반 해제로 이루어진 사례
12. 정비사업 준공물량의 시장 임기별 구역 지정 시기
13.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비구역별 취소현황 등
14. 정비사업 현장에서 유물 발굴된 사업 현황
15. 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 현황
16. 토지거래허가제 용역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10.15.부동산대책 관련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건의내용

[미래공간기획관] — 25 건

1. 용역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사전에 임의로 모집을 하 고 랜덤 추첨을 통해 당일 참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함.
2. 노원 운전학원 부지 재개발은 민간부지이지만 개발 관련해서는 해당 구청,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 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내 석계역 일대 교통 체계 개선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4.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평가 시, 심사위원이 특정인물이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 있는 심사위원 선정이 필요함.
5. 편 스테이션 사업이 시민 입장에서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명칭 개선, 안내시설물 설치, 시누리집 등 통한 적극 홍보 필요함.
6. 강동역 편스테이션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 가능한지 검토 요청함.
7. 민간제안사업으로 송전선로 공사까지 필요한 상암-선유도 곤돌라 노선 수익성이 우려되며 수요 예측도 어려움. 선유도공원 부분은 주민들에게 편익을 많이 제공 중인 정원으로 훼손하면서까지 민자사업을 제안하려면 뚜렷한 명분 등의 내용 제시 필요함.
8. 파크골프장 건립 관련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제안 및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라며, 탄천·일원동 일대 건립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9. STO(증권형토큰) 사업 역시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기 바라며, 루센트블록과 MOU체결, 수의계약 체결 등은 성급히 적용하는 것 아닌가 우려됨.
10. 파크골프장 건립 관련 중구 지역 건립 검토하여 주기 바람.
11.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신속한 주택공급에도 역행하는 주거 일변도의 전면 계획 변경 지양, 국제업무 기능 중심의 개발 추진이 필요함.
12. 신당역 편스테이션 추진 관련하여 '25.1월 민간사업자 계약취소 이후 미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지속 이용 방안 마련 필요함.
13. 먹골역 편스테이션이 민간운영으로 전환 후 이용률 부진한바 향후 활성화 방안 검토하여 추후 보고 요청.

14. 노들섬 하늘예술정원(중기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자료에는 신축으로 되어 있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닌지 점검 필요.
15. 노들섬 계획홍수위를 14.87로 계획하였는데 계획홍수위는 15.33 이므로 확인바라며 지상부 침수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 필요.
16. 수상예술무대 및 접안시설의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공유재산심의 재심의 대상은 아닌지 확인 필요.
17. 한강대교 북단 교통광장 부지 개발은 민간보다 공공에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18. 노들섬 내 헬기장, 방공기지의 경우 국방부 협의해서 진행해야함.
19. 서남권 편 스테이션 내년 조성 계획(소요예산 포함) 수립 후 12월 까지 보고 요청함.
2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 관련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구의공원 임시터미널 계획) 자료 제출.
21. 2025.3월 준공된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 용역의 사업화를 위한 예산확보 관련, 예산심의 시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망.
22. 사전협상 신청 대상지 미선정 또는 중단 현황
 - 대상지 선정 신청하였으나 대상지 선정이 안 된 대상지 현황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후 진행 과정에서 대상지에서 제외된 사업 현황(각 사업에 대한 대상지, 사업자, 사유, 일시 등 사업현황 상세히)
23. 남부터미널 개발 사업 관련 실행가능 사업 사업설명서(예산포함)
24. 방배5구역 기부채납 설계공모 자료
25. 편 스테이션 러닝 단체 신청 현황 자료

[디지털도시국] — 11 건

1. 서울시 직원 이메일 비공개 관련 자료 제출
2. 자치구별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선번장 관리 현황
3. 서울기록원 신속점검 개선요구 이행 결과
4. 데카르트 연구소가 개발 중인 글로벌 인덱스 중 '약자동행 가치'가 반영된 지표 관련 자료
5. WeGO 스마트시티 인덱스 개발 사업의 공모요건에 부합하는 국내·외 기관 현황
6. 스마트서울맵 오픈API 현황
7. 디지털도시국 규제철폐 현황
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관련 예산 요구(이중화 등) 및 반영 현황
9.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서울시 정보시스템 피해 현황
10. '24년도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원인
11. 서울시 스마트라이프워크(SLW)와 AI페스타 협약 사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25 건

1. 콜센터 직접 고용 관련 SH 조치사항 및 정규직 노조에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2. 한강버스 안전사고 관련하여 국감 때 제출이 누락된 이유 및 안전문제에 SH의 책임은 없는지? 대주주로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공적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 바람.

3. SH 본연의 설립 목적인 주거복지를 최우선 해주시고,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과 승진 포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4. 임대주택 보유세가 완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 장기 전세주택 국비 지원 등 제도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람.
5. 당산동 양육친화주택은 제2세종문화회관 사례처럼 좋은 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바람.
6. 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개선은 시도의장협의회 등 중앙정부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적극 활용하길 바람.
7. 불법전대 관련 공유숙박 사이트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바라며, 26년 적발 계획은?
8. 한강버스 관련 이크루즈 협의 결과 보고해 줄 것과 출퇴근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 요금 현실화 계획은?
9. 중랑창업지원센터 관련하여 서울시와 잘 협의하여 발주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림.
10. 한강버스 대여금 관련 추후에 대여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시의회 의결을 피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음.
11. 불법전대 신고 및 적발, 조치 관련 매뉴얼 및 2025년 8월 기준 신고건수 30건 관련 입수경로, 확인 방식, 현장확인서 등
12. 과도한 소송 방지를 위한 소 제기 전 구제방안
13. 2025년 1월 이후 보수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단가 및 보수업체 현황 및 2025년도 보수공사 수의계약 내역

14. 매입임대 가결물건 대비 미매입 물건에 대한 대책
15. 퇴직자 재직업체 심사단계, 입찰단계 필터링 시스템 관련 자료
16. 행감 제출자료 불법하도급 관련 데이터 불일치 재확인(개별 509p, 550p)
17. 매입임대주택 매도인 감정평가 방식 변경 사유(기존 문제점 등)
18. 용산 보유세 부담 전후 사업성 분석 변동 내용
19. 불법전대 점검 방식(시스템)에 대한 점검계획서
20. 최근 3년간 중앙정부 법제도, 업무추진관려 질의회신 및 결과
21. SH도시연구원 - 서울연구원 비교자료
22. 용산 보유세 소송관련(1심 소송결과 판결문, 항소 이유서, 소송 대응계획)
23. 필로티구조 매입주택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24. 주택관리업자 동일업체 재선정 내역
25.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 카페 등 입점현황 자료

[서울AI재단] — 1 건

1.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최신화가 미흡하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으니 개선 방안 마련하여 서면으로 제출 바람.

※ 주요 감사 사항

기본명	감사방법	주요 감사사항
주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2024, 2025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정부 및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해제에 관한 사항 ◦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 및 주택임대차 지원제도 운영, 주택임대차 상담에 관한 사항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제도와 관련된 사항 ◦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관리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 및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다가구·원룸 공공임대주택 매입·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주택정책 개발·연구, 주택동향 및 주택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등 주요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 공공택지개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 역세권 주택 사업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 빙집관련 계획수립 및 매입, 정비에 관한 사항 ◦ 휴먼타운2.0 및 뉴빌리지사업에 관한 사항 ◦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 건축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빙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활성화에 관한 사항 ◦ 민간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수

기본명	감사방법	주요 감사사항
주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p>립 정비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과 관련된 사항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재건축진단에 관한 사항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 공공지원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민간·공공재개발 공모 및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통계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 ◦ 정비기반시설 입체·복합화와 관련된 사항 ◦ G밸리 주변지역 주택 확대방안과 관련된 사항 ◦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재정비촉진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해제지역) 공공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조례에 관한 사항 ◦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한옥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 한옥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민선8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 2022, 2023, 202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주택실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본명	감사방법	주요 감사사항
미래공간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2024, 2025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건축정책위원회 등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사항 ◦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선정사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노들 글로벌 예술섬 계획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 설계공모 및 심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관리 등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 동행개발리츠에 관한 사항 ◦ 공공토지 활용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송현문화공원, 이전희기증관 등 지역거점개발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건축혁신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 글로벌헤드쿼터 유치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 복합화 및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 대관람차, 한강 곤돌라 등 민자사업에 관한 사항 ◦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 상암재창조 및 도시활력 거점조성 공간기획·조성에 관한 사항 ◦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추진, 문화비축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 ◦ 2022, 2023, 202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미래공간기획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본명	감사방법	주요 감사사항
디지털도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2024, 2025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 행정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스마트라이프워크 등 디지털 행사에 관한 사항 ◦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 디지털정책 홍보 · 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세계スマ트시티기구(WeGO) 운영 지원 및 지도 · 감독 ◦ 서울AI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 · 감독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정보화사업 관리 및 정보시스템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시스템 정책수립 · 조정 ·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 · 조정 ·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록관, 기록문화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보안 정책 수립 · 조정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 조정, 시스템 구축 ·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운영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정보통신 정책 수립 · 조정 및 총괄 ◦ 스마트도시 등 통신인프라 정책 수립 · 조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 관리 ◦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 · 조정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 운영, 유통 · 개방 및 개발 지원 ◦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 · 운영 ◦ 정보자원 통합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에스플렉스센터 시설 운영 및 입주관리 관한 사항 ◦ 기록관리제도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 · 감독 ◦ 2022, 2023, 202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디지털도시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 감사사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2024, 2025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검증에 관한 사항 ◦ 건축 및 토목 조경공사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위탁관리·직접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 한강 수상 및 수변개발 등에 관한 사항 ◦ 골드시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2022, 2023, 202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서울AI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2024, 2025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2022, 2023, 202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서울AI재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9.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총괄

기관별	계	시정 요구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	자료요구
계	195	144	36	15
도시공간본부	36	26	10	-
균형발전본부	41	30	10	1
디자인정책관	26	20	5	1
미래청년기획단	34	23	4	7
글로벌도시정책관	35	26	6	3
서울디자인재단	23	19	1	3

시정·처리요구 사항

144건

[도시공간본부] — 26 건

1. 신속 통합 기획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224개 사업지 중 실제 착공은 2곳뿐이며, 80%가 구역 지정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은 제도의 추진

력이 매우 낮다는 방증임. 구역 지정 과정의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 절차 개선과 사업 촉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함. 또한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용적률 보정 개수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평당 건설비와 감정평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 정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함.

2. 서울시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와 실제 성과의 격차가 크고, 착공 실적도 감소 추세여서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 특히 신속 통합 기획, 공공재개발 등 주요 공급 수단이 초기 단계에서 정체되면서 공급 속도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행정 절차 단축, 인센티브 설계, 민관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함.
3. 재건축단지 학교용지 지정과 관련,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위치·규모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내부방침만으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함. 내부 방침에 의존하기보다 교육청과 협의체계 강화하고 지역별 학령인구, 생활권 분석을 토대로 학교용지 지정 기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4. 대학 지역기여시설의 결정·운영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반영이 미흡하고, 설치 후 관리 기준·사후 평가·페널티 체계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5. 미래서울도시관은 시민의견 미반영, 세계도시관 기획 미흡, 도시모형 중복, 부서 간 이원화 등 우려를 해소하여, 전시 중심이 아닌 정책·체험 기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반영하기 바람.

6.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 리스크 항목을 관행적으로 ‘해당 없음’으로 기재해 형식화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간·비용 증가가 반복되고 있어 사전심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만큼 심사 실효성 제고 및 구조적 개선을 마련하기 바람.
7. 서울역 개발 관련 중앙·지방 계획이 협의 없이 중복 추진되고, 타당성 심의도 형식에 그쳐 용역 반복·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획 조정·타당성 심의 실효화·용역 연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8. 공공기여시설은 개발이익 환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공적 편익을 제공해야 하나, 현재는 기부채납 이행 여부만 확인하는 등의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고 있음. 준공 시점에 맞춰 시설용도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장기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 바람.
9. 개발사업 추진 시 다수의 위원회를 거치면서 심의 절차가 중복되고, 다양한 의견이 교차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 절차를 일원화·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현행 제도는 비오톱 1등급지의 복원·이전·관리 비용을 토지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형평성이 저해되는 상황임. 도시의 환경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유지·관리 비용을 공공이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한양도성권을 서울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실제 정책은 보존과 규제 중심에 머물러 도심의 생활·정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역사 보전과 도시활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종로 북부의 정주 기능 회복을 위한 실질적 도시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12. 종로 북부는 직(職)과 락(樂)은 남고 주(住)는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도심의 일상적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도심의 인구 유입과 생활 기반 복원을 위한 주거 기능 강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3. 최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듯 정비사업이 계획 대비 실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이는 계획 - 집행 - 평가 - 환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도시공간본부는 계획 수립부터 집행·평가·환류까지 전 과정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 도시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바람.
14. 2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불과 35일만인 3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정책의 혼란이 결국 10월 15일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
15. 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큰 혼란을 빚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 업무는 주택실이 아니라 도시공간본부에 있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야 함.
16. 용적이양제를 기도입한 일본·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 향후 제도 도입시 거래 가격·방식 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면밀히 검토해서 안정성 강화할 필요가 있음.
17. 서울 전지역 토허제 지정 관련, 서울시 부동산동향 분석시스템 활용해 거래량 감소에 따른 지방세 손실분 등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필요.
18. 국토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선 등 서울시 주요 철도 구간이 차질

없이 담길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강화해주기 바람.

19. 관광숙박특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등 인센티브 마련 시 특화구역 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
20. 시교육청 부지교환, 서울역사박물관 이전부지 검토 등 경희궁지 역사문화 공원 조성계획이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돈의문 박물관마을만 운영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므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종료를 재검토하기 바람.
21. 도시공간본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올 때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정작 발표만 하고 추진되는 일이 없으며, 구도심을 그대로 두고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도 의문임.
22.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용적률 정책이 엇갈리며 협의 부재로 주민 피해와 정책 간극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조율이 시급함.
23. 입체공원 사업은 특정 지역 편중이나 선입견 없이, 형평성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기 바람.
24. 서울시 정책에서 유사한 개념임에도 용어가 제각각 사용되거나 시기마다 명칭이 바뀌어 정책 이해와 실행에 혼선을 주고 있음. 행정 신뢰성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용어와 정의를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25. 서울의 도시 발전 전략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구조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성과 유동성을 중심에 둔 공간 설계가 요구됨. 목적지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연결되는 ‘유동적 도시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26. 심의위원들의 출석률 저조와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심의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 특히 위원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 할 경우 회피 규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공정한 참여를 통해 심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균형발전본부] — 30 건

1. 남산ゴ돌라 소송 지역으로 인해 기 출범한 곤돌라인수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국토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한 것과 관련, 곤돌라 사업 시작 전부터 논의가 되었다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국토부에 적극 의견 개진이 필요함.
3. 경관 정책이 문화재·자연 중심의 보존 행정에 머물러 있어 초고밀·복합도시로 변화한 서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밀도 국가 기준에 기반한 경관 관리가 지속되고 있음. 아파트·스카이라인·생활권 공간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도시 경관을 서울의 얼굴로 인식하고, 경관정책을 보존 중심에서 창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바람.
4.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치구 간 편차를 해소하기 바람.
5. 균형발전본부가 실질적 편성권을 확보해 균형발전 목적에 맞는 예산을 주도적으로 편성하도록 기조설에 적극 요구하기 바람.
6. 남산ゴ돌라 사업은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수단 운영·홍보예산이 계속 집행돼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가 미흡하므로, 예산 집행 타당성·단계별 대응계획·홍보 전략 개선을 마련해야 함.

7. 다락원체육공원 GB관리계획 변경 용역의 타절준공은 기초검토 부실의 결과이므로 시설률·건폐율 사전검증 강화와 내부 전문성 활용으로 예산 낭비 방지 필요함.
8.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 리스크 항목을 관행적으로 '해당 없음'으로 기재해 형식화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간·비용 증가가 반복되고 있어 사전심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만큼 심사 실효성 제고 및 구조적 개선을 마련하기 바람.
9. 우당기념관은 관리 부실·성과 과대평가 등 운영 전반의 개선이 시급함.
10. 균형발전본부의 명소화 시설은 문화본부로의 이관이 기능 정합성과 장기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하기 바람.
11. 국립보건원 부지 혁신파크 사업이 4월 입찰 무효 이후 7개월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함. 서울시는 지연된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함.
12. 혁신파크 사업에서 용적률 급상승과 종상향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부지를 매각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음. 민간 매각보다는 주택 공급 등 시민 수요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13. 국가상징공간 사업이 정당성 확보와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의회 보고도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조형물 설치가 국가 위상이나 시민 자부심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의미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14. 국가상징공간 사업의 긴급 입찰이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채 협상 계약 형태로 진행되었고, 통일교 재단 소관 업체가 선정되면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5. 광화문 광장 사업은 2024~2025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복적으로 증액되었으나, 의회에 제출된 금액이 매번 달라지고 있음. 예산 증액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투명한 관리가 요구됨.
16. 서울시가 강남 3구와 도심 중심으로 정책을 집중하면서 종량구 등 외곽 지역에는 맞춤형 발전 전략이 부족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 전략 수립이 시급함.
17. 남산 케이블카 사업이 법적 분쟁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응이 미흡한 데다, 관련 고위 공무원이 해당 로펌에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적 대응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8. 2021년 6월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기 투입된 마중물 사업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마중물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이나 생활 SOC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아직까지 모호하므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함.
19.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이 지난해 100미터 태극기 게양대에서 올해 설계공모를 통해 감사의 정원으로 변경됐는데도 100미터 태극기 게양대로 편성된 예산을 이월해 변경 절차 없이 집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큼.
20.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운영·관리 체계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안전 운영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음. 유지관리비 추계, 관리주체의 역할, 안전운영 매뉴얼을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제시해 시민 이용 안전을 확보하기 바람.

21. 도시재생기금은 집행률 저조와 불용 반복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업성과 관리 및 사전 타당성 검증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집행률을 제고하고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절차와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22. 남산 곤돌라 사업은 단일 교통수단 중심의 검토로 인해 이동권 확대와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대안 검토가 부족한 실정임. 곤돌라뿐 아니라 모노레일, 전기셔틀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병행 검토해 남산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바람.
23. 곤돌라 소송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남산 관련 홍보 사업들이 추진 불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소송과 별개로 남산 전체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곤돌라 외 남산 관련 홍보 컨텐츠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의 정원 관련하여 사업 초기 국가상징공간 논의 단계부터 일정, 추진 방식, 규모 등을 두고 혼선이 심해 신뢰도가 하락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논쟁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주기 바람.
25. 현재까지 진행한 재생사업 현황과 결과 등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함.
26. 남산 곤돌라 재판이 길어지면서 한국삭도공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시민들은 남산을 이용하기 더 어려워졌으므로 재판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케이블카가 아니라도 남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함.
27.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 교량 건설사업 준공이 세차례 연기되며 거의 완공 단계인 보행교와 보·차도교가 1년 이상 방치되고 있으며, 인근 상계동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된 2007년 10월 이후 18년째 공사현장에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음.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정책으로 준공을 서둘러야 함.

28.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 따르면 공릉동 한전연수원은 2022년 업무협의, 2023년 계획 수립, 2024년 설계, 2025년 하반기 착공 일정인데 아직도 업무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정부는 정부자산 매각 중단을 발표했음. 변화된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29. 남산 생태 여가 활성화 계획 용역에서 수행 업체 대표가 건축위원, 도시 재생위원, 동대문 DDP 관련자로 활동하고 있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함.
30. 현대차 GBC 프로젝트가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지역 개발 효과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의료원 부지도 공사 마무리 이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 수립이 시급함.

[디자인정책관] — 20 건

1. 서울색 사업이 매년 색상이 바뀌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민 인지도도 낮은 데다 색상 명칭도 추상적이고 직관적이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음. 시민 의견 반영 여부 역시 불명확하므로, 통일성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서울색 개발에 매년 약 2억 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도시경관·조명·건축 등 관련 부서들과의 연계가 미흡해 실제 적용과 확산 효과가 낮은 실정임. 색상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굿즈, 조형물, DDP, 건축물 조명 등과 연계한 구체적 활용 시스템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확산 전략이 필요함.
2. 서울시 사업명칭에서 'Fun Station', 'Fit Station', 'Runner Station' 등 외래어·조어 사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3조의 취지에 맞게 시민이 일상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우선 사용하도록 용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언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3. 서울서체는 단순한 글꼴이 아니라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 자산임에도, 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전략과 문화외교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서울서체가 도시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도시와 협력할 수 있는 문화외교 매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글로벌 확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4.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2025년까지 1,521점이 선정되었으나, 재인증 비율이 22%에 그치고 설치 위치·사용 기간·유지관리 현황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인증 이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의 시민 의견 수렴 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보완하기 바람.
5. 도시경관개선사업은 성과지표가 불명확해 사업의 우수성과 미흡한 점을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행정 책임 또한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공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검증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성과지표를 정립하고, 그 지표에 따라 평가받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바람.
6. 빅워크 업무협약서 문구를 지적 후에야 수정·재체결하는 등 사전 검토가 미흡했음. 협약 체결 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함.
7.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중 ‘라이트 런’ 사업은 향후 서울시 직접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코스 협소 등 안전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8. DDP 내 카페드페소니아의 무단점유 및 계약 종료 이후 진행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함.
9. 디자인기업 안심보험의 보장내역이 「디자인산업발전 5개년 계획」 당시 계획과 상이함. 최초 보험 설계 단계에서 사업성, 보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함.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보장내용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10.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중요 사안에 대한 보고체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하기 바람.
11. 빛공해방지계획수립 용역의 업체 전문성·평가 공정성·계약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람.
12. 서울경관기록화(7차) 용역의 무단 하도급·구두 승인 등 계약관리 부실과 절차 위반 등 잘못된 관행이 남지 않도록 하고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13.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단속할 때만 사라졌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나타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거리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4. 코엑스에 이어 명동과 광화문 일대가 옥외광고물 특구로 지정됐고 동대문 일대도 추진 중인데 광화문 일대의 경우, 빛공해와 교통안전문제뿐 아니라 국가상징공간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문화회관 등 기존 시설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15. 균형발전은 도시 외형 개선이 아니라 정책의 혜택이 더디게 미치는 종로 북부 등 생활현장의 시민이 대상이어야 함에도, 현 정책은 외형 개선에 집중되어, 주민 중심 접근이 부족한 상황임. 실행 과정에서 기회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와 실행을 정합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16. 종로 북부는 직(職)과 락(樂)은 남고 주(住)는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도심의 일상적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도심의 인구 유입과 생활 기반 복원을 위한 주거 기능 강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7. 서울 도시디자인 정책은 시민이 한눈에 인지할 수 있는 대표 성과나 실물이 부족하며, 이벤트나 행사 유치에 치중하면서 실질적·가시적인 디자인 결과물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보여줄 수 있는 실물 중심의 성과 창출이 필요함.
18. 편 디자인 벤치 등 실물 디자인 사업은 제작비가 8~900만 원 수준으로 과도하다는 시민 반응이 많으며, 체감도나 실용성도 낮아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실효성 중심의 사업 재구조화가 요구됨.
19. 도시디자인 정책이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2022년 행감에서도 제기되었음에도 2년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과 책임 있는 개선이 필요함.
20. ‘고서울(go SEOUL)’ 로고 개발에 12억 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퀵서비스 업체 로고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저작권 검증과 디자인 유사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미래청년기획관] — 23 건

1. 서울시의 은둔·고립청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성과지표가 상담 건수와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한정되어 정책효과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향후 은둔·고립청년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사회 복귀 여부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양적 지표 중심의 숫자 행정을 개선하기 바람.
2.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직접 방문이 가능한 청년 중심의 이용 구조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은둔·고립청년에게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음. 권역별 아웃

리치팀을 구성해 심리상담·복지·고용을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바람.

3. 청년 지원정책은 명확한 성과지표 없이 평가만 반복하는 구조에 머물러,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청년 복귀율 및 복귀유지율 등 실질적 사후관리 지표를 마련하고, 복귀 이후 생활안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바람.
4. 2025년 상반기 통계청 지역고용조사에서 종로구 청년고용률이 29.7%로 서울 평균에도 크게 미달한 가운데,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책이 지역의 고용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청년고용률 개선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종로의 산업구조와 청년 수요 간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마련해 주기 바람.
5. 전세사기, 해외취업사기,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 다양한 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20~30대 청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년 대상 사기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청년정책의 중심을 기회 제공 중심에서 위험 예방과 안전망 강화로 전환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6. 청년들의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영테크 용역업체가 재정난으로 파산한 것과 관련, 업체 선정 당시 재무 상태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검증·관리 절차 도입이 필요함. 시중 금융권 회사들도 여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협업을 통한 강사풀 활용 등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7. 신규사업인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 활동계획을 보면 본 사업 취지인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는 상관 없는 축제 예산 지원이나 사업 목적과 다른 활동

계획이 다수 있음. 정산 과정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8. 미래청년일자리 사업은 용역 쪼개기·긴급입찰 반복·성과평가 부재, 고용성과 저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9. 미래청년기획단 사업이 사무관리비 편성으로 평가체계밖에서 반복되고, 정례사업임에도 긴급공고를 지속해 공정성과 개방성이 저해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10. 서울청년예비인턴사업은 단기·형식적 구조와 일반용역 편성으로 성과관리·사후체계가 부재하고, 기업검증·중복참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청년정책 교육 의무 미이행과 형식적 운영으로 실질적 교육체계 정비와 이수관리 강화가 필요함.
12. 청년수당 콜센터 운영 용역의 수의계약 사유·계약서류 오류 등 계약관리 부실이 확인되므로 시정과 절차 준수에 주의해야 할 것임.
13. 영테크 사업에서 최근 금융사기와 사고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사업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고, 민원과 위험 신호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에도 서울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됨. 청년들이 경제적 취약성에 따라 고수익 기대 심리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 사업이 포퓰리즘적 요소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음. 또한 내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만큼, 서울시의 관리 실패가 명백함. 상담사 검증 체계에 허점이 있으며, 보험·증권 판매직에 종사하는 상담사들이 금융상품 판매로 이익을 얻는 구조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담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이 큰 문제임. 자격 요건, 상담사 검증 방식, 이해충돌 위험 차단 등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14. 영테크 위탁 운영업체 중 한 업체가 재정난으로 폐업하면서 재무 상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위탁업체 선정 구조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 근본적인 구조 재설계가 필요함.
15. 청년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등 주거분야 집행률이 2025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잡아놓은 목표의 4분의 1, 7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사회주택 모델처럼 서울시에서 투여하는 예산의 두 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주택실과 논의하기 바람.
16. 자기성장 기록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수혜자격이 정지되는 청년수당 중도탈락 청년의 비율이 16%에 달하는데 이 중에는 본인은 이메일로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는 민원도 있으므로 억울한 중도탈락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기 바람.
17. 시가 운영하는 청년직무캠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사업 등 각종 청년일자리사업의 중복 지원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8. 청년 일자리사업에 연속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우 재선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인건비 및 인력 지원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19. 해외봉사단 운영 중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 고도화 방안 검토가 필요함.
2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의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미래청년기획관의 다른 사업은 모두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 청년수당 사업만 대상을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35세

이상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서울 청년수당 대상을 39세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21. 올해부터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서울린 참여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서울린은 6세 이상 24세 이하 저소득층의 입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인데 우선권을 주는 것은 부당한 정책 오류임.
22.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재무설계, 투자교육 등 영테크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던 회사인 위크노미가 정작 자기 회사 관리를 못해서 부도나고 폐업했는데 이는 민간위탁 업체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임.
23.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과 프로그램은 AI 등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 지원 사업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취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청년센터 멘토링, 청년 예비 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기존 프로그램들이 시대 변화에 맞는지 점검하고,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 서울시는 청년층의 고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글로벌도시정책관] — 26건

1.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관련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 힘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임.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업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하는데 문제의식의 맥을 잘못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임.
2. 서울시장의 외국인 면담 일정을 보면, 노들섬 국제설계 공모에서 최종 당

선작으로 선정되기 전에 토마스 헤더윅과 사전에 만나서 노들섬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개인전 오프닝에도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임. 단순히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3. 국제개발협력 ODA 예산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해 12월이고 올해 3월과 4월에 걸쳐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있었는데 아직도 수사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 감시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차제에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서울시는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로 인해 도시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도시외교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정책 효과를 높이기 바람.
5. 도시 간 교류·협약은 증가하고 있으나, 교류 이후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성과 설명이 부족해 정책의 실효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단순 교류 확대에서 벗어나 교류 이후의 변화와 성과를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6. 해외재해구호 사업은 인도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성을 확보할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함. 재해구호 사업에도 기준·절차·평가를 명확히 설정해 도시외교와 재해구호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7. 건설 현장, 물류창고, 제조공장, 숙박·요식업 등 서울의 주요 노동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의 노동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공식 통계와 복지 체계가 부재해 ‘보이지 않는 인구’로 남아 있는 상황임. 서울의 도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조사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8.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아동이 최대 1만 3천 명으로 추정되며, 상당수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행정상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기본적 지원에서 누락되고 있음.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미등록 아동·청년이 방치되지 않도록 실태 조사와 지원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9. 미등록 외국인의 임시체류 종료 이후, 서울시가 단속 대상인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한 정책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임. 미등록 외국인 및 아동·청년에 대한 대응 원칙을 정립하고, 보호와 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0. 테크스칼러십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 저조 문제 해결 방안과 경기도 소재 캠퍼스를 생활권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11. 테크스칼러십 장학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정착과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 정책 홍보 등 의무 활동 사항을 늘리는 것에 대해 추가 검토하기 바람.
12.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 재원도 투입된 만큼 지급 외국인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확보, 향후 시 외국인 정책 설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13. ODA 사업이 도시정책관에서 예산 편성하고 SH 산하 기관이 수행하는 구조는 비정상적이며, 이 편법적인 구조가 비리를 초래했음. 특히 사후 정산 방식에서 구조적 허점이 존재하고,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DA 전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야 함. 또한, 캄보디아 사업 내용이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다르게 기재되거나 누락된 정황이 있어,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14. 국제협력과 내에서 과장과 임기제 공무원의 부적절한 결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단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심각한 상황임.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15. 서울시는 현재 '마스터플랜·정책 자문' 등 용역 사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와 성과 평가 체계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임. 용역 사업 이후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사업이 본 사업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후속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됨. SH가 해외 ODA를 수행하는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ODA 사업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시 정립하여 절차, 기준,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함.
16. 가사사용인 사업 관련,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 방식 및 인센티브에 대한 해외 사례 등 용역을 진행하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 있음.
17. ODA 챌린지 사업의 경우 서울이 선진 정책을 선제안하고 해당 정책의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을 발굴하는 형태의 사업 방식도 논의가 필요해보임.
18. 민간위탁시설 채용·인력운영의 불안정·편법 요소 개선과 채용심사위원 중 외부위원 과반 구성 등 공정한 절차 확립이 필요함.
19. 글로벌유학센터의 경우 외국인·유학생 지원시설 간 중복사업과 저효율 구조를 통합·조정해 기능 재정립과 예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출입국업무 불편이 서울글로벌센터 전체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법무부와 협력해 민원환경 개선·인력 확충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21. 외국인정책 마스터플랜의 성과 부진과 추진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실행력·성과관리·재설계가 시급함.
22. 24시간 운영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예산이 부족해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조차 내외국인 간 예산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23. 2023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출생신고 없는 아동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두 배임.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데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발굴이 어려우므로 발굴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함.
24. 글로벌센터 빌딩의 2층 외교부와 법무부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보다 열악한 상태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함.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공실 문제와 낮은 임대료, 위탁 경영 문제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함. “공실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답변 대신, 실제 현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며, 임대 및 운영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네이밍라이츠를 활용한 민간 협력 방안을 통해 운영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5. 국제회의장이 비어 있는 시간이 많고 홍보가 부족해 대관 및 홍보 체계 전면 개선이 요구됨. 현재 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불가능하고, 대관 신청이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서비스 이용’ 페이지로 우회해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문제로 지적됨. 이 시스템을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함.
26. 글로벌도시정책관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국제기구 유치’가 지난 1년 동안 성과가 전무한 상태임. 국제기구의 정의 재정립과 비소속 상태의 기구들, 신규 설립 예정 기구 등에 대한 타겟팅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

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기본 업무 프레임 자체의 재정비가 필요함.

[서울디자인재단] — 19 건

1. 디자인재단이 최근 경영평가에서 조직·인사관리 점수가 평균 이하로 매우 낮게 나왔으며, 특히 2024년 채용 실태조사에서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문제가 드러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내부 직원들의 업무태만, 이직률 증가, 전문성 부족 등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어 조직 인력 체계 컨설팅 용역 결과를 단순 용역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개선에 활용해야 함.
2. 유구전시관 이전·전시 사업은 지난해 추경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10억 원을 확보했음에도 1년 넘게 진척이 없어 준비 없이 예산만 확보한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 사례로 지적됨.
3. 디자인재단이 보일러 문제와 같은 기초적인 시설 문제로 형사 고발까지 당한 것은 기본적인 행정 대응 능력과 소통 체계가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4. 디자인재단 이사장이 재단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회 질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함. 특히 DDP 운영과 관련해 SBA 위탁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기본적인 행정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있음.
5. 새활용 플라자 사업이 디자인재단 본연의 업무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해당 기능은 서울창업허브 등과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재단의 사업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6. DDP 공간을 SBA에 위탁하면서 발생한 수익 및 업무 분담 문제에서 디자

인재단은 본래 수행해야 할 업무를 SBA에 떠넘기는 동시에 SBA 위탁 업무까지 대신 수행하는 이중 구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간 회수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7.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연간 약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사업 개념, 실행 계획, 추진 현황이 명확하지 않고, 센터의 역할과 책무도 정리되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 구체적 실행 계획과 행정 절차,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재단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요구됨.
8. 서울디자인재단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가치가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실질적 포용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임. 참여 이후 보완이 아닌, 기획 단계에서부터 포용적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포용성 기반을 강화하기 바람.
9. 카페 소송 건 관련하여 소송이 한참 진행 중엔 올 초에서야 추가 무단 점유자를 발견하는 등 재단의 소극적 대응이 매우 아쉬움.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용 공간인 만큼 향후 소송 진행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10. DDP 내 운영 정지된 보일러 관련,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보일러 시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매년 12월 실시하는 자가측정에서 측정 의무 이행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임. 향후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 발생시 소관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DDP 정기 감독을 강화하여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11. 서울디자인재단이 다수의 관련 용역을 반복하고도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기획역량과 정체성 부재가 드러난 만큼 중장기 계획 수립과 내부 역량 강화가 시급함.
12. 우수디자인상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15년 째 한 전시에만 의존하는 등 해외전시 전략·성과관리 미흡으로 전략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함.
13. 새활용플라자는 재단 본연의 디자인·창업 지원과 거리가 있어 설립 목적과 불일치한 위탁·공간 운용 구조를 재정비하고, SBA 공간 회수·스타트업 지원 정상화 등 개선방안을 용역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 개편이 필요함.
14. 디자인문화를 확산하고 디자인산업을 지원하는 설립 취지와 달리 현재의 서울디자인재단은 축제와 행사를 수행하는 이벤트 회사로 전락한 느낌인데 디자인재단 본연의 역할을 찾아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바람.
15. 재활용 + 창작 + 디자인 = 새활용인데 새활용플라자 운영과 관련해 인력 구성, 업무분장, 사업내용 등 어디에도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없음. 개선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6. 동대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동대문 슈퍼패스 사업 관련하여 할인 비용과 홍보 비용 등 상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상권활성화 효과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17. 디자인문화본부 조직에서 시설팀이 본부에 속해 있는 현 구조는 일반적인 인사·홍보·안전·시설 기능이 경영지원 부서에 배치되는 조직 원칙과 맞지 않아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체 조직 구조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함.
18. 문화본부에는 시설관리나 경영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 중심의 인력구성만으로는 안전·시설·경영관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한

계가 있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과 인력 보강이 요구됨.

19. 서울디자인재단은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2022년 행감에서도 제기되었음에도 2년째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건의사항

36건

[도시공간본부] — 10 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하기 바람. 또한,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볼 필요 없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기 바람.
2. 도시계획 규제가 획일적 기준 적용에 머물고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창의적 정책 실험이 제약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의 맥락과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서울시와 조건이 맞지 않는 해외사례인 용적이양제를 무리하게 시행하려다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으며 결국 유야무야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냉철하게 판단하기 바람.
4. 투기과열지구 등이 아닌 자치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의 불합리성에 대해 중앙 부처에 서울시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기 바람.

5. 종로구청 신청사 예정지인 수송13지구, 오랜기간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직2구역, 종로구청장이 계속 붙들고 있는 창신1동 남측 등 지구 단위계획 수립 후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람.
6. 공중보행로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줬는데 준공 후 개방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입체공원제도와 관련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인식을 넓히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7. 신내 택지개발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6년 상반기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바람.
8. 공공시설에 네이밍 라이츠 제도를 도입해 기업 마케팅 수요를 활용하고, 그 수익을 시설 운영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서울시는 예산 부담 없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재원 확보가 동시에 가능한 실질적 원인 전략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서울시의 개발 및 규제 정책이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시장 원리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효과에 대한 성찰과 시장 질서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 수요·공급 구조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10. 도심 혼잡과 교통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서도 공중 보행로를 도입해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균형발전본부] — 10 건

1. 석재 수급 문제로 감사의 정원 조성의 본 취지가 훼손되거나 평가절하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2.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DDP', '서울디자인워크' 등 다양한 브랜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해왔으나, 도시 전체의 구조와 질서를 설계하는 도시디자인 철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정책이 색·형태·재질 등 시각적 요소 중심의 상품디자인에 편중되어 있음. 도시의 교통·건물·동선·생활 패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도시디자인 관점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바람.
3. 신성장 거점사업 중 '망우리묘지' 명칭을 시민 친화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4. 국가상징공간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5. 도시재생기금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용역」은 일반용역이 아니라 학술용역으로 추진했어야 하므로 주의하기 바람.
6.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수립된 청와대 주변 지역 상권 녹지 활성화 계획은 대통령실이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종단됐는데, 이제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기로 하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음.
7. 광화문광장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은 시민의 헌신과 노력을 기리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조형물 설치에 그치지 않고 상징성과 지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사업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음.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석재 등 상징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시민에게 오래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추진하기 바람.

8. '23년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 시 구로구가 제안한 온수산단 개발 사업은 최종 선정되지 못했음에도 불구, 온수역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사업과 묶어 관리 중임. 추후에도 자치구가 제안한 사업들 중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주기 바람.
9. 남산 서울타워가 50년 된 역사적 건축물임에도 안전성과 관리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미래 활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2 남산타워 건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잠실 스포츠 마이스 프로젝트에 네이밍 라이츠를 도입해 운영 자금과 시설 보수·개보수 비용을 확보하고, 기업은 브랜드 홍보 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원-원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디자인정책관] — 5 건

1. 빛공해방지계획수립 용역 수행업체의 제안서에 명시된 공학기술사가 회사 소속인지 확인 후 보고 바람.
2.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시민위원들이 미술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고, 비전문가인 시민의 눈으로 보고 참여해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바람.
3.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은 경찰청과 치안협의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업무로 도시경관보다 범죄예방, 안전 영역으로 보이는데 디자인정책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바람.
4. 디자인정책관 - 디자인재단 - 실국 간 협업 구조에서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해 정책 추진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조직 간 협업 구조를 정비하고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5. 디자인 분야에서도 시민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을 마련해 정책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미래청년기획관] — 4 건

1.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장학재단법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과 금융회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수혜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예산 규모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지난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7년 3월 시행 예정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온둔 아동·청년 지원 등 이미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으므로 차제에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3. 단기 알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로 전전하며 체감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청년 1인가구의 60%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내몰았음. 서울시 청년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서울시 청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이 수반되기를 간절히 바람.
4. 서울시는 단순히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세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함. 행정과 정책은 세부적이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미래 트렌드 변화에 맞춘 정책을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실행해야 함.

[글로벌도시정책관] — 6 건

1.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만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참여하다가 실효성이 너무 떨어져서 거의 중단된 것으로 보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돌봄 노동의 수요가 계속 커질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
2.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약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존재하며, 이 중에는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 등 현지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적 자원이 다수 존재함에도, 서울시는 이들을 도시외교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현지 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는 재외동포를 도시외교의 핵심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기 바람.
3. 재외한인 인적 정보를 정확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바람.
4. 서울 명예시민을 행사 초청, 인터뷰 기고 등 일회성 활용이 아닌 서울의 각종 사업과 정책에 조력자로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함.
5.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률이 20%가 채 안되는 상황인데 좀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조직과 인력 구성의 균형과 정합성을 재점검해야 하며, 서울을 알리는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중복 수행되고 있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타 부서와 혼재된 업무 구조로 인해 중복, 비효율, 방향성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책 총괄 및 기획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함.

[서울디자인재단] — 1 건

- 서울디자인재단의 종합계획 수립 후 내년 초에 보고해 주기 바람.

기타(자료제출 등)

----- 15건

[균형발전본부] — 1 건

- 광화문 광장 조형물 관련
 - 광화문 광장 상징 조형물 제작 구매 설치 관련된 내부 방침서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업체별 제한 요청서, 심사 위원회 명단 일체 심사 내역 심사 결과 일체

[디자인정책관] — 1 건

- 서울형 흡연부스 가이드라인 개발 3종 자료(시범설치 방법, 개발과정, 설치비용 등 세부 내용)

[미래청년기획관] — 7 건

- 24년도 고립은둔 청년 사회복귀자 통계자료.
- 동아리 지원사업 관련 청년 관계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 (길고양이 배식, 연합 MT 등)이 있는데 해당사항에 대한 사유.

3. 2023~2025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계획변경 현황.
4. 미래청년일자리 투자심사 관련 여부, 사업 용역을 사무관리비로 시행하는 사유, 사업 용역 긴급입찰에 관한 사유.
5. 청년수당 콜센터 운영 용역 공문 오기 사유 및 수의계약 관련 문서 누락 사유.
6. 2023~2025년도 영테크 상담사 위촉관련 평가 자료.
7. 청년수당 1차모집과 2차모집 서류통과율 차이 사유.

[글로벌도시정책관] — 3 건

1. 서울외국인주민센터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방침서 중 '24년 추 진실적 데이터 수정하여 제출(행감제출자료 283p).
2. 테크스칼러십 '25년 생활비, 보험료, 항공료 수혜내역(행감제출자료 473p~474p).
3. 서울글로벌센터 2차 채용심사위원 명단.

[서울디자인재단] — 3 건

1. 보일러 운영정지 건 관련 수도권 대기환경청 고발 건 의견서 제출 내용.
2. 출연금 예산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
3. 재단 중장기 경영전략 관련 과업지시서,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향후 재단 적용 계획 일체

※ 주요 감사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 청취, 시책질의 · 답변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관명	주요 감사사항
도시공간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간 정책 결정 및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용도지역 · 지구, 구역의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주택공급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수립 · 결정에 관한 사항 ○ 서울대개조 관련 정책 수립, 국가상징공간 조성 업무 추진현황 ○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수립·운영, 재창조 전략 추진 ○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구상,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현황 ○ 공항권역 고도제한 국제기준(ICAO) 개정안 대응 발전방안 추진현황 ○ 용적이양제(TDR) 도입 및 거래관리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신규·재지정 검토 등 총괄 ○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및 관리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 · 시행,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 등 관리 현황
균형발전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총괄·관리 ○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구조화 ○ 도심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및 남산콘돌라 도입 추진 ○ 도시개발 체비지 운영 및 관리 ○ 동북권 창동·상계 동북권역 경제거점 조성 사업 총괄·조정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조정 ○ 서북권 신산업 전략거점 조성 및 수색·DMC역 복합개발 사업추진 현황 ○ 서남권·동북권 신규 거점사업 추진 현황 ○ 광화문광장 종합운영계획 및 세종로공원 정비사업 등 광화문 광장 일대 편의·상징성 강화 관련 사업 총괄·조정

디자인 정책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정책 수립 / 디자인서울 2.0 기반조성 ○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진흥 ○ 디자인재단 지도·감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리·운영 ○ 디자인산업 정책기반 조성 / 디자인 협력 개발 및 확산 ○ 디자인전문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디자인 활용지원 사업 추진 ○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및 야간경관 개선 ○ 좋은빛 환경조성 / 빛 활용 축제·미디어 사업 추진 / 옥외 광고물정책 총괄 기획 등
미래 청년 기획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 기본계획·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자율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청년수당 사업 운영 및 관리 ○ 미래 청년 일자리, 직무체험 프로젝트, 청년쿡 등 일자리·창업 관련 사업 시행 ○ 서울 영테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등 금융 관련 사업 시행 ○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관리 ○ 청년 마음건강 사업, 고립·온둔청년 지원사업 시행 ○ 청년정책 홍보 및 소통 전략계획 수립·시행 등
글로벌 도시 정책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외국인정책 관련 정부 협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인재 및 유학생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기획·조정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사업 ○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외 지역과의 국제 교류 활동에 관련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지역의 교민, 시민 · 민간단체와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 국제기구 · 회의유치 및 지원 · 협력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국제개발협력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재) 서울 디자인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디자인 행사, 전시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사항 ○ DDP 운영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DDP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사항 ○ 디자인인재발굴 및 비즈니스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브랜드 및 DDP 자체 브랜드 정체성 확립 및 상품개발과 확산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운영 등

10. 교통위원회

□ 총괄

(단위: 건)

구 분	계	시정조치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자료요구)	비고
계	305	171	88	46	
교통 실	139	71	50	1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33	20	11	2	
서울교통공사	85	50	13	22	
서울시설공단	48	30	14	4	

【교통신】 시정·처리 요구 71건

1. 동대문구 자율주행 버스 관련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실시간 면허 인증 즉시 도입, 미성년자·무면허 이용 완전 차단, 안전 외면한 사업 관행 시정 및 공동 안전기준 준수, MOU 불이행 업체 제재 강화할 것.
3. 공유 전기자전거와 관련하여 방치 자전거 즉시 회수 체계 의무화, 견인 사각지대 해소 및 조례 개정 추진 명확화, 전기자전거 사고 통계 분리·체계적 관리, 주차장 확충 및 관리 기반 강화할 것.
4. 스마트쉘터 운영과 관련하여 고장 및 미운영 시설 즉시 정상화, 키오스크·미디어파사드 등 핵심 기능의 지속적 미작동 문제 조속히 해결, 상용화 불가·반복 고장 시설의 폐기·축소 등 재정 효율성 확보, 스마트쉘터 확대 중단 및 고장 시설 활용·정비 방향 신속 결정할 것.
5. 마을버스와 관련 흑자업체까지 지원되는 왜곡된 재정지원 구조 개선, 불법적 보조금 수령 방지 시스템 마련 및 부정수령 보조금 환수 조치, 조합·업체의 회계 부실 및 재무 투명성 제고 위한 방안 마련할 것.
6. 택시 전체 운전자의 75% 이상이 60세 이상인 현실을 고려해 택시조합·개인택시조합 등과 협력해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고령운전자 관리대책 수립하고,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 전력자가 운수종사자로 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경력 조회 및 취소·정지 처분을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화할 것.
7. 자전거등록제 25개 구 중 2개 구만 시행하는 현 체계를 개선하고, 서울시 차원의 등록 활성화 정책 강화하여 도난·방치 문제 개선.
8. 양재도첨 물류단지 개발과정에서 2023년 8월 14일 변경승인은 기존 사업자를 수혜자에서 원인자(책임 주체)로 전환시킨 결정적 분기점으로,

행정 절차상 매우 중대한 쟁점임.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부관의 변경은 처분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업자에게 불이익 또는 책임을 전가하는 변경은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 원칙 측면에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임. 시민들은 하루빨리 물류단지가 정상적으로 개발되어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는 행정의 책무이자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함. 따라서 서울시는 법률적 요건 검토와 사업자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다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적 과오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시민이 기대하는 결과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도출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서울시가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정책의 본래 목적 달성 및 양재도심물류단지의 신속한 개발 및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균형 있는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람.

9.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 결과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 향후 임금협상 효과 분석, 시 재정부담 최소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10. 버스 광고, 정류장 명칭 사용, 정류소 관리체계 개선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수익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11. 버스정류소 관리체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진행 시기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화 계획·공모 일정·재정 효과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정비할 것.
12. 공영차고지 CNG충전소업체 중 EV 사업 비용을 CNG 충전소 회계에 포함해 영업이익이 실제보다 축소된 문제에 대해 회계를 분리·정정하고, 정확히 재산정하여 환원 조치할 것.
13. 공인회계사 검토 결과의 단순 확인을 넘어 세부 항목별 증가·감소 사유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할 것.
14. 공영차고지 CNG충전소업체와의 계약서(협의서) 용어 불일치로 인해 해석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구를 정비하고, 정확한 이익 기준을 명확화할 것.

15. 감사 과정에서 수 차례 자료를 요구해도 재무제표 1장만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료제출 의무를 미준수하는 문제가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체계를 개선할 것.
16. 서울시는 서울CNG 재무제표·협약 이행 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고, 미납금·부당이득이 확인될 경우 사용 허가 취소, 환수, 형사고발 등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7. 전년도 감사에서 정류장 명칭 정비를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 변경이 이행되지 않은바, 올해 중으로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 명칭을 정비하고, 추진 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것.
18.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 실제 작업 내용·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고, 허위·부실 유지보수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엄정히 묻는 한편, 계약 구조를 개선할 것.
19. 교통실이 체결한 관련 협약서·계약서를 전수 점검하여 권리·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개정·재체결 방안을 마련할 것.
20. 미성년자 이용 행위 중단 및 재발 방지-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민사적으로 피해 사고에 대해 업체의 공동 책임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상기시키며, PM 업체들은 미성년자 무면허 이용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도덕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업체 및 서울시 차원에서 대안 마련 필요.
21. 바우처 택시 기사들이 봉사료를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승차 거부, 폭언, 불친절, 승하차 지원 미흡 등 운영 규정(제6조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인센티브의 목적 및 장애인 특성에 대한 운전자 재교육을 강력히 강화하고 불만 택시 기사에 대한 배제 등 관리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이를 위한 계획수립 보고 바람.
22. 현재 나비콜(1,600대) 우선 배차 후 온다콜(7,000대)로 전환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긴 대기 시간 및 낮은 성공률 발생. 나비콜과 온다콜의 상호 연동을 통해 주변 택시를 모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배차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 요망. 해당 계획 보고 바람.

23. 공단 장콜에 비해 법인장 콜 교육 시간이 현저히 적음. 공단 장콜의 운전원 경우 1년에 52시간의 보수교육과 법정교육을 진행하는데, 법인장콜 운전원의 교육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함.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는 공공복지의 핵심 영역임. 운영 주체가 다르더라도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은 같아야 하므로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법인 특장택시의 교육을 강화할 것.
24. 일부 버스회사의 과도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임금체불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해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음. 아울러 현행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의 '대여금 관련 10점 감점'은 제재 효과가 부족하므로, 감점 상향 또는 별도의 제재 장치를 도입해 준공영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함.
25. 서울시는 시민에게 최고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시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낮은 요금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은 이해하나, 운송원 가 상승, 인건비 부담, 시내버스 대출금 등 운송업계 수익 악화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26.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예정) 지연으로 인해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도 지연될 수 있음. 비록 대외비로 정보 교류가 어렵더라도, 서울시 계획이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 대폭 수정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협조 및 교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27. 강북횡단선 등 3차 철도망에 기대를 거는 시민들의 계획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한 진행 상황을 안내하여 소통을 강화 요구.
28. 서부선 수요 예측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등의 SNS 루머) 돌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 큼. 현재 진행 중인 리맥(LIMAC) 심사는 수요 예측이 아닌, SH공사의 공기업으로서 출자 적정성을 따지는 단계임을 명

확히 홍보하여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것을 요구함.

29. 서울시는 SH공사 출자 적정성 심사 적극 대응 필요. SH공사가 홍제역 세권 재개발 등 주택 외 인프라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SH공사 출자 적정성 심사에 적극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서울 시의 확실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액션을 취해 줄 것을 요구.
30. 성동구와 광진구의 PM 견인 건수가 0건으로 제출됨. 실제 견인 건수가 없는 것인지, 데이터 집계 누락인지, 혹은 아예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교통실 차원에서 정확히 확인 필요.
31. 만약 견인 건수가 '0'인 것이 지자체의 노력에 따른 모범적인 결과라면 그 노력을 파악하여 다른 구에 전파하고, 단속이 부실했던 것이라면 엄중하게 조치하여 PM 정책 방향성에 반영안 마련 요구.
32. PM 이용자들 역시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불법 주차 이용자에 대한 확실한 폐널티 부과(이용 정지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 할 것을 당부.(PM회사, 서울시)
33. 발렛 주차 등 이용자 외 제3자가 PM을 무단으로 이동시켜 불법 주차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까지 이용자에게 폐널티를 부과하기 어려운 만큼, 업체 및 지자체가 불법 적치, 제3자 불법 이동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요구.
34. 서부선 설계감리비 12억 원에 대한 2026년도 예산 확보 필요. 서부선 예산 투입과 경위 등 전반적인 보고 요청드리며, 서부산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시민 소통 요구.
35. SH공사의 출자 적정성 심사(LIMA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실시협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실시협약 준비 상황 점검(협약안 보완 여부)과 함께 실시설계 착수 후 공정 진행의 최단기 스케줄과 일반적인 스케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요구.
36. 물류센터 조성으로 인한 공공기여금(약 1,700억 원) 중 교통 관련 공공기여분(도로 보수 및 확장 등) 세부 이행 계획 및 처리 내용을 서울 시 차원에서 확실히 재확인하고, 그 결과 보고 요망.(서울시 차원 확실한 관리 필요)

37. 지하 7층, 지상 27층 규모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 특히 신정동일하이빌 등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 진행 상황 및 피해 저감 노력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
38. 'ICT, 콜드체인 스마트 물류 시스템' 등 일반 시민에게 생소한 전문 용어에 대해 시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요약하고 설명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강화 요구
39.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시와의 합의(서비스 개선 및 보조금 지급 상향)에 따라 운행 계통 및 운송 서비스 개선 계획을 약속된 기한 내(유예된 11월 말까지) 적극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서울 차원의 철저한 관리 요구.
40. 운행 효율화를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된 버스 운행 방식(오전/오후 교체 운행 등)이 보조금 최대 2.4배 증액의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오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차량별/기사별 운행 실적)를 확실하고 투명하게 구축하여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
41.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 및 운행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향후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운전자 ID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고 운행 데이터를 확실하게 전산화할 것 요구.
42. 지하철역 내 소란 행위, 운행 방해, 폭행 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행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82조(과태료 조항)에 근거, 서울시가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시민 보호 차원에서 행위자들에게 과태료 강력하게 부과 요구.
43. 지하철 역사 내 1역사 1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현황 등 장애인 및 임산부를 위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정책 성과에 대해 종합 홍보 계획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것을 요구.
44. 현재 전장연 시위로 인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시민 오해 심각. 이에 대한 해명 자료 및 홍보를 신속히 할 것을 요구.
45.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를 차량기지 예정 부지로 이전하는 실시설계 용

역이 내년 7월 31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 요망. 차량기지로서 전력 확보 및 보안 문제 등 부대 설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준비 당부.

46. 자재센터 이전 계획이 서부선 사업 시행 시점과 연계하여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시점 관리 요구.
47. 12월 27일 마감 기한이 임박한 서부선 사업의 협약 체결을 위해 결사항쟁의 자세로 임하여 재조사로 인한 행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당부.
48. 마을버스 97개 사 중 86%가 특정 회계법인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담합 및 비위 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회계 풀 자체를 변동시키고 공평하게 여러 업체가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요구.
49. 회계 컨설팅 예산(약 1억 원)을 활용하여 마을버스 회계의 객관화 및 서비스 개선, 관리 체계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
50. 노후 시내버스의 실효성 있는 차량 성능 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실 관리 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노후 차량 성능 저하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관리·점검을 실시할 것.
51. 노후 시내버스 대·폐차 권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관리 및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2. 노후 시내버스의 연장검사 시 출력 테스트에 냉·난방 가동 등을 포함하여 연장검사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53. PM 사고에서 20대 이하 비율(38~40%)과 지속적인 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고 예방 정책을 마련할 것.
54.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이 내년 3월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기한 내 구체적인 개선방안 수립·시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55. 버스 노조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 부담 증가분

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56. 수공협 부채 누적 및 대출 한도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구조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57. 마을버스 기사 고령화로 인한 자료 누락, 수기 입력 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행·수요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 입력·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58. 마을버스의 기준 운송원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서울시 운송원가 산정 과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
59. 마을버스 업체가 흑자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은행 대출 조건 유지를 위한 조정 회계일 수 있는 만큼, 업체별 금융거래확인서 등 재무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경영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60. 마을버스 적자·흑자 현황, 노선별 수입 구조, 운송원가 등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마을버스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할 것.
61. 핵시자전거 관련, 브레이크를 제거한 자전거의 위험성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핵시자전거 이용이 유행하면서, 제동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조적 위험성, 법적 책임, 안전 규정 등이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캠페인, 홍보 등 강화가 필요함.
62. 따릉이포 관련,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따릉이포(자전거 정비업체)에서 시민 요구에 따라 브레이크를 제거해주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함. 해당 업체는 '브레이크 제거 불가'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거 작업을 실시한 바 있어,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남. 지도·점검 강화 필요.
63. 마을버스 관련, 실제로 운행되지 않는 마을버스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마을버스의 재정 지원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운행 여부와 인건비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개선 바람.

64.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미성년자 면허 인증 의무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이용과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학원가와 학교 주변은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로, 킥보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이로 인한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학교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이 필요함.
65. 신림3 공영차고지 CNG 충전소 이전 차질로 인해 서울창업허브 착공 시점이 당초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이상 지연된 상황임. 이는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및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핵심 전략사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소 이전 일정의 신속한 재조정,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착공 일정에 맞춘 인허가 및 행정절차 선제적 이행, 사업지연 방지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서울창업허브가 더 이상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람.
66.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미 제시된 만큼, 서울시는 행정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행방향을 명확히 수립하고 신속히 대응할 책임이 있음. 대응을 미루거나 불명확하게 처리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지연이자, 소송비용, 추가 보전비 등 시민의 세금으로 전가되며,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됨. 따라서 서울시는 법적 책임 이행, 행정 신뢰 회복, 재정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통상임금 반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히 협상이 지연될수록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타 지자체 사례처럼 통상임금을 먼저 반영하고, 임금협상을 별도로 내년으로 분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67.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의 독점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주기 바람.
68. 여성 운전자를 위한 전용 휴게공간 확보, 야간근무 선택제, 안전장치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여성 운수종사자 비율을 확대해 주기 바람.
69. 업체별 상황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주기 바람.

70.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추진에 있어, 원만한 협의로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음.
71. 양재 물류단지의 공공기여 등 사업 공익성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궁극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시정 · 처리 요구 20건

1. 우이신설연장선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국비 32억 원에 상응하는 시비 18억 원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할 것, 추경이 아닌 본예산 수정 편성이 필요함. 2026년 10월 착공 예정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재원 조달 계획을 명확히 수립할 것
2. 공사장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59건(사망 2건 포함)의 사고가 있었는데 시공사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제재 기준 및 집행 강화, 전문 통역 인력 배치 등 다국어 안전교육 강화할 것.
3. 도시철도사업은 장기적·연속성이 핵심인 국가 기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예산 편성 방식으로 인해 시비 부족 시 국비가 미교부되거나 불용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음. 이는 사업 지연 및 재정 비효율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가·지자체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함. 이에 따라, 사업 준공 시까지 국비·시비 매칭비율을 사전에 확정하고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이를 적극 설득해 주시기 바람. 매칭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할 경우, 국비 불용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4. 진접선 사고 사상자·부상 정도 등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만큼, 피해 규모와 중대재해 적용 여부를 정확히 재점검하여 공식 통계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부상자 치료·보상 절차도 재점검해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할 것.
5. 도시철도국이 체결한 관련 협약서·계약서를 전수 점검하여 권리·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개정·재체결 방안을 마련할 것.
6.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안전사고 관련 레일대차 사고 원인 분석 및 안전 교육 미흡((주)동위)
 - 안전 교육 매뉴얼 검토필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동력식 대차 작업 안전 수칙 및 안전 점검표(테이블 위 탑승 금지, 경사 급회전 금지)에 대해 대표이사가 직접 보지 못했고, 그만큼 안전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생략됐을 가능성이 높음, 도기본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 필요.

7.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안전사고 관련 레일대차 사고 원인 분석 및 안전 교육 미흡((주)동위)

- 작업 안전 관련 자료 숙지 및 배포 사고 이후 해당 대차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치로 대체했다고 밝혔으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위험 작업 및 장치에 대한 법정 및 회사 자체의 안전 매뉴얼을 포괄적으로 정리, 배포하며 작업자들에게 철저히 교육 요망.

8.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안전사고 관련 레일대차 사고 원인 분석 및 안전 교육 미흡((주)동위)

- 공기 지연 및 비용 문제 재확인 필요, 사고로 인해 약 25일간 작업이 중지됨. 진접선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2~3년 지연되었고 공사비가 증가한 상황으로, 이미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많이 지연된 상황. 해당 사고로 인한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와 실제 공기 영향 여부, 비용에 대해 명확히 검토하고 대안 마련 요망(도시기반시설본부 차원의 확인 필요, 보고요망)

9. 작년 이월되었던 서부선 감리비 예산(12억 원)이 기획조정실에서 전액 삭감되어 온 상황, 사업 추진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금번 예산 심의 시 감리비가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과 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비 자료 누락(매년 9월분까지만 제출)에 관련된 사항 상세히 파악한 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관련 자료 재제출 요구.

11.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서부선 시설비 지출 내역(소량)이 노량진 자재센터 차량기지 이전 설계비로 사용된 것을 확인.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 요망.

12. 동북선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어두운 지하 공간에서 신호수와 일반 작업자의 형광 조끼 색상이 동일하여 신호수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문제 지적, 신호수 복장을 구분하고 점멸 발광이 가능한 조끼 등을 활

용하여 신호수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신호수
식별 체계 개선.

13. 신호 장비 및 지휘 철저 사고 당시 신호수가 경광봉 등을 들고 있지 않았고, 반복 작업이라는 이유로 신호수의 지시 없이 굴착기가 임의로 이동했던 점을 지적하며, 신호수에게 경광봉 등 발광 장비를 지급하고 운전원과 신호 체계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 및 준수하는 등 작업 지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
14. 굴착기 운전석에서 우측 4시 방향(통상 사각지대)에서 작업자가 식별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 사고 후 설치된 360도 식별이 가능한 어라운드 뷰 등의 안전장치 적극 활용 및 공사 현장 전반에 도입 요구.
15. 소음 등으로 인해 신호수의 지시 전달 체계가 미흡하거나 장비 기사의 주의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전기 활용 등 굴착기 기사와 신호수 간의 명확한 소통 및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
16. 현재 안전 관리 체계와 매뉴얼 전반적인 재검토 요청, 지하 및 터널 공사현장 후진/이동 중 사각지대 사고 예방에 대한 보완 사항을 확인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함.
17. 한신공영(주) 안전사고 및 비위행위 철저 검토-최근 5년간 사고 발생 상위 업체 중 3위(2025년 6건 등)라는 불명예스러운 상황 지적,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검토할 것을 요구.
18. (한신공영(주))현장 비위 행위와의 연관성 파악-용접 화재 예방 미흡, 철근 가공 계획 미준수 등 연간 4~5건씩 발생하는 자잘한 비위 행위가 현장 안전 문화의 나비효과(풍조)로 이어져 안전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내부적으로 상세히 확인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
19. 위례선 트램 관련, 신호체계 교통안전심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전체 일정 차질을 방지해야 하며, 시운전·교통안전심의와 연계된 전체 공정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주민·현장 TF 운영을 강화하여 펜스 설치·철거 등 현장 민원에 적극 대응 필요.

20. 동북선 사고는 단순한 시공상의 실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됨. 특히 시공사와 감리, 그리고 본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본부와 시공사는 사고를 일회성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사전 위험예측-상시 모니터링-즉각 대응으로 이어지는 통합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람. 사고 재발 방지 차원을 넘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 사고를 유발하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사·감리사에 대해 입찰 제한, 평가 감점, 계약상 폐널티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중대한 사고의 경우, 향후 유사 사업 참여 제한, 재발 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 능력 평가 강화 등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서울교통공사】 시정 · 처리 요구 50건

1. 경기문 의원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도 보고하기 바람.
2. 창동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92% 공정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향후 시운전 및 설치검사 철저히 관리, 부품 확보 및 예비 부품 준비 강화할 것
3. 창동역 개집표기 교체와 관련하여 2026년 예산에 개집표기 교체비용을 반영하고, 태그리스 교체사업과 연계하여 재정 확보 및 관리하여 창동역 유동인구 폭증 대비할 것.
4. 창동민자역사와 관련 이행보증금 1·2차 분리납부를 위한 협약서 수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이행보증금 납부 지연 방지. 납부 지연이 공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 2026년 3월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 협조 당부.
5. 전동차 4호선 1편성 미납품, 5·8호선 초도편성도 미납 등 계약기한 지속 초과하고 있는데, 다원시스가 제출한 자금조달·공정 정상화 협약의 실행 가능성 검증과 이행 점검 체계를 즉시 구축할 것.
6. 임직원 성비위 문제 관련 성희롱·성비위 사건은 기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무관용 원칙과 철저한 조사·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현재 징계까지 평균 4~8개월 소요되는데 징계 전까지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및 보호 프로그램 의무화할 것. 성비위 사건이 외부로 이첩되는 것은 내부 고충처리 및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신호로, 특히 간부의 성비위 사건은 권력 관계로 인해 2차 가해·압력 가능성이 높아, 일반 직원과는 다른 강화된 특별 조치 마련 필요.
7. 물품보관함 또타라커가 노약자·외국인에게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는, 전용 앱 기반의 복잡한 이용 방식과 접근성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비위사실까지 적발된 만큼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8. 다원시스 전동차 교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주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차 사업까지의 선급금 사용 내역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의 중대한 허점으로 판단됨. 현재 제출된 자금조달 방안 또한 형식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상태임. 향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행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재정·납품 계획 제출, 공사의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 가동, 9차 사업 등 남은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 및 납품 일정 준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또한, 사업 구조나 계약 조건 등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응 원칙과 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최악의 상황(납품 실패, 계약 파기 등)에 대비한 대체 공급 방안 및 비상 대응 시나리오도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람.
9. 노동자 대표와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작업환경 안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
10. 통합관제센터 하부 면진 이중마루 설치는 시스템 안정성과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면진 설비 및 특수마감 시공 면허를 보유한 전문 시공사의 참여가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전문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제기된 상황이므로, 시공 적정성 및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함. 시설의 핵심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문 시공 면허 보유 여부 확인, 시공 품질 점검 및 계약 조건 준수 여부 검토 및 필요시 시공사 교체 또는 재시공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11. 위례트램 차량의 핵심 내부 부품이 해외 제품(중국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부품 수급 지연 시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 이 높아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도시철도 특성상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와 운행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부품 조달체계와 국내 재고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수

적임. 이에 따라, 해외부품 수급 리스크 분석 및 국내 재고 확보 계획 수립, 긴급 유지보수 대응 체계 마련, 공급업체와의 SLA(서비스 수준 협약) 명확화,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술 전환 또는 국산화 검토 등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람. 위례트램이 서울시 최초의 트램사업인 만큼,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안정성과 대응 속도를 최우선 관리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12.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가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 및 평가 방식 문제로 경쟁이 저해되고 있어, 입찰·평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수 업체 참여가 가능한 공정한 계약 구조로 개선할 것.
13. 핸드레일 소독기가 설치 후 방치·철거, 낮은 가동률 등으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만큼, 설치·철거·유지보수 전 과정의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여부를 명확히 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시정할 것.
13. 서울교통공사가 체결한 관련 협약서·계약서를 전수 점검하여 권리·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개정·재체결 방안을 마련할 것.
14. 과거 타임오프 위반 사건에서 공사의 근태 관리 책임 확인. 현재 근태에 대한 시스템화, 이원화(노무처 + 소속장) 관리 체계를 도입했으니 근태 관련 유사 사건 재발 시 '공사의 관리 책임이 없다'는 판정 받을 수 있도록 이전과 다르게 엄격한 근태 관리 감독 이행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리검토와 근태 감독 기준 마련 후 보고 요망.
15.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해 승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 관련 인사 내규의 개정을 검토 후 개선 시급.
16. 타임오프 위반자가 표창 추천을 받고 결격 사유 조사 및 상벌위원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최종 단계에서 감사에 의해 취소됨. 결격 사유 조사 과정 미흡성 보안과 추천 과정 자체를 예방하지 못한 사안 등을 상세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기준 마련 시급)
17. 혈중알콜농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열차 운전자의 취중 출근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내 2회 이상 적발 시에만 징

계 조치가 이루어지는 현행 내규 문제 심각. 한 번의 승무 전 음주 적발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내규 개선 및 강화 시급.

18. 철도안전법 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출근 후 환복한 시점을 포함하여 업무의 범위와 시작 시점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음주 숙취 상태로 출근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 요망.
19. 파면·해임 징계 취소 판정 후 행정소송 계류 중인 32명 중 7명이 근속 승진 결정. 반면, 경징계(감봉, 견책 등)를 받아 처분이 확정된 직원 중 승진대상자 4명은 승진 제한됨. 근속승진 적법성 재검토 및 소명 필요 하며 법리검토 다시 받고 이를 기준으로 내부기준 전면 개선 요구
- 법률 검토 결과 현행 내규로 쟁송 중인 자의 승진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는 이와 같은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 쟁송 중인 경우(행정소송 중인 경우)에도 승진할 수 없도록 인사 내규를 명확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20. 승진 관련 노무 자문 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2조의 단서 조항(징계처분 요구 등의 승진 제외 규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음. 법률 자문 오류 확인된 만큼 오류 최소화를 위한 기준 필요하며, 자문 이후 적용 단계 내부 프로세스 개선 필요.
21. 감사 담당 부서가 행정소송 중인 자에게 재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소명할 것을 요구 (해임·파면보다 경한 징계를 내릴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이 이중으로 되는 불합리함 방지 목적 추정). - 감사 부서의 재징계 요구 미시행 사유 확인.
22. 교통공사는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매년 높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고용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또한 서울시 '2530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
23. 교통공사는 최근 3년간 87건이 넘는 MOU를 체결하며 사실상 예산이 투입되는 협약을 다수 진행해 온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공익적 효과를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체결·관리할 것.

24. 혁신리더 인재양성 교육 관련, 시립대 등 타 대학 대비 교육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비 산정 기준과 과정 운영, 특히 해외연수 과정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필요성·효과성을 명확히 검증할 것. 아울러 전체 직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반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함.
25. 늘어나는 지하철 범죄를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이용하는 비상통화장치, 112 비상벨 등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철 범죄 예방에 철저히 대비할 것. 예방을 위해 출퇴근시간 혼잡역사에 대한 보안관 배치 필요.
26. 타임오프 시간 내에 조합 활동을 했는지 공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답변은 여전히 악용될 가능성을 시사 (예: 개인 용도로 사용) 향후 악용 사례 적발 시 확실하게 조치할 수 있는 보완대책 수립 요망.
27. 전장연 점거 시위 등으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 노조 지도부가 타임오프를 사용해 현장에서 협상하거나 항의하는 활동이 전무한 점을 지적. 공사 측은 유선 및 문서로 해당 활동을 요청했으나, 노조는 직원들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만 했다고 답변. 실제 공사 직원들의 업무 고충 축소를 위해 사용되도록 타임오프제도 운영 개편 필요.
28. 노조 지도부가 근로자들의 합당한 권리 보호와 공사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나서도록 노사협력실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바로잡을 것을 촉구.
29. 기자설명회가 3년간 1건에 불과한 등 공사의 대시민/대언론 입장 발표 활동이 부족. 필요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입장 발표 등 활동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30. 전장연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공사에 대해 오해하고 약자 프레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안전발판 구비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오해를 풀어도록 노력 당부.

31. 전장연 시위나 문란 행위 등 시민 안전을 저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 공사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강력한 공식 입장을 표명 할 필요 건의.
32. 지하철 보안관의 휴게실 및 탈의실이 기지 근무 직원이나 일반 역사 근무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인권 확보와 사기 진작을 위해 등등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요구.
33. 시청역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보안관 휴게 공간 내 남녀 구분 및 탈의 공간의 프라이버시 문제 (칸막이 부재, 냉난방기 부족으로 인한 문 개방 우려 등)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조치를 완료할 것을 요구.
34. 제출된 자료에서 합정역, 강동역 등 여성 근무자가 없음에도 여성 공용 시설이 명시되는 등 자료의 불일치가 발견되었음을 지적하며, 보안관의 휴게 및 탈의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요구.
35. 경영 혁신을 이유로 지하철 보안관 정원(350명에서 274명)이 실제 현원에 맞춰 감축되었음을 확인. 역당 배치 인력 부족(약 0.2명) 상황을 고려하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인력 운영 및 증원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
36. 무단결근 등 불법 행위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사안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며, 현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강력하고 투명한 대처를 당부.
37. 타임오프 무단결근 관련 행정소송(내년 2월 13일 변론 예정)에 대해 공사 측은 절대 연약한 모습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로 비춰지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
38. 노조 측이 소송을 장기화하고 임단협 쟁점으로 삼는 행위가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바로잡아 직원들의 사기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

39. 다원시스 납품 자연·재무위험 등에 대비해,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A/S·부품 수급, 대체조달 방안 등 비상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관리할 것.
40. 다원시스의 반복적인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공사는 해당 업체의 만회 계획과 이행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로 납기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41. 유관기관 취업 관련, 공사 내 다원시스 출신 근무자가 있는 경우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적절한 조치 체계를 마련할 것
42. 범죄 관련, 몰카 적발·단속이 형식적·방법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적발 절차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43. 기관사 음주 관련,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기관사 음주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올해에도 다수의 기관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공사는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보다 강화된 징계 기준과 예방 체계를 마련해 음주 운전 시도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할 것
44. 지하철 취식 관련,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주류 취식 관련 민원이 4천 건 이상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재 근거가 미흡해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하철 내 취식 금지 규정 도입 등 약관·조례 정비를 포함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또한 안내방송만으로는 제재가 어렵고 현장 대응에도 한계가 명확한 만큼, 버스와 같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통해 악취·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할 것
45. 성수역 계단 신설 사업은 시민 안전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약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일정 차질을 넘어, 사업 변경 과정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행

정이 스스로 지키지 못한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

- 지연의 원인을 투명하게 변경된 사업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함. 시민과의 약속이 행정의 신뢰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 해야함
- 성수역 계단 설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의 신뢰 문제임을 인식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주기 바람.

46. 매출채권 관련하여 공사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미회수 채권 및 악성 채권이 누적되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단순 장부상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 평가와 채권의 성격별 분류, 책임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함.

- 특히, 장기 미회수·악성 채권의 회수 가능성 진단/ 채권관리 전담조직 또는 책임부서 지정/ 정기적인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 회수 불가능 채권에 대한 정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채권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재정건전성 확보는 비용 절감보다 회수 가능한 재원의 실질적 확보가 우선임을 강조하며, 공사의 채권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주시기 바람.

47. 스마트 혼잡도 시스템 고도화 이후, 역사 내 혼잡도도 열차 내 혼잡도처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48. EMV 단말기 구축에 있어 국·시비 확보 등 교통공사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49. 리튬배터리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운송약관 상 휴대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이 시급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구체적으로 개정해주기 바람.

50. 신조 전동차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납품 지연이 반복되거나 선급금 사용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및 집행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서울시설공단】 시정 · 처리 요구 30건

1. 감사실에서 병가 부정사용 및 악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사용자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별도 보고바람
2.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와 관련 고속터미널, 강남역, 을지2구역 등 고장 다발 구역 원인 분석 및 개선 필요하며, 장기 중지 문제 해결 위한 대응이 필요함.
3. 자동차전용도로 포트홀 관련 동일 위치에서 10회 이상 반복된 포트홀 발생 14곳 이상, 총 253곳에 대해 재발 원인 분석 및 구조적 개선이 필요, 포트홀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및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필요.
4. 경기장 잔디 품질 관련 민원 일부 해소하였으나 겨울철 휴먼기에 접어드는 잔디 보호 대책 수립 필요, 내년도 잔디 관리 예산에 대한 효율적 사용 계획과 관리 계획 마련 필요.
5. 조직 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3~4급 중상위 직급 인력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전략적 의사결정, 정책조정, 대외 협상 등 핵심 기능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성 기반의 행정역량도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임.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상위 직급 인력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재가 핵심 직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6. 청계천 석면 조각이 장기간 방치된 점은 현장점검 및 일상관리 체계의 부실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됨. 특히 석면 발생 구간에 대해 시민 접근 제한, 유해성 안내, 안전표지 설치 등 기본적인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시민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었음. 현장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체계를 재정비하고, 유해물질 발견 시 신속한 조치·안내·복구가 이루어지는 표준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기 바람. 아울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당 구간의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함.

7.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위한 지정 병원을 중증 환자가 이용하기 쉬운 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것.
8. 보라매병원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일시적 장애인 지정가 능 병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것.
9. 지정 병원 기준 및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여, 제도가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 ‘이용자(장애인) 중심 서비스’로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시 행할 것.
10. 서울시설공단이 체결한 관련 협약서·계약서를 전수 점검하여 권리·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개정·재체결 방안을 마련할 것.
11.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대행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의 계약 주체가 서울시설공단으로 되어있음. 이는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 주체가 되어야 하며, 공단이 불특정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 단, 이해대한 대대적인 검토 필요(민간위탁개념을 적용 중으로 부적절)
 - 경제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재산관리관인 서울시가 보험 모두 가입.
 - 시설공단 대행사업 보험료 또한 공단의 사업비가 아닌 서울시의 공공운 영비 통계목으로 편성 및 집행되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프로세스를 수정 요구.
12. 최근 3년간 추진된 시민 대상 캠페인과 공모전 중에는 참여 인원 미집 계, 전시성 행사, 이벤트성 공모전 등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음. 이처럼 ‘보여주는 캠페인’ 수준에 머무르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단은 홍보사 업의 목적과 효과성을 재점검하여, 시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참여형·성과형 홍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평가 체계를 개선할 것.
13. 서울어린이대공원 야외무대 이용료감면은 조례상 근거가 있으나, 최근 면제 사례를 살펴보면, 명백한 사유와 기준 없이 내부 심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명확한 감면 기준과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감면 등 대관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
14. 매년 동일한 사유의 예산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예산

편성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예산 전용 시 법적 절차와 승인 과정을 점검해주기 바라며, 특히,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현실적인 예산편성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일반운영비, 동력비 등 시설유지 목적의 경비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것.

15.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배차와 기피 현상 방지를 위해 티머니와의 협조를 통해 축적된 탑승 시간, 탑승/하차 위치, 이용자 이동 경로 등 GPS 및 요금 결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수요 거점 지역 파악 및 대기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것을 요구.
16. 따릉이의 음주운전, 고의 훼손, 방치 및 무단 운행 등 불법 이용자에 대해 약관에 따른 이용 정지 및 폐널티(초과 요금 부과 등)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고나 폐널티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 (특히 음주운전 처벌 시 1년 이용 정지 약관 확인)
17. 불량이용자가 따릉이 앱에서 징계로 정지된 경우,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우회하여 접근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도록 징계 조치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따릉이 앱과 기후동행카드 간의 제재가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
18. 현재 민간 구급업체(EMS) 이용 비용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구.
19. 서비스 이용 후기를 와상장애인 대표 단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주무관이 실제 이송 과정을 참관하여 개인 특수 기구(척추측만증용 휠체어 등) 사용 여부 및 차량 탑재 가능성 등 실용성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
20. 지하도 상가의 불법 전대와 장기 고착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

하도상가는 일정 기간 직영으로 전환하고, 고투몰 등은 블록별로 나누어 복수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등 수탁 방식을 다변화하여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것.

21. 지하도 상가의 불법 전대 근절과 공유재산 관리 원칙 준수라는 목표 아래, 기존 영업자의 생계·권익도 함께 고려한 단계적 정비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22. 지하도 상가 중 장사가 잘되는 구역·업종은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일부 공간은 노인·청년 등 공익 목적 시설로 전환하거나 필요 시 매각을 검토하는 등 지하도상가의 공공성과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것.
23. 양재대로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된 구간에 대해 재난안전실 등 관계 부서로의 업무 이관 가능성을 포함하여 관리 주체와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고, 도로 특성과 위험도에 맞는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24. 직원 병가 사용 관련, 최근 병가·휴직 제도의 목적 외 사용과 해외여행 사례 등 남용이 매년 반복되고, 공문서 변조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비위가 드러난 만큼, 사후 징계 중심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병가 승인·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제도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병가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
25. 장애인콜택시 근무체계 검증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대(07~09시, 15~17시) 대기시간 단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이는 단순히 운전원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대별 수요 편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운영구조의 한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운전원 단순 증원 방식에서 벗어나 근무형태 유연화(시간대 집중배치, 탄력근무제 등) /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 수요예측 기반 배차 최적화 권역별 탄력 운영 모델 도입 등 수요변동에 대응 가능한 운영전략을 적극 검토 바람. 장애인콜택시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공서비스임을 감안하여, 시간대별 수요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26. 장애인콜택시 등록회원 수가 유사한 자치구 간에도 차량 보급률과 인력, 차고지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 수준에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배분 기준이 수요 실태와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임. 따라서, 차량·인력·차고지 배분 기준의 전면 재검토 / 등록회원 수 / 실제 이용수요 / 이동 취약도 기반의 맞춤형 배분 / 자치구 간 균형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이동권은 복지 서비스가 아닌 기본권적 권리임을 고려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배분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람.

27.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의 중대한 결함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 평가를 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철골 변형이 육안으로 확인된 사례로, 정기안전점검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임. 특히, 사고 발생 시 긴급안전점검 실시, 리깅 하중 제한, 안전통제 등 즉각적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관리체계의 허점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의 평가방식 및 전문성 강화 / 주요 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긴급상황 즉시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실효성 확보 / 구조물 하중 관련 사전 검토 및 안전성 검증 의무화가 필요함. 안전점검은 단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실질적 예방 시스템임을 감안하여, 재발방지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람.
28. 청계천 행운의 동전 모금실적이 매우 저조함. 스토리텔링 등 홍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 참여형 사회공헌사업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체질을 개선해 주기 바람.
29.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관리 책임을 서울시 재난실로 미루고 있음.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30.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국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비 확충에 힘 써주기 바람.

【교통실】 건의 50건

1. PM 공유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업체들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본사 주도의 수익구조 속에서 지역 운영자, 특히 신규 가맹 희망자에게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고,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이어져 민원과 피해 사례가 반복되는 실정임. 이에 따라, 민생노동국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구조의 투명성 제고, 책임 주체 명확화, 가맹 희망자 보호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특히 플랫폼 형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배분 구조, 운영책임 범위, 계약상 권리·의무의 명확화를 위한 관리·감독 기준 마련이 시급함. 서울시는 PM 공유서비스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모빌리티 정책과 연계된 공공성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운영 안정성과 공정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2. 서울시는 지난 2년 6개월간 현금없는 버스의 시범운영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운영 가능성을 이미 충분히 검증하였음에도 전면 시행을 미루고 있음. 외국인·노약자 등 일부 이용자의 불편은 선불형 교통카드, 간편발급기 등 대체 수단 마련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며, 실제로 현금수입 비율이 낮고 회수율은 95% 이상으로 손실 규모도 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함. 현금결제 폐지는 현금 관리비용 절감 / 요금 분쟁 감소에 따른 안전운행 / 현금통 이동 불필요로 인한 운송 효율 향상 / 환승 할인 및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가능성 확대 등 디지털 전환 효과가 크므로, 시민편익과 교통체계 혁신을 위해 조속한 전면 도입이 필요함.
3. 민자사업 협상업무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은 토목·건축·시스템·운영·사업성·재무·수요·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이 결합되어야 하는 복합적 행정 분야임. 그럼에도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협상 주체와 조직 구성은 실무역량 중심의 전문성 확보보다는 행정적 절차 수행 성격이 강해, 실제 협상력 강화 및 계

획의 완성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해당 업무에 본부 내 전문기술직, 재정·사업분석 인력, 법률 및 운영 전문역량을 보유한 관리직 등 다양한 직군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 조직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함. 실무협상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각의 전문분야가 단편적으로 검토되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 기획 단계부터 통합적·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협업 구조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함. 특히, 민자협상은 단순한 절차 관리 수준을 넘어, 사업 구조 설계, 재무구조 검토, 운영비용 추정, 리스크 관리, 법률 검토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전략적 행정 영역이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풀(Pool) 구성, 분야별 책임자 참여제, 협상지원 전담TF 구성 등 조직운영 혁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서울시가 도시철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리 중심에서 전문성과 협업 기반의 조직체계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임.

4. 통상임금, 동아운수 사건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어, 문제 예측 기반의 시뮬레이션 및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5. 정책 기획 단계부터 비용 효율성과 재정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민 세금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버스 정책을 추진할 것.
6. CNG 충전소 자연 감소 이후 충전소 운영 지속 여부, 통·폐합 여부 등을 포함한 선제적인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
7. 개인택시·법인택시의 갓등이 제각각이라 시민 혼란이 우려되는바,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디자인·색상·표기 기준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버스 기사 근로시간이 부풀려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과 작업 실태를 토대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신중히 검토할 것.
9. 택시정책과와 서울시설공단이 협의하여, 서울시 산하·연계 병원을 포함한 지정 병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10. 기술 발전을 통한 안전 확보 노력- PM은 다른 교통수단 대비 사고율과 치사율이 낮은 편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장애물 감지 후 급브레이크 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인 안전 장치 개발 및 도입을 통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관련 계획 수립 요망.
11. PM 전용 면허 도입 검토 - PM 업체 측에서 운전 면허 유무와 사고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PM 전용 면허 도입이 안전 강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PM 전용 면허 도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요망.
12. 장애인 바우처 콜 이용 시 미터기에 할인된 요금(예: 1,500원)만 표시되어 기사들로 하여금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오해를 만듦. 불친절 및 승차 거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운전자가 실제 받을 최종 요금(봉사료 등 시 지원금 포함)이 명확히 보이도록 미터기 표시 방법, 정산 시스템 개선 건의.
13. 기존 온다콜/나비콜 외에 카카오T 등 일반 택시 플랫폼을 장애인 바우처 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바우처 택시 이용 가능 차량 대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
14. 시각/신장 장애인 등 특수 이용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서비스 유지를 위해 온다콜 측에 상담원 증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거나 나비콜 상담원의 전문성이 온다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력적 보완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
15.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운전자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인지, 법인특장택시인지 구분해서 관리할 것.
16. 민간 전기자전거의 불법 방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 따릉이 등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민간 간 관리 체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건의함.
17. 막다른 길 안내표지판이 자치구별로 규격·색상·문구가 상이하여 시민 혼란과 교통안전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권고하고, 경찰청·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

18. 대규모 시내버스 지원금(적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서울시 신용도에 타격을 줄 우려 있음. 부족한 내년도 예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19. 특별회계 전환 및 국비 지원 검토-과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없이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을 활용하는 방안과, 코로나 팬데믹 시기 버스 기사들의 헌신을 고려하여 뉴욕/런던 사례와 같이 연방 정부(중앙정부) 특별 지원금을 요청하는 등 교통을 넘어선 행정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요구.
20. PM 이용자의 이동 밀집 데이터(GPS 로그)가 쌓여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철역 등 주요 밀집 지역에 카셰어링 사례와 유사하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합법적이고 안전한 PM 거치대/정차 구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구.
21. 시의 사업 추진 의지 적극 표명 서부선 지연 관련 자극적인 보도나 루머에 대응하고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리맥 심사 이후 신속히 협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 발언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표명할 것을 당부.
22. 지하 굴착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활용하는 에어바운스를 활용하여 암반 굴착 지역을 덮는 등의 첨단 공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서울시와 협조하여 적용할 것을 건의.
23.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원활한 출퇴근 여건 마련과 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해 물류센터 인근의 목동선 경전철 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24. 물류 기술(기기)의 빠른 발전을 고려하여, 향후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기술 도입에 용

이하도록 준비하여 추가적인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및 일정 지연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

25. 시에서 제시한 운행 횟수(예: 70회→100회)가 현장의 노선 특성(정체 구간, 산악 노선 등) 및 버스 운영 현실(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등)을 반영하지 못한 과한 요청이 아닌지 마을버스 조합과 세부적인 케이스별 검증과 논의를 지속하여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재조정할 것을 건의.
26. 고령 운전자 및 행정 인력이 부족한 마을버스 업체들의 운전자 ID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또는 ID 카드 직접 발급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시스템의 정착을 도울 것을 건의.
27. 마을버스 조합 측에 운전자 ID 시스템 및 운행 데이터 투명화가 상벌의 개념이 아닌, 오히려 시가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더 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됨을 인지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
28.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교통사고 건수 감소의 유효성이 통계적으로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운송업자들의 불편 해소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해 심야 시간대(밤 11시~새벽 시간대)에 한하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의 속도 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건의.
29. 전장연 시위로 인한 피해액(손해배상 등) 산정 범위 및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기존 결론에 대해, 계약 체결 불가 등 파급 효과를 포함한 피해 범위를 재검토하여 민사 소송의 가능성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건의.
30.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KTDB 외에 티머니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서울 시민의 구체적인 교통 이동 패턴 및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고 경전철 계획에 반영할 것을 건의.
31. 서부선 사업에 SH공사가 출자 투자자로 나설 경우, 이를 계기로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한 다른 민간 투자자들의 추가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사

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

32. 과거 위례신사선 사업을 포기했던 GS컨소시엄이 재정사업으로 전환 후 다시 시공사로 참여할 동향이 있다면, 서부선 사업에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다시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고려할 것을 건의.
33. 준공영제 운영에서 사고 관련 책임·관리 의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내부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34. 시내버스 특정 업체가 노후 차량을 다수 보유하여 같은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만 지속적으로 취약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노후 차량 다량 보유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함.
35. PM보험의 현행 체계에서는 운전자 본인 상해 보장이 사실상 불가(실비 보험·상해보험·후유장애보험 등 대부분 적용 제외)한 설정이므로, PM 탑승자(운전자) 상해보장 보험 도입이 필요함.
36. PM의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중심의 법 개정만으로는 PM 이용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 안전 중심으로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7. PM 업계(운영사·보험사)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협의 또는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상해보장 체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8. 서울시 버스 기본요금이 인근 경기도 대비 낮아 재정 적자 확대가 계속 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39. 마을버스가 환승 할인 적용 시 기본요금의 약 50%만 회수하는 구조로 인해 업계에서 환승제 탈퇴 검토가 제기되고 있는바, 마을버스 환승요금 정산 구조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0. 전기버스가 CNG 대비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중장기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함.
41. 향후 자율주행 기술 도입 시 인건비 절감 가능성이 큰 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자율주행 도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2. 마을버스 조합 내부 논의 및 용역 검토, 홍보·참여 독려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조합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3. 전동차의 잔여 물량 발주 시 차량 수명 연장 가능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하고, 최소 30년 이상 사용을 전제로 부속품은 그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계할 것.

44. 동북선과 우이신설선(연장선)의 신호시스템 국산화라는 명분뿐 아니라 기존 설비의 대수선 비용, 신규 도입·전환 비용, 유지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택할 것.
45. 오픈루프 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비 확보 및 정산 시스템 구축, 수수료 조정 등 남아있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주기 바람.
46. 운수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성평등 관점의 인력 확보 전략을 마련해주기 바람.
47. K패스 무제한형 출시로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시민 선택 유인이 저하될 것으로 보임. 경기도와 같이 K패스 기반으로 통합 운영 검토 바람.
48. 바닥 신호등의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설치·유지관리 책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행정 해석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람.
49. 버스나 정류장 등에 차열페인트 적용을 통해 실제 체감온도 완화와 냉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검증한 사례들이 있음.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버스정류장 등에 적용 가능성 검토 바람.
50. 양재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단순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닌, 시민 전체의 이익과 미래 서울시 물류 혁신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건의 11건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용역 시행자가 KTCSM 개발 및 특허보유자로 알고 있는데 제척사유 해당 여부 등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 바람.
2. 동북선 등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고려할 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건설사 및 감리사의 과실에 대해 실효성 있는 폐널티 부과 기준 마련이 필요함. 재발 방지 를 위해 단순 행정지도를 넘어, 입찰 제한, 성과 평가 반영, 재발 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등 실질적 제재수단을 마련해 주기 바람. 안전사고는 사후 조치보다 책임 있는 예방체계 구축이 핵심인 만큼,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향후 유사 사업의 참여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위례트램 차량의 핵심 내부 부품이 해외 제품(중국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부품 수급 지연 시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도시철도 특성상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와 운행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부품 조달체계와 국내 재고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해외부품 수급 리스크 분석 및 국내 재고 확보 계획 수립, 긴급 유지보수 대응 체계 마련, 공급업체와의 SLA(서비스 수준 협약) 명확화,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술 전환 또는 국산화 검토 등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람. 위례트램이 서울시 최초의 트램사업인 만큼,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안정성과 대응 속도를 최우선 관리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동력대차 인원 탑승 전면 금지 규정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지침을 강화하고, 사고 시 운전자·관리자 책임 기준과 점검일지·CCTV 등 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할 것.
5. 대차례일에 대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의 안전표 등 숙지 미흡, 도 기본 차원의 작업자 안전교육에 대한 기준 마련 요망.
6. 서부선- 2월 27일 협약 기한이 도래하여 수요 재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의 진행 자체가 결정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 지역 을 최소화하고 재정 전환 등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서부

선에 관심 있는 위원들과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

7. GPR 탐사, 지상 이상징후 등 관련 연구용역 건의- 시공 부서로서 지하 착굴 공사가 성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싱크홀 관련 연구용역이 현재 없으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추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볼 것을 당부.
8. 서부선 사업이 12월 27일 협약 기한을 넘겨 수요 재조사를 하더라도 사업이 영영 무산되는 일은 없다고 시민들에게 확실히 밝혀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대한 사업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9. 서부선은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이 배정된 적 없으며, 실시협약 체결 후 대광위 승인을 거쳐 국비가 결정되는 절차임을 재확인하며, 향후 국비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10. 이벤트성 차량 도입 아이디어 제안 -튀르키예 안탈리아의 '노스텔지어 트램' 사례나 일본 JR의 '헬로키티 하루카' 열차 사례처럼, 위례선 트램 차량의 껌데기(디자인)만 교체하여 이벤트성 열차로 도입할 경우 관광 상품 및 인기몰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
11. 도시철도사업은 기획 - 설계 - 시행 - 관리까지 장기적·연속성을 갖는 사업으로, 특히 기본계획 단계에서 기술성, 사업성, 운영성, 재정성 검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업 추진의 완성도와 연계성이 확보됨. 현재 기본계획 수립 기능이 교통실에 있으나, 실질적 전문성을 갖춘 조직은 설계·적정성 검토 및 민자협상 경험을 보유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임.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기능을 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이관하여, 기획 - 설계 - 사업관리의 전 과정이 단일 조직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기능 재정비가 필요함. 서울시가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기능의 도시기반시설본부 이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서울교통공사】 건의 13건

1. 다원시스는 서울교통공사 발주 전동차 제작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장 작업 현황 등에 대해 위원회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진실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하고, 현장 공개·정보 제공 등 투명한 소통을 강화할 것.
2. 20년 이상 노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중장기 교체 계획을 마련하고, 안전시설로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음.
3. 에스컬레이터의 설비·부품 표준화와 우수 업체 중심의 발주 방식을 통해 부품 수급 기간을 단축하고,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일 것.
4. 운전자 취중 출근에 대해 내부적인 처벌 강화 외에도, 철도안전법과 연계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유관기관(국토부, 철도사법경찰대 등)과 협의하여 강화 방안을 검토 건의.
5. 행정소송에서 공사가 승소하여 징계가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승진(승진 취소 불가)과 인상된 급여의 환수가 어려운 상황. 향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내부 절차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없을 경우 이 또한 마련할 것을 건의- 불공정한 인사 조치의 환수/수정 절차 검토.
6.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출퇴근시간 혼잡역사에 대한 보안관 배치를 검토하여 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
7. 최근 '메트로 히어로즈' 사례와 같이 일선에서 헌신하는 보안관들(특히 20대 소수 인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저하될 수 있는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를 보완하는 데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건의.
8. 다원시스는 조직개편·자구노력 등을 통해 납기 지연을 조속히 해소하고, 선급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며, 향후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할 것.
9. 하청업체에 대한 “당월 마감·익월 지급”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연 시 상환 계획·안내를 명확히 하는 등 하청업체 경영 악화·도산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과 소통을 강화할 것.

10. 교통공사 사장의 거취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현 사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본부장단이 적극적으로 보좌해 지하철 운영과 교통정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1.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와 공사채 악순환의 근본 원인이 국가가 부과한 무임수송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자체가 단독 부담하고 있는 구조에 있는 만큼, 국회와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정무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 더 이상 서울시민에게만 재정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협의를 주도할 것을 건의함.
12.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이미 오픈루프를 도입한 주요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 구조와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서울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주기 바람.
13. 운송약관 개정과 함께 휴대금지품목에 대한 대대적 홍보, 시민 계도 등에 힘써주기 바람.

【서울시설공단】 건의 14건

1.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주요 기계·설비 등 안전·편의에 직결되는 시설의 유지관리 계약은 단순 최저가 낙찰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안전성·유지관리 실적·시민 편의 등 공익성 지표를 반영한 종합 평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정 운영을 위한 장기계약·책임 유지관리 방식 도입이 필요함.
3. 자율주행, AI 예측장비 등 차세대 기술 도입 시 적용할 '3대 원칙(공공성·안정성·고용안정)'을 명문화하고, 공단 내 가이드라인(내부 지침)을 제정해야 함.
4. 현행 공용차고지 사용료가 조례상 '천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는바, 요율 상향 등 제도 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
5. 택시정책과와 서울시설공단이 협의하여 서울시 산하·연계 병원을 포함한 지정 병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6. 청계천 수질 조사 결과 일부 하류 지역의 대장균 수치 등이 높게 나옴. 연간 청계천 수질 개선을 위한 장비 등 자산 취득비가 300만 원에 불과한 것을 미루어 하천 환경 관리의 전문성과 긴급 투입 필요성에 비해 매우 부족한 예산으로 판단. 적재적소에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시민들이 청계천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검토 서울시 건의 필요.(향후 계획서 보고바람)
7. 천호대교 낙하물 신고 관련, 담당직원의 민원응대가 미흡하고, 부적절했는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응대 매뉴얼 재검토 및 직원 교육 강화 등 민원응대 체계 개선 바람.
8. 장애인콜택시 기사 교육 이수 후, 교육 내용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0/X 등)를 도입할 것을 건의. 교육 이수자 또는 우수 직원에 대해 모범적인 기사임을 나타내는 배지/인증마크를 제작하여 차량 외부에 부착함으로써 이용자(장애인)가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감정적 장벽 해소 및 소통 환경 개선에 힘쓸 것을 건의.(감정 골을 없애

는 데 치중할 것을 요청)

9.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배차 성공률 제고를 위해 주차장 증설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수요가 높은 지역 인근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차량 대기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건의.
10.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 불법 노점상 문제(특히 대형 행사 시 점거 현상)가 주요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음. 자치구와의 협력 한계를 인지하고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노점상 관리 및 계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인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
11.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속 불법 노점상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게 대형 행사 전 사전 출동 및 경고 조치를 요청하여 노점상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과태료 부과 사안이므로 행정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
12. 전용도로 쓰레기 투척 등을 관리하기 위해 상습구역에 대한 CCTV설치 및 포상제도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13. 청계천 반려견 출입 전면 허용 조례안이 장기간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시범 운영만 반복 연장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안전대책과 이용수칙 강화 등 합리적 제도 설계를 통해 청계천 반려견 출입 여부가 명확히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14. 법이 바뀌어야 움직이는 수동적 태도보다, 설치 가능한 시설에는 선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의무이행을 넘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교통신】 기타(자료요구) 18건

1.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확인증을 발급해주는 지정 병원 목록 자료
2. 바우처 택시 이용 요건 관련 상세 자료
3. 버스정류소 명칭 변경 현황 자료
4. GTX 및 도시철도 노선 추진 현황 자료
5. 교통안전체험시설 관련 교육장소 사진제출요망
6. 도시철도 차량 내 전자문자 안내판 개선 계획, 수어안내 영상 관련 제출요망
7.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관련 10/20 준공된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요망
8. 10월 28일 발생한 전기버스 냉각수 유출사건 관련 사고원인 조사결과, 부품 교체 내역, 정비내역, 문제가 됐던 부품 제조사 조치사항 등 일체 제출요망
9. 서부선 관련 최소한의 필요예산 확보를 위해 2026년 회계연도 예산에 해당 사업 예산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확인 요망
10. 버스 운송평가 기준 관련 자료
11. 2024년도 버스회사 평가 결과 자료
12. 버스 대폐차 기간 및 연장 검사 기준 관련 자료
13. 전기버스·수소버스의 대폐차 기간 및 연장 기준 자료
14. PM 운영사의 2025년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자료
15. 버스 관련, 최근 시내버스 기사 인건비의 통상임금 반영에 대해 노조측의 과도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울시는 버스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인건비 상승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 등 서울시의 노력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길 바람.
16. (보고요청) 650번 버스노선 연장 건 계획 관련
17. (보고요청) 남부순환로와 관악로, 강남순환도로가 개통함으로 인해서 관악로가

굉장히 밀린다고 민원 많음. 그 부분에 대한 준비사항

18. (보고요청) 관악구 공원 설립로 연결되는 곳 신호등 설치건의드린 적 있음. 진행 상황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기타(자료요구) 2건

1. 도시철도사업 시비 미편성에 따른 국비 불용 문제에 대해 도기본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
2. 서부선 시종점 노량진쪽 자재센터 차량기지로 사용할 예정, 이전설계비로 지출된 예산

【서울교통공사】 기타(자료요구) 22건

1. 혈액암 관련

- 차량·기계분야 혈액암 관련 현장조사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 작업환경개선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안

2. 메트로환경, 그린환경 관련

- 서울메트로환경 임금협약서 / 단체협약서
- 합의된 인건비 산출기초내역서 - 메트로환경
- 야간반 5시30분 조기퇴근에 대한 시범운영 계획(안)

3. 공사 통합 이후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의 설치 업체 현황

4. 최근 5년간 호선별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및 유지보수 예산 현황

5. 유지보수 예산 편성 시 항목별 산출 내역

6. 교통공사 직원 퇴직 후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업체 취업 현황

7. 9호선(1·2·3단계) 올해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및 청소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

8. 현재 전동차를 제작 중인 공장의 작업자 수와 작업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는 실시간 현장 영상

9.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안전법 의거 위험성 평가 결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 포함(직렬별로 구분).

10. 교통공사와 자회사의 2020년부터 2025년 손익현황, 당기순이익, 배당금 받은 것, 준 것 다 구분, 배당금 사용내역.

11. 행정소송 계류 중인 파면·해임 대상자 32명 중 7명이 승진한 것에 대해, 공사가 승진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률 검토 자료를 즉시 제출.

12. 교통공사 근속 승진자 노무 자문 원본 제출 요망, 관련 자문 과정.(자문 주문 내용 등)

13. 지하철 역무원 및 보안관 휴게실 현

- 시청역, 경복궁역, 잠실역, 명동역 4개 역 휴게실 사진
- 해당 휴게실의 남녀 구분 여부 명시
- 휴게실 평수

-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근무 인원 (파악 가능한 경우)

14. 직렬별 정규직/비정규직 인력 현황

- 직렬별 정규직 인원
- 직렬별 비정규직 인원
-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

15. 호선별 보안관 근무 현황 및 경찰관 배치

- 각 호선별 총 역사 개수
- 동시간대 근무하는 지하철 보안관의 주요 동선 (순찰 경로 등)
-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는 1~8호선에 배치되어 있거나 협조 근무/순찰 하는 지하철경찰관의 배치 인원 현황

16. 노조 측에 전장연 시위 관련 활동 협조를 요청했던 공문 및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

17. 타임오프 악용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86)의 기일이 공사 측(원고)에 의해 갑작스럽게 변경된 경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재판 진행의 정황 및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

18.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펌웨어 업데이트 등) 대비 및 조치자료

19.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 명단, 부도 업체 수, 이와 관련된 피소 건수, 현재 거래 중인 하도급업체 수 및 업체별 미지급 금액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 특별관리역사 관련

- 공기질 법정 기준 초과된 37역 자료

21. 서울시로부터 미회수 중인 253억 매출채권 관련

22.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 요청한 '수수료율 절감을 위한 해외 카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 가능 여부' 회신 자료 제출 바람.

【서울시설공단】 기타(자료요구) 4건

1.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전환 현황 자료
2. 첨단기술 도입 관련 투자비와 인건비 절감 효과 비교 자료
3.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를 대행하여 관리하는 서울시 공유재산 건물 목록,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유재산대장에 기록된 가격 1억 원 이상의 공작물, 기계, 기구 등 목록, 상기 목록에 대한 손해보험 관련 상세 정보.
4.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에 협력하고 있는 민간 구급업체의 목록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

□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감사자료 및 문서확인 등

□ 중점 감사사항

-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 2024·2025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현황
- 2024·2025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집행 현황
- 2024년도~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24년도~2025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25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 2025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조례·규칙·사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2025년도 행정소송 계류 및 패소사건의 판결문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 현황
-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집행 현황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11. 교육위원회

□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계	527	217	192	118
서울시교육청	463	172	175	116
교육지원청	16	14	0	2
직속기관	19	11	8	0
교육연구정보원	1	1	0	0
융합과학교육원	2	0	2	0
교육연수원	2	0	2	0
학생교육원	3	2	1	0
유아교육진흥원	2	2	0	0
보건안전진흥원	2	2	0	0
학생체육관	1	1	0	0
교육시설관리본부	6	3	3	0
도서관·평생학습관	8	7	1	0
학교안전공제회	2	2	0	0

[시정요구사항]

1.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전문가 제도 등 실효적으로 이용되는 사업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특별보좌관 명함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등 특별보좌관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보좌관 제도의 폐지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중학교 배정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근거리 배정 원칙 및 학생·학부모 선택권, 학군·부동산 연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3. 감사관은 반복되는 청렴도 저하의 원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운동부 부패·갑질·공공 재정 환수 등 취약 분야에 대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내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
4. 중학교 배정 제도 관련해서 학부모·학생의 선택권 확대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5. 교육정책국장은 특별장학 단계에서 교원의 주장만을 근거로 사안을 종결한 절차적 한계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 제보·증거·수사 상황에 따라 즉시 정식 감사를 재개하여 교원 징계의 신뢰성과 엄정성을 확보할 것
6. 교육정책국장은 교권 침해 사안에서 실질적인 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시정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분리조치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
7.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이 많이 낮은 부분을 참작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8.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 등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사각 지대가 있으니 미배치교를 중심으로 위센터 등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마음 건강 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것
9.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딥페이크 학교폭력 사건에서加해자 징계가 너무 약하니+ 해자 엄벌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중 '조치 없음'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 그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

10.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공기순환기 설치 및 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 체계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함께 논의해서 조치할 것
11. 교육행정국장은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의 교육과정이 교육청과 합의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전면 재점검하고, 강의계획서 등 세부 자료를 제출받아 부적절한 과목 운영 시 MOU 파기 검토 사항으로 사료되니 그에 따라 조치할 것
12.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의 사회복지기관 근무경력이 보수 산정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어, 교육청 지침 마련과 교육부,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3. 총무과장은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직속기관 부설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지정을 위해 각 기관의 건물 특성과 방문객 현황, 주차장 혼잡도를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가능 위치 및 규모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할 것
14. 교육행정국장은 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학교숲 기본계획'을 미수립한 점과, 최근 3년간 전액 외부재원에 의존하여 14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미 조성된 학교숲에 대한 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
15. 교육행정국장은 교육청 직속기관과 학교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운영 방식과 설치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16. 교육정책국장은 학교장이 미인가 연수기관 연수에 참여하면서 연수비를 학교운영비로 집행하는 사례는 규정 및 지침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시정조치 사항을 검토할 것
17. 교육정책국장은 교원자비부담연수비 지원 수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하위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 권장 수준만큼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8.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신문을 수거·압수하거나, 서울의 중고등 학교 절반이 전교회장, 부회장 출마에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등 학생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민주적 학교규칙 개정 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9.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생들이 극단적 판단이나 이분법적 사고로 치우치지 않도록

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헌법 제31조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따라 연4회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
21. 총무과장은 교육감 명의의 명절 현수막 게시에 사용된 예산 집행의 적법성·타당성에 대해 밝히고, 게시 위치·절차·예산 근거를 전면 재점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22. 총무과장은 교육감 명의의 명절 현수막 게시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 및 예산 전용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더 세심하게 살필 것
23. 감사관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시험문제 유출 교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감사 중인 교원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도 개선을 신속히 검토할 것
24. 교육행정국장은 외국인학교의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 규정의 협점을 보완하고, 정·현원 꼼수 운영으로 내국인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학교에 대해 정원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
25. 교육정책국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대해 대법원 결과가 나왔음에도 명확한 교육청의 입장이 없는 바 삼권분립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기초학력진단 검사 결과 공개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할 것
26. 교육정책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2025년 시행을 확정하고, 시험장·감독 인력 확보 등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것
27.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기한 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고, 학폭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학폭위 신뢰도를 높일 것
28.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법률로도 명시돼 있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율이 굉장히 낮으니 피해 학생에 대한 법정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치료 지원도 적극적으로 행할 것
29. 파면된 전임 교장의 학교 출입 및 학생·교직원에 대한 비정상적 영향력을 즉시 중단하고, 외부인의 부적절한 개입 및 학생 동원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록 관리·감독과 예방 대책을 강화할 것

30. 학생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는 사학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시행하고, 감사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
31. 교육정책국장은 과학고 등 이공계 진학 확약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장학금 수혜 환수 기준을 강화하고, 법적 미비에 대한 보완책을 갖추는 등 과학고 학생들이 의학계열 편입보다 이공계로 진학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
32. 교육감은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금전적 피해와 회원권 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적 매뉴얼을 개선하고, 학생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33. 교육감은 공공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할 것
34. 신구초등학교의 원상복구에 세금이 투여되는 상황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성찰이 요구되며, 공직기강을 세우는 한편, 조직 차원의 관리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
35. 학교복합시설 회원권 판매 후 발생한 불법 전대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구제방안 마련 및 학교 복합시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
36. 교육행정국장은 성일초 사태와 관련 업체가 야반도주하는 사건에 비추어 강학상 특권을 가진 해당 업체가 범죄와 연결될 것에 대비하여 사후적인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할 것
37. 교육행정국장은 신구초등학교는 이행보증금이 없어 더 큰 피해가 양산된바, 이행보증 관련 매뉴얼을 새로 정하여 기준을 통일하는 방향에서 향후 학교시설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38. 교육정책국장은 고교학점제 관련하여 교육청 자체의 정책연구 방안을 마련할 것
39.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에서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로드맵을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할 것
40.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북 웨이브 사업을 독서 습관 형성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독서 문화 정착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참여

자의 재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

41.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통일교육 행사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시 내 역사유적 탐방 및 여성 독립운동사 등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행할 것
42. 교육감은 강동구 명일동 재건축에 따라 학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청의 선제적인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계획을 마련할 것
43. 재건축 진행에 따라 해당 지역의 초중고 학교 신설 및 부지 확보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명일동 재건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청의 대응 속도를 더욱 신속하게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4. 안전총괄담당관은 교육청의 안전정책이 사고 이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한편,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 체계 구축할 것
45. 안전총괄담당관은 교직원 안전교육 이수율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 교육청 차원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사와 연동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46. 안전총괄담당관은 지자체·경찰·학교 간 책임 공백으로 인해 통학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47. 안전총괄담당관은 마곡 안전체험관의 활용성이 낮고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 체계로 개선할 것
48. 교육행정국장은 신명초 급식실·식당 증축사업의 사전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반영 과정의 단절을 시정할 것
49. 교육청이 학교와 시설사업의 협의 과정에서 협의 기준 및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사업 추진 시 예산 반영 기준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할 것
50. 길동초·상일초의 노후 학교 재구조화·개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여건과 지역 상황을 반영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51. 녹색제품 구매계획·공시 지연 시정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이 법정 기한 내 공시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여, 기한 준수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52.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시 교육청의 메이커 교육이 단기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진정한 창의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생 주도적 문제해결과 진로 연계교

육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메이커 교육정책 개선책을 마련할 것

53. 교육정책국장은 메이커 교육을 위해 장학사 한 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 5인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방안을 만들고, 강남, 서초, 송파 등의 특정 지역에 메이커 교육이 집중된 반면, 동부권과 서남권 학교에는 장비 및 교육 기회가 부족한 거점학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권역별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54. 현재 AI 디지털 교육은 기술 활용 중심에 치우쳐 있으므로, 향후 비판적 사고, 정보 판단, 윤리적 책임 등을 포함하는 AI 리터러시 교육으로의 확장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
55. 교육정책국장은 AI 활용 수업에 집중된 연수방식에서 벗어나 AI 교육 철학과 윤리적 고려, 데이터 공정성 등도 다루는 심화 연수방안을 마련할 것
56. 교육정책국장은 AI 리터러시 교육 과정에서 AI 활용률이 아닌, AI 이해도와 리터러시 성장도를 성과지표로 삼아 평가할 것
57. 교육정책국장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연계 교육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평등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8.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장애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예산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굿센 카드 치료비 지원,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의료적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핵심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세심한 관리와 홍보를 이행할 것
59.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서울시 특수학급 과밀 비율이 심각하므로, 특수학급 신설과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60.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정서 행동 문제 학생 지원 예산인 PBS(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1.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장애학생의 진로 연계 교육의 일환인 대학생활 체험을 일회성 체험이 아닌 진로 연결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실질적인 진로 개발로 이어 지도록 노력할 것
62.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고교 학점제의 특수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90% 삭감될 예정임에 따라, 장애학생들의 진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예산 재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

63. 급식실 환기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급식 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4. 급식 인원 수 감소를 이유로 조리 종사원 배치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기준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할 것
65. 급식실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66. 영양교사의 보조 인력지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
67. 사립유치원의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
68. 사립유치원의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시설개선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
69. 사립유치원의 시설개선 예산이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을 이유로, 2026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
70. 안전총괄담당관은 교육청 본청이 참여하는 통학로 협의체를 활성화할 것
71. 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로 적발된 교원 124명의 비위행위에 대해 '고의가 아니다'며 경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시정할 것
72. 월 3회 이상 외부강연을 했음에도 규정에 따라 감사관에 신고, 검토하지 않은 직원이 많은 바,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73. 평생진로교육국장(교육정책국장)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의무 편성해야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는바,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74. 급시시설 환기개선 예산 불용률을 개선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75. 학생들의 청력 검사 기준을 보완해 미세한 난청도 식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
76.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시정 할 것
77.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비위 적발된 운동부 지도자의 재채용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타시도교육청과 연계된 인사검증시스템을 검토할 것

78.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와 운동부 지도자의 잘못으로 폐단되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것
79.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정규 특수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80.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5년간 2,600억 원 예산이 투입된 '입학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명품, 가전, 골프용품 등으로 남용된 것에 대해 시정할 것
81. 교육감은 학부모·학생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실제 수렴 대상은 교사·관리자 9명에 한정되어 약속 불이행 및 절차 누락 발생을 야기했는바, 정치적 권리와 같은 민감한 정책은 이해관계자 전체 의견이 필수이므로,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
82. 교사의 정치적 발언·행동 민원 자료와 관련해 의원별 제출 내용이 상이하게 구성된 결과가 발생하여 자료관리 및 검증 체계의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바, 자료 산출·검증 절차를 즉시 정비하여 동일 기준·동일 기간의 자료가 일관되게 재출될 수 있도록 시정 할 것.
83. 특정 직원(P씨)의 비상근 시민감사관 4년 6개월 경력이 "서울시교육청 2년 이상 근무요건"으로 인정된 과정이 명확하지 않았음. 특히 임용 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제출은 필수 요건이지만, 그 제출 여부가 불명확하며 총무과에서도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을 진행했다면 이는 절차 위반이므로, 관련 서류 전체를 즉시 재검증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 조치 및 임용 무효에 대하여 검토할 것
84. 일부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비리 관련 협상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제보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요건을 검증하는 공식 절차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이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취지 훼손 및 구조금 오·남용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총무과장은 공익제보자 인정 기준 및 절차를 즉시 마련하여 사익 목적 제보자 배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85. 공익제보센터 전 센터장 및 일부 직원의 경력이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 중심으로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채용은 공정채용 절차라고 답변했으나, 검증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 부재. 특정 편향을 가진 인사의 임용은 조사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므로, 총무과장은 임기제 채용 전 과정(공고 - 서류 - 면접 - 채용)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
86. 특정 직원 P씨의 비상근 시민감사관 경력이 임용 요건(서울시교육청 2년 이

상)으로 인정된 과정이 불투명하고 필수 서류인 '주당 근무시간 명시 경력증명서'의 제출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바, 즉각적인 서류 재검증을 실시하여 절차 위반 확인 시 책임자 처벌 및 임용 무효를 검토할 것

87. 자격 요건(서류·근무시간) 미충족 상태에서 면접 고득점(73/75)을 받아 최종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바, 정치적 배경에 의한 부적정 채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 과정(서류·면접)의 전수 재검증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
88. 서류 제출 미비자를 최고점에 가깝게 평가한 서류전형위원회의 심사 적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됨. 이는 단순 착오 수준이 아니라 심사부실 또는 특혜 제공 의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원 구성·평가 근거·심사 기록을 즉시 조사하고 부적정 판단 시 징계 등 후속조치를 요구함.
89. 타 시도(충남·경기 등)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874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정기 검사 체계를 갖추지 않고 준공 시 1회 검사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교육시설 안전과장은 즉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성 의심 가능성이 높은 '오래된 운동장'부터 우선 검사 실시할 것
90. 최근 설치(2~3년 경과) 인조잔디에서 쿠션 저하·마모·화상 등 품질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본부장은 "구체적 민원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 함. 교육청은 즉시 품질 실태조사 및 문제 제품 유형·시공업체 분석을 실시하고, 품질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시정·재시공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91. 교육행정국장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작동 여부·정상 상태를 교육청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화재예방 기본시설의 설치·작동상태를 즉시 재점검하고, 미설치 학교·고장 시설에 대한 시정계획(설치·보수)을 즉각 마련할 것
92. 노후 전선 교체·정비에 대한 기초현황조사 및 우선순위 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모든 학교의 전기설비(전선·분전반·누전차단기 등)에 대한 기초조사·위험도 평가·교체 계획 수립을 즉각 시행할 것
93. 서울시교육청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4천 명 이상이 유통 중단을 요구한 사회적 논란 도서인 '내친구 김정은' 서적을 서울시내 3개교에서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학교 자율'만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은 심의 절차를 거쳐 비치를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논란 도서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 점검 및 심의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94. 전자칠판 동일 모델이 대학 경쟁입찰은 272만 8천 원, 교육청 납품은 450만 원이라는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청도 “단가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 바, 전자칠판 구매·조달 과정에서 단가 형성, 조달방식, 제품선정 절차의 불합리한 요소를 즉각 점검·시정할 것. 또한 중국 OEM 기반 제품 중심 구조에 대한 현장 우려를 반영하여 물품 구매에 참고할 것
95. 회계연도 말 교육청에서 배포한 교원 근무성적 평정 보조 엑셀 프로그램이 ‘교장 또는 교감 중 한 명만 평정 가능’한 구조로 내려간 것처럼 현장에서 인식되고 있음. 교장·교감 각각의 평정이 가능하도록 보조프로그램 구조를 즉시 점검하고, 2026학년도 평정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개선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
96.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국회의원실에서 발송한 ‘참조 요청’ 공문을 ‘협조 요청’으로 변경하여 발송한 절차상 문제의 즉각 시정. 공문 취지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결재·확인 절차를 즉시 정비할 것.
97. ‘공람 계시’가 아닌 ‘전 학교 공문 발송’ 처리 오류의 시정. 문 발송 절차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교육을 강화하고 즉시 시정할 것.
98.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생선수들이 경기·훈련 일정으로 인해 최저학력 이수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수하기 어렵고, 그 결과 부모가 대신 영상을 틀어놓는 등 실효성이 없는 운영 실태가 드러났음. 학생선수의 훈련·경기 일정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즉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이수 불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99. 운동선수는 최저학력 기준의 제한을 받는 반면, 음악·미술·예술 영재 등은 동일한 ‘특기생’임에도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를 지적함. 동일 범주의 특기생임에도 적용 기준이 상이한 현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즉시 검토하고, 불합리한 기준 적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
100. 남부교육지원청 보고자료에서 ‘발리송 나이프’를 ‘장난감 칼’이라고 표현한 사실 지적.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사건 축소 없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함.
101. 동일한 전치 2주 피해에도 △출석정지 8일, △사회봉사 6시간, △사회봉사 8시간 등 조치 편차가 과도하게 크다는 점이 확인됨. 이는 심의위원회별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데서 발생한 문제로, 심의위원회 내 조치 기준 적용의 일관성 확

보를 위한 즉시적 시정 조치(연수·가이드라인 강화 등)가 필요함.

102. 학교폭력 조치 세부기준 중 전학(8호)과 퇴학(9호)의 점수가 동일(16~20점), 반성·화해 점수는 낮고, 지속성·고의성 점수는 낮게 부여되는 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됨. 현행 세부기준이 현장 피해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 재검토와 내부 적용 방식의 시정이 필요함.
103. 지구촌학교 관련 김보경 교감의 공익제보 및 부당해고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해당 학교로 즉시 연락하는 등 제보자 보호 체계가 미흡한 정황이 있어 관련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
104. 성동구 지역 정치인에 의해 학교 통폐합 및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현수막 홍보된 사안에 대해, 실제와 다른 정보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즉각적으로 바로잡지 않고 사실 확인·정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시정할 것.
105. 교육감은 학교법인, 운화학원 임원승인취소 요구 등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
106. 교육감은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익제보자 복직 후 보복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107. 교육감은 감사 지적사항, 권고 사항 이행 안 된 채 반복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국장이 교장으로, 가족경영체제, 학생들에게 강제 연극을 하도록 하는 등 4번 감사, 2번 학생인권옹호관 권고에도 시정되지 않은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하여 면밀한 추가 감사를 시행할 것
108. 대변인은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소요하여 4만 8천부의 서울교육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나, 주요 독자층을 겨냥한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독자층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은 물론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할 것
109. 4세고시, 7세고시 문제가 두드러지는 등 사교육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므로 교육연구정보원 및 정책기획관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연구에 협업할 것
110. 기획조정실장은 생태전환교육,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예산 편성 시 잉크, 종이 절감 부분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쟁길 것
111. 정책기획관은 학교통합지원과 운영 관련, 참여율 저조, 조직 규모의 적절성, 학교 업무 경감 효과 여부 검토할 것
112. 기획조정실장은 법정 전입금, 기본 전입금, 비법정전입금 확대 및 협상력을 강

화할 것

113.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비율이 전국 최고 높은 수준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114. 감사관은 사교육카르텔, 문항거래 교원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부족하므로 징계 조치 관련하여 교육부에 강력 처벌 규정을 요청할 것
115. 안전총괄담당관은 어린이통합버스 합동점검 결과 관련, 시정조치 건수 37건, 47건 등 건수 많은 곳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할 것
116. 교육행정국장은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학교 정상화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 재원 파악 후 조치하고, 지방공무원 파견 미수용 관련 교육부와 협의해 대안 마련할 것
117. 공익제보자 유모씨 사문서 위조사건 관련, 8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처벌불원서 제출했다고 나와 있으나 법원 자료 제출 목록에 없으니 확인할 것
118. 우촌초 감사관과 협의해 감사 시정조치 미이행 사항을 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부와 구체적인 협의계획을 세울 것
119. 교육행정국장은 우촌초 정상화 관련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120. 교육행정국장은 공익제보자 중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복직 결정 건에 대한 구체적인 복직절차 안내 등 제반 조치를 다 할 것
121. 사립학교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 등 법·제도 한계 담은 사립학교 법 개정안 작성해 교육부와 협의할 것
122. 교육행정국장은 우촌초 홈페이지 게재됐던 예결산서 삭제된 상황으로, 일광학원·우촌초, 예결산서 미제출, 우촌초 홈페이지 미게재 조치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여 보고할 것
123. 교육행정국장은 결산서 제출 후 수정 관련, 사립학교 사무직원 업무 미숙지, 재무회계 역량 교육 강화 및 예결산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124. 교육행정국장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내역 비공개 시행 관련 공개 여부 판단에 대한 결과 보고할 것
125. 교육행정국장은 우촌초에 이규태 전이사장이 학사와 이사회 운영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여 조치 후 보고할 것
126. 교육시설관리본부 사이트의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원사업 처리현황이 2020년 이후로 업데이트 안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할 것

127. 일광학원 우촌초, 미이행된 행정조치 적극적 조치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쟁길 것
128. 임시이사회의 역할은 학교 정상화이고, 정상화를 위해선 공익제보자의 복직이 가장 중요한데 교장, 교직원, 학부모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엄벌촉구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본래 임시이사회의 역할과 맞지 않으므로, 교육행정국장은 일광학원 우촌초, 공익제보자에 대한 엄벌촉구 탄원서 제출 관련, 탄원서 제출 경위 확인하고 보고할 것
129. 일광학원 우촌초, 예·결산보고서 미제출 관련, 그동안 제출하지 않은 결산서 제출하도록 할 것, 제재조치 방안 법적자문 구할 것
130. 이규태 전 일광학원 이사장이 현재도 계속 학교를 들락거리며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데 조치 방안, 자문 구하거나 교육부랑 협의해 결과 보고 할 것
131. 교육정책국장은 서울공연예술고 운영 부적정과 비위, 학생 인권침해 반복, 특별장학 나가서 그동안 지적 사항과 새로운 사각지대 찾아볼 것
132. 교육정책국장은 서울공연예술고 감사 후 처분과 시정 권고 등 미이행에 대한 조치 부분 법·제도 개선안 만들고 교육부에 협의할 것
133. 교육정책국장은 서울공연예술고, 학생인권침해 반복에 대해 교육지원청도 주시할 것
134. 교육정책국장은 서울공연예술고 관련, 특목고 재지정 평가에서 감정 피하려고 현 행정실장 면직 후 재임용한 것인지, 행정실장과 관련해 평가 점수에 반영된 것인지 확인할 것
-행정실장 면직 조건으로 특목고 재지정했으나 이후 재임용한 것은 교육청 기망한 것과 관련해 법률 자문 받아볼 것
135. 교육정책국장은 1교1변호사제 관련 자문이 없는 경우 자문료 지급 예산 낭비가 되거나 자발적으로 기본운영비에서 변호사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실행률이 낮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재검토하는 한편, 특정 법무법인에 계약이 독과점되는 현상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6. 교육정책국장은 2030 교원 면직률 높은 것과 관련해 원인 분석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2030 교원들의 설문조사 혹은 현장 의견 들을 것
137.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지도점검, 시기와 방식 개선할 것
138. 유아 대상 영어학원 월평균 교습시간 증가에 대하여 적정시간 기준 및 교습비

조정 등 관련 해결책 마련할 것

139. 선행학습 금지 관련 어려움 행정처분 근거없어, 법 개정안 전의 어디에 어떻게 제안했는지 내용 정리해 제출할 것(제도 개선 건의안)
140. 영유아 사교육 레벨테스트 관련 법적 제재 건의 등 영유아사교육 대책팀과 협업과 소통할 것
141. 농구장 관람권 판매량의 10% 체육시설 초대권에 대한 현황 파악 후 협행 조례 조항 재검토할 것
142. 학생체육관 홈페이지, 게시물 업데이트 및 협행화할 것
143. 도서관 담당자들의 통계 입력 오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산출 기준 철저 요청
144. 평생진로교육국장과 진로직업교육과장은 특성화고 노동인권·안전 교육 관련, 사이버 교육(12시간)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대면 교육 확대 및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 이해·습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현장실습 시 안전·노동 환경 점검 강화,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행 요청, 필요시 기업 현장 기습방문도 검토할 것
145.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실습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부당한 요구가 있거나 위법 요소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것
146.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청소년 대상 신종 사기(계좌 매매 등) 관련 대책이 미비하므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 교육을 즉시 강화할 것
147. 여러 대학이 제공하는 '은퇴 설계' 연수의 실질 내용이 현장 체험 중심(수목원·박물관·산책 등)으로 구성돼 은퇴 설계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교육청·학교 예산이 투입되는데 프로그램 검증 절차가 없거나 미흡하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 연수 프로그램을 재정비할 것
148. 교육감은 중학교, 자유학기프로그램, 진로체험 등 선택 시 민간업체(진진리서치 등) 시스템 통해 신청하고 있는 현황파악 및 교육청에서 e알리미와 같이 통일해 효율적으로 관리 검토할 것
149. 교육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법정부담금의 비공개 전환 이후 개선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연구용역 추진도 고려할 것

150. 감사관은 서울디자인고의 감사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을 고려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이나 특별장학 등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
151. 11개 교육지원청 간 학생 수 및 학교 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원청 내 직원이 동일한 숫자인 것은 부당한 인사배치로 볼 수 있으므로, 직원 수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2. 교육청의 적극행정 문화가 부족한 것은 수많은 사업을 일부 직원이 담당함으로써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 사업조정을 통해 행정 다이어트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
153. 기획조정실장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혐오성 집회와 관련하여 집회 관리 부담을 학교 현장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교육청이 책임 있게 조치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교육청 주도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154. 교육행정국장은 ESS(에너지저장장치) 의무 설치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의무대상 여부 및 설치 가능성에 대한 기본 검토조차 수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무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
155.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전자도서관 어플 개편 이후 1년 이상 앱 운영 오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초기 계약(안정화 조항) 및 사업 관리의 부실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시정할 것
156.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교가 사설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은 학생·학교가 공교육 체계를 통해 충분한 진로·학업 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 확충 및 기준 마련 등 시급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
157.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사교육 컨설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별 단가가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므로, 교육지원청 차원의 교습비 관리·점검 강화와 학생·학부모 대상 안내체계 정비를 즉시 추진할 것
158. 교육감은 공약 내용 중 '기초학력 증진·교육격차 해소' 등 추상적 표현에 머물러 실효성 검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공약별 구체적 성과지표(KPI) 및 이행평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정할 것
159. 서울시교육청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실상 관리·감독 부재를 인정하였으므로, 최소한의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현행 체계를 즉시 개선할 것. 특히

등록 탈락 기관(9곳)과 미등록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에 대한 기초 데이터 구축 및 위험성 확인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

160.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학사 분쟁 등 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대응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인정한 만큼, 사건 접수 절차·연락 체계·초기 대응 프로토콜 등 최소한의 공적 보호장치 마련을 즉각 추진할 것

16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운동장·통학로 침식·잠식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면적 축소 사례(51개교 중 24개교)가 발생함. 향후 모든 승인 과정에서 조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도록 즉각적인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

162. 교육정책국장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재계약 미희망·중도퇴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근무여건·보수·지원체계 개선 없이 동일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가 주거·비자·생활정착 지원을 모두 떠안는 현재의 운영 방식은 사업 목적(공교육 내 영어 소통경험 강화)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학교 부담을 즉시 경감하고 지원청 중심의 지원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것.

163. 교육정책국장은 원어민 교사 보수 등급기준 가운데, 현재 S~H등급 체계에서 상위등급은 극소수(0.2%)만 유지되고 대부분 하위등급에 집중, 평가 기준·등급 유지 기준이 불명확하여 교사의 경력·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등급 산정·유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수 체계를 즉시 재검토하여 시정할 것.

164. 교육정책국장은 혁신학교 신규 지정 과정에서 학부모 동의율을 "참여 학부모 기준 50%"로 적용하면서도 전체 학부모 규모와 무관하게 통과시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예: 전체 627명 중 95명 투표 → 동의율 95.8%로 지정) 해당 기준은 학교 민주성·절차적 정당성을 저해하고, 실제 학부모 의견 반영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의율 기준과 절차를 즉시 재정비할 것.

165. 교육청이 실제로 존재하는 다수의 미인가 국제학교를 2곳만 파악하고 있는 등 현황조사 체계에 심각한 오류가 드러났으므로, 즉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정할 것.

166.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규정된 '시설폐쇄 명령' 가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권유 수준의 행정조치에 머물고 있는 행정 공백이 확인됨. 불법 운영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고발 및 법적 절차 강화를 통해 시정을 요구함.

167. 최근 5년간 민원 현황 자료가 부정확하고 기관별 분류가 통일되지 않아 교육청 내부의 자료 관리·민원 처리 체계 미흡이 확인됨. 민원 접수·처리 체계와 자료 축적 방식을 즉각 점검하여 표준화·정확성 확보를 시정할 것.

168.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원청별 학교폭력 심의 지연율 격차가 매우 크며(성동광진 29% vs 강서양천 96%) 교육부 지침(4주)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폭 심의 인력·심의실 수 부족으로 장기간 미개최되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

169.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 소요기간이 최대 7일까지 지연되어 피해학생 분리 조치 기간(최대 7일)과 충돌하고 있고, 인력 배치기준 부재로 지원청별 인력 편차도 심각하므로, 배치 기간 단축 및 기준을 재정비할 것.

170.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급식실, 체육관 설치 등으로 운동장 면적이 축소되고 있는 각급 학교 현황을 고려하여,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면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71. 교육정책국장은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결치기 수업에 의한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수업 미도달 학생들을 위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172.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급식실, 체육관 설치 등으로 운동장 면적이 축소되고 있는 각급 학교 현황을 고려하여,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면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건의사항]

1. 교육행정국장은 폐교 활용 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다양한 폐교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검토할 것
3.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생 자퇴 데이터를 조속히 구축해 줄 것
4.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 진학·학업 설계 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학생·학부모

의 불안을 해소할 것

5. 교육감은 학생들의 의견 및 행동을 정치적 성향으로 단정하거나 ‘극우화’ 등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학생들에게 정치적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표현과 책임 있는 소통을 해줄 것
6.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효과 실효성이 높으니 적극 활용을 해줄 것
7. 대변인은 교육청 보도자료 배포 시 첨부파일에 한글 파일과 더불어 PDF 파일도 같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해줄 것
8. 감사관 인력이 충분한지 검토하고 감사관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
9. 안전총괄담당관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니 공립유치원에도 통학버스를 적극 지원 및 배치하여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공립유치원 입학 기회를 제공할 것
10. 학생들의 안전 사고 관련 교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높으니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청구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에게도 적극 안내할 것
11. 감사관은 학교 운동부 관련 불법 찬조금 모바일 신고 센터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12. 자양중 교직원 행태 민원(사설 업체에서 총무를 맡으며 공무원 겸직 신청 없이 성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제공 역할 등) 처리 관련 감사관에서도 파악해 볼 것
13. 폐교부지 활용 시 교육시설 중심 활용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공공재’ 차원으로 접근할 것
14. 석면 제거 사업의 지역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에서 불용이 생기는 점을 검토하여, 특히 초등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석면 제거 사업에 속도를 낼 것
15.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저조한 점에 대해 검토하고, 조속히 해당 사업을 진행해서 시설 개선율을 높이고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권을 증진해 줄 것
16. 교육정책국장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징계 수위를 개선할 것
17.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교육청이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입시 영향으로 인한 자퇴 현황 등 핵심 정보를 명확히 구축할 것

18. 서울시 초·중·고 교권 침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결정 비율이 4배 이상 상승하고 교원 치유센터 이용 건수도 폭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사 보호 체계 전반의 신뢰 회복이 시급함
19. 공립유치원 통학버스의 필요성과 수요를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전면 조사하여, 수요가 확인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20.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딥페이크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에서 '조치 없음'으로 판단하는 사례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고, 피해학생 보호 중 '조치 없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및 관리할 것
21.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 바닥재에서 기준 초과 유해 물질이 확인된 만큼, 표본조사에 그치지 말고 전수조사 확대를 고려하고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교육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
22. 교육행정국장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관련 환경적으로 취약한 학교 및 소규모 예산으로 개선 가능한 학교를 병행하여 우선순위로 진행 및 예산 편성할 것
23. 교육정책국장은 초등학생 대상 온라인 오픈 채팅 알바·사기 유혹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스쿨벨 등 교육청 공식 채널을 통해 학부모에게 위험성을 적극 안내 및 경고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24. 수능 이후 고3 학생 관리가 학교별로 편차와 방치 우려가 있으니, 실태를 점검 해서 금융교육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볼 것
25.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관련하여 학교가 제출하는 교육환경 개선 수요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선정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교육현장 수요 기반의 결정 체계를 정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6. 교육정책국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 속에서, 서울시교육청 역시 현장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27. 교사의 정치기본권 허용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것
28. 안전총괄담당관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연계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행안부·자치구와의 협의에만 기대지 말고 교육청 차원의 예산 확

보와 자체 추진 대책을 적극 마련해 줄 것

29. 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사립유치원보다 저조하니 공립유치원 교실에도 CCTV가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이들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
30.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적극 논의해 줄 것
31. 교육행정국장은 반복적인 학교시설 하자 발생 원인을 전면 재점검하고, 하자 빈발·부실시공 업체를 입찰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2. 교육행정국장은 2021년 공표한 '과밀학급 80% 해소' 목표의 이행 현황을 재점검하여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과밀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33.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 지침만 기다리지 말고 교육청 차원의 유효교실 활용 방안 마련해서 학교 내 유효교실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것
34. 난독·경계선 지능 등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 필요 및 학습진단성장센터의 실질적 성과를 보고할 것
35.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스포츠 문화관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 지원 확대를 고려해 줄 것
36.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금의 편차를 줄이고, 특히 재정 취약 구청에 대한 조정 및 협의를 지속할 것
37.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여부 및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과거 서열화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과 함께 명확한 공개 방안을 결정해서 알려줄 것
38. 교육감은 학교 복합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과 장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39. 교육감은 복합시설 회원권 문제와 관련하여, 전대 문제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법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을 제시할 것.
40. 교육감은 신구초등학교 복구를 위해 세금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1. 안전총괄담당관은 모이자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소통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42. 신구초등학교의 기술안전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시설 복구 로드맵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43. 안전총괄담당관은 핵시자전거, 아동유괴 등 변화하는 안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인식확산을 위한 로드맵 수립 후 보고할 것
44. 대변인은 복합화 시설 관련 영상제작에서 소송 장기화로 인한 주민 금전 손실 등 피해사실에 관한 영상 홍보 콘텐츠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45. 대변인은 미래학교추진단과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주민들의 학교 복합시설 이해도 및 불법 전대 등 법적이해 수준이 낮은 것에 대응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46. 학교복합시설백서 발간에 따른 직원 교육 등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47. 대변인은 브레이크 장착을 권장하는 핵시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시 무면허 및 촉법 문제등 법적 사각지대인 14~16세 학생 안전을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등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
48.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9. 학교지원과장은 청담고 이전 관련 2019년 서초구청과의 MOU 체결 당시 버스 지원에 관한 협의가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0. 교육정책국장은 만14세와 16세 사이 안전사고에 관한 법적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가 함께 학교 현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
51. 방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신경써서 관리할 것
52. 고교학점제 정책의 공백기를 메우는 과정에서 온라인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53. 특수교육과장은 진로체험 교육가와 함께 하는 특수학생의 대학 진학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한편, 대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공유의장을 마련할 것
54. 감사관은 현재 자율종합감사제도의 감사 기간이 짧고, 감사 실적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감사 실적에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 기준 및 깊이에 대한 일관성을 강화할 것.

55. 서울시 교육청의 청렴도가 저조하고, 내부 체감도 및 공정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함
56. 청렴도 예산이 교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실제 체감도 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사용의 성과를 체감도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
57. 안전총괄담당관은 교직원 안전 교육 이수율이 낮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인사 관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58. 통학로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 단순 점검 중심이 아닌, 학교·자치구·경찰이 상시 협력하는 통학로 관리 체계 도입을 제안함
59. 학생·가정·직업계고 안전교육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60.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 업체와의 표준계약서에 안전교육 이수 및 사전점검 완료 조건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함
61. 안전정책 평가 방식을 형식적 이행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체감도·참여율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62. 설계 진행 여부를 이유로 예산이 누락된 신명초 급식실 사업 예산이 재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할 것
63. 학생수 변화와 통폐합 가능성 등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된 부분을 고려하여, 상일초등학교 학교 특성에 맞는 지속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64. 길동초의 주차장·수영장 등 복합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계획 수립을 마련할 것
65. 교육행정국장은 녹색제품구매 관련 교육 및 포상 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것
66. 녹색제품 품목 집중도와 목표 달성을 고려해, 중요 품목 관리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녹색제품 구매 실적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67. 메이커 교육 성과 평가 방식(참여 학생 수 및 행사 횟수)이 행정 지표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생 역량 변화와 같은 교육 지표 중심으로 성과 관리 체계를 재설계할 것
68. 메이커 교육을 체험 위주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중심 프로젝트 학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AI, 로봇, 디지털 디자인 등 차세대 기술과 융합하는

서울형 메이커 교육 모델을 개발할 것

69. 교육정책국장은 융합과학 교육에 대한 정책 철학을 단순한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학생역량 강화로 개선해 나갈 것
70. AI 교육의 인프라 강화: AI 디지털 학습 지원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 확대 외에도, AI 교육의 본질을 다룬 비판적 사고 중심 교육으로 전환 필요
71. AI 교육을 넘어서 창의적 문제 해결 교육으로 전환: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문제 정의 및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할 것을 건의.
72.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디지털 소양을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
73. 이음교육 프로그램의 전면 확대: 유아초등 연계 교육이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내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함.
74. 장애학생의 교육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장애학생의 자립 지원과 진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건의함.
75. 기술적 보조기기와 맞춤형 콘텐츠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기 보급 외에도, 기기 활용법에 대한 교사 교육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견의함.
76. 장애학생 가족 지원 예산 복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가족 지원 예산의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 복원을 요구함.
77. 조리 종사원 결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제안: 조리 종사원 결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단체 운영 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을 견의함.
78.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투자와 조리 종사원 쳐우 개선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 문제 해결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79. 영양교사 보조 인력 지원: 영양교사의 보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급식 업무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 인력 지원이 시급하

다고 건의함.

80. 사립유치원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사립유치원의 안전 관리가 공립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건의함
81. 사립유치원 시설 개선을 위한 공공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시설 개선을 위한 공공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예산 배분에서 공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안함
82. 사립유치원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정부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함
83.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흑석고등학교의 학년당 학급 수를 증원할 것
84. 감사관은 '사교육 카르텔'로 적발돼 교육청이 징계 조치한 124명 교사와 같이 범죄 의도가 명확한 건에 대해 앞으로는 중징계를 검토할 것
85. 감사관은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직접 징계를 요구한 교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사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정 개정을 상급기관에 요구할 것
86. 감사원 감사가 아닌 경로로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돼 송치된 4인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나 업무배제를 검토할 것
87. 행정국장은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
88. 교육행정국장은 사립유치원이 교육시설안전인증 취득을 희망할 경우 시설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상급기관과 협의할 것
89. 교육정책국장은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을 참조해 중학교에도 과학중점학교를 지정할 것
90. 교육정책국장은 동작 지역에 영등포중학교가 수학과학융합센터로 조성된 만큼, 지역사회 연계성을 감안해 동작 지역에 과학중점 '거점학교'를 시범운영할 것
91. 공동교육과정의 소인수 과목이 개설되더라도 예산 지원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할 것
92. 중점학교 개설 기준인 '자교 학생 30% 이상, 타교 학생 70% 이내'로 폐강되는 과목이 발생하는 만큼, 기준을 보완할 것
93. 교육정책국장은 서울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교학점제 정책 연구를 수행할 것
94.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조리실 내 조리흄(Cooking fume)을 측정할 것
9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를 감안해 조리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것

96.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를 감안해 조리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것
97. 학생들이 청력손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것
98. 학교폭력심사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 보고할 것
99. 학생보호인력과 SPO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
100. 학생보호인력이 과거와 같이 본업과 무관한 업무를 하지 않는지, 그 외 애로 사항과 보완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완할 것
101. 감사관은 최근 5년간 월 3회 이상 외부강연을 했음에도 감사관에 신고, 검토하지 않은 직원을 모두 찾고,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장 '위반시의 조치'에 따라 이를 직원을 조치할 것
102. 감사관은 외부강의 신고 결제는 각 팀장이 하는 바, 팀장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행동강령에 맞게 외부강연이 이뤄지도록 할 것
103.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청의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4. 기획조정실장은 사학이 원고인 소송의 경우 패소율이 높은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5. 미회수 소송비용 1억 7,886만 원을 조속히 회수할 것
106.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이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고 연중 고르게 신청되도록 조치할 것
107. 교육감은 오래된 학교수영장에 우선적으로 대수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
108. 서울시내 6개 폐교에 대한 시설 관리 예산이 5년간 26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폐교 활용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
109. 교육정책국장은 2025년 디벗 양품화 사업의 '베터리 교체' 수요 예측 실패 및 집행률 저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110. 디벗 양품화 사업 중 파우치, 펜촉 등 소모품을 전수교체하고 있는데, 지속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교체를 신중히 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111. 디벗충전함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것
112. 올 들어 디벗충전함 고장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제조사와 협의해 고장률을 줄일 것
113.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구매를 하거

나 용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공사립 학교에 적극 안내하여 활용방안을 강조할 것

114. 교육감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 SNS 활동, 정당 가입, 선거운동 참여 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의 우려와 교원의 권리보장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정립을 위한 중장기적 논의 구조(공론화·설문·학부모 의견수렴 등) 마련을 검토할 것.
115. 서교초 수영부 학생들이 인근 창천중학교로 자연스럽게 진학하여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체육특기학교 운영 시 지역 기반 종목 연계 중심의 배치 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
116. 감사관은 교육현장에서 감사 인력이 강압적으로 조사한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공익제보센터 직원의 전문성·윤리성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조사 시 절차적 공정성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교현장의 불신을 해소할 것.
117. 학교 내부 갈등·징계 과정에서 사익 목적 제보가 증가하고 있음. 교육청이 사립학교 감사와 공익제보 연계를 최소화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과도한 조사, 무분별한 제보 남용을 줄일 필요 있음
118. 타 시도는 법령 없더라도 자체 지침을 만들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 중. 서울도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인조잔디 유해성 기준을 반영한 자체 정기검사 제도화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을 건의함
119. 폐교부지가 현재 6개 존재하고, 향후 5~10년 내 추가 증가가 예상됨. 교육청·서울시·국토부 등과의 협의가 “의견 조회 수준”에 머물러 실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향후 폐교 증가에 대비하여 주택공급·생활SOC·교육시설 등 융합형 복합개발 모델을 포함한 중장기 활용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을 건의함. 특히 대토(代土) 방식·민자 활용·공공복합시설 모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120. 현재 학교 용적률이 ‘30%·150%’ 수준으로 뮤여 있어 급식실·특별교실·돌봄시설 확보 등 필수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 청사의 고층화·입체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서울시·지역구 시의원이 공동 참여하는 ‘학교 신축·증축 용적률 협의 구조’ 마련을 검토할 것을 건의함.
121. 차단기 교체보다 스프링클러 설치·노후 전선 교체가 우선순위 되어야 함. 화재 위험도 기반의 ‘우선투자 분야(스프링클러·전선·누전 시스템)’ 순위를 설정하

는 기준 마련을 제안함. 향후 예산 편성 시 이 기준에 근거해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122. 성진학교 2,400평과 잔여부지 2,400평 개발이 향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에 있는데, 현재 일반고 신설 타당성 용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만큼, 잔여부지에 대해 고교 신설·교육시설·생활SOC 등 복합적 활용계획을 검토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안함.
123. 전자칠판 구매 관련 학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제품 정보 공개 강화, 공정한 절차 운영 등을 포함한 중장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124. 전자칠판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도입 전반에 대한 TF 구성·중장기 계획 수립 등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125. 교원평정프로그램 관련 교육청은 장기적으로 전문 개발 인력 활용, 외부 전문업체 공동 개발, 타 시도 우수사례 비교 등을 포함한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유지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126. 향후 교원평정프로그램 개발·수정 시 교장·교감·평정 담당교사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 강화 필요.
127. 향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안내의 기준·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128. 부서 간 공문 전달 시 원문 유지·검토 프로세스 강화 등 중장기 개선을 검토 할 것.
129. 학생·학부모 대상 행사에 안내 시 적정여부에 관한 내부 사전 검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0. 교육청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교육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개선 의견 제시를 강화하는 중장기 체계 구축을 검토할 것.
131. 서울체육고의 특수학교로서의 취지에 맞게, 체육 특기생 선발의 합리성·기준 적정성에 대한 제도 검토가 필요함.
132.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조치 세부기준 개정 관련 반성·화해 점수 하향, 심각성·고의성 점수 상향, 전학·퇴학 기준 세분화 등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사항을 종합한 정식 개정 의견서(문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건의함.
133.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계속 같은 학교에서 마주쳐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은 향후 학폭심의 운영에서 피해학생 보호 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함.

134.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안내의 기준·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135. 서울시교육청은 부서 간 공문 전달 시 원문 유지·검토 프로세스 강화 등 중장기 개선을 검토할 것.
136. 학생·학부모 대상 행사에 안내 시 적정여부에 관한 내부 사전 검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7. 교육청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교육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개선 의견 제시를 강화하는 중장기 체계 구축을 검토할 것.
138. 서울체육고의 특수학교로서의 취지에 맞게, 체육 특기생 선발의 합리성·기준 적정성에 대한 제도 검토가 필요함.
139.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조치 세부기준 개정 관련 반성·화해 점수 하향, 심각성·고의성 점수 상향, 전학·퇴학 기준 세분화 등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사항을 종합한 정식 개정 의견서(문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건의함.
140.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계속 같은 학교에서 마주쳐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은 향후 학폭심의 운영에서 피해학생 보호 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함.
141. 교육청은 학교가 시설 개방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운영비 부담,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지원청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개방과 관련된 대안 제시 및 예산협의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
142. 행당중 폐지 논의 시 가장 큰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당중 학생의 광희중 배정 및 금호동권 학생의 금호중 배치 조정 등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마련·제시할 것.
143. 10대 남학생의 이분법적 사고 확대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및 민주주의 수업 중요성 강조
144. 현장실습생, 수당 등 실습지에 따른 편차가 큰 특성화고 학생, 차별 문제(임금 격차, 편견 등), 취업연계 대책 마련 촉구
145. 일광학원, 운화학원, 서울공연예술고 등 개선 미비와 관련해 이유가 무엇인지, 법·제도 한계 개선안 분석 후 보고 요청
146. 서울공연예술고,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감사해서 정상화된 학교

환경 만들어 줄 것

147. 고등학생 등교시간 실태조사 및 변경에 관한 대시민 여론조사 실시를 검토할 것
148. 교육청 및 산하기관 전무 초대장, 격식차린다고 종이 낭비하지 말 것
149. 교육정책국장은 재난 상황 대비 및 안전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종합정보센터 건립, 신속하게 추진할 것
150. 전공별로 실무와 연계된 전문성 있는 교육 확대 및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연수·자격증 취득 지원, 전공별 졸업생 특강, 진로 멘토링 등 실무형 프로그램 지속 강화 등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51. 학교방문 노동인권·진로탐색 교육의 낮은 시행률(약20%)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 확대 필요
152. 취업 중심 학교와 진학 중심 학교의 운영 실태를 반영한 예산·사업 지원의 차등화 필요성 제기
153. 청소년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교육자료 제작, 학교 현장 전파 필요
154. 교육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것
155.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유보통합 관련해 추진과정과 자치구 목소리 등 공유와 소통할 것
156. 특정 국가·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포함한 시위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학생 보호·갈등 완화·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부서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정비할 것
157.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학생 선택권 확대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가 사설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진로·학업설계 지원 강화가 필요함. 현재의 연간 진로·학업설계 프로그램만으로는 학생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지원 대상 확대, 인력·예산 보강, 학교별 컨설팅 기준 마련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또한 향후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보완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체계 구축을 요청함.
158. 고교학점제로 인한 자퇴생 통계 및 원인 분석 즉히 추진할 것.
159.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서울시의 등록·관리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기관들에 대해 등록 유도 전

략, 현행 기준 재검토,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건의함.

160. 미인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편향 교육, 높은 학비, 학교폭력 등 문제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만큼, 교육청은 정보 제공 체계 구축 (기관 정보·학비·교육내용 공개 등) 및 피해 예방·상담 연계 방안 마련 등 보호 정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161. 민식이법 이후 무인단속장비가 증가했음에도 스쿨존 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은 자치구·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보도·차도 분리, 통학로 구조개선, 펜스 설치 등 물리적 안전조치 확대를 추진할 것을 건의함.
162. 최근 3개년 개방 학교 수 및 개방시간 통계가 연도별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 원인분석 및 관리체계 마련할 것.
163. 행정국장은 서울시 학교 개방률이 전국 최하위인 원인을 단순 '지역 특성'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량적·정성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 미개방·축소 학교별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
164. 행정국장은 타 시도 대비 낮은 학교시설 개방률을 개선하기 위해, 스쿨매니저 제도 외에도 학교가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165. 행정국장은 운동장 축소는 학생들의 신체활동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차도 분리 등 안전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운동장 보전을 최대화하는 설계·승인 기준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6. 학교시설 개방률, 개방시간, 운동장 면적 변화 등 핵심 지표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전담 분석·점검 체계 구축 검토 필요.
167. 학생 만족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축소되는 주요 원인은 낮은 보수·주거여건·행정부담임. 서울시교육청은 중장기적으로 보수 현실화, 주거·생활지원 제도화, 코티칭 교사·지원 인력 연수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168. 현재 혁신학교는 공모·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반면 자사고·외고 평가는 세부 기준이 매우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어 제도 간 형평성이 떨어짐. 신규 지정 시 설문·의견수렴 방식의 표준화, 참여율 최소 기준 설정, 심사 기준의 구체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

169. 자사고·외고에 비해 혁신학교의 평가지표가 단순하고 느슨하여 운영성과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교육청은 기존 혁신학교 평가지표를 재검토하여 학교유형 간 평가 형평성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
170. 평생교육진로국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확산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 실태를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와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관리 기준·점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것
171. 현재 법령상 폐쇄 명령에 대한 강제력과 제재가 미비하므로, 학원법·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중장 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또한 미인가 기관의 학원 전환 및 등록 유도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172.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 제공 체계(학비, 교육과정, 운영자 현황), 상담창구 마련, 분쟁 대응 절차 등 학생·학부모 보호 중심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을 건의함.
173. 학교폭력심의와 관련하여 학생 수·사안 발생 건수에 따라 지원청별 심의실 확충, 전담조사관·생활교육팀 인력 재배치 등 유동적 인력 운영 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
174. 장애학생은 진술·피해 설명이 어려워 심의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어 조력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필요함. 국가인권위 권고·타 시도(강원) 조례 제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의무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175. 교육정책국장은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결치기 수업에 의한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수업 미도달 학생들을 위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기타사항]

1. 폐교 자산 2024 1. ~ 12. 발전방향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
2. 2025 7. ~ 8. 폐교부지 대상 서울시교육청 시민참여 지역별 토론회 세부내용
3. 특별보좌관 제도 폐지 검토 결과 보고
4. 자양중 교직원 행태 관련 민원 처리 내역 일체 제출할 것

5. 최근 3개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안 제출할 것
6. 노원구 소재 축구부 감독 금품 수수 행위 관련 처리 내역 보고 요청
7. 중학교 배정 관련 계획안 제출할 것
8.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관련 구체적 계획안
9. 교육행정국장은 폐교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되면 공유해 줄 것
10. 공립유치원 취월율 저조 요인에 대한 자료 제출
11. 교육정책국장은 교권 침해 시 미조치 사안이 늘어난 구체적 사유에 대해 보고 바람
12. 6년 한도가 다 된 디벗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문의
13. 학교폭력(딥페이크) 가해학생은 조치를 받았는데 피해학생은 조치가 없는 이유 및 현황
14. 학교폭력관련 제출자료(28건) 빈칸 채워서 재제출 요청
15. 전문상담사가 미배치된 학교 내 마음 건강상담이 필요한 학생 수요 현황
16.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의 정책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유 바람
17. 학교 운동부 부패 척결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므로.
학교 운동부 관련 학부모 면담 및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것
18. 교육정책국 혁신교육전공대학원 mou 계약 내용
19. 혁신 교육 전공 대학원 관련 보완 자료 (최초계약서, 최근 2개년치 계약서 등)
20. 혁신 교육 전공 대학원 관련 올해 수업한 강의 목록 및 계획서(syllabus) 및 사용된 책들 일체
21. 급식실 환기시설 용역 결과 나오면 공유해 줄 것 (연말 예상)
22.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연구용역 결과 공유
23. 교권 위원회 개최 현황 관련 교권침해 인정됐으나 미조치율 상승(4배)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 보고
24. 국민유치원 통학 버스 운영 필요성과 수요 파악
25. 교육감 명의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 34개 설치 관련 내역(위치, 사진 포함) 제출할 것
26. 현수막 설치 관련 구청 협조 공문 제출
27. 사교육카르텔 교원 징계, 업무 배제 등 서울시교육청 조례개정 가능 여부 검토
28. 외국인학교 정·현원이 많이 다른 것과 관련 외국인학교 운영 전수조사 자료
29. 학교시설공사 하자내용 및 조치 최근 3년치 자료 제출
30. 초중고 학교별 교실현황 (일반교실, 특별교실 포함) 일반학급 수 재검토 후 제출 요구

31. 자사고 과학고 외고 진학 현황(의대/공대), 확약서 위반 시 제재 관련 (제재건수, 내용 등) (최근 3년) 자료 제출할 것
32. 독서종합계획 별도 보고할 것
33. 기초학력 관련 종합결과 보고할 것
34.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의견수렴 방법 및 의견수렴관련간담회, 토론회를 실시한 경우 내용, 개최일, 참석자, 논의결과 등 전반적인 자료
35.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자료(연단위 통계)
36. 조세포탈 방지책 관련 보고/ 다른 기관(국세청)과 연계 방안 자료 제출할 것
37.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할 것
38. AI 디지털 교육 종합계획 보고
39. 안전총괄담당관은 통학로 개선 등 통학 안전 관련 보고할 것
40. 안전인증제 취득이 조속히 이뤄지기 위한 방안 마련 후 보고할 것
41. 도서 장서구입비 편성비율 저조문제 해결방안
42. 학교도서관 장서 보관장소 부족문제 해결방안
43. 흑석고 발령 교장·교감 인적사항 자료제출할 것
44. 난청 예방 교육, 학생 청력검사 기준 강화 관련 방안 모색 및 대안 보고
45. 급식실 공기정화장치 설비 확충과 조리실 공기질 기준 개선에 대한 방안 제출
46. 급식시설 환경개선 진행 및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제출할 것
47. 최근 5년간 월 3회 이상 외부 강의 나간 직원 명단 및 적발 인원에 대한 조치 계획 제출
48. 지구촌학교 과태료 관련 자료 제출할 것
49. 관련법에 의거한 자료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응할 것
50. 통폐합학교·폐교학교·소규모학교 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 폐교가 새로운 시설로 활용되기 전 지역주민 사용 가능토록 검토할 것
51. 폐교 활용에 대한 지자체 의견 제출할 것
52. 6년 내용연수 만기 도래 예정인 노후 태블릿의 추후 활용방안 제출할 것
53. 지속 사용 가능한 소모품에 대한 활용계획을 보고할 것
54. 교사의 정치적 발언 및 행동 관련 접수된 민원사항 일체(최근 5년간) 제출할 것

55. 교육감에게 서교초 수영부 - 창천중학교 연계 가능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므로, 향후 관련 조치 및 협의 결과를 의원실에 별도 보고할 것.
56. 비상근 시민감사관 경력(주당 근무시간 포함) 증명서
57. 임기제 세부 급여 및 등급별 보수 내역
58. 공익제보센터 최근 3년간 채용 공고 - 서류·면접 평가자료 - 임용 결과 일체
59. 공익제보센터 직원 전체 인건비(연도별, 직급별) 산출자료
60. 사립학교 감사 관련 공익제보 접수·조사 사례(최근 3년)
61. 공익제보센터 상근 시민감사관 해당 인사·채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할 것
62.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63. 남부관내 중학교 빨리송 나이프 학교폭력 관련 학교폭력심의 회의록 및 위원 명단(개인정보 삭제 후)
64. 강경숙 의원실 교육청 협조 공문 내용(최초, 정정), (공문 어려울 경우 안에 내용만 작성)
65. 전자칠판(oem 방식, 물품선정위원회 등) 조달 관련 보고
66. 교원 평정 보조 프로그램 수정, 보완에 관한 보고
67.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관련 교육청이 교육부에 개선 의견 제출 한 자료 요청
68. 서울체육고 입시 사례 관련 사실관계 보고 요청(입시요강 및 입시결과)
69. 학교폭력 조치기준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협의자료 및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개진한 의견의 정리자료 제출 요청
70. 지구촌학교 공익제보 관련 종합 보고(김보경 공익제보인 관련)
71.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관련 교육청이 교육부에 개선 의견 제출 한 자료 요청
72. 서울체육고 입시 사례 관련 사실관계 보고 요청(입시요강 및 입시결과)
73. 학교폭력 조치기준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협의자료 및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개진한 의견의 정리자료 제출 요청
74. 행당중→광희중 배정 및 금호동권→금호중 조정 배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적정성 검토 결과를 추후 보고할 것.
75. 서울공연예술고, 2020년 특목고 지정 취소, 유예, 2022년 재지정 시 운영평가위원 리스트랑, 평가결과표, 평가 결과보고서, 2025년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76. 서울교육 소식지 정보 취약계층 접근성에 대한 분석 검토
77.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감사 관련(특정감사 실시 계획 포함)
78. 보고 때 인쇄물 아닌 파일 제출 요청

79. 토너, 잉크, 종이 절감 부분 예산 반영 요청했는데 몇% 절감했는지 수치 요청
8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전입금) 12월 전출금 차년도 전출 관련 규정 제출할 것
81. 사교육카르텔 교원에 대한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 검토 의뢰 등이 있으면 제출할 것
82. 사교육카르텔 관련 향후 계획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다음주 중으로 보고
83. 정책기획관,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완료되면 보고
84. 사교육카르텔 문항거래 관련, 교원 징계 관련 검토 후 보고
85. 일광학원 민원 감사 시정조치 미이행 사항 처리와 교육부와 협의에 대한 구체적 계획 보고
86. 사립학교 법령 개정 계획 제출
87. 법정부담금 공개여부 제도 관련 검토결과 보고
88. 교육시설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원 및 처리 현황 업데이트 요청(시정조치 요청)
89. 2025년 성북구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원요청 현황자료 제출
90. 우촌초 최근 엄벌탄원서 내용 및 경위 확인
91. 일광학원 그 동안 제출(보고)하지 않은 예결산서에 대한 검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등 추후 조치 결과보고 요청
92. 흰일중 이사장 손주 돌봄 전담 기간제교사 3명 관련 사안 확인 요청
93. 변호사, 연수 강사나 학교폭력 예방 강의 등 자문 외 실적 제출
94. 선행학습 규제방안 마련과 관련 입법을 위한 교육청의 제도 개선 노력과 경과 자료 제출
95. 영유아 영어학원 교습시간 과다문제 해결과 적정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 대책 보고
96.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실습 간 괴리감에 대한 지속적 파악 및 의견 청취 강화
97.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근로자성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
98. 향후 수상 구조 교육 확대를 위한 추가 논의 진행
99. 신종사기 수법에 대한 경찰청과의 협의 및 문의 내역
100.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출
101. e알리미 관련 최근 3년 민원 접수 내역

102. 최근 3년 간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내역(학교별, 운동종목별, 지원내역)
103. 교육행정국장은 타 지자체에서 실내체육관 조명시설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 관내 노후 체육관·체육시설 조명설비의 안전 점검 체계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04. 안전총괄담당관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상당수가 2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있어 3점식 등 실현 가능한 안전장치 대안을 검토 후 보고할 것
105. 고교학점제 대비 사설 컨설팅 이용 학교 8개교 명단 및 지출액 상세자료 제출 할 것
106. 지역별 사교육 컨설팅 단가 자료(교육지원청 보유자료) 제출할 것
107. 미인가 국제학교 현황을 제출할 것
108. 제출된 운동장 축소 총량(4,500평) 산정의 정확성 재확인 후 관련 자료를 재제출할 것.
109. 최근 3개년 학교시설 개방 실태조사·설문조사 자료를 일체 제출할 것
110. 학교시설 개방 중단·축소 학교 목록 및 사유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
111. 교육지원청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비율 자료를 제출할 것
11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급여 등급 기준표 자료 제출할 것
113. 미인가 국제학교 현황 자료 제출할 것
11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 및 배치 소요기간 현황 자료 제출할 것
115.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한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위원 및 참고인으로서 참여 현황 자료 제출
116. 장애학생·경계성 지능 학생 학폭 심의 시 조력인 제도 운영 현황 및 타 시도 조례·운영체계 조사 및 서울 적용 가능성 검토 후 보고할 것.

교육지원청

– 시정요구사항 14건, 기타사항 2건 –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성일초, 신구초 사례와 같이 복합화시설 점검 결과 소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계약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찰보증 절차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
2. 신구초 복합화시설 무단 증축, 환기시설 미비 등 안전 문제 발생과 관련된 사후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
3. 논현초 등 일부 학교에서 수도 및 전기 계량기 미분리로 학교운영비 부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복합화시설의 현금거래로 인한 조세 누락과 권리금 문제 등으로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타사항]

1.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생태전환과 함께하는 일반직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의 사업내용 제출할 것
2.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한 25년도 예산안 절감 내역 제출할 것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 육설을 한 사례가 발생한 바 교육자의 공직 기강과 품위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강빛초중 이음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지원청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를 시정할 것
2. 대명초, 고덕초 통학로와 관련하여 통학버스 운행문제, 육교설치 문제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할 것

■ 남부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중학교 3학년이 교내에서 빨리송 나이프로 동급생을 3회 찌른 중대한 흉기사고임에도, 심의위는 출석정지 8일이라는 극히 낮은 처분을 의결함.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교육청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음에도, 남부교육장은 사건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함. 이는 사건 공유·보고체계 붕괴, 중대 사안 심의 기준 부재, 교육장의 관리·감독 소홀, 을 의미하며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함. 중대 사건(흉기·성폭력·집단폭력 등) 전담보고체계 구축 및 심의 재점검을 즉시 시행할 것.
2. 남부교육지원청 보고자료에서 ‘빨리송 나이프’를 ‘장난감 칼’이라고 표현한 사실지적.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사건 축소 없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함.
3. 동일한 전치 2주 피해에도 △출석정지 8일, △사회봉사 6시간, △사회봉사 8시간 등 조치 편차가 과도하게 크다는 점이 확인됨. 이는 심의위원회별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데서 발생한 문제로, 심의위원회 내 조치 기준 적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즉시적 시정조치(연수·가이드라인 강화 등)가 필요함.
4. 학교폭력 조치 세부기준 중 전학(8호)과 퇴학(9호)의 점수가 동일(16~20점), 반성·화해 점수는 낮고, 지속성·고의성 점수는 낮게 부여되는 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됨. 현행 세부기준이 현장 피해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수

년간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 재검토와 내부 적용 방식의 시정이 필요함.

5. 구로지역, 혐오 시위 관련 학교들에 필요한 지원 면밀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중부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환일중 관련 이기철 교사 정직 건, 소청심의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
2. 환일중, 이사장 손주 돌봄, 3명의 기간제 교사가 맡았다는 제보에 대하여 파악 후, 직장 내 갑질 문제, 학생 인권 침해 문제 등 지적사항 개선 여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직속기관

–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8건 –

■ 교육연구정보원

[시정요구사항]

1. 교육연구정보원은 국제교육포럼 결과를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과 접목시킨 사례가 없으므로 향후, 교육정책과 포럼, 각종 연구를 연계해서 진행할 것

■ 융합과학교육원

[건의사항]

1. 융합과학교육원 디지털 천체 교체에 따른 당면 과제인 리모델링 예산이 60억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낙후된 시설 수요에 맞도록 사업 준비를 잘 할 것
2. 수학토크 콘서트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학교 외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남산천체과학관에서 도와, 과학과 수학이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교육연수원

[건의사항]

1. 학교복합시설백서를 활용한 효율적인 공무원 연수에 대해 방안을 고민할 것
2. 교육연수원장은 교육청 소관 교육연수원 내 수영장 시설의 다목적체육시설전환을 조속히 완료할 것

■ 학생교육원

[시정요구사항]

1. 학생교육원 수상 구조 교육 관련, 수요 대비 지도사 인력 부족으로 교육 제공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상 구조 교육 지도사 인력 확충 및 환경개선이 필요함
2. 교육장(바지선·폰툰)의 규모 제한 관련하여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할 것

[건의사항]

1. 수상 교육(생존수영, 구조교육)을 더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교육부와 협력해 시설 확장, 인력 확보,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요청

■ 유아교육진흥원

[시정요구사항]

1. 전국 최초로 건립된 유아교육진흥원이 현재 미등기 상태에 놓여 있는데 불법 미등기 해소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전 절차를 연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조속히 마무리할 것
2. 현재 진입로 협소로 인한 방문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

■ 보건안전진흥원

[시정요구사항]

1. 보건안전진흥원은 초등학교, 유치원 놀이시설 바닥재에 탄성포장재 등 유해성분 조사할 때 타 시도에 비해 성분 조사 항목이 적은 바 이를 시정하여 유해성분 조사항목을 확대할 것
2. 보건안전진흥원은 기관 사이트의 게시물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바 이를 시정할 것

■ 학생체육관

[시정요구사항]

1. 학생체육관장은 직원 피복비 집행과 관련하여 특수성을 이유로 규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 집행 기준 및 검토 절차를 정비할 것.

■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정요구사항]

1. 수영장 이외의 부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은 수영장만 재산관리 이관되어 법적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
2. 20년 이상 된 노후 수영장이 현재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등 대수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
3.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수영장, 헬스장 등 공용 시설 개방에 대해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건의사항]

1. 리모델링비 산출을 바탕으로 학교 적립금 및 교특 예산을 활용하여 복합시설 수영장의 리모델링 및 보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함
2. 학교 복합시설 수영장과 같은 시설보수 및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제안함
3. 시설개방 시 학교에서 직원의 업무가 가중될 것을 고려하여 시설개방은 루틴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

도서관 · 평생학습관

–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건 –

■ 정독도서관

[시정요구사항]

1. 정독도서관은 다양한 독서대회 유치 및 유일본 전시 등 도서관 특화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시회 홍보 및 참여 확대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사 기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서울시의 5년 연속 전국 1인당 도서관 장서 수가 최하위 수준이므로 도서 대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서구입비 예산 편성 지원도 잘 살필 것
- 정독도서관은 서울시 운영 도서관과 협업을 통해 '서울아트책보고'와 같은 예술관련 도서 소개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
- 정독도서관 관장으로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바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직급 체계 개선을 검토하여 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

■ 용산도서관

[시정요구사항]

- 국가도서관 시스템 상 도서관 중 용산도서관의 대출 이용자수 현황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 파악 후 시정조치 할 것

■ 마포평생학습관

[시정요구사항]

- 마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일정(강좌 현황) 실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사이트 정비 필요
 - 특정 강좌만 노출하고 전체 강좌 게시하지 않아 모든 강좌 정보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건의사항]

- 마포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개발 관련, 고덕평생학습관 시니어 모델 클래스가 우수하므로 타 평생학습관에도 벤치마킹 및 확산 제안

■ 영등포평생학습관

[시정요구사항]

1. 평생학습관 전체적으로 영화관람 프로그램 등 문화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4개 평생학습관 간 프로그램 성과공유 및 우수 프로그램 확산, 부모교육(학부모·조부모 대상)의 강화 및 확대 운영, 수요 기반 프로그램 개발 필요 등 프로그램 운영 강화방안 촉구

학교안전공제회

– 시정요구사항 2건 –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시정요구사항]

1.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중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데이터 활용 등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예방 방안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2. 감염병 대응시기가 도래하였는데, 안전공제회 보상은 기금을 통해 집행되는 만큼 기금고갈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행 안전과 관련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중학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책과 관련된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 관리 ○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 ○ 서울교육 홍보물·영상물·간행물 등 교육홍보자료의 제작·보급 ○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홍보대사·홍보자문단 및 시민기자단 운영 ○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 운영 ○ 미디어 홍보전략 개발 및 관리 ○ 그 밖의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운영 ○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 감사자문위원회 및 시민감사관 운영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 공익제보센터 운영 ○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총괄 ○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관리 ○ 보안·당직관리 및 청사방호 ○ 회의 및 행사 ○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 학교의 차량정수관리 ○ 청사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직원식당 운영 ○ 교육감 선거사무의 협조 업무 ○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지방공무원의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등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및 후생관리 ○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 비상·전시동원 업무 ○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훈련 ○ 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 ○ 민원 제도 개선, 각종 민원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터 운영 ○ 기록물의 운영(기록물의 생산·수집 활용 및 폐기 등) ○ 정보공개제도 운영 ○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및 검색·열람 제공 ○ 업무관리, 기록물관리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 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 · 지휘 ○ 국가안전관리 세부계획 및 학교안전관리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 ○ 학교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학교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 및 운영 관리 ○ 국 · 공유재산 재해예방 및 대책 수립 ○ 교육시설재난공제 관련 업무 ○ 산업·중대재해 예방 총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 관리 ○ 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업무 총괄 ○ 서울시 및 자치구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 추진 ○ 유보통합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책의 총괄 기획·개발·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 주요업무계획 및 중기발전계획의 수립·관리 ○ 국정과제 및 공약사업 관리 총괄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및 조정 ○ 공무원 인건비 편성·관리 ○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 ○ 조직·정원관리·행정사무 개선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소송 총괄 및 수행(국가·행정·민사소송 등)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운영·지원 ○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 다문화, 탈북학생교육 관련 업무 ○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감사자료 확인 <input type="radio"/> 현황보고 청취 <input type="radio"/> 질의·답변 <input type="radio"/> 서류 또는 현장확인 <input type="radio"/>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장학 및 유·초·중등 교육과정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정원·인사·연수·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혁신미래학교 지정·운영 등 학교혁신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수학·과학·영재·정보·외국어·독서 교육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유아교육 운영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바칼로레아(IB) 탐색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평생교육의 기획·운영 및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지원 <input type="radio"/>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지도 <input type="radio"/>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포함)의 운영 지원·지도 <input type="radio"/>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지도·감독 <input type="radio"/> 학교(성)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input type="radio"/> 학교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지원 <input type="radio"/> 학생인권 교육·상담·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 진로·적성·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지원
- 학교체육에 관한 운영 및 지도
- 학교 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 업무
- 수련활동소규모테마교육여행 운영 지도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 학교보건 · 환경위생 · 학교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생배치계획
-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
-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관리, 결산
- 국·공유재산의 관리(취득, 관리, 처분)
-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내진보강, 석면제거
-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관한 사항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 투자(BTL) 관리
- 각급학교 시설 복합화에 관한 사항
- 신청사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교육정책 및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등의 조사·분석·연구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교 교육활동 지원 관련 정책연구 ○ 각급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 인성·진로 및 진학 교육자료 개발 ○ 학교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비롯한 교육정보화 운영 지원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 교육 기획·조정 ○ 과학교육 연구 및 연구 활동 지원 ○ 과학·영재교육용 자료 개발 및 보급 ○ 전시관 운영 및 각종 과학행사 시행 ○ 학생 과학교육·과학대중화 교육 지원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 ○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연수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연구 및 정보 제공 ○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유치원 학부모교육 운영 ○ 유아 체험교육 활동 운영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 국내외 인성·수련교육 자료 관리 ○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관리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보건·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위생·안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연수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관 사용 ○ 특기학생 훈련 지원 ○ 체육기능 향상 ○ 체력단력실 운영 ○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관리 예산 지원 및 시설보수 지원 ○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지원 및 사업비 관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 ○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운영 ○ 각종 문화행사 주관 및 각종 지역행사 유치·지원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 평생학습관 자료의 상호대차 ○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 자료 보존 및 관리 ○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제작 ○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 ○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 평생교육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 ○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각종 독서교육활동 지원 ○ 도서관 홍보 등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 유·초·중·고등학교 특별활동 운영지도 ○ 유·초·중·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 유·초·중·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 학교 지도 ○ 유·초·중·고등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 업무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고 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 ○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유치원 포함)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 ○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학급편제 ○ 의무취학·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중학교 학군관리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 입학 관리 등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체료의 부과 및 징수 ○ 공체급여 지급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사항

일 시 (장소)	대상 기관	증인출석대상		출석사유	출석 여부
		성 명	소속 및 직책		
2025. 11.17.(월) 10:00 (교육위원회 회의실)	서울시 교육청	김해성	지구촌학교 교장	학교 운영상 비위 관련	×
		박지혜	지구촌학교 감	학교 운영상 비위 관련	○
		김보경	前 지구촌학교 교감	학교 운영상 비위 관련	○
		유영환	일광학원 임시이사장	임시이사회 운영 관련	×
		엄범순	우총초장	공익제보자 횡령 재판 관련	×
		박재련	前 서울공연예술고 교장	부적절한 공연·사적 모임 학생 동원 관련	×
		임호성	서울공연예술고 교장	학습권, 종교의 자유 및 교육환경에서의 권리 침 해 관련	○
		지향	양동중장	학교 시설 개방 관련	○
		신현종	송산학원 이사장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개입 관련	×